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를 발간하며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 기록물을 ‘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은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중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주요 형사사건기록을 활용,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콘텐츠를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온라인으로 제공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한 곳에 모으고 형사사건기록물의 역사적·기록학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사료 발굴 및 역사연구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고자 네 편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는 1950·6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중요 기록물이 국민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시대상을 조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를 ‘지식정보화사회’로 이끄는 작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형사사건기록을 수집·정리, 특히 재분류에 관련했던 관계자와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8년 12월

국가기록원장

Contents

글쓰는 순서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1.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콘텐츠 현황 보고 안대회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 12 1.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추진 배경
- 13 2. 형사사건기록의 보유 현황 및 공개재분류
- 15 3.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의 콘텐츠 구축 과정과 구조
- 17 4. 평가 및 발전 방향

2. 검찰청 기록의 유형별 특징 및 관리 방안 이현정 (대검찰청 기록연구사)

- 20 1. 들어가며
- 21 2. 검찰청 기록의 유형
- 24 3. 검찰청 기록의 유형별 구성 및 특징
- 29 4. 검찰기록의 보존 특징 및 향후 관리 방안

3. 형사사건기록의 기록학적 의미 전명혁 (외국어대 정보기록관리학과 겸임교수)

- 32 1. 머리말 : 형사사건기록의 ‘역사기록화’ 작업
- 34 2. 공안사건 기록의 범위와 정의
- 36 3. 공안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 기록의 생산 및 성격
- 41 4. 맺음말 : 공안사건 기록의 정리 및 활용 방안 제언

4.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I) 노영기 (조선대 강사)

- 46 1. 머리말
- 47 2. 형사사건기록의 한국현대사 자료로서의 가치
- 53 3. 사료적 측면에서 본 형사사건기록의 가능성과 한계
- 55 4. 맺음말

5.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II) 오유석 (성공회대 강사)

- 58 1. 형사사건기록의 한국현대사 자료로서의 의미와 가치
- 61 2. 새로운 역사쓰기로서 형사사건기록의 활용 가능성
- 미시사 연구 사료의 측면에서
- 64 3. 결론을 대신하여 - 연구자의 역사적 상상력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첫 번째 기록 김창룡 저격사건

- 70 1. ‘김창룡 저격사건’의 역사적 의미 및 기록물 개요
- 79 2. 기록으로 보는 ‘김창룡 저격사건’
- 103 3. 사건조사 이후부터 최종판결까지
- 107 4. ‘김창룡 저격사건’ 더 알아보기

두 번째 기록 진보당사건

- 128 1. 진보당사건이란
- 137 2. ‘진보당사건’ 기록물 개요
- 141 3.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세 번째 기록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 174 1. 역사 속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 189 2. 사건기록으로 보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네 번째 기록 필화사건(1949~1965)

- 230 1. 역사로 보는 필화사건
- 240 2. 사건기록으로 보는 ‘필화사건(1949~1965)’

1.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콘텐츠 현황 보고

2. 검찰청 기록의 유형별 특징 및 관리 방안

3. 형사사건기록의 기록학적 의미

4.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Ⅰ) :
‘김창룡 저격사건’을 중심으로

5.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Ⅱ) :
사료적 측면에서 본 형사사건기록의 가능성과 한계

1.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콘텐츠 현황 보고

1.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추진 배경

2. 형사사건기록의 보유 현황 및 공개재분류

3.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의 콘텐츠 구축 과정과 구조

4. 평가 및 발전 방향



1.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콘텐츠 현황 보고

안대회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1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추진 배경

1968년 ICA(International Council Archives; 국제기록보존협의회) 마드리드 대회에서는 기록공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비공개 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30년 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세계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고 함)'의 개정된 공개조항에 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재분류를 의무화했고,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재분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심의절차를 거치도록하고,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제도를 도입하여 비공개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했다. 이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비공개 사유의 대부분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기록을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을 공개하여 활용하게 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재분류 대상 총 12만2천여 권에 대하여 공개재분류를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현재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등의 사건기록, 감사기록, 수사기록, 인허가기록 등 6만여 권에 대하여 생산기관별·기록유형별 재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생산기관과 협의한 후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했다. 나머지 기록물은 2009년 6월까지 재분류를 완료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급변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무수한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기존의 단순한 소장기록물의 열람 및 복제, 재분류된 기록물의 단순 목록공개의 차원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즉, 기록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점차 다양해지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 안에 담긴 정보를 다양한 서비스 아이템을 통한 디지털콘텐츠로 가공하여 지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우선 공개로 결정한 기록물 가운데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인 형사사건기록을 검토해 일반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콘텐츠를 기획했다.

2 형사사건기록의 보유 현황 및 공개재분류

현재 대검찰청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형사사건기록은 7,335권으로, 해방 이후 1968년까지 주로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 미군정법령 제19호 위반, 미군정포고령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제5조 위반, 특별조치령 위반(제4조, 제5조), 간첩·간첩방조, 대통령부통령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반공법위반, 내란의죄(내란, 소요, 집시법위반) 등 주로 공안 사범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물철로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다. 이들 형사사건 기록에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여러 연구서, 언론, 자서전 등에서 사건의 상당부분이 이미 공개된 ‘역사적인 사건’(진보당사건, 김창룡 저격사건, 3·15부정선거사건, 필화사건 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사사건기록의 무조건 비공개에 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 전부를 포괄적인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선고 2003두1370(2004. 9. 23))가 있고, 이미 대검찰청公安부에서도 《공안 자료 좌익사건실록》이라는 간행물을 1964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발간·배포했다. 이 간행물은 공안사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처분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사건 이해의 중요한 자료로서 일반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은 우선 30년 경과한 역사적 사건 관련 형사사건기록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고, 수사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범죄예방에 현저하게 장애를 줄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개로 재분류했다. 다만, 피의자, 증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사생활정보 등은 여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유형·정보별 공개범위를 세분화하였고,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상정보 삭제 후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기관에 공개재분류 의견을 조회한 후 생산기관의 의견과 국가 기록원의 재분류 의견을 기록물공개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공개했다.

3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의 콘텐츠 구축 과정과 구조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콘텐츠는 말 그대로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개과정, 처리과정, 역사적인 의미 등을 담아 역사콘텐츠로 구축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사건기록은 사건수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보여주는 수사기록간 연결이 명확하여 기록물 건들의 구조와 맥락을 잘 복원하면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과 수사과정에서의 쟁점사항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의 기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획단계에서 형사사건기록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이미 언론이나 현대사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들을 조사하여 선별했고, 이를 공개재분류 담당자, 원내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과 논의하여 선정했다.

표 1. 시기별 주요 사건기록

대상시기	기록물 보유 현황			주요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기록	
1940년대	245	73	831	인민공화국 서울시당사건 등 남로당 관련 사건
1950년대	1,628	1,327	5,113	김창룡 중장 저격사건, 진보당사건, 동아일보 자유언론사건, 정치개혁 민족협의회사건
1960년대	4,024	1,834	1,391	3·15 부정선거 관련, 장도영 반혁명사건, 민족통일연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동백림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경향신문간첩사건, 경북의대사건
1970년대	4,879	3,125		민청학련, 재일교포간첩단사건, 사상계 필화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어떤 사건을 콘텐츠로 구축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는 우리원 소장 기록물로 사건을 어느 정도 재구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다. 이 조사단계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연구동향,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주요쟁점과 역사적 의미 등을 파악한 후 서비스 대상 주제 및 사건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기록들을 검색하여 기록물 보유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근현대사, 사회학 등의 전문연구자들을 섭외하여 사건의 연구동향, 주요 내용, 처리과정,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자문하고, 전문연구자에게 사건의 개요, 역사적 의미, 기록공개의 의미 등에 대한 원고를 부탁했다. 이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전문 연구자들이 기술함으로써 내용이 보다 전문적이고 풍부해지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장된 정보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 사건수사의 초점, 수사의 방향, 사건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조사된 동일한 행위 구조 속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형사사건기록을 생산시기 및 생산기관에 따라 상·하위로 구분하여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기록물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의 가주제와 가목차를 토론하여 결정한 후 주제에 해당하는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표 2.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주요 구성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주 제	소 주 제
	사건의 역사적 의미 및 기록물 개요	사건의 개요 역사적의미
		사건 기록 공개의 의미
		기록물 개요 - 생산기관 및 공개이력 - 보유기록물 개요 - 열람조건 - 기록물 목록
	사건기록으로 보는 ○○사건	사건기록으로 주제별 재구성 주요 기록물 소개
	사건 더 알아보기 참고자료	인물이력 관련자료 소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기술을 진행했다. 내용을 기술할 때는 형사사건기록 및 관련 기록들에 수록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함으로써 일반 이용자들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내용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원고작성이 완료 되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설계 작업을 통해 콘텐츠의 이미지, 메뉴구조 등을 결정했다. 콘텐츠 개발 때 주로 논의 되었던 것은 이용성, 가독성(可讀性)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일반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건과 가장 조화가 되는 색상, 이미지, 인터페이스를 세심하게 고려했고, 입체적이고 동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플래시기법 등을 사용했다. 웹디자인 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나라기록포털에 탑재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나라기록포털에 서비스된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의 콘텐츠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 및 관련 기록물에 대한 개요, 사건기록으로 보는 주제별 재구성, 기타 참고자료로 구성되었다.

사건 및 관련 기록물에 대한 개요에는 사건기록의 생산기관 및 공개이력, 보유 기록물에 대한 간단한 개요, 열람 조건 등을 기술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좀더 정확한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사건기록으로 보는 주제별 재구성에는 주제의 이야기 구조에 맞도록 그 하부에 소주제를 설정하고, 그 소주제 별로 적절하게 이야기를 전개했으며 그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자료에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당시 신문기사, 외국에서 공개된 관련 기록물의 내용, 주요 인물들의 이력 등을 제공하였다.

4

평가 및 발전 방향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시리즈로 ‘김창룡 저격 사건’, ‘진보당사건’,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필화사건(1949~1965)’ 네 개의 콘텐츠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록물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어떤 것인지 이용자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했고, 역사 학자와 같은 특정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기록물에 흥미를 가지고 기록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계와 언론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되었던 단순 목록제공이나 백과 사전식의 해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서비스로 기록의 공개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게 국가기록원의 기관 인지도를 향상시켰고, 콘텐츠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개재분류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제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학적, 역사학적, 사회사적, 문화사적 분석을 통해서 소장기록물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와 누구나 쉽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 검찰청 기록의 유형별 특징 및 관리 방안

1. 들어가며
2. 검찰청 기록의 유형
3. 검찰청 기록의 유형별 구성 및 특징
4. 검찰기록의 보존 특징 및 향후 관리 방안



2. 검찰청 기록의 유형별 특징 및 관리 방안

이현정 (대검찰청 기록연구사)



1 들어가며

검찰청은 수사 및 재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행정 기관과는 달리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기록을 생산한다. 다시 말해 일반 행정 공문서는 물론, 불기소사건기록, 재판확정사건기록, 판결문, 결정문 등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이 생산, 접수되고 있는 공간이다.

검찰청의 기록은 두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기록의 공동 생산이라는 특수성이다. 검찰청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사, 재판관련 기록은 생산 과정에서 검찰청 1개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수사기관(검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은 공소제기라는 형식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기관인 법원에서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면서 완성된다. 불복이 있는 경우 기록은 또다시 검찰과 법원을 오가면서 작성된다.

이처럼 검찰기록은 생산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두 번째는 보존기간 판단의 복잡성이다. 수사와 재판 관련 기록은 보존기간 판단시 복잡적이면서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다. 수사와 재판 관련 기록은 재판 확정 후에 집행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 등과 같은 범죄 적발과 형벌 집행과 관련한 기준이 보존기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검찰청의 기록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지고, 기록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청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2 검찰청 기록의 유형

검찰청기록은 크게 사건 기록, 재판기록, 행정기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 유형 중 검찰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록은 사건기록이다. 사건 기록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산출되는 기록을 말하며 재판 확정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재판기록은 법원의 판결이 기재된 기록이므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보존·관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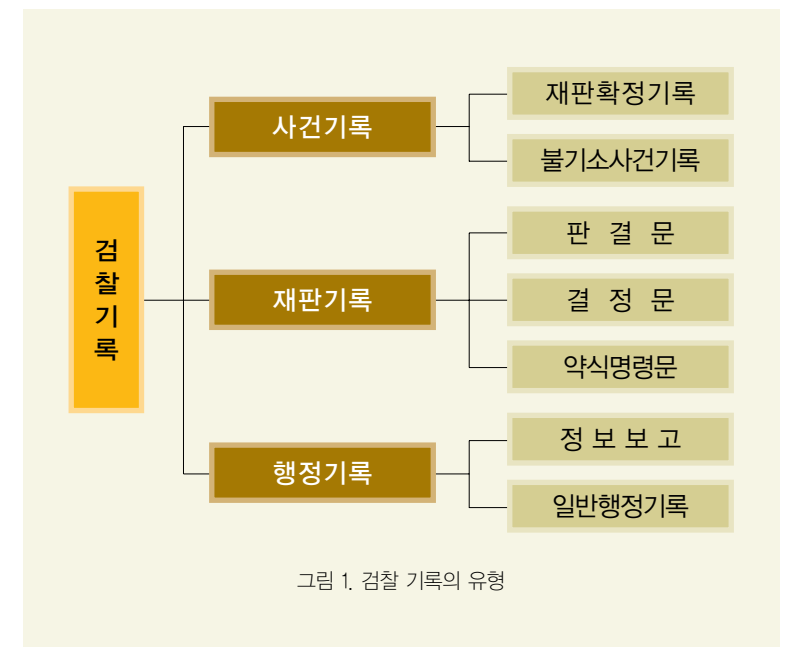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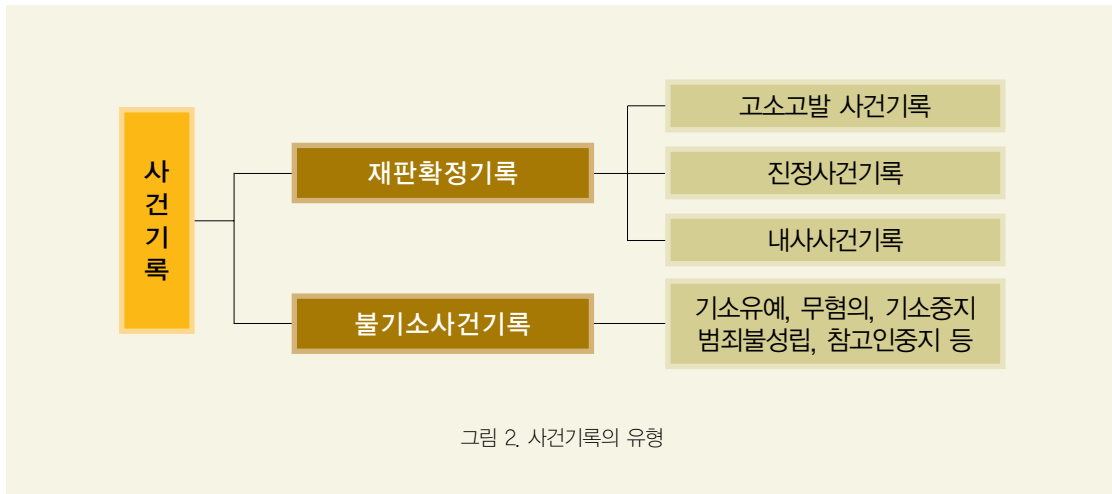
그림 1. 검찰 기록의 유형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세 번째 유형인 일반행정기록은 행정업무와 관련되어 생산·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로서 검찰기록의 한 유형에 포함된다.

우선 사건기록의 유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공소(公訴) 제기 여부에 따라 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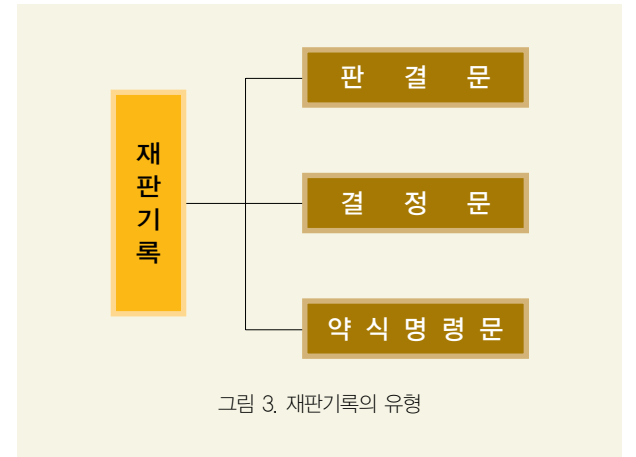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이 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중국처리(終局處理)한 사건기록은 불기소사건기록이 된다. 재판확정기록은 다시 수사를 개시하게 된 사유에 따라 구분되어지는데, 고소·고발사건기록, 진정사건기록, 내사사건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고소·고발사건기록은 고소권자·고발권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이고, 진정사건기록은 개인·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내사사건기록은 검찰청에서 첩보 등이 접수되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사건기록이다.

이러한 재판확정기록과는 달리 불기소사건기록은 검찰청에서 검사가 기소유예¹⁾,

협의 없음²⁾, 죄가 안 됨³⁾, 공소권 없음⁴⁾, 기소중지⁵⁾, 공소보류⁶⁾, 참고인증지⁷⁾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려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고 중국처리한 사건기록을 말한다. 이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중국처리한 기록이기 때문에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으로 구성된 재판확정기록과는 달리 법원의 소송 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재판기록은 재판의 판결을 기재한 기록으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을 말한다. 재판기록은 <그림 3>과 같이 판결문, 약식명령문, 결정문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판결문은 재판이 종결되면서 판사가 법에 의해 유죄, 무죄 및 면소 등의 판결을 기재한 문서이고, 약식명령문은 약식 절차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것을 기재한 문서이다. 또한 결정문은 공소기각 결정의 경우처럼 중국 재판을 결정의 형식으로 할 때 작성되는 재판기록인데,



- 1)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한다.
- 3) 피의사실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작하는 사유가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한다.
- 4)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등에 처분을 말한다.
- 5)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 6)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치를 말한다.
- 7)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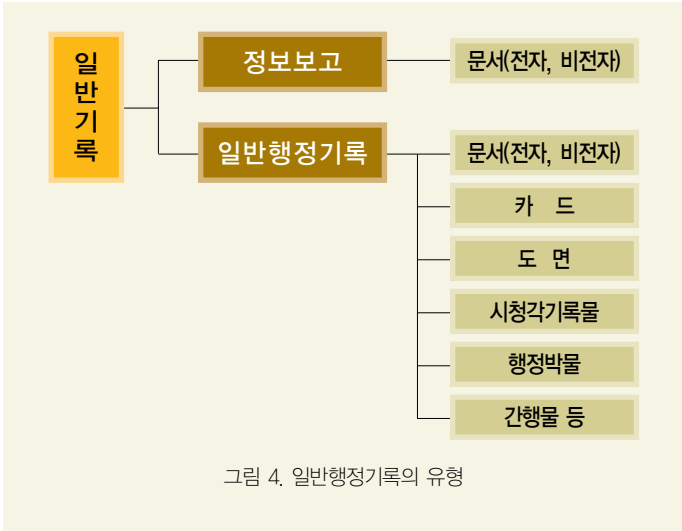


그림 4. 일반행정기록의 유형

그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재판기록의 분류는 재판이 어떠한 형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즉 재판의 형식에 따라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서도 일반 행정기록이 생산되는데 아래 <그림 4>와 같이 기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일반행정기록은 타기관과 마찬가지로, 문서·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된다.

단 타기관의 일반행정기록과는 달리 정보보고 형태의 문서가 생산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보고는 사건 발생보고, 수사경과, 향후 수사계획 등 각종 사건과 관련된 수사보고서이다. 일반 행정문서 기안과 거의 같은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사·재판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기록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3 검찰청 기록의 유형별 구성 및 특징

3-1. 기록 유형별 구성

사건기록은 수사, 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생산된다. 사건기록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사건기록은 크게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서 작성된 수사기록과 법원에서 작성한 소송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수사기록은 수사가 진행되는 시간 순서대로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모든 기록이

표 1. 사건기록의 종류

구 분	종 류	세 부 종 류
수사기록	기록표지	
	사건송치서 표지 또는 수사사건기록 표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고소장 / 고발장	
	수사지휘서	
	범죄인지서	
	진정서 / 탄원서	
	각종 수사자료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각종 증거자료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사건기록 표지(을지)	
	소송기록	
소송기록	표지	
	기록목록	
	공소장	
	증거목록	
	구속에 관한 서류	체포영장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구속기간 갱신신청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혹은 변호인선임서)
	진정서 /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참고제출자료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증인신문조서
		감정인신문조서
		통역인신문조서
		번역인신문조서
		고소취소서
		재정신청서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수사기록에 편철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착수 경위나 성격, 관련자들의 제출서류 등에 따라 수사기록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소·고발장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범죄인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록은 모두 다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사자료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은 검사, 검찰직원, 조사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과 관련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문서로 수사하는 과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핵심자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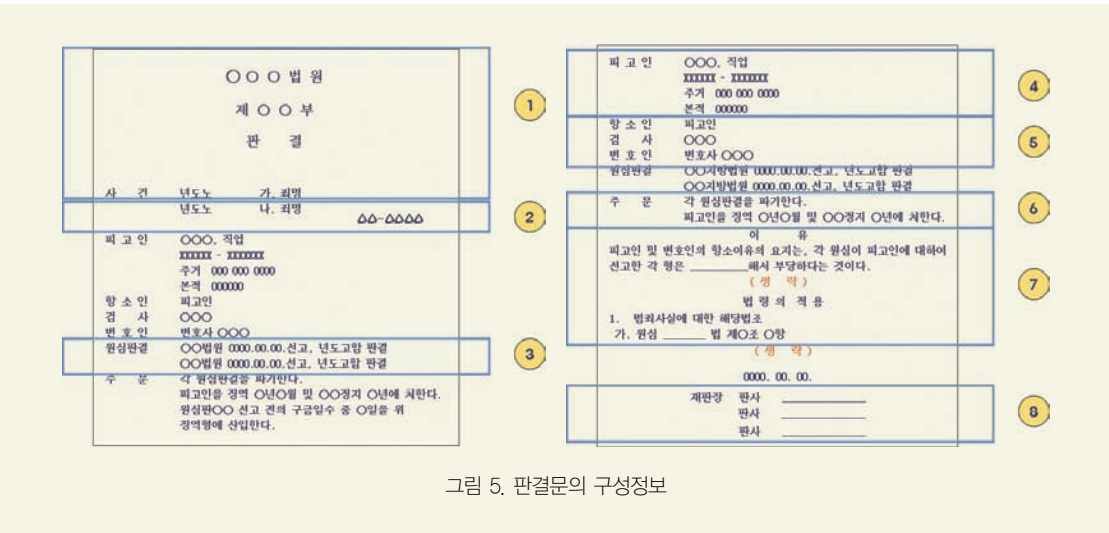


그림 5. 판결문의 구성정보

법원에서 작성한 소송기록 또한 수사기록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기록에서는 공소장과 공판조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범죄인 처벌에 대한 의견서이고 공판조서는 법원서기가 공판장에서 공판절차를 기재한 것이다. 구성이나 체계가 복잡한 형사사건기록과는 달리 재판기록은 <그림 5>에서 보듯이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으로만 생산된다.

표 2. 판결문의 구성정보

번호	영역	구 성 항 목
1	판결문 구분정보	• 법원명 • 법원사건번호 • 법원사건구분(일반/분리/병합)
2	판결문 기본정보	• 검찰사건번호
3	판결문 관련정보	• 판결 법원명 • 판결 선고일자 • 사건번호 • 사건구분 • 관련 사건번호 • 관련 사건구분
4	피고인 정보	• 피고인 구분(내국인/외국인/법인/기관) • 피고인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포함) • 주거, 최후주거, 본적, 현재 • 확정일자 • 죄명 • 기타정보
5	사건관련인 정보	• 항소인, 상고인 • 검사, 변호인
6	주문정보	• 주문코드(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 주문년수/월수/일수/시수 정단기구분 • 주문금액 • 전체주문
7	이유정보	• 적용법령명/조 • 전체이유
8	판사정보	• 판사구분 • 판사명 • 서명, 도장

판결문의 구성정보는 <그림 5> 및 <표 2>에서 보듯이 총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8개의 영역은 판결문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정보, 사건번호 등의 기본정보, 피고인의 주거·이름 등의 피고인 정보, 피고인의 이력·경력·사건경위를 기술한 이유정보, 판사이름 등을 기재한 판사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유정보는 피고인의 이력, 경력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사건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한 부분으로 판결을 내린 근거법령과 이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수사, 재판관련 기록은 일반행정기록과는 다르게 여러 기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각 영역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특수한 기록의 형태 및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표 3. 보존기간의 세부사항

보존기간	재판확정사건기록
1년	• 구류 또는 과료
3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3년 미만의 징수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5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30년	• 사형
준영구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영구	• 10년 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보존기간	불기소사건기록
3년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 장기 5년 미만 징역,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1만원 이상의 벌금
5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준영구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영구	•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만한 사건

3-2. 기록 유형별 보존기간

수사, 재판관련 기록은 재판 확정 후에 집행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므로 기록학적 관점으로만 보존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적발 및 형벌의 집행과 관련된 기준이 보존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건기록은 공소제기 여부에 따라 재판확정사건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보존기간 또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재판 확정사건기록은 형의 시효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에 따라 보존기간이 책정되는데, 그 보존기간의 세부적인 사항은 <표 3>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존기간 책정과 더불어 검찰에서는 영구, 준영구기록에 한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영구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이 바로 그것인데, 이 지침에서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사건,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 등은 형의 시효 및 공소시효와는 관계없이 영구, 준영구 기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기록은 이와는 달리, 예외없이 보존기간이 영구로 책정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판결문, 결정문, 약식명령문 등 재판기록은 형식이 다르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두 영구기록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렇듯 수사, 재판 관련기록은 보존기간에 있어서도 일반행정기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4

검찰기록의 보존 특징 및 향후 관리 방안

보존서고에 배치할 때도 검찰 기록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존한다.

<그림 6>에서 보듯이 검찰 기록은 기본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보존기간 별로 기록물을 배치한다. 단 불기소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기록과 참고인중지 사건 기록은 사건이 재기될 가능성이



그림 6. 검찰청 사건관련기록 보존서고 배치도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있기 때문에 여타의 불기소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재판 기록은 기록의 유형이 다르고, 보존기간이 모두 영구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기록물을 배치하고 있다. 이렇듯 검찰기록의 보존 특성은 보존기간 뿐만 아니라 사건과의 연관성도 고려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건이 종료되어 서고에 배치된 후에라도 다시 사건이 재심 또는 재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기록이 한번 불기소사건기록 쪽에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판 확정사건기록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서고관리담당자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청은 앞서 살펴본 기록의 특징 또는 수사정보 관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보존에 적합한 시설, 장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는 향후 전국 검찰청의 준영구 이상 수사, 재판기록을 대검찰청 산하 특수기록관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즉 준영구 이상 보존해야 하는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재판기록,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사건, 재판기록 등을 특수기록관에 집중적으로 보존,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수사정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검찰청은 그 특수한 기록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형사사건기록의 기록학적 의미

1. 머리말 : 형사사건기록의 ‘역사기록화’ 작업
- 2.公安사건 기록의 범위와 정의
- 3.公安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기록의 생산 및 성격
4. 맺음말 :公安사건 기록의 정리 및 활용 방안 제언

3. 형사사건기록의 기록학적 의미 : ‘공안사건’ 기록의 생산과정 및 정리·활용 방안

전명혁 (외국어대 정보기록관리학과 겸임교수)



1 머리말 : 형사사건기록의 ‘역사기록화’ 작업

그간 ‘과거청산’ 기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면서 일제시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한국근현대의 역사적 기록들의 열람과 활용에 대한 요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1월 국민의정부 시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이래, 참여정부 시기에 국정원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2004.11.2), 국방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5.5.27), 경찰청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4.11.18)를 각각 설립하였다. 또 최근 사법부에서도 ‘법원 60년사’ <역사 속의 우리 사법부>(가칭)에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포함시킬

계획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천명한 바가 있다.

이러한 ‘과거청산’ 기구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로 줄임)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기록을 입수, 수집하고 있다.²⁾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자료수집 대상기관은 역설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기관’의 역할을 했던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검찰청, 국군기무사 등 국가기구이다. 또한 수집 대상기록도 이들 수사기관에서 생산한 형사사건, 특히 공안사건(公安事件)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형사사건기록, 그 가운데 공안사건기록에 대한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학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진통으로서 겪었던 1960~80년대 공안사건기록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에서 형사사건기록 가운데 주로 공안사건 기록의 정리·활용 방안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카이브즈 기술(記述)은 기본적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기록물 세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또 아카이브즈 기술은 관련된 모든 행위군(群)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록물과 그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 즉 그 정보를 지적·행정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 그리고 보존소의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법률 제7542호), 2005.5.31.

2)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진실규명 조사방법) 및 동법 제33조 제1항(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에 의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내부와 외부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³⁾

필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집한 공안사건 기록들을 접하면서 그 기록의 접근성과 활용을 제고하고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기록원에서 그 기록들이 셀렌버그가 언급하는 원질서(original order)와 출처의 원칙에 따라 정리(arrangement)·기술(description)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형사사건 중 영구보존기록인 공안사건 기록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안사건 기록의 범위와 정의

공안사건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붕괴시키려는 의도와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공안사건은 법의 집행과 치안 및 안보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구들, 그 중에서도 특별부서들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다.⁴⁾

공안사건은 대부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 사건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제8조에 의거 영구보존 되고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 개정 2008.1.7 법무부령 제627호) 제8조(보존기간) 3항에는 “형법 제2편 제1장 제2장의 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⁵⁾고 하여 첫째, 형법상 내란의 죄 둘째, 형법상 외환의 죄 셋째,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반공법, 국가보안법 사건 중 10년 정도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 또는 영구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하 치안유지법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1925년 5월 12일 시행된 치안유지법은 일제하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악법이었다. 그런데 해방 후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사건을 계기로 좌익세력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정부의 기틀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정권의 독재강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강화되어 갔던 것이다.⁶⁾

반공법은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3일 제정되었다가 1980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반공법」가운데 제4조(찬양, 고무 등), 제5조(회합, 통신 등), 제6조(탈출, 잠입), 제7조(편의제공) 등 주요 조항은 대부분 1980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 등 조항에 편입되어 그대로 계승되었다.⁷⁾

표 1. 1960~70년대 주요 공안사건⁸⁾

발표일	사건명	관련자	수사기관	배경, 관련사건
1964.8.14	인민혁명당사건	도예중, 박헌채, 김영관 등 57인	중앙정보부	한일회담, 6·3사건
1967.7.8	동백림사건	정규명, 정하룡, 윤이상 등 194인	중앙정보부	제7대 국회의원총선거
1968.8.24	통일혁명당사건	정태목, 김종태, 이문규, 김질락 등 158인	중앙정보부	1·21사건, 푸에블로호사건 등
1969.8.24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권재혁, 이일재, 이형락 등 14인	중앙정보부	1·21사건, 푸에블로호사건 등
1971.4.20	재일교포유학생학원 침투간첩단사건	서승, 서준식 등 51인	육군보안 사령부	제7대 대통령선거 제8대 국회의원총선거
1974.4.25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도예중, 서도원 등 21인	중앙정보부	민청학련사건, 긴급조치 4호
1979.3.9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이우재, 한명숙, 정창렬 등 50인	중앙정보부	민중의식화교육운동탄압
1979.10.9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	이재문, 신항식 등 84인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부마항쟁

3) Fredric M. Miller,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125쪽.

4) 정호기, 「박정희시대의 ‘공안사건’들과 진상규명」, 『역사비평』 2007년 가을호(통권 80호), 268쪽.

5)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3항1호는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갑종), 3항2호는 “10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3항3호는 “10년 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 역사비평사, 2004, 71~72쪽.

7) 「반공법」(일부개정 1968.3.18. 법률 제1997호) ; 「국가보안법」(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참조.

8) 정호기, 앞의 글, 270쪽 참조.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따라서 1960~70년대 공안사건은 대부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형법 제87조 (內亂), 제90조 (豫備, 陰謀, 煽動, 宣傳), 제98조 (間諜) 등과 관련한 사건이며, 공안사건기록은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행형(行刑)기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은 1960~70년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3 공안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 기록의 생산 및 성격

셸렌버그가 언급하였듯이 기록은 “그것의 물리적 형태나 특징과는 상관없이 공적 이거나 사적인 기관에 의해 법적인 의무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본래의 업무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서 작성되거나 인수되고, 기능, 정책, 결정, 절차, 시행 또는 다른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나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 때문에 그 기관이나 그것의 합법적인 후임자에 의해 보존되거나 또는 보존되도록 한 모든 도서, 서류, 지도, 사진이나 기타 사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들”⁹⁾이다.

형사사건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인 형사소송법에 기본적으로 근거한다¹⁰⁾.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재판, 법의 집행에 이르는 활동 과정은 결국 형사사건의 기록이 생산되는 과정이다. 공안사건기록은 형사사건 가운데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집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네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경찰이나 과거 중앙정보부 등의 수사단계 둘째, 검찰에서의 수사 및 기소단계 셋째, 법원에서의 재판단계 넷째, 법의 집행과 교정(矯正)단계이다.

9) T. R. Schellenberg,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18쪽.

1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3쪽.

표 2. 인혁당재건위 사형수 8인의 고문 주장

피고인	내	용
도예중	〈항소이유서〉 • 공소장 1~6번까지의 범죄사실은 허위조작 되었으며 검사 조서 작성시 4.20.~25. 철야취조를 받고 4~5일에 걸쳐 고문당함 (311호실)	〈상고이유서〉 • 74.4.20.~6.8.(50일간) 중정 조사에서 4~5차에 걸쳐 고문을 당함(6국 311호) • 중정 취조시에 협심증까지 일으켜 수차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때 중정에서 사준 외제음료 협심증 치료제인 설하정, 리트로그라셀린정을 먹고 회복이 되었는데 약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
서도원		〈상고이유서〉 • 경찰관 및 검찰관 작성의 조서 및 자필진술서는 고문과 협박 하에서 강요에 의해 작성, 증거능력이 없음
이수병	〈항소이유서〉 •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문과 일주일에 걸친 주야 연속심문 등 위협과 화유를 겸한 정신적 위축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었음	〈상고이유서〉 • 간첩과의 관계를 추궁하려 무턱대고 가해지는 목불인견의 고문을 당했다. • 고문과 협박 속에서 수사관과 검찰관이 동일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했고 조작된 줄 알면서도 바보처럼 제 손으로 무인을 찍어야만 했음
김용원		〈상고이유서〉 • 중정조서와 진술서는 심한 몽둥이질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통해서 꾸며진 것이며 취조관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고 폭력으로 무인을 찍음 • 중정에서 몽둥이질을 해서 왼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음
하재완	〈항소이유서〉 • 공소내용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친 혹독한 고문과 협박 및 사전에 작성된 각본에 의한 것임	〈상고이유서〉 • 4.28.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었으며, 탈홍이 되고, 폐농양이 생겨 취조관이 시키는 대로 조서 작성
우홍선	〈항소이유서〉 • 6.25 전투 중 부상을 입어 반불구자로 후송 되었고 생혈이 심해 전신이 약화되어 지금 까지 고통 받고 있음	〈상고이유서〉 • 경찰관 및 검찰관 작성 조서 및 진술서는 중정 지하실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강요되어 불가항력으로 허위 진술한 것임
송상진	〈항소이유서〉 • 수사는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서가 아니고 청사전에 본을 박아 놓고 강요하여 필기 무인케 한 것이다.	〈상고이유서〉 • 4.28. 구속되어 4.30. 부터 본인의 소신을 적으라고 하여 몇 가지를 적은 후 오후부터 고문이 시작 • 6.7. 21시경부터 중정 지하실에서 김상희수사관으로부터 고문하겠다는 협박 하에 인혁당재건에 대한 조직을 부르는 대로 쓴 것임
여정남	〈항소이유서〉 • 취조과정 중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전기, 물고문, 심한 매질 등으로 인한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주사를 맞아가며 재판에 임했다.	〈상고이유서〉 • 시종일관 고문, 곤달, 협박으로 강제 조작 허위 진술된 기록임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수사단계는 내사 및 범죄인지, 수사개시, 사건현장조사, 수사활동, 수사과정, 수사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내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속의 확신이 들면 구속지휘품신서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런데 당시 공안사건은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07조¹⁰⁾를 위반하여 사전에 구금하여 진술을 받고난 후 1주일 가량 지난 후 영장발부를 하였다.¹²⁾

또 형사소송법 第244條(被疑者訊問調書の作成)에는 “①被疑者の陳述은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調書는 被疑者에게 閱覽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被疑者가 増減, 變更의 請求를 하였을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被疑者가 調書에 誤記가 없음을 陳述한 때에는 被疑者로 하여금 그 調書에 間印한 後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게 한다.”¹³⁾고 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원칙과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任意性)이 강조된 것인데 당시 공안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많은 부분 고문 등 가혹행위 등에 의해 조작된 경우가 많았다. (<표 2>¹⁴⁾ 참조)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사건’을 발표하면서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서도원, 도예종 등이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하여 인민혁명당을 재건하였다는 ‘인혁당재건위원회사건’을 발표하여 서도원, 도예종 등 8인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형당한 사법사상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같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인지보고서,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의견서와 이 수사관련기록을 송치한다.

둘째,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은 검찰수사개시, 사건현장조사, 검찰수사활동, 검찰수사과정, 경찰수사종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검사는 검찰조사를 마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수사의 단서가 될 자료(송치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신변을 경찰로부터 입수하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착수의 필요성과 착수의 시기 등을 판단한다. 또 검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사실존부를 확인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한다.¹⁵⁾

한편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은 1차수사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의견서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작성된 측면도 있겠지만 검찰이 증거를 확보·확인하는 심층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1차단계의 수사된 결과를 단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 기획수사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전통’은 일제하 고등경찰과 지방법원검사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셋째,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인데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¹⁷⁾ 형사사건의 경우 3심제에 의해 관할 지방법원의 1심과 고등법원의 2심,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3심으로 구성된다. 1심법원의

9) T. R. Schellenberg,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18쪽.

1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3쪽.

11) 형법 제1조 1항의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1960년대 시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1500호]을 인용한다.

第207條(緊急拘束과 令狀發付期間) 1항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拘束한 境遇에 拘束을 繼續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地方法院判事있는 市 또는 郡에서는 拘束한 때로부터 48時間以內에, 其他의 市 또는 郡에는 72時間以內에 拘束令狀의 發付를 受ける 要한다”

12) 1964년 8월에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인민혁명당사건’으로 구속된 전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박현채는 1964년 7월 24일 긴급구속되었는데 구속영장은 1964년 7월 29일 발부되었다. (『박현채 구속영장』, 1964.7.29, 고 박현채 10주기 추모·전집 발간위원회 엮음, 『박현채전집』 7권, 해밀, 2006, 110쪽.)

13) 2007년 6월 1일에는 형사소송법에 다음의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14)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5.12.7, 141~142쪽.

15) 이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의거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16)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일제시기의 형사소송법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刑事訴訟法 [1926년 5월 5일 법률 제75호], 野村調太郎 編『新案 朝鮮六法』Ⅲ, 松山房, 1933). 예컨대 1936년 12월 일제에 의해 체포된 이재유의 朝鮮共産黨再建京城準備그룹 사건의 경우 1937년 4월 1일 경기도경찰부사법경찰관 高村正彦이 경성지방법원검사정 福田甚 郎 앞으로 보낸 「의견서」와 1938년 2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의 「예심종결결정」은 그 내용이 유사했다.

17) 이재상, 앞의 책, 586쪽.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抗訴)할 수 있다.¹⁸⁾ 또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不服)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上告)할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 조서(公判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¹⁹⁾

제1심의 형사소송 공판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의 3단계로 진행되며, 모두절차를 마치면 사실심리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증거조사는 범죄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심증을 얻기 위한 행위로 서류나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의 종류가 있다.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 직전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증거결정을 한 다음 증거조사를 하는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은 신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증거서류는 요지를 고지(낭독)한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직접 신문할 것을 알리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은 검사, 변호인, 그리고 재판장순서로 진행된다.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직접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신문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 또는 부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숨겨진 일면을 진술하게 하고 실제적 진실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1심의 형사소송 공판절차의 최종단계가 판결선고절차이다. 판결선고절차는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심리를 모두 종결하면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²⁰⁾

넷째, 형사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부의 판결선고(예 징역 3년)를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됨으로써 수형인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집행이 시작된다. 입소한 후에는 신분장·계호·접견·서신·교육·교회·종교생활·위생과

의료·교도 작업·징벌·분류 및 처우·가석방·석방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다.²¹⁾ <표 3>은 이상의 4단계와 각 단계 속에서 생산되는 주요 기록의 종류와 유형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과 기록의 유형

단계	1단계 : 경찰, 중앙정보부 (1차 수사)	2단계 : 검찰 (2차 수사)	3단계 : 법원 (재판)	4단계 : 矯正기관 (형집행)
생산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인지보고서 • 구속영장신청서 • 구속영장 • 피의자검거보고 • 압수조서 • 진술서 • 피의자신문조서 • (송치)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신문조서 • 자술서 • 공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지방법원(판결문) ; 공판조서, 항소이유서 • 2심: 고등법원(판결문) ; 공판조서, 상고이유서 • 3심: 대법원(판결문) •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집행지휘서 • 재소자 신분카드 • 명적표 • 석방지휘서 • 사형명령서 • 사형집행서

4 맺음말 : 공안사건 기록의 정리 및 활용 방안 제언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은 432조에 이르는 방대한 형사소송법의 이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기록은 크게 수사 및 공판기록, 판결문 등 재판기록, 명적표, 수용자신분장

18) 형사소송법 第357條 (抗訴할 수 있는 判決(개정 1963.12.13)) ; 형사소송법 第371條 (上告할 수 있는 判決) 참조.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1500호] 第51條 (公判調書의 記載要件) ①公判期日の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公判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公判調書에는 다음 事項 其他 모든 訴訟節次를 記載하여야 한다. 1. 公判을 行한 日時와 法院 2. 法官, 檢事, 書記官 또는 書記의 官職, 姓名 3.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輔助人과 通譯人의 姓名 4. 被告人의 出席與否 5. 公開의 與否와 公開을 禁한 때에는 그 理由 … 14. 判決 其他의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事實

20) <http://www.worldlaw.co.kr/WorldLaw Court/1ho buqwon1/h1 frame%20bubwon main.htm>

21)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을 참조할 수 있고 수용자(收容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용은 行刑法 일부개정 1962.12.24 법률 1222호]를 참조할 수 있다.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등 행형기록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검찰청은 수사 및 공판기록을 수사진행의 과정, 즉 기록이 생산된 순서에 따라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다.

현재 1970년 이전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관련 영구보존 기록은 대부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보존을 위해 이 기록들을 M/F화 또는 스캐닝을 하고 있다. 예컨대 1964년 ‘인민혁명당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의 경우 총 35권 15,000여 쪽의 방대한 분량인데, 개별적인 기록물의 묶음인 철(권)단위로 하나의 M/F를 구성하고 있다. (<표 4> 참조) 그런데 이 M/F의 순서가 원래의 기록물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표 5>, <표 6> 참조)

즉 M/F화 과정 속에서 수사 및 공판기록의 ‘원질서’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분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M/F의 물리적 성격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기록물을 원래의 기록물의 체계 (<표 6> 참조)로 유기적으로 재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M/F화된 물체계의 순서를 원래의 기록목록의 순서대로 체계화하여 바로잡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철(권)마다 기록물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술 (description)을 추가하여 이를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4. 국가기록원 수사기록의 정리 상태 (예 인혁당기록)

연 번	M/F번호	기록물관리번호	면 수
1	1310091-6890	BA0804555	1-734
		BA0804556	735-1477
		BA0804557	1478-2243

표 5. 국가기록원 M/F기록 세부목록

M/F번호(권단위)	관리번호(綴단위)	기록정수(총2,243쪽)	관련자 / 내용
1310091-6890	BA0804555	1-734	도예중, 김금수, 이재문
	BA0804556	735-1477	임창순, 김한덕, 허작, 김병태
	BA0804557	1478-2243	강무갑, 이영석, 박상홍, 김경희, 오병철

표 6. 원질서에 따라 재구성한 기록물 목차

기록 순서	기록물관리번호 (기록정수)	관련자	철 제 목 / 주 요 내 용	기록물정수
1	BA0 803887 (1~187)	도예중	사건송치서(압수금품총목록, 기록목록) (1~9281) (1~1662) 의견서(도예중 외 46명)	48~1098
2	BA0 803887 (188~454)	도예중	의견서(도예중 외 46명), 별지(북괴노동당제4차대회)	1099~1366
3	BA0 803887 (455~886)	도예중, 임동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기록 피의자 도예중, 임동규(其一)』 - 도예중 범죄인지보고, 피의자체포보고,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인지동행보고 - 임동규 피의자신문조서	1367~1789



4.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I) :

‘김창룡 저격사건’을 중심으로

1. 머 리 말
2. 형사사건기록의 한국현대사 사료로서의 가치
3. 사료적 측면에서 본 형사사건기록의 가능성과 한계
4. 맺 음 말

4.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I):

'김창룡 저격사건'을 중심으로

노영기 (조선대 강사)



1 머 리 말

'역사학'은 어떤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실(事實)을 사실(史實)로 만들어간다. 그렇기에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료를 친구처럼,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며 산다. 그러나 인류가 남긴 모든 흔적이 역사가 아니듯이 자료 또한 모두 역사학의 탐구 대상은 아니다.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역사학의 대상이 되고, 가치 있는 자료의 해석에 따라 역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적어도 그 자료가 가치가 있으려면 몇 가지 전제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또 설사 어떤 사람이 자료를 남겼더라도 그것이 모두 역사적 자료, 즉 '자료(史料)'로 평가받지는 않는다. 자료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며,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가

남긴 자료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뒤에야 비로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로 인정되며, 그때부터 '자료'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화(歷史化)' 작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그 인물 뿐 아니라 관련된 사건이 갖는 가치이다. 아무리 역사적 인물이 관련된 일이라도 모두 역사학의 해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에 따라 역사학의 접근이 달라진다. 특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처벌과정을 기록한 형사사건 기록물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형사사건 기록물이 모두 사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중요도, 그 사건이 갖는 사회적·역사적 의미에 따라 '사료'로서의 가치가 판단된다.

이 같은 전제 아래, 이 글에서는 1956년 1월 30일 발생한 '김창룡 저격사건' 관련 기록물을 중심으로 형사사건기록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 기록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2 형사사건기록의 한국현대사 사료로서의 가치

앞에서 전제했듯이 '김창룡 저격사건'의 기록물은 김창룡에 대한 평가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저격당할 당시 그의 직책은 육군 특무부대장이었다. 본래, 육군 특무부대는 대공방첩활동을 주요 임무와 목표로 하는 기구였다. 또 부대 명칭에 나타나듯이 육군 특무부대는 육군본부, 즉 육군참모총장의 통제를 받는 기구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김창룡 특무부대장은 자신의 권한 이상의 일을 벌여왔다. 그것은 김창룡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창룡은 자신의 기구이다 시피 했던 육군 특무부대를 기반삼아 활동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위를 능가했다. 그리하여 육군 특무부대는 본래 임무인 대공사찰을 넘어서 군 내외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며 헌병총사령부와 함께 이승만 정권을 떠받치는 권력기구가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육군 특무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부대는 이승만 정권의 유지를 위해 ‘족청계(민족청년계) 제거’, ‘군 일부 반란사건(이형근 김종평이 관련된 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안사건을 적발했다. 이중 몇몇 사건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 김창룡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훗날 ‘김창룡 저격사건’의 재판정에서 과거 그의 부하이자 저격 주범이었던 허태영은 육군 특무부대가 적발한 사건들 중 상당수는 김창룡이 조작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창룡은 군내 고위 장성들도 감시했다. 더 나아가 김창룡은 특무부대의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장성 임관에 관여하는 등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그의 행위에 대해 군 내외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 김창룡을 불러들여 그의 공훈을 칭찬할 만큼 각별하게 신임했다.

그렇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이 암살되고 육군 특무부대에 빈소가 설치되자마자 빈소로 달려왔으며, 범인 색출을 지시하는 담화와 함께 장례식에서 애도사를 발표했다. 이와는 달리 본래 임무를 넘어서 김창룡의 독선과 권한 남용은 군 내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육군 최고 수뇌부를 비롯한 많은 군인들이 김창룡의 전횡과 독선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창룡 저격사건이 발생했다. ‘김창룡 저격사건’ 관련 자료는 이 같은 배경을 이해하며 접근해야 그 기록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제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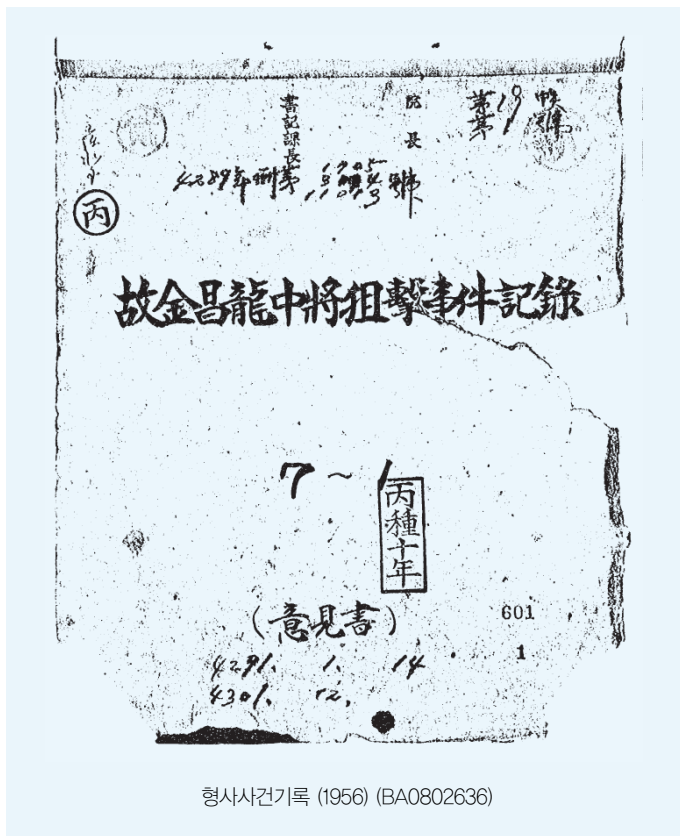
형사사건기록은 사건의 기본 사실을

복원하는 기초자료이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사건의 배경, 전개과정, 그리고 사건의 결과와 역사적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 형사사건기록은 관련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이 점은 ‘김창룡 저격사건’ 관련 형사사건기록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창룡 저격사건’은 1956년 1월 30일 사건발생 직후부터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이었다. 그를 각별하게 신임했던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그가 몸담았던 군대, 그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민간사회, 그리고 미국 등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궁금해 했다. 그러나 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암살의 동기와 배후 등 핵심사항들은 여전히 의문에 싸여 있다. 물론, 육군 특무부대의 수사를 통해 범인은 잡혔고 그 배후도 일정부분 규명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이 공개되기 전까지 사실을 복원하는 자료로는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과 이후 여러 차례의 증언 및 언론의 추적 기사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암살사건의 수사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담은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이 공개됨으로써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종결까지의 경과가 드러났다.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은 암살 당일의 사건발생보고부터 시작한다. 당시 부대장 암살사건이 발생하자 육군 특무부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범인 색출에 나섰다. 범인이 체포되기 전의 자료로는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진술, 감시보고서, 사건 현장도 등이 있다. 특히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사건의 정황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고등학생과 인근 미용실 주인,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특무부대원, 현장을 지나던 헌병대 대원 등은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은 사건의 윤곽과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범행에 이용된 차량 등을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구성하면, 1956년 1월 30일 아침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출근하던 중 그 앞을 막아선 지프차에 대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클락 선을 올리자 범인들이 뛰어나와 김창룡을 저격했고 범인들은 20대 청년들이었다.

또 범인들을 추적하기 위해 벌인 특무부대의 수사과정, 그리고 범인으로 의심되는 허태영 대령에 대한 감시보고서 등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2월 10일 이전부터 특무부대는 허태영을 주목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특무부대는 허태영의 집에



형사사건기록 (1956) (BA0802636)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있었던 신초식과 송용고의 외모가 용의자들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체포에 나섰다. 이 형사사건기록들을 통해 김창룡 저격사건 직후 특무 부대가 어떻게 사건을 수사하였으며, 범인의 운곽을 어떻게 좁혀가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범인을 체포한 이후의 상황이다.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심문조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김창룡 저격사건’의 범인인 신초식과 송용고, 그리고 이유희의 심문을 통해 사건 당일 날의 상황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의 상황은 이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일정하게 사실에 접근한 상태였다. 이들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발생한 동기, 즉 ‘김창룡 저격사건’의 배경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갔다. 다만, 허태영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주범으로 체포된 허태영은 처음부터 자신이 김창룡을 죽였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김창룡을 암살한 동기로 김창룡의 전횡과 독선을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려 애썼다. 이것은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든 확인된다. 허태영의 사주를 받아 직접 김창룡을 암살하였던 신초식과 송용고 등도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즉 ‘김창룡 저격사건’이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것은 1950년대 김창룡의 행적과 관련된 것이며, 김창룡의 행위를 보장해줬던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방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한국전쟁기 부산정치파동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행위에 반대하는 육군참모총장을 경협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병력의 이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이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원용덕 헌병사령관을 통해 집권 연장을 꾀한다. 출근 중인 국회의원들을 헌병대가 강제 연행하였고,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대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정치파동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군 수뇌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부를 감시할 수 있는

사찰기구를 강화시켰는데, 그러한 기구가 바로 육군 특무부대와 헌병총사령부였다.

허태영은 진술에서 육군을 감시하던 육군 특무부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김창룡의 행적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그 같은 김창룡의 전횡과 독선 때문에 자신의 상관이었던 김창룡을 암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이 가지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허태영의 암살동기에 대한 진술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 방식, 김창룡의 활동에 대한 군부의 반응, 육군 특무부대의 활동 등 중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영은 육군 특무부대가 본래 임무인 군사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당시 육군 수뇌부였던 정일권, 이형근, 백선엽, 원용덕 등의 비리를 조사해 경무대에 보고함으로써 군에 혼란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점 때문에 김창룡 암살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동기 진술에서도 배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허태영은 자신의 행위가 이미 군 내부에서 일정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였고, 신초식도 김창룡 저격 이후의 계획까지 진술했다. 김창룡이 암살된 후 이진용이 특무대장에 임명되고 허태영은 헌병감에 임명되기로 했으며 자신들도 장교로 임관하기로 계획되었다는 등의 진술이 나온다. 하지만, 이내 허태영은 이전까지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진용과 도진희의 공범 여부를 부인하고, 군부 상층부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이 기록물에는 이후 공범으로 밝혀진 민의원 도진희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도진희에 대한 신문조서뿐 아니라 도진희 운전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신문조서, 허태영과 도진희가 차를 교환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도진희는 허태영과 마찬가지로 과거 김창룡의 부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육군 특무부대의 전신)에 근무하던 1949년 9월, 동대문구 민보단장 고희두 고문치사사건의 주범으로 실형을 살았다. 복역 도중 한국전쟁이 터지자 김창룡이 직접 옥문을 열어 구출했다. 그런 그가 왜 암살의 공범이 되었는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특무부대는 도진희가 암살에 공모하게 된 이유를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신을 김창룡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몰아갔다. 도진희는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로 볼 때 그가 공범이었던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사건의 수사는 주범 허태영과 관련자들 운전병 이유회, 육군본부 정병감 이진용 대령, 제12범죄수사대 대장 안정수 소령, 허태영의 동생 허병익 중위, 저격 하수인으로 신초식, 송용고 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문힐 것 같았던 사건의 배후수사는 그해 11월 13일 황운하(허태영의 부인)의 탄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황운하는 사건의 배후로 당시 2군사령관 강문봉 중장과 전 헌병사령관 공국진 준장을 지목했고, 자신의 남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다는 요지의 탄원을 각계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공국진 준장이 곧 자수하고 이로부터 사건 배후수사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강문봉 중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성정모 대령, 강홍모 대령, 백학규 중령, 최창준 예비역 소령 에 대한 검거가 이어졌다. 유재홍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 결과 암살의 배후로 최종 지목된 당시 2군사령관 강문봉 등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1957년 4월 17일 열린 군법회의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문봉 중장은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그 외 피고인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틀 후 이승만 대통령은 강문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가벼워진 것은 저격사건의 최고위층 강문봉뿐이었다. 강문봉에 대한 감형 지시가 있던 날 ‘행동대장’에 지나지 않았던 신초식과 송용고에게는 원심을 뒤엎고 사형이 언도되었다. 허태영은 물론 운전수 이유회에게 언도된 사형도 끝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5월 22일 신초식과 송용고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고, 같은 해 9월 23일 허태영과 이유회도 사형되었다. 결국 사건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들은 사건의 진실을 가슴에 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전체적으로 진술을 통해 사건의 동기와 배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기의 군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당시 군부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창룡 암살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살인행위가 아니었듯이 ‘김창룡 저격사건’의 기록물도 형사사건 기록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격사건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의 죽음과 관련된 암살의 동

기와 배후를 밝히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3 사료적 측면에서 본 형사사건기록의 가능성과 한계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1950년대 후반 한국사회, 특히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떠오르는 군대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창룡 저격사건’의 기록물이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김창룡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만큼이나 크다. 그가 단순히 육군 사찰기구의 수장이 아니듯 그의 죽음 또한 한 명의 군 고위급 장성의 죽음 이상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에 대한 군부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사건이 ‘김창룡 저격사건’이다. 그러므로 ‘김창룡 저격사건’의 기록물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방식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 군부의 존재 양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사건 기록물에서는 당시 군부의 반응이 잘 드러난다. ‘유엔군사령부 한국군’으로 이어지는 군 지휘체계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리고 김창룡을 지렛대 삼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군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창룡 저격사건’은 허태영을 중심으로 하는 하수인급 인물들에 의해 실행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당시 육군의 핵심 지휘부가 망라 되어 있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김창룡 저격사건’은 195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중요한 단면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렇기에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은 1950년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한국 군부와 이승만 정권, 더 나아가 당시 한국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또 간접적으로 1961년 군부가 5·16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치화(政治化)’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이다. 한국군부가 직접 정권을 장악하기 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력과 밀착하며 ‘정치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군부를 감시했던 김창룡과 특무부대의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군부의 반응은 1950년대 한국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김창룡 저격사건’은

바로 이 같은 배경 아래 터져 나온 사건이며, 그러므로 이 기록물은 1950년대 한국 정치와 군부의 정치화를 설명하는 데 간접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사건 배후로 지목된 군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까닭에 사건에 대한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 강문봉 중장과 공국진 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이 왜 허태영과 공모하여 김창룡을 암살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김창룡 저격사건에 관련되었는가 등 사건 관련 핵심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 이후 이들은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암살 동기에 대해 일정하게 증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이승만 정권 몰락 이후 사면 복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또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물들의 자료 뿐 아니라 군 관련 인사들을 조사했던 조사위원회의 자료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형근은 회고록에서 이 사건에 강문봉 이상의 배후가 있음을 거론하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로 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중지되었음을 회고했다. 이형근의 회고로 볼 때 '김창룡 저격사건'의 배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방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만 사실의 절반을 완성할 수 있으며, 김창룡의 죽음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를 온전하게 재평가할 수 있다.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의 한계는 여기에 있다. 사건을 최일선에서 진행했던 허태영을 비롯한 하수인급들에 대한 진술만이 있을 뿐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피의자들의 신문조서에서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확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수사과정에서 암살의 동기를 김창룡에 대한 허태영 개인의 '사원(私怨)', 즉 허태영이 서울지구 방첩대장에서 해임된 직후 김창룡의 처사에 대한 원한으로 김창룡을 암살했다는 특무부대의 주장과 전 군과 전 국민을 위해 행한 '애국적 거사'였다고 주장하는 허태영의 진술이 대립했다. 허태영은 암살의 배후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나 이내 다시 번복했다. 이후 육군 특무부대는 허태영과 그의 부인과의 자유로운 면회를 허용해 부인이 임신

하는 등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만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기록물은 이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많은 점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잘 규명되지 못한 이승만 정권 후반기의 정치 행태를 밝혀내는 데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맺 음 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사건의 전모를 최대한 숨기거나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허태영은 자신의 행위를 군이 숨기려하기보다는 애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태영은 김창룡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특무부대를 이용한 것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대신해 자신이 김창룡을 암살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사건 배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황운하의 탄원으로부터 시작된 재수사로 인해 사건 배후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처벌받았지만 허태영이 사건의 진상을 숨기려했던 의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료가 사건의 진실 전부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진실에 온전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건기록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의 복원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의 실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건기록 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교차검토(cross check)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증자료는 형사사건기록이 갖는 한계를 어느 정도 넘어설 것이다.

김창룡 저격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방증자료가 있다. 우선, 김창룡이 남긴 비밀 일기가 있다. 이 기록물은 사건 발생 직후 <경향신문>에 '김창룡 비밀유고(1956.2.3 ~ 2.7)'로 연재되었다. 허태영은 자신이 김창룡을 암살하게 된 동기를 법정에서

제 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해

진술했고, 그의 진술은 책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알려졌다(『名人獄中記 허태영편』, 희망출판사, 1966). 이외에도 김창룡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남긴 자사전 등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사건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사건의 실체와 이면을 보충해 줄 수 있다. 또 ‘김창룡 저격사건’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의 보충이 필요하다. 즉 김창룡이 암살된 배경의 이해, 당시 군부의 구조와 내부의 역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했던 사건 확대과정에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자료가 군부 내부의 동향과 구조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형사사건기록의 공개뿐 아니라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해 ‘역사화’ 작업이 진전되기를 기대해본다.



5.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Ⅱ) :

사료적 측면에서 본 형사사건기록의 가능성과 한계

1. 형사사건기록의 한국현대사 사료로서의 의미와 가치
2. 새로운 역사쓰기로서 형사사건기록의 활용 가능성
3. 결론을 대신하여 - 연구자의 역사적 상상력

5. 형사사건기록의 역사학적 의미(Ⅱ): 사료적 측면에서 본 형사사건기록의 가능성과 한계

오유석 (성공회대 강사)



1 형사사건기록의 한국현대사 사료로서의 의미와 가치

“제주 4·3의 재평가는 한국의 민주정부와 자료공개여부와 비례한다”

(요미우리 신문 1992년)

이 이야기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사가 1992년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보도특집을 내면서 아직도 그 진실은 커녕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의조차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일본과 과거사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 역사적 진실여부를 공방해 오고 있다. 이른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세계 기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정신대 할머니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일본의 침략행위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속속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인데 그들은 이 문제가 매우 정치적인 문제라는 의미에서 ‘민주정부’를 언급하고 있으며 같은 비중으로 ‘자료공개’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과거사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며 그래서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노 역사가의 언명처럼 한국에서의 20세기는 세계사의 격변 속에서도 가장 증폭된 ‘극단의 시대’ (Hobsbawm, 1997)¹⁾ 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확실히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가장 혹독한 ‘격변의 세기’였다. 우리 모두는 ‘식민지·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추격근대화’라는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을 겪으면서 신분 질서의 급격한 해체, 민족분단, 대량동원, 대량학살, 대량수탈, 반공주의하의 집단 공포정치와 군부권위의 주체제하의 집단억압과 저항을 경험하였다. 그 경험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고 집단마다 달랐다. 그러나 친일과 반일, 분단과 통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남과 북, 민주와 반민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극단적 대립과 갈등 사이에서 한국인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 오직 한 길만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역사만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그것이 정치적 탄압으로 일어난 정치사 및 사건사의 역사에서는 더욱 더 하나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또 다른 역사는 왜곡하거나 은폐·침묵되거나 지워져버렸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또 달라졌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발전시켜 온 민주화운동은 ‘기억투쟁’을 통하여 과거 국가 권력과 지배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지워진 과거사의 복원을 요구하며 민주화 이후 세워진 정부를 압박했고 그 결과 각종 과거사위원회 설치와 국가기록에 대한 공개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었다.

2007년 9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진보당 조봉암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민주화의 결실과 기록물

1)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 20세기 역사〉, 까치글방, 1997

공개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2006년 7월 4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47년만에 진보당사건으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같은 날 조봉암의 딸인 조호정 씨와 ‘죽산 조봉암선생 명예회복 범민족추진위원회’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1959년 7월 31일 서대문 교도소 사형장에서 산화한 조봉암선생의 사법살인사건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이 역사에 남긴 족적을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9월 18일 제 54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당한 ‘진보당 조봉암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가 죽산 조봉암선생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대선에서 200만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우리 시대 대표적인 보수정론지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조봉암은 한국에서 처음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던 정치인이다. 그는 전향 후 공산독재에 철저하고 분명하게 반대했다. 이런 인물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것은 한국 현대사의 그늘이다. 정부는 재심 청구와 독립유공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다.²⁾ 이러한 보도내용은 그동안 과거청산 논의와 관련하여 적지 않았던 보수적 저항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은 ‘억울한 죽음을 맞은 비운의 한 정치지도자’의 명예회복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식민·해방·분단·냉전·독재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의 이념적 갈등이 빚은 역사 및 기록의 왜곡과 정치적 폭력이 모두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냉전이데올로기로 재단해 왔던 한국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건에서 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그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재심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른바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의 공식 국가기록으로 남아 있는 형사사건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참조했다. 즉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존의 의혹들을 해소해 주는 충분한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국가기록(형사사건기록)을 충분히 조사, 활용하였다.³⁾ 형사사건기록, 특히 공안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기록은 그 기록 자체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실증적 증거라는 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우리 현대사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수많은 공안사건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모두 공개된다면 이를 통해 잊혀지고 침묵당한 역사를 복원하고 그것을 시대사별로 정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역사쓰기로서 형사사건기록의 활용 가능성 - 미시사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

실제 역사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재판(사건)기록이나 기록 문서’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연구성과들이 있다. 이를테면 진즈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⁴⁾,

2) <조선일보>, 2007년 9월 29일 사설

3) 이번 기록물 공개로 ‘조봉암 법살 사건’의 정치적 흑막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간접적 당사자들(판사들, 수사관들, 사건관련자들)이 기존의 자료들만으로 구성해 왔던 사건의 진실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형사사건기록 및 재판기록을 촘촘히 검토한 결과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사형선고를 한 점 등이 드러난 것이다. 즉 형사사건기록으로 드러난 증거불충분, 국가보안법상 범죄구성요건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사형선고를 한 점, 특무대 수사의 불법성 등은 그동안 진보당 및 조봉암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재심을 요구해왔던 ‘조봉암 구명위원회’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4) 카를로 진즈부르크, 『치즈와 구더기』, 문학과 지성사, 2001

데이비스의 마르탱 게르의 귀향⁵⁾, 레비의 무형의 유산, 레돈디의 이단자 갈릴레오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들은 모두 문서기록을 바탕으로 쓰여진 새로운 역사쓰기로서 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미시사' 연구들이다. 미시사란 구체적 개인이란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⁶⁾. 즉 전체사라는 흐름 속에서 정작 역사의 주체인 행위자로서 인간 개개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시구조역사보다는 경계가 잘 지워진 지역 내에서 어떤 위기나 사건에 대처하는 그 곳 사람들의 전략이나 가치관 등을 면밀하게 탐색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역사 속의 복잡하고 미묘한 리얼리티를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정치·경제·사회변화를 다루는 전체 구조사에서는 거의 접근 불가능한 개개인 혹은 공동체의 인적 관계망과 가치관, 일상적 생존 전략 등을 통해 역사를 보다 두텁고 조밀하게 조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학계에서도 이러한 미시사연구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이 공개하는 방대한 형사사건기록(재판기록 포함)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도 미시사연구의 층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건기록은 이른바 한 사회가 지배적으로 부과하는 정당과 정상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기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른바 사회적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괴리와 갈등을 극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미시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한국현대사의 경우 사상과 정치이념을 둘러싼 비교적 풍부한 공안사건기록(형사사건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침묵되고 날조된 대항 담론과 그 담지자들의 모습을 폭넓게 조명하고 이들을 새롭게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문기록들은 일종의 피의자와 관련자들, 그리고 신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화이며 구술증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화를 사이에는 서로의 이견이나 오해가 가감 없이 노출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 '범죄(사건)'의 각각의 행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혹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정권 담당자들의 생각과 진위를 엿볼 수 있는 증거를 잡을 수도 있고 역사적 기록이 없는 부분, 문헌으로 밝힐 수 없는 사소한 부분을 발견 할 수도 있다.

즉 그러한 진술이 나오는 역사적 상황맥락을 추적해볼 수 있다.

또한 형사기록은 역사적 사건·사실의 정당화라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것을 뒤집기도 하는 잠재적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 즉 직설적인 역사의 복원이라기보다는 역설적 복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우리는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의 진실뿐 아니라 가려진 이면까지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진보당사건 관계자들은 연배의 차이가 있고 각기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 이지만 대부분 일제 식민시기와 해방 직후의 건국 활동, 전쟁과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분단을 몸으로 겪어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형사기록은 개인 삶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분단'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어떻게 각 개인의 삶에 각인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삶의 지향과 과제가 '해방과 분단'에 있지만 그들이 처했던 서로 다른 사회역사적 '존재' 양식으로 말미암아 같은 공간과 시간에 같은 사건을 겪었다 해도 다 같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다 같은 역사해석일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와 과거 경험에 대한 다양한 판본을 볼 수 있다. 즉 관련자 모두 한국현대사에서 '해방과 분단'이 가한 남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삶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 구조의 제약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행위'자로 살아온 세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범죄'로 몰린 상황에 대한 해석도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마주치게 되는 각 개인들의 삶의 내용이 매우 다채롭다는 것도 형사사건 기록이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도 명백하다. 자칫하면 각 피의자가 처한 범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전유하였는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의 역사를

5)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마르탱 게르의 귀향』, 지식의 풍경, 2000

6) 곽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13~15쪽.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형사기록의 신문 조서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시종일관 개인적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활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끊임없이 반추하고 자신의 과거활동을 당시 사회 전체의 움직임과 연결시키거나 일체화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생애와 활동을 진술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진술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진술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료적 가치로서의 충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형사사건기록의 신문기록은 검사측이 원하는 대답을 강압적으로 유도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질문과 원하는 답을 강제하는 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짓과 부분적 감추기 등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 기록의 진술서는 구술과 비슷하고 피의자신문조서는 구술증언과 같은 대화이지만 이 자료들은 그것이 범죄와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과의 긴장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절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낙인될 수 있는 억압된 상황에서의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기록은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내는 구술기록과는 다른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한국현대사와 같이 왜곡과 굴절이 심한 역사를 재구성할 실증적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3 결론을 대신하여 - 연구자의 역사적 상상력

실증적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 형사사건기록을 연구자들이 실제 역사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구술기록이나 문헌 기록이나 그 자료가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이다.

형사사건기록을 활용할 때는 그것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위해 분석 도구를 갖고 있어야만 하며 연구자와 기록의 상호읽기를 통한 긴장관계를 멈추어서도 안 된다.

특히 형사사건기록의 분석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해석 작업이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미시사 연구들은 대부분 과거의 기록에 대한 연구자의 풍부한 상상력의 해석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해석이다. 연구자는 확실하게 재판기록을 둘러싼 권력자와 피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검사와 피의자의 주관적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연구자 자신이 그것을 토대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책임을 안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형사사건기록을 통한 새로운 역사 드러내기를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과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역사를 과거의 화석 같은 존재로부터 깨워서 피가 통하고 숨결이 있는 살아있는 실체로 복원하고 생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원과 생환이야말로 기록속의 역사를 살아 숨쉬는 역사로 만드는 자세일 것이다. 역사를 생환하고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그 시절을 어떤 형태로든 맞서서 걸어간 다양한 계급, 계층, 지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시절이 채워질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형사사건기록은 바로 그런 사람들 즉 역사에 자신들의 기록을 정당하게 남길 수 없었던 사람들의 기록이며 바로 이 점에서 새로운 역사쓰기와 읽기로서 형사사건기록이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새로운 자세와 풍부한 상상력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기록, 김창룡 저격사건

두 번째 기록, 진보당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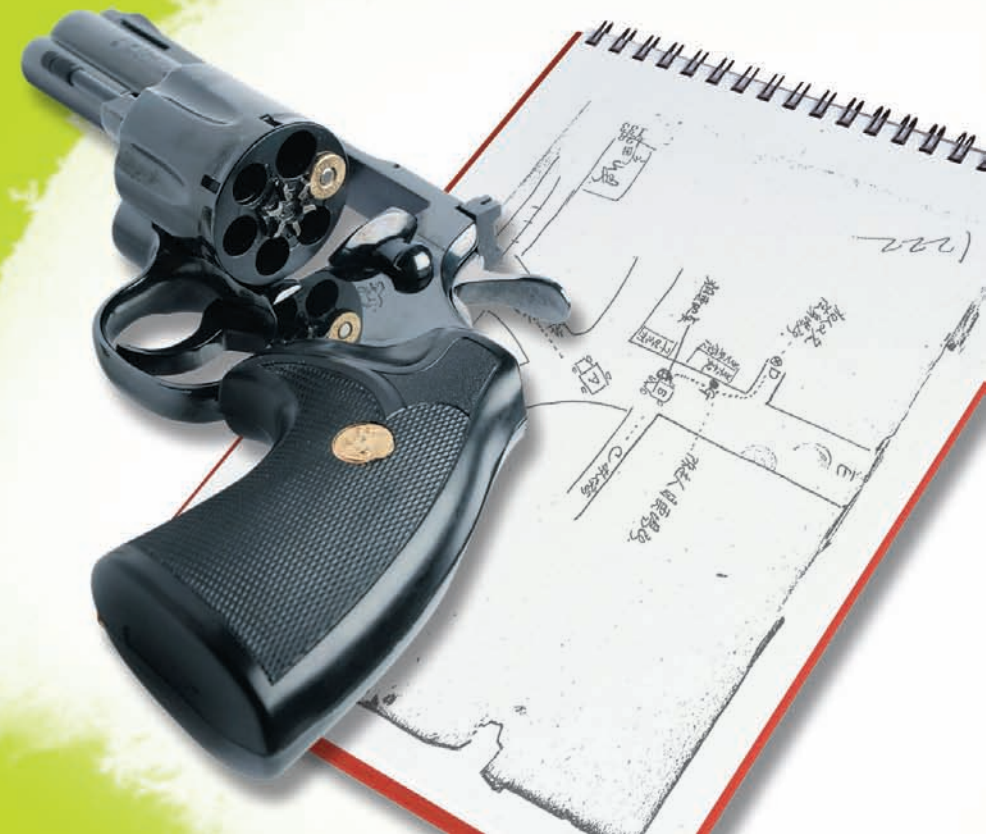
세 번째 기록,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네 번째 기록, 필화사건(1949~1965)

첫 번째 기록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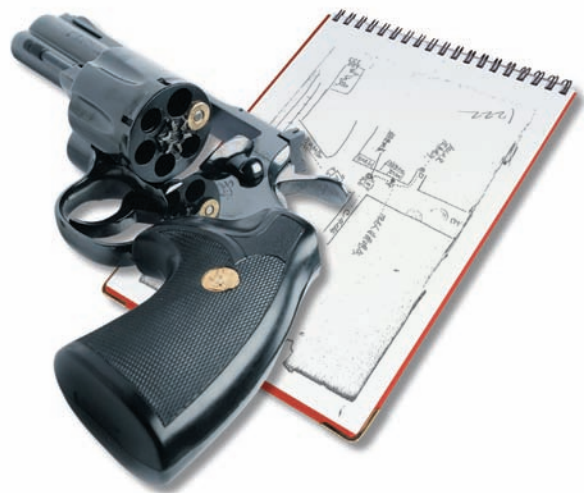
김창룡 저격사건

1. ‘김창룡 저격사건’의 역사적 의미 및 기록물 개요
2. 기록으로 보는 ‘김창룡 저격사건’
3. 사건조사이후부터 최종판결까지
4. ‘김창룡 저격사건’ 더 알아보기



첫 번째 기록 _

김창룡 저격사건



1

'김창룡 저격사건'의 역사적 의미 및 기록물 개요

1-1. '김창룡 저격사건'의 역사적 의미

1956년 1월 30일 아침, 육군 특무부대(이하 '특무대'로 줄임) 부대장 김창룡 소장이 출근길에 막아선 군복 차림의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범인들(3명)은 번호판 없는 지프차를 타고 도주했고 김창룡은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 특무대에 설치된 빈소를 찾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범인을 잡을 것을 명령했다. 특무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증언에 따라 용의자들의 인상착의가 만들어졌고 범행에 이용된 지프차 등이 지명수배됐다. 특무대를 비롯해 경찰과 헌병총사령부 등 각 수사기관들이 전력을 다했으나 범인을 곧바로 잡지 못했다. 2월 3일 김창룡의 장례식이 치러진

뒤에도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특무대 특별수사본부가 전국의 특무대 부대장들을 모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부대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뒤지던 506특무대장이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을 지냈던 허태영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특무대원들은 잠복과 감시 끝에 2월 23일 허태영 대령을 특무대로 연행했다. 특무대의 계속된 추궁과 추적으로 도피했던 신초식과 송용고, 그리고 지프차 운전자 이유희 등이 체포됐다. 그 외 지프차를 제공했던 105범죄수사단 허병익 중위, 특무대 수사방향을 알려주고 피의자들을 숨겨줬던 육군 정병감 이진용 대령, 허태영의 집을 드나들었던 안정수 대령 등이 연행됐다. 또 사건 직후 허태영으로부터 지프차를 샀던 민의원 도진희도 구속됐다.

김창룡이 누구이기에 대통령이 곧바로 조문왔을까? 그는 왜 그의 부하였던 허태영에게 암살됐을까?

김창룡은 1920년 11월 23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태어나 영흥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 신경(新京)의 만주철도회사에서 1년 근무했다. 그 뒤 일본군 헌병대 군속으로 입대해 일본군 관동군 헌병대에서 4년 4개월간 복무했다. 그는 관동군 헌병대에서 주로 대공사찰 업무를 담당했다. 김창룡은 해방 후 곧바로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련 군정과 인민위원회의 체포였다.

일제시기 경력으로 볼 때 그는 '친일파'였다. 그는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사병으로 입대해서 조선인과 독립운동 조직을 적발하는 등 공을 세워 군조(중사)로 제대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법률 제3호)은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창룡 (CET0019193)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있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대로라면 김창룡은 결코 국군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단은 과거를 묻지 않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공을 세워 죄를 갚으라며 친일파를 중용했다.

고향 땅에서 두 차례나 ‘전범’으로 잡혔다가 탈출한 김창룡은 38도선을 넘었다. 곧바로 국방경비대(육군의 전신) 제5연대(부산) 사병으로 입대했으나 가혹한 훈련을 견디지 못해 탈영했다. 그 뒤 제3연대(이리) 사병으로 재입대해 부연대장(김백일)의 추천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의 전신)에 입교했다. 1947년 4월 19일 소위로 임관한 뒤 국방경비대 제1연대(태릉) 정보장교로 임명됐다. 이때부터 그는 군내의 ‘좌익세력 척결’에 몰두했다. 일제 시기 활동과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었던 그의 행적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여순사건 직후 군대 내의 좌익세력을 적발할 목적으로 강도 높은 숙군(肅軍) 작업이 전 군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창룡은 유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일제시기 관동군 헌병대의 경험과 38선을 넘었던 경력이 잘 조합된 결과였다. 그는 1948년 12월 30일 이재복(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검거와, 1949년 4월 1일 이중엽(남로당 중앙간부)의 검거 공적으로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군내 좌익세력 척결’을 부르짖으며 많은 사람들을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도 있었다. 1949년 10월 29일 서울시 동대문구 민보단장 고희두가 육군 정보국 제3과(방첩과)에 연행돼 수사를 받던 도중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의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고문치사였다. 당시 육군정보국 제3과 이등중사였던 도진희는 주범으로 구속돼 3년형을 선고받았고, 도진희의 상관이었던 김창룡은 육군본부에서 공군본부로 좌천됐다. 시련이 닥친 김창룡에게 한국전쟁은 새로운 전기였다.

한국전쟁 직후 잠시 서울을 빠져나갔던 김창룡은 1950년 9월 25일 인천상륙작전에 참가, 서울에 입성했다.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자신이 본부장으로 취임해 부역자 처벌을 주도했다. 그 공으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게 됐다. 김창룡은 이승만의 오른팔이 됐고, 특무대를 창설해 이승만의 친위기구이자 무소불위의 권력 기구로 만들었다.

원래 특무대는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이었으나 1950년 10월, 김창룡은 대공 전담 기구로서 육군 특무대를 창설했다.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을 만큼 신임을 얻고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김창룡은 군내 방첩활동이라는 특무대 본래의 임무를 넘어선 영역까지 권한을 확대시켰다. 특무대는 각종 선거나 ‘족청(민족청년단)계 제거’ 등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개입해 이승만의 독재 강화에 이바지했다. 또 장성 임관 등에 개입하여 군부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김창룡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승만이 가장 신임했던 인물의 죽음이다. 이승만은 그의 암살소식을 듣자 곧바로 빈소를 찾아오고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장례식 조사를 포함해 3차례나 담화문을 발표했다. 수 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같이 하며 ‘형님, 동생’했던 백범 김구의 빈소도 찾지 않았던 이승만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김창룡에 대한 이승만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

김창룡의 죽음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애도는 1950년대 한국군의 특성과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방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한국전쟁기 ‘발체개헌’을 시도했던 이승만이 군대를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이종찬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종찬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이승만 대통령을



김창룡의 장례식 모습 (CET0056888)



김창룡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는 이기봉 국회의장의 모습 (CET0056888)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압박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전시(戰時)에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던 육군참모총장으로서의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렇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군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게 할 통로가 필요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특무대와 헌병총사령부(사령관 원용덕)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두 기구를 통해 군대를 적절하게 통제했다. 김창룡은 누구보다도 이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허태영의 진술처럼 고급 장성들의 비위를 조사해 경무대에 보고하는 등 방첩활동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다. 김창룡 저격사건은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방식에 대한 군 내부의 반발이었다. 그렇기에 허태영은 시종일관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군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영기 (조선태강사)

1-2.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물 개요

1 2 1. 생산기관 및 이관 이력

‘故김창룡 중장 저격사건’ (이하 ‘김창룡 저격사건’ 이라 한다) 기록의 생산기관은 서울지방검찰청(사건기록) 및 서울고등검찰청이며, 생산년도는 1956~1958년이다. 판결문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보존하다 1996년에 정부기록보존소(현재의 국가기록원)로 이관되었으며, 사건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현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하다 2005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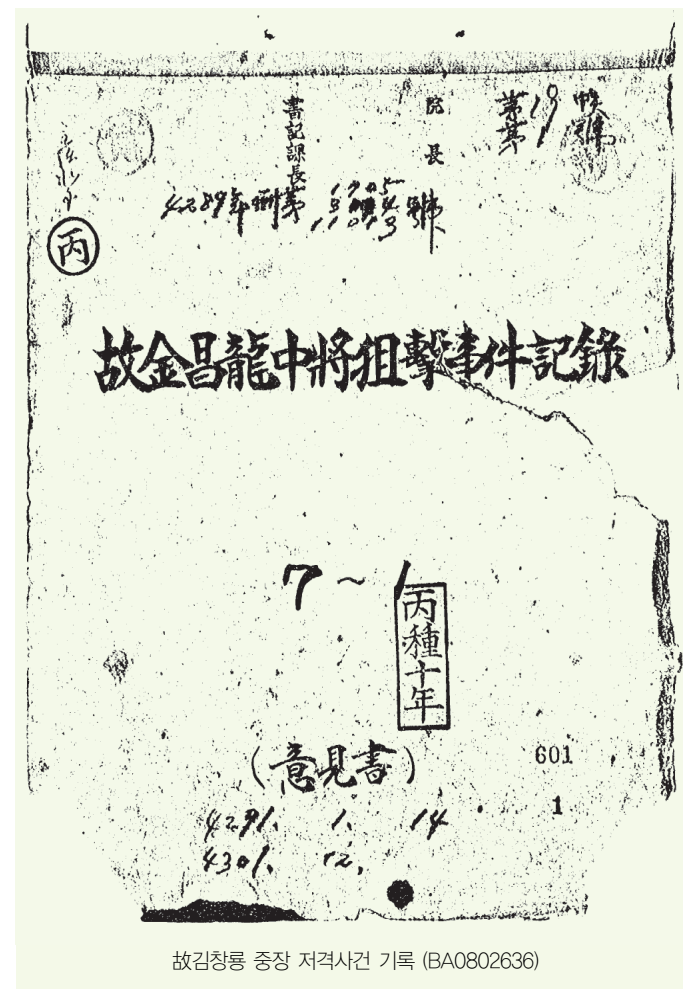
그런데,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 중 형사사건기록은 육군 특무부대(이하 ‘특무대’ 로 줄임)에서 생산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기록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의 생산기관은 육군 특무대이다. 당시 육군 특무대가 사건을 조사한 이유는 피해자인 김창룡이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육군 특무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10월 창설되어 1960년 7월까지 존속했던 기관으로, 대공(對共)업무를 전담했다.

1 2 2. 보유 기록물 개요

‘故김창룡 중장 저격사건’ 기록물은 형사사건기록 6권(관리번호 BA0802636~BA0802641), 판결문 7건, 사형집행종료보고 2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창룡 저격사건’의 발생, 수사 및 재판과정을 일괄해 조명할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군 검찰부에 있는 기록도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9명이 기소되었으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3인은

민사재판에 회부되었고, 허태영 등 현역 군인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형사사건기록은 허태영, 허병익, 이유희 등의 기록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던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등 민간인 피의자 기록이 대부분이다. 군사재판을 받았던 허태영, 허병익, 이유희, 이진용 등의 사건기록은 육군 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배후인물로 추가 구속되었던 강문봉, 공국진 등의 기록은 판결문만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육군 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은 육군 특무대에서 조사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를 위한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이 추가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기록은 육군 특무대에서 생산한 기록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故김창룡 중장 저격사건 기록 (BA0802636)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형사사건기록은 총 3,000여 쪽,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에는 육군 특무대의 의견서, 수사기록(부대장 피살사건 발생보고, 검증조서, 시체검안서, 부대장 저격범 체포수배, 故김중장 저격 용의자 심지보고 등), 검증조서, 구속영장 등이 편철되어 있다. 2권부터 6권까지는 도진희, 신초식, 송용고, 허태영, 허병익, 이유회 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판결문은 총 6건으로, 신초식과 송용고 및 도진희의 판결문이다. 신초식과 송용고의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항소판결문(1956. 11) 및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등본(1956. 8) [BA0062032], 대법원 판결문 및 상고판결문(1957. 4)[BA0024909, BA0024912]이며, 도진희의 판결문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1956. 9)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957년 9월) 및 대법원 상고판결문(1958. 1)[BA0062041]이다.

사형집행종료보고는 1958년 5월 20일 서울형무소에서 신초식과 송용고의 사형집행 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문건이다.

표 1. 형사사건기록 목록

관리번호	제 목	쪽 수	비 고
BA0802636	입수금품총목록		
	의견서	1	
	부대장피살사건발생보고	25	
	검증조서	26	
	사체검안서	33	
	부대장저격범체포수배	37	
	故김중장저격범심지보고	41	신초식
	故김중장저격용의자수사보고	44	
	故김중장저격범동행보고	49	신초식, 이오고
	故김중장살해공범자인지보고	55	도진희
	검증조서 “모의”	57	
	민의원체포구금동의요청건 “사본”	81	도진희

관리번호	제 목	쪽 수	비 고
	同上 동의의 건 “사본”	83	도진희
	구속영장	84	도진희
	구속영장		송용고
	구속영장		신초식
	故김중장살해용의자동행보고	85	도진희
	감정서	87	
	도의원차량관련사실조사보고	101	
BA0802637	증인진술조서	105	이오근
	증인진술조서	215	박오준
	진술서	246	이오근
	진술서	250	신초식
	증인진술조서	253	박오길
	진술서	279	허태영
	진술서	287	허태영
	진술서	290	박오길
	진술서	293	허병익
	진술서	296	이오철
	진술서	298	나오수
	진술서	300	이윤희
	증인진술조서	305	나오수
	증인진술조서	321	이오철
	피의자신문조서	357	이윤희
	피의자신문조서	408	허태영
	피의자신문조서	505	허병익
	피의자신문조서(1일)	539	도진희
BA0802638	피의자신문조서(2일)	660	도진희
	증인진술조서	705	박오준
	증인진술조서	729	이오근
	증인진술조서	766	우오준
	피의자신문조서(3회)	823	도진희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관리번호	제 목	쪽 수	비 고
	피의자신문조서(4회)	867	도진희
	피의자신문조서(5회)	890	도진희
	증인진술조서	962	김○○
	진술서	998	김○삼
	피의자신문조서	1000	신초식
	증인조서작성의뢰	1081	김○곤
	증인조서작성의뢰	1083	김○곤
	진술조서	1084	김○곤
BA0802639	증인진술조서	1096	장○현
	증인진술조서	1146	이○대
	증인진술조서	1180	김○순
	증인진술조서	1223	김○복
	증인진술조서	1260	권○자
	증인진술조서	1277	천○순
	증인진술조서	1297	임○갑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329	이윤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442	허태영
	진술조서	1525	구○효
	진술조서	1560	이○순
BA0802640	증인진술조서	1599	김○수
	진술서	1645	신초식
	피의자신문조서(1회)	1650	신초식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818	허태영
	증인진술조서	1936	신○엽
	피의자신문조서(2회)	2001	신초식
BA0802641	피의자신문조서(1회)	2084	송용고
	진술서	2177	송용고
	피의자신문조서(2회)	2191	송용고
	피의자신문조서(3회)	2323	송용고

2

기록으로 보는 ‘김창룡 저격사건’

1956년 1월 30일 아침, 당시 김창룡 육군 특무부대장은 출근길에 괴한들로부터 권총 저격을 받고 파살되었다. 이 사건은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군기(軍紀)사건으로, 사건발생, 범인 체포, 최고위급 장성의 사건 연루가 드러나기까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재판은 무려 90여 회의 공판을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동안 김창룡 저격사건의 구체적인 진상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다.

👉 ‘김창룡’은 누구인가?

- ▶ 함경남도 영흥 출생
- ▶ 영흥공립보통학교, 영흥공립농업학교 졸업
- ▶ 만주철도회사 신경(新京) 근무
- ▶ 1941년 일본 관동군 헌병대 입대
- ▶ 해방 후 귀국, 1947년 육군사관학교 입교, 3기생으로 졸업
- ▶ 1947년 4월 19일 소위 임관, 제1연대 정보장교로 임명 받아 대공업무 담당
-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대대적인 좌익세력 척결 활동과 숙군(肅軍) 작업으로 이승만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
- ▶ 1951년 육군 특무부대장 승진
- ▶ 1953년 준장 승진
- ▶ 1955년 소장 승진
- ▶ 1956년 1월 30일, 저격으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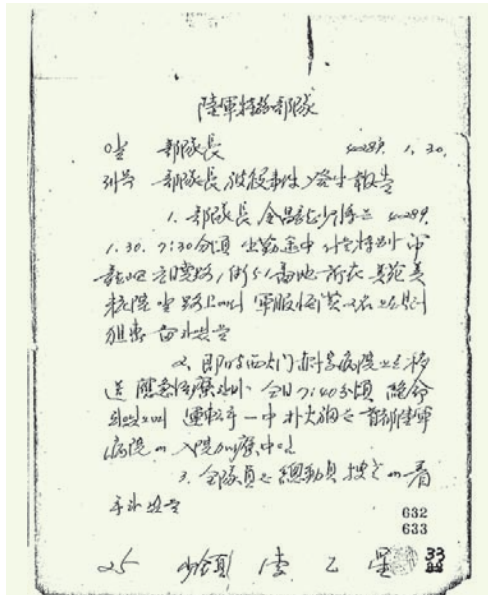
2-1. 1956년 1월 30일 7시 30분의 총성

1956년 1월 30일 새벽 7시 30분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소장은 출근 도중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51번지 미원(美苑)미장원 앞 노상에서 군복을 입은 괴한 2명으로부터 저격당했다. 사건 직후 김창룡은 서대문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7시 40분경 사망했고, 운전수 박○○은 중상을 입고 육군 수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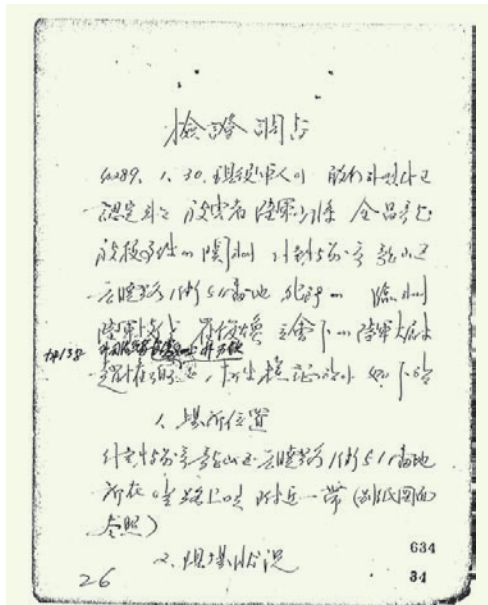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육군 특무대는 부대원을 총동원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부대장 피살사건 발생보고 (1956.1.30) (BA0802636)



검증조서 (1956.1.30) (BA0802636)

〈부대장 피살사건 발생보고〉를 육군 특무대 부대장에게 올렸다. 그리고 같은 날 특무대 수사관들은 사건현장인 용산구 원효로 1가 51번지에 출동해 4시간에 걸쳐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검증조서〉를 작성했다. 범행현장은 김창룡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며 그 부근은 자혜병원 등 유명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현장에서는 범인들이 발사했다고 추정되는 미제45구경 권총 탄피 2개가 발견되었으며 그 옆 담장 약 2미터 범위 내에 6발의 탄흔이 발견되었을 뿐 다른 단서들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현장 목격자인 미용사 김○○은 미장원 옆 공터에서 장교복을 입은 군인 2명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그 중 1명은 얼굴이 미남형으로 키가 6척쯤 되고, 나이가 28세 가량이었고 다른 1명은 키 5척 6촌, 나이는 26세 가량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사건현장에서 국방색 호로형 지프차에 발동을 걸고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고, 7시 30분경 김창룡이 탑승한 남색 지프차가 내려올 때 도로를 차단했고 김창룡이 탄 지프차가 크락슨을 2번 울려 신호할 무렵 2명의 군복을 입은 괴한이 김창룡의 차문을 열고 권총을 5, 6발 발사해 김창룡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수에게도 증상을 가한 후 지프차를 타고 원효로 전차도로 방향으로 도피했다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1월 30일 9시에서 9시 20분에 육군 특무대는 시체를 검안하고 〈시체검안서〉를 작성·보고했다.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시체는 안색 창백, 체온 하강, 동공 산대(散大)했으며 사지하악(四肢下顎)과 기타 관절은 사후강직(死後強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시체상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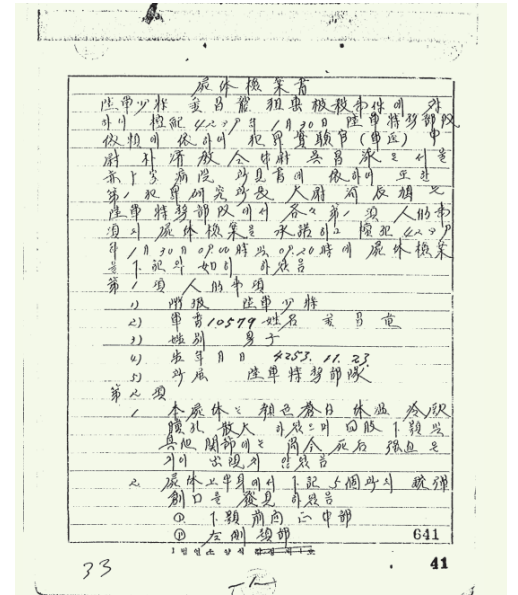
에서 5개의 총탄창구를 발견했는데 하악전면정중부(下顎前面正中部), 좌측경부(左側頃部), 우측 쇄골하부, 우측 액하부(腋下部), 시체 좌측 쇄골부에서 소절개흔(小切開痕)을 발견했다. 소절개흔은 적십자병원에서 미제45구경 권총탄환을 절개해 적출한 절개창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우측 견갑부 외 좌측 전박내측(前膊內側)에 총탄찰과상이 있었다. 결국 김창룡의 사인은 전반적인 검사와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을 구명하지 못했지만 총창으로 인한 폐장과 심장 대동맥 등의 손상, 출혈 과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측했다.

2-2. 사건의 단서를 수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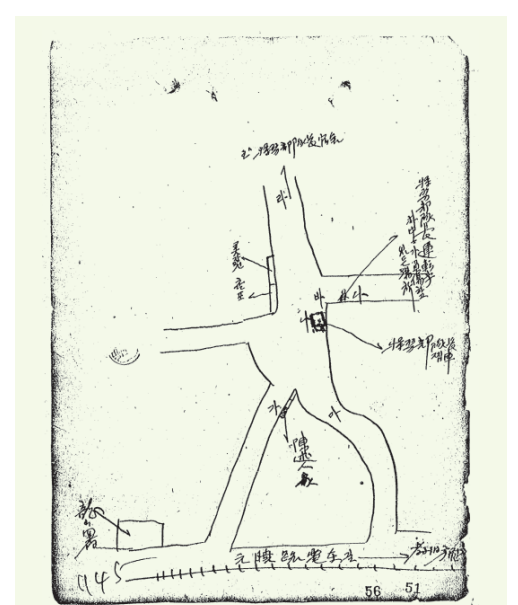
1956년 1월 30일 김창룡 특무대장 피살 당시 사건 현장 상황, 저격법들의 인상착의, 지프차에 대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나타난 증언은 다음과 같다.

저격당한 김창룡을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던 육군 특무대 문관 장○○은 1월 30일 오전 7시 30분경 집에서 총성 4발을 듣고 현관 밖으로 뛰어 나왔다가 김창룡이 피습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의 집은 사건현장과 불과 약 10여 미터 떨어져 있었다.

장○○의 진술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경 ‘가’ 지점에 나서 보니까 ‘나’ 지점가로(사건현장도1) 양탄벽에 특무대 부대장의 지프차가 약간 비스듬하게 붙어있었고 지프차 옆으로 가서 차문으로 들여다보니 김창룡은 차 앞자리에 앉은 채 왼쪽으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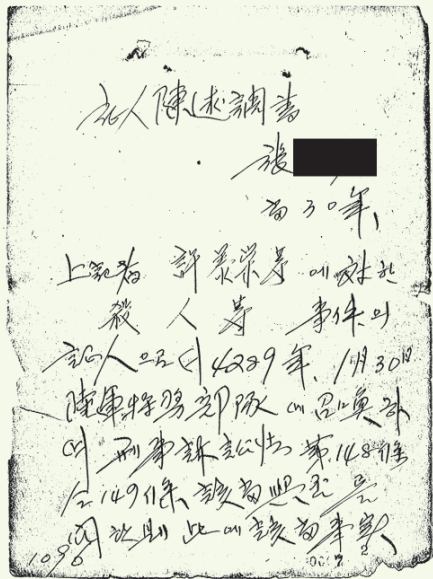
시체검안서 (1956.1.30) (BA080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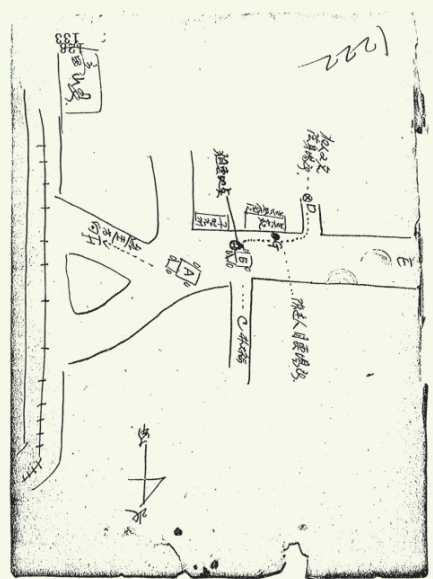
사건현장도1 (1956.1.30) (BA0802636)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장○○ 증인진술조서 (1956.1.30) (BA0802639)



사건현장도2 (1956.1.30) (BA0802636)

그리고 부대장의 운전수 박○○ 중사가 부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차에 태워 적십자병원으로 갔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창룡은 절명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인인 김○○은 등교길에 자혜병원 부근에서 사건을 목격했다. 1월 30일 7시 30분경 사건현장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그는 도로상에 군용 지프차가 가로놓여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한다. 잠시 후 푸른색 지프차가 자혜병원 쪽에서 내려와서 가로놓여 있던 차에게 비껴 달라는 신호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갑자기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푸른색 지프차의 문을 열고 김창룡에게 권총 4발을 발사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사건현장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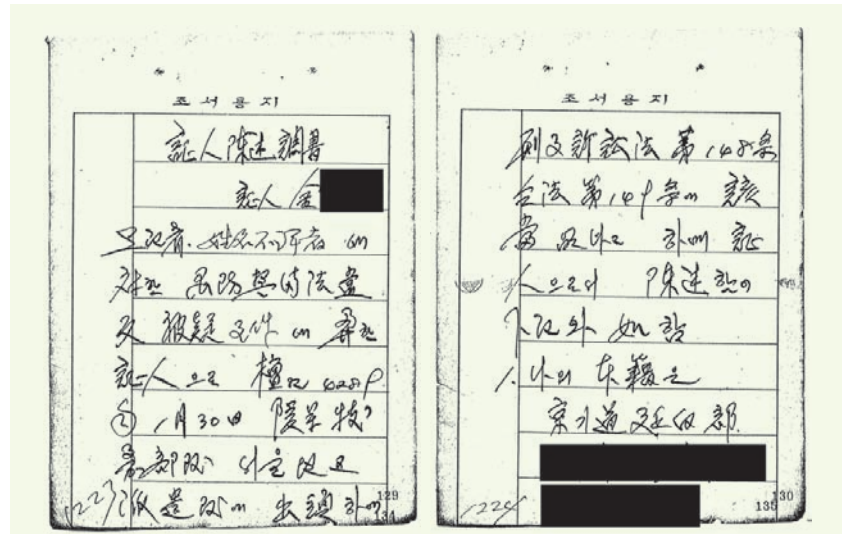
당시 범인들이 사용한 권총은 미제45구경 권총이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3~4발이라고 증언했다. 총을 직접 발사한 범인은 크고 잘생긴 편이었고 옷은 작업복에 상의는 시보리 잠바를 입고 있었다. 운전대에 앉아 있던 사람은 키가 별로 큰 편은 아니었으나 역시 군복을 입었다고 했다. 범인들이 사용한 지프차는 한국군 지프 차로, 도장한 색은 윤택이 없는 국방색이고 텐트 천으로 호로를 씌웠으며 앞뒤 번호판은 없었다고 한다. 범인들은 김창룡을 저격한 후 용산경찰서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현장에서 노점상을 했던 권○○(당시 50세)은, 아침 7시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원효로 1가 자혜병원 옆)에 나와 있었고, 사건현장으로부터 6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사건현장에 군복(미제 작업복)을 입은

군인 2명과 지프차 1대가 노점 아래에 서 있었고, 잠시 후 김창룡의 차가 내려와 크랙슨을 몇 번 울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갑자기 군인 한명이 김창룡의 차문을 열고 총을 5발 쏘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창룡은 ‘아이고’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졌으며, 군인들은 타고 왔던 지프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170센티미터 정도의 큰 키였으며, 계급장이 없는 모자를 썼고, 옷은 국방색 미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1956년 1월 30일 오전 7시 30분, 김창룡은 용산구 원효로 1가 10의 1 자혜병원 앞 노상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피살되었다. 저격범은 모두 2명이고 권총은 5발이 발사되었다. 4발은 김창룡에게 명중되었고, 1발은 박○○의 오른쪽 팔뚝에 맞았다. 사고 지점은 김창룡의 집에서 120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자혜병원과 미원미장원 앞인데, 구멍가게가 있고 그 앞에는 전신주가 하나 서 있었다. 그 전신주 부근은 좁은 골목이었는데 전신주 앞에는 청색이 혼합된 녹색 지프차가 서 있었으며, 김창룡의 지프차가 이곳을 통과하려고 크랙션을 울렸으나 그 지프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돌연 전신주 뒤에 숨어 있던 괴한 한명과 뒷골목에 숨어 있던 괴한 1명이 김창룡의 지프차 문을

열고 김창룡에게 권총 5발을 발사한 후 길을 가로막고 있던 차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범인 중 한 명은 약 5척 8촌 쯤 되는 키가 큰 자로서 야전점퍼에 하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또 한 명은 키가 5척 7촌 정도인데 아래 위 모두 국방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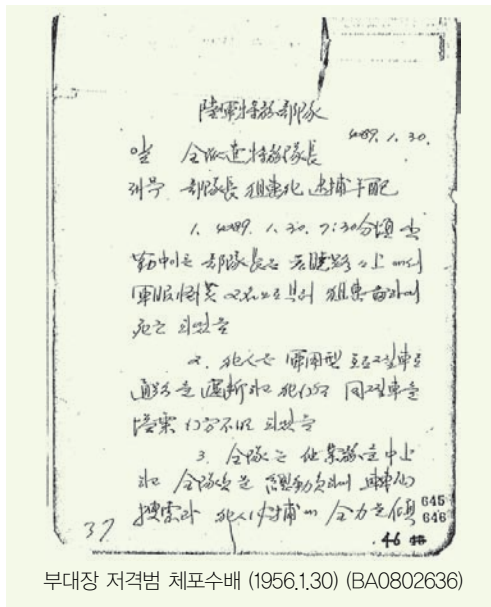


김○○ 증인진술조서 (1956.1.30) (BA080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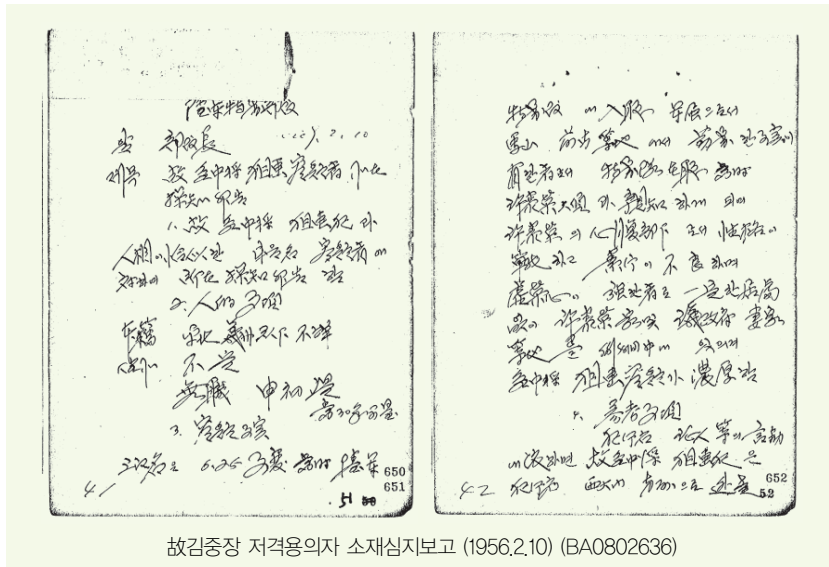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3. 저격사건을 수사하라-드러나는 용의자들



부대장 저격범 체포수배 (1956.1.30) (BA0802636)



부대장 저격범 체포수배 (1956.2.10) (BA0802636)

1956년 1월 30일 아침, 사건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인상착의와 범행 때 사용된 차량의 특징을 토대로 육군 특무대는 사건발생 당일인 1월 30일 〈부대장 저격범체포수배〉를 하달해 전 대원을 총동원, 범행에 사용된 지프차에 대한 차량수색을 지시했다.

그러나 육군 특무대는 사건수사 10여 일이 지나도 김창룡 저격 범인들을 체포하지 못하다가 1956년 2월 10일에서야 저격범들과 인상이 흡사한 용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부대장 저격범 소제심지보고〉를 작성한다. 특무대에서는 김창룡을 암살할 만한 유력한 혐의자를 찾던 중 허태영 대령을 주목하게 된다. 육군 특무대는 허태영의 집 주위에 잠복해 있다가 증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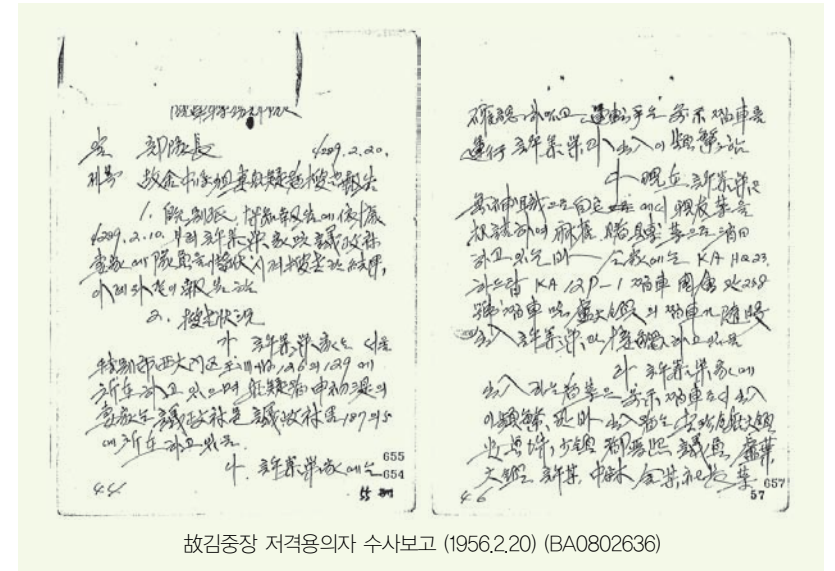
진술한 자들과 흡사한 용의자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신초식으로 나이는 30세 가량이었다. 신초식은 한국 전쟁 당시 육군 특무대에 군속으로 입대해 마산과 전방 등지에서 근무했고, 특무대에서는 허태영의 심복이었던 인물이었다.

이후 육군 특무대의 수사관들은 2월 20일 허태영의 집과 의정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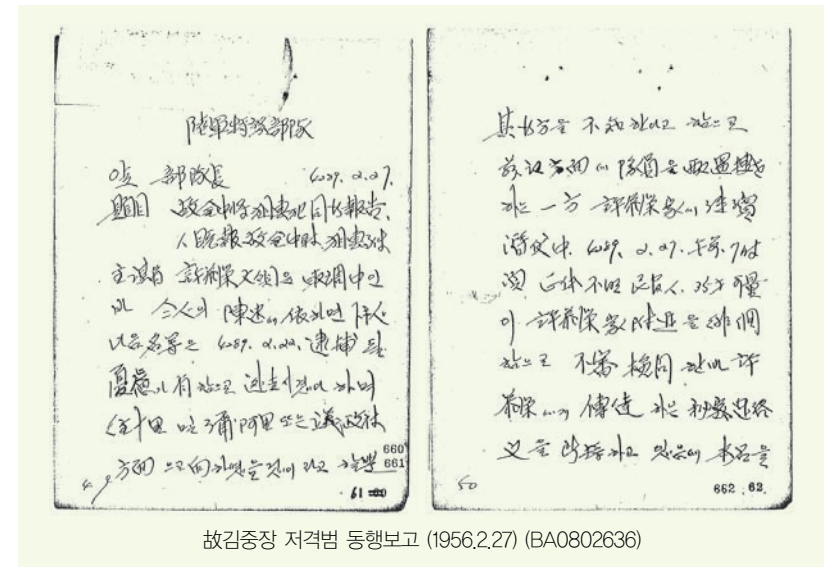
있는 신초식의 처가 주변에 잠복하면서 주변 인물들의 동향을 수사하게 된다.

〈부대장 저격범 소제심지보고〉에 따라 2월 10일부터 허태영의 집과 신초식의 의정부 처가에 특무대원들을 잠복시켜 수사했다. 신초식과 송용고는 허태영의 집에서 일절 외출을 하지 않았다.

허태영의 집에는 이진용 대령, 안정수 소령, 도진희 의원, 노엽 대령, 허모 중위, 김모 사장 등이 왕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창룡의 저격범들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용의자들을 연행한 후 사실규명하자는 〈부대장 저격범의자 수사보고〉를 올리게 된다. 2월 27일



부대장 저격범의자 수사보고 (1956.2.20) (BA0802636)



부대장 저격범 동행보고 (1956.2.27) (BA0802636)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에서 체포해 <故김중장 저격범 동행보고>를 올리게 된다.

육군 특무대는 사건수사 20여 일만에 김창룡 저격사건범으로 육군 대령 허태영, 운전병 이유희, 육군본부 정병감, 이진용 대령, 제12범죄수사대 대장 안정수 소령, 허태영의 동생 허병익 중위, 저격 하수인으로 신초식, 송용고 등을 검거했다.

김창룡 저격사건의 저격범들을 체포해 취조한 결과 송용고와 신초식은 허태영의 심복으로 허태영의 선동에 호응해 허태영으로부터 권총을 받아 김창룡 특무대 부대장 지프차의 진로를 막고 송용고는 2발, 신초식은 3발을 발사해 김창룡을 암살하고 운전수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그 뒤 허태영에게 성공했다고 보고하고 범행 때 사용한 권총은 운전수를 시켜 허태영 집 부엌에 묻었다는 것이다.

2-4. 그들은 왜 김창룡에게 총을 겨누었는가?

1956년 2월 27일에서 3월 1일까지 육군 특무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의 피의자들인 허태영, 송용고, 신초식, 이유희, 도진희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신문은 김창룡 저격사건의 경위와 저격 당시의 상황진술, 지프차 처리과정에서 도진희 의원의 사건과의 관계 유무, 다른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었다.

허태영의 운전병이었던 이유희는 김창룡 저격에 가담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는 당시 사령관이었던 허태영 대령의 지프차 운전수로 오기 전 1955년 4월에서 7월경 허태영의 집에서 송용고와 신초식을 알게 되었고, 허태영의 운전수로 있으면서 상관·부하를 초월한 형제 이상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했다. 1955년 9월 중순경부터 김창룡 살해계획을 논의했는데 암살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월 23일 10시경 송용고가 부산에서 상경해 합류한 이후이고, 자신은 단순가담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허태영은 범행동기, 범행모의 과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허태영은 김창룡이 육군 특무대 부대장으로 군사안전보장에 주력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허태영은 김창룡이 고급장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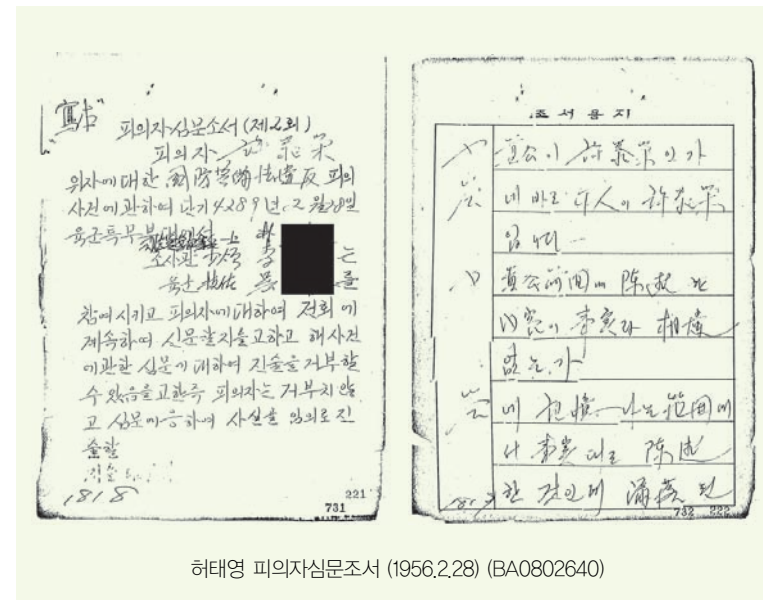
비리를 조사·입건해서 군 내부를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는 가운데 1955년 10월 말부터 허태영은 김창룡을 제거할 결심을 했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적당한 인물을 물색하던 중 과거 특무대 재임 때부터 심복으로 있던 신초식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허태영은 1955년 11월 초 시내 남산동 요정에서 강문봉 중장, 김○○ 준장과 김창룡이 회식한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이 기회에 김창룡을 살해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암살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허태영은 신초식 혼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산에 있던 송용고를 상경시켜 김창룡 암살계획에 참여시켰다고 진술했다.

신초식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에게 허태영은 부모, 형과도 같은 사람으로 살해 동기는 허태영 대령에게 있으나 살해 결의는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 군부 내 장성들이 자신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허태영의 말을 믿고 허태영의 지시에 따라 김창룡을 살해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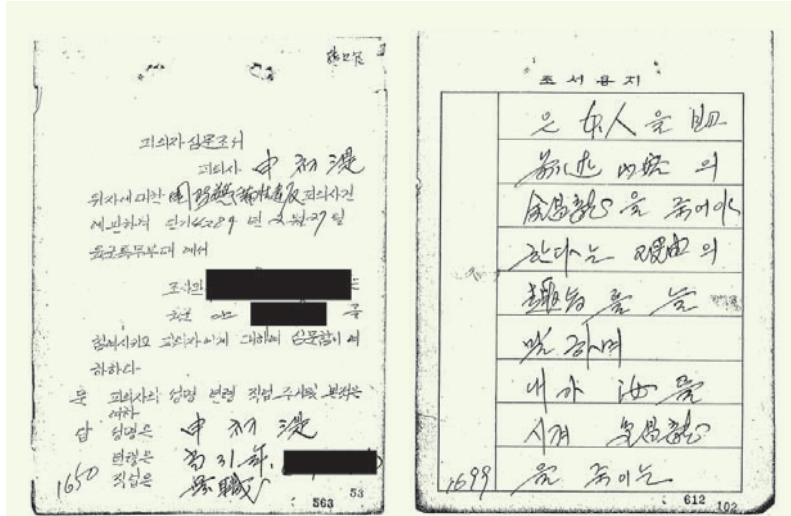
또한 신초식은 김창룡 저격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손원일과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대장, 이형근 대장, 원용덕 중장, 제2군사령관 강문봉 중장, 입법부의 도진희 의원이 중심이 된 세력파도 이미 논의가 되었다는 말을 허태영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사건이 발각되어도 절대 체포되지 않을 것이며 거사에 성공하면



허태영 피의자신문조서 (1956.2.28) (BA0802640)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신초식 피의자신문조서 (1956.2.27) (BA0802638)

특무대 부대장에는 이진용 대령이 임명되고, 허태영은 헌병감, 송용고와 신초식은 육군 중위로 임명되어 심향등지로 파견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허태영은 김창룡 저격사건의 배후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허태영은 1956년 2월 23일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사건의 배후에 대해 신초식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

했지만, 2월 27일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입장을 바꿔 배후는 없고, 다른 관계자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진희 의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도진희가 국회의원이었으므로 지프차를 잘 처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매수했던 것이며, 송용고를 피신시킨 이진용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 없다고 진술했다. 신초식이 진술했던 군 지도부와의 암살계획 논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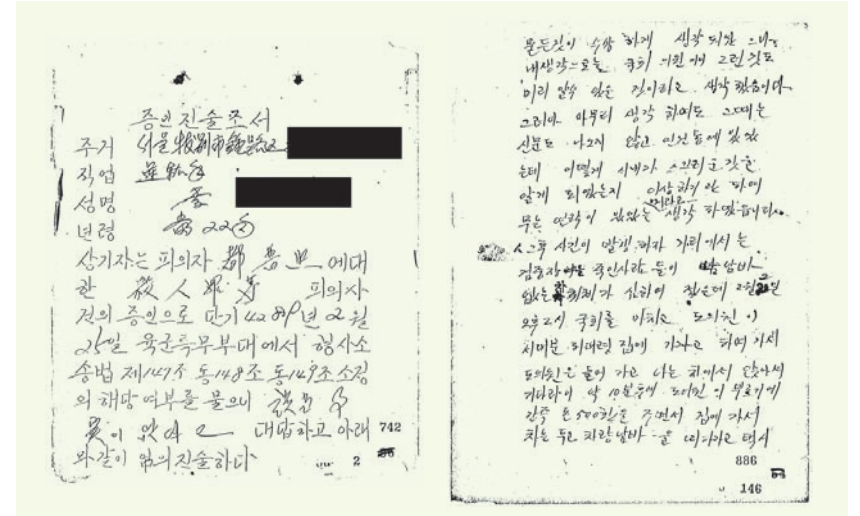
2-5. “남바 없는 국방색 지프”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해 저격 당시 이용되었다는 번호판 없는 국방색 지프차는 사건 직후 수배되었다. 그리고 지프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철저한 차량 검문이 시작되었다. 허태영은 암살을 계획하면서 허병익 중위(제15범죄수사대 소속)의 차가 번호판이 없는 군용차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사용하기로 했다. 허병익의 “남바 없는 국방색 지프”는 저격 당일 출근 중이던 김창룡 지프차의 통행로를 막았고 저격 후에는

허태영의 차고에 보관되었다. 그뒤 차는 검문과 추적을 피해 제3자에게 인계된 후 수리·도색을 거쳐 새 번호판을 달고 새로운 차로 다시 운행했다. 차량에 대한 수사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피의자 신문이 시작된 이틀 후인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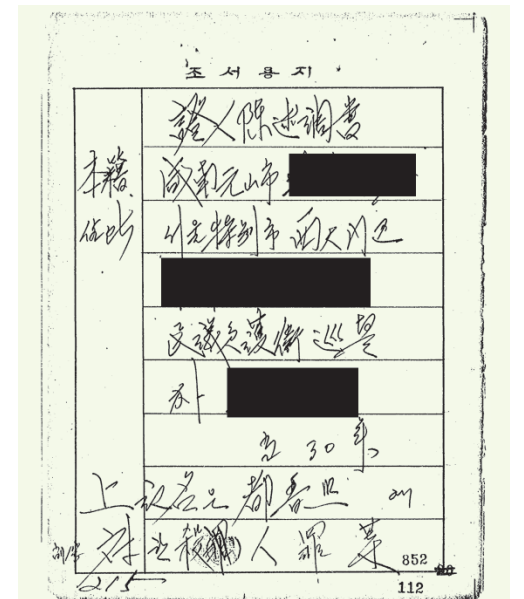
2월 25일에서 29일까지 7인의 증언으로 이루어졌는데 허태영이 추적을 피해 지프차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에 연루된 인물을 보여준다.

국회의원 도진희의 운전수인 이○○은 1956년 2월 25일과 26일의 진술에서 사건 당일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월 30일 아침, 도진희의 딸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길에 효자동에서 나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소 의아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도진희가 “오늘 시내에서 시끄러웠지?” 하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후 도진희와 함께 국회에 나갔다가 김창룡 암살 소식을 듣고는, 문득 아직 신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진희는 아침에 밖이 시끄러운 것을 알았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 증인진술조서 (1956.2.25) (BA0802637)

이○○ 진술서 (1956.2.26) (BA0802637)



박○○ 진술서 (1956.2.26) (BA0802637)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그 뒤 이○○은 2월 2일 국회를 마치고 도진희를 태우고 허태영의 집을 방문했다. 10분쯤 후 도진희는 돈 500환을 주며 집에 가서 차는 두고 번호판을 떼어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도진희의 차에서 떼 번호판을 허병익의 “남바 없는 국방색 지프”차에 붙였고, 또다시 도진희의 지시로 차의 앞문 오른쪽 호로문과 뒤 호로문을 수리했다. 2월 22일 국방색인 차색을 청색으로 바꿔 칠해 완전 개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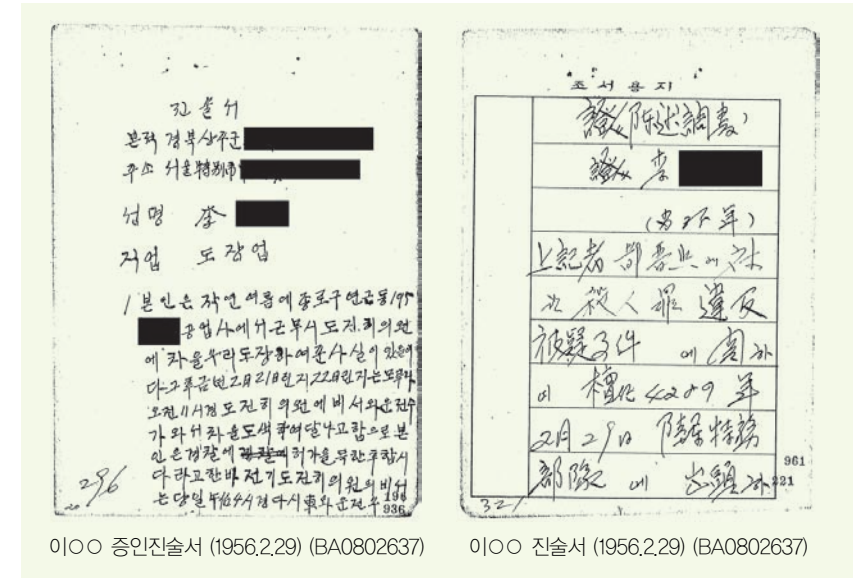
도진희의 운전수인 이○○에 이어 도진희의 호위순경 박○○의 증언이다. 박○○은 김창룡 저격사건이 발생하고 3~4일 후 지프차가 교환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도진희가 교환했다고 하는 지프차를 보았더니 국방색에다 번호판이 없으며 호로 등을 수리한 흔적이 있고 교환한 후 일체 운행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불법 차량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역시 도진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어 운전수인 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언급을 꺼리면서 다만 호로와 문짝을 수리했다는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김창룡 저격에 사용되었던 차량의 호로가 찢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평소 도진희와

김창룡의 친분 관계를 생각하고는 덮어두기로 했다. 도진희가 교환해 수리한 차량은 약 5일 후 청색으로 도색되고 ‘관 258호’의 번호판을 달고 다시 운행했다.

박○○의 진술이 수집된 3일 후인 1956년 2월 29일, 허태영에게 차량을 대여해 준 허병익 중위의 진술이 있었다. 허병익은 자신의 차를 도진희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 차는 1956년 1월 29일 허태영에게 대여한 차량이라는 것이다. 대여 차량은 허태영의 차고에 보관 되다가 1956년 2월 2일 도진희에게 매도되었고, 같은 날 도진희 차량의 번호판 ‘관 258호’가 번호판이 없던 허병익의 차에 부착되었다. 차가 국방색에다 호로가 찢겨 검문을 당하지 않을까 허병익이 걱정하자 도진희는 관용 번호판이 달린 국회의원의 차라 검문당할 염려가 없다고 장담했다. 차량대금은 도진희가 나누어 지급

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인 1956년 2월 29일 도장업자 이○○의 진술이 있었다. 1956년 2월 21일에서 22일경 오전 11시쯤 도진희의 운전수와 비서가 와서 차를 도색해 달라고 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일행은 오후 4시경 동대문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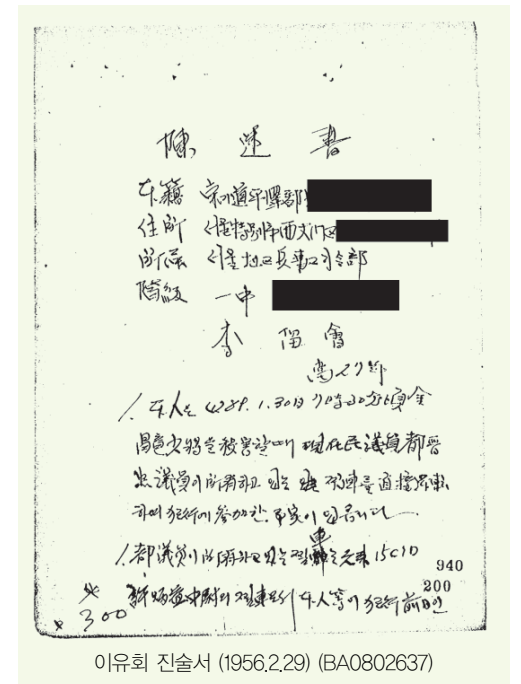


이○○ 증인진술서 (1956.2.29) (BA0802637)

이○○ 진술서 (1956.2.29) (BA0802637)

보안계 교통주임과 함께 왔고 경찰관이 “이 차는 국회 차(이니) 칠해주시요”라고 지시하면서 “누가 와서 묻거든 내가 동대문 경찰서 보안계 교통주임인데 나한테 보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은 당일 오후 7시까지 차를 청색으로 도색하고 도진희로부터 1만6천 환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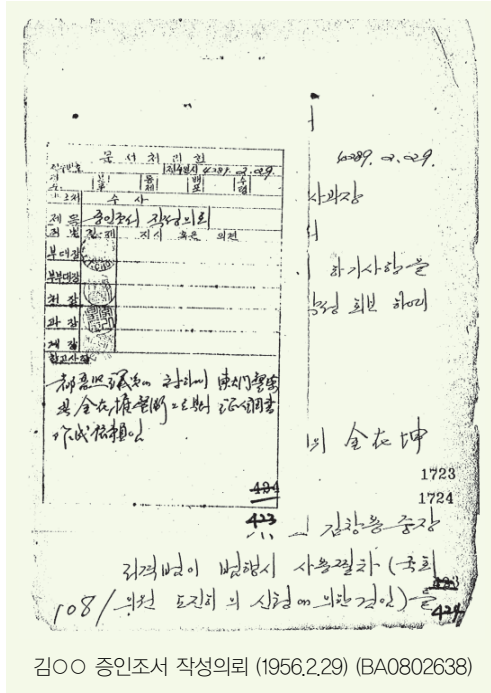
역시 같은 날 사건 당시 지프차를 운전했던 이유희의 차량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이유희는 도진희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증언했다. 범행 십여 일 전인 1956년 1월 22일경, 허태영은 허병익의 차를 빌린 후 30일 암살에 사용했고 그 후 차고에 감추었다. 앞서 운전수 이○○와 허병익 중위가 진술한 바와 1956년 2월 2일 도진희가 허태영의 집을 방문해 차량을 인수하고 도진희 차의 번호판이 저격에 사용되었던 지프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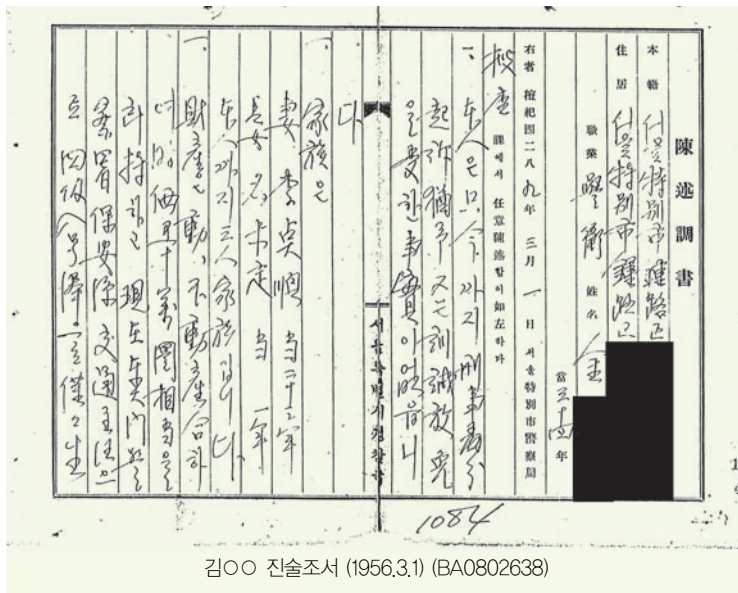
이유희 진술서 (1956.2.29) (BA0802637)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김○○ 증인조서 작성의뢰 (1956.2.29) (BA0802638)



김○○ 진술조서 (1956.3.1) (BA0802638)

달리게 되는 경위를 다시 한 번 증언하고, 도진희가 허태영의 소개로 허병익의 차를 70만 환에 사기로 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음을 진술했다.

한편 지프차의 도색을 알선해준 동대문 경찰서 보안계 교통주임 김○○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특무처장 육군 중령 장보형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장에게 김○○의 증인조서 작성을 의뢰했다. 저격 당시 사용한 지프차를 도장 변색해 준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 도장 전후의 색깔 등에 대한 조서가 이루어졌다.

김○○은 진술조서에서 저격사건에 사용된 지프차를 도색하게 해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 동대문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며 도진희를 알게 되었고 1956년 2월 21일 혹은 22일 도진희가 보낸 사람이 와서 지프차를 도색하러 갔더니 경찰의 허가를 요구한다고

하여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 문제의 지프차를 타고 가서 도진희를 만나 그 차가 도진희의 차라는 확인을 얻어냈다. 김창룡 저격사건 이후 차의 도색과 변형이 금지된 상태인데다 차의 상태도 좋지 않고 국방색 차에 관용번호판을 붙이고 있어 이상했지만, 잘 봐주라는 서장의 지시도 있고 국회의원의 차라는 데 믿음을 두고 도장업자를 찾아가 도색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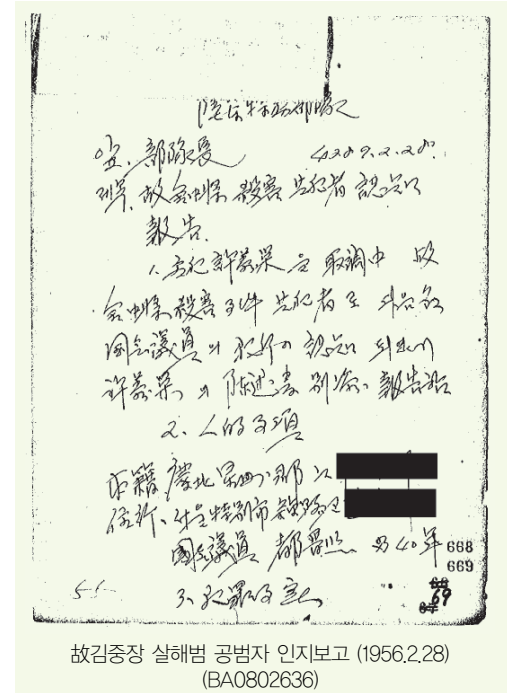
2-6. 공범자가 있었다

차량의 행방을 수사하는 과정은 저격사건의 전모를 한 겹 더 벗겨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도진희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도진희는 범행에 사용된 지프차를 인수해 수리·도색하고 자신의 차 번호판을 떼어다가 붙여서 일반차량으로 위조했다. 수사당국은 도진희를 공범자로 인지하고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도진희에 대한 체포 구금 동의요청을 발부했고 국회는 이를 동의했다. 도진희는 동의요청이 가결되던 당일 국회에서 체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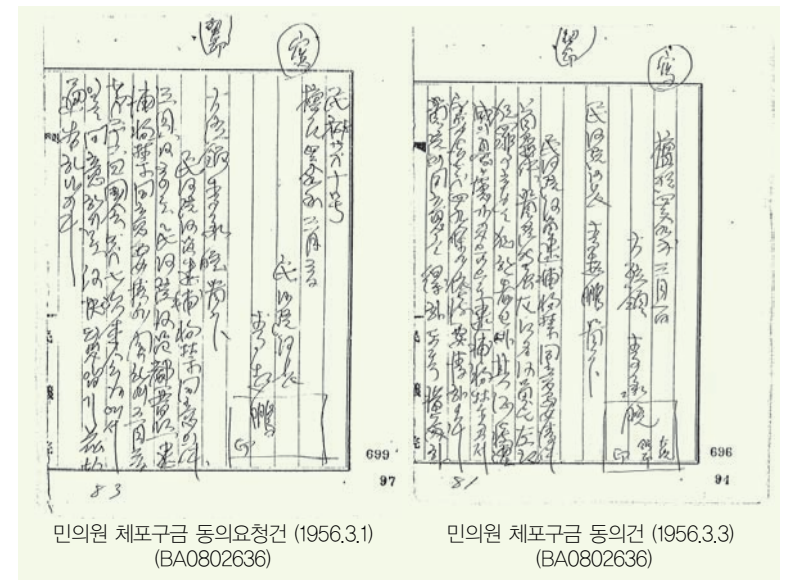
수사당국은 1956년 2월 28일〈故김중장 살해공범자 인지보고〉를 작성, 도진희가 허태영과 공모해 김창룡을 살해한 후 저격에 사용한 지프차를 인수해 호로를 수리하고 차색을 바꾸어 28일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도진희를 연행,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회의원(당시 민의원) 도진희의 체포·구금에 대한 동의요청이 발부되었고 국회는 비밀회기를 소집, 표결에 부쳐 찬성 99, 반대 52, 기권 5표로 도진희의 체포·구금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국회에서 구금동의안이 가결



故김중장 살해범 공범자 인지보고 (1956.2.28) (BA080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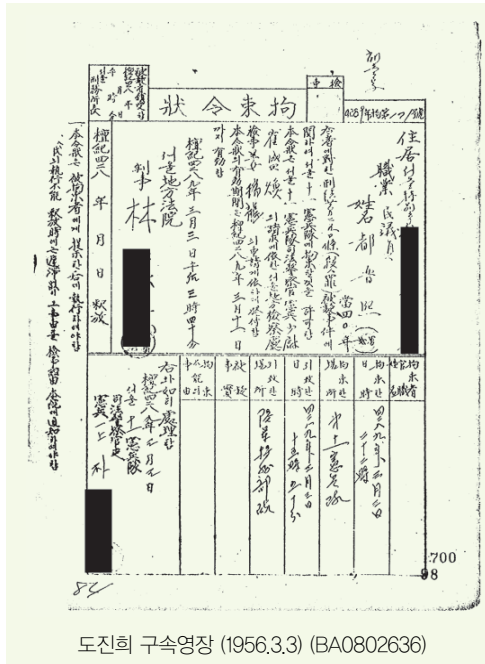


민의원 체포구금 동의요청건 (1956.3.1) (BA080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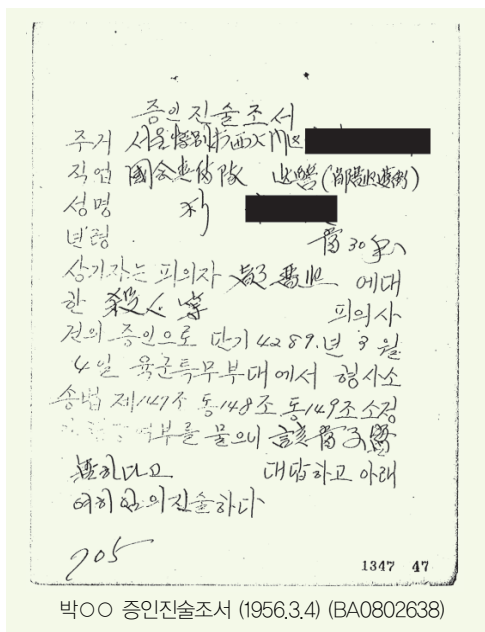
민의원 체포구금 동의건 (1956.3.3) (BA0802636)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도진희 구속영장 (1956.3.3) (BA0802636)



박○○ 증인진술주서 (1956.3.4) (BA0802638)

되자 수사당국은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1956년 3월 3일 도진희를 동행했다. 허태영과 공모해 김창룡을 살해하고 저격 당시 사용된 지프차를 인수받아 수리·위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도진희를 입건함이 타당하다고 부대장에게 보고했다.

도진희의 동행이 이루어진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진희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도진희의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격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가 이루어졌다. 도진희가 인수해 수리·운행 중인 지프차를 증거물로 차압하고 사실을 조사한 바,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밝혀져 보고되었다. <대여차량 검사신청서>와 <대여 지프차량 출처보증서>가 첨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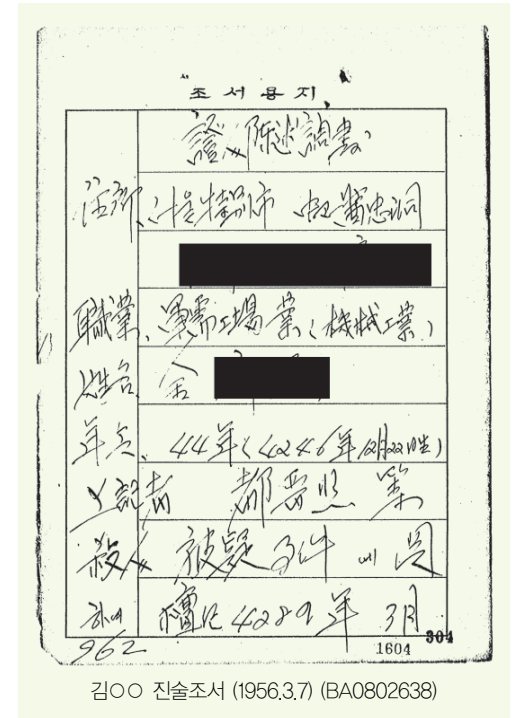
3월 초에는 지프차의 수리와 관련해 또 한번의 증언 수집이 이루어졌다. 도진희의 호위순경 박○○, 운전수 이○○, 헌병대 대위 우○○, 공장업자 김○○이 증언하는 지프차의 수리 과정, 그리고 지프차 매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등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도진희의 호위순경 박○○은 1956년 2월 26일 1차 진술에 이어 1956년 3월 4일 2차로 작성된 증인진술 주서에서 도진희의 안내로 포장사에 가서 저격 당시 사용된 지프차가 도진희가 기존에 타던 차와 교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박○○은 또한 이후 본인의 돈 40만 원이 지프차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음을 증언했다.

5월 3일 헌병대 대위 우○○의 증인진술도 이루어졌다. 저격사건이 일어나고 3일 후인 2월 2일, 허태영의

집에서 도진희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국회의사당까지 온 사실이 있는데 차 안에서 도진희가 호로 수리를 이○○에게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또한 자신과 도진희 외에 허병익 등 차에 타고 있었던 3인을 열거했다.

이틀 후인 1956년 3월 7일 차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공장업자 김○○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평소 허태영, 도진희와 친분이 있던 그는 2월 2일 허태영의 집에 도진희와 다른 인물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들과 함께 저격에 사용되었던 지프차를 탔는데 차의 상태가 좋지 않고 호로가 사방으로 찢어져 있었다고 했다. 도진희가 국회의사당에서 내리고 허병익과 우○○이 각각 내린 후에 김○○은 을지로 3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리고 지프차를 도진희한테 돌려보낸 사실을 진술했다.



김○○ 진술주서 (1956.3.7) (BA080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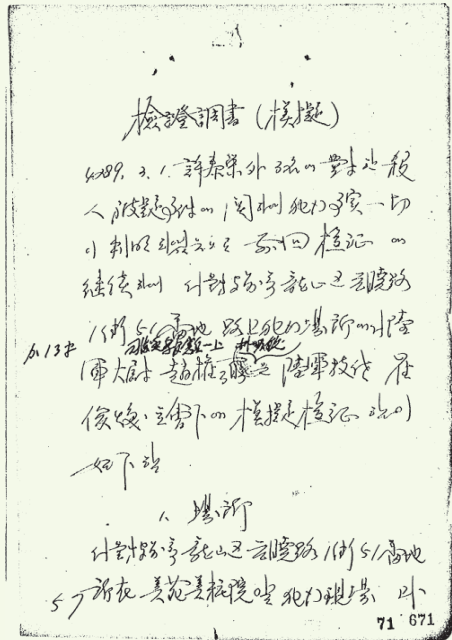
2-7. 되살려본 1956년 1월 30일 7시 30분

1956년 3월 1일 육군 특무대는 허태영 외 3명에 대한 살인피의사건과 관련한 모의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검증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와 서대문구 옥천동 허태영의 집에 이르는 도로에서 이루어졌다. 피의자 신초식, 송용고 등의 상황 진술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사건발생, 과정 및 결과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현장 검증사진과 도주로 약도 등이 첨부되어 있어 사건 당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검증주서>를 통해 본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다.

1956년 1월 27일 신초식과 송용고는 김창룡 집 부근을 답사하고 군복 등을 수령, 1월 28일 7시경 저격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이틀 후 1월 30일 6시 40분경 허태영의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모의 검증조서 (1956.3.1) (BA0802636)

집에서 허태영 소유 지프차를 이유희가 운전하고 송용고는 소령으로, 신초식은 중위로 위장했고, 7시 10분경 사건장소인 원효로 1가 56번지 미원미장원 앞 세 갈래 입구에서 송용고와 신초식은 하차해 대기했다.

김창룡이 탄 지프차가 도착하자 송용고는 김창룡 차 문을 열어 미제45식권총으로 김창룡을 향해 2발을 발사하고 신초식은 김창룡에게 3발을, 운전수에게 1발을 발사했다. 대기 중이던 지프차에 함께 탑승하고 전차로로 나와 예정되어 있던 대로 전매청을 경유해 서대문로로 빠져 충정로를 지나 목적지인 허태영 집에 도착했고 해당 지프차를 차고에 입고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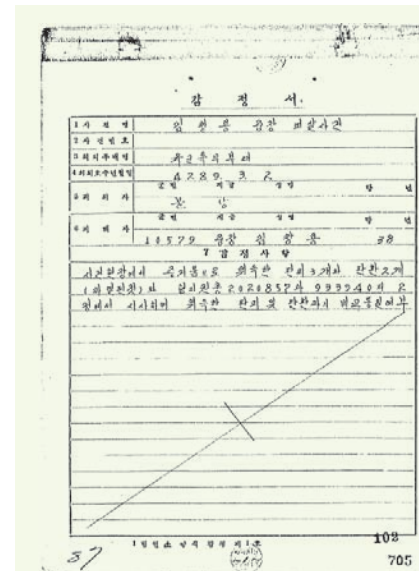
현장검증은 부대원들이 실제상황을 모의로 재연한 것으로 당시 사진을 통해 사건당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건 현장 및 도주로, 허태영의 집 구조가 그려진 <범행도>를 통해 대기장소, 도주로 등 사건 당일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편, 육군 특무대는 1956년 3월 2일 ‘김창룡 중장 저격사건’에 대해 사건현장에서 증거품으로 취득한 탄피와 탄환에 대한 감정을 범죄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범죄연구소는 탄피 3개와 탄환 2개(파열된 것), 혐의 권총 2정에서 취득한 탄피와 탄환을 비교, 동일 여부를 감정하여 다음 날인 3월 3일 그 결과인 <감정서>를 특무대에 송부하였다. 문중(問證)과 지증(知證)을 비교·분석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했는데, <감정서>를 검토하면 당시 사용된 권총 2정과 탄피 및 탄환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현장검증 도주로 모습 (1956.3.1) (BA0802636)



감정서 (1956.3.3)
(BA0802636)



사건 당시 사용된 미제45식권총 (1956.3.3)
(BA0802636)



모의 현장검증 저격 직전 모습 (1956.3.1) (BA0802636)

2-8. 엇갈리는 진술

육군 특무대는 본 사건의 피의자 도진희에 대해 1956년 3월 3일부터 7일까지 5회에 걸쳐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신문은 도진희와 허태영과의 관계, 사건의 공모사실 여부 및 사건 발생 후 수습 여부와 관련해 사건 당시 사용되었던 지프차의 구입 경위, 사건 이후 차를 수리한 이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건모의와 사건수습 사실 여부에 있어 허태영의 운전수 이유회는 2월 2일 허태영과 함께 도진희의 집에 간 사실을 진술했고, 도진희의 운전수 이○○도 허태영이 찾아왔으며 20~30분 가량 있다가 갔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도진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복했다.

<피의자신문조서(2회)>에 의하면 도진희는 허태영과 1949년 방첩대 시절부터 알아오던 친구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기만당했으며 허태영을 '악질불한당'이라고 표현했다. 신문과정에서 도진희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특히 사건 사전 인지 여부, 사건모의와 수습을 위해 허태영이 도진희의 집을 방문한 사실 여부, 차 수리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는 앞선 피의자 및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었으므로 몇 차례의 대질 신문이 있기도 했다.

지프차의 구입 경위와 차 수리 지시 여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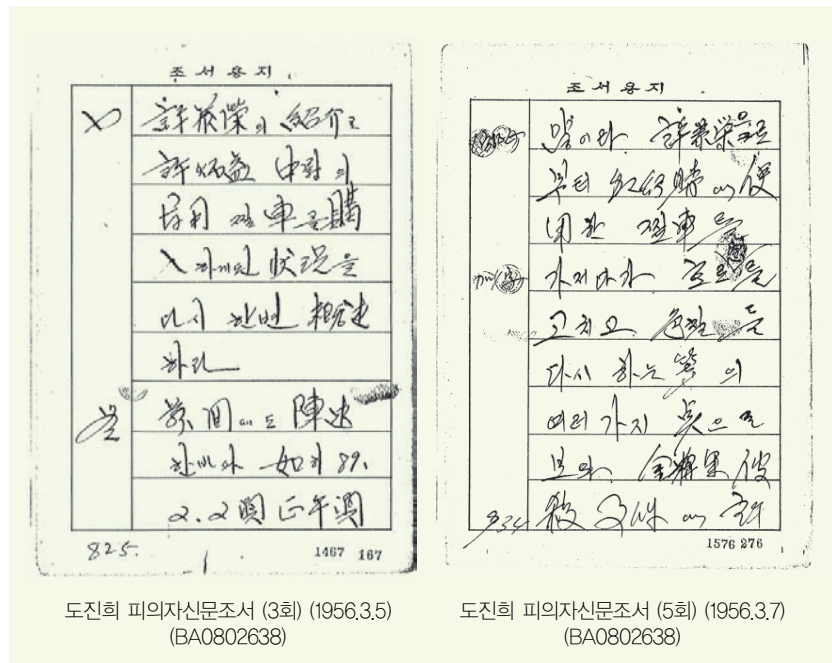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진술이 이어졌다. <피의자신문조서(3회)>에서 도진희는 2월 2일 허태영 집을 방문했을 때 지프차가 2대 있는 것을 보고 허중위로부터 인수받았고, 그 날 허중위가 자기용무로 차를 몇 시간 사용하겠다고 하여 운전수 이○○에게 용무가 끝나는 대로 국회 앞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오지 않아 다른 자동차로 귀가하는 도중 차 수리를 하고 있는 이○○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은 2월 2일 도진희의 차가 없어 도의원에게 물으니 '종로3가에 고치러 보냈어'라고 말했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수 이○○을 만났는데 이 때 도의원이 국방색 지프차를 가리켜 이것이 내 차야' 했다는 것이다. 그 때 박○○은 차가 국방색이고 넘버가 없으며 차 문이 파손된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 사건 당일 도진희의 말과 행동에 대한 확인 문답이 있었다. 도진희의 <피의자신문조서(5회)>에 의하면 사건 당일 아침 도진희는 박○○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박○○이 '오늘 아침 출근 도중에 저격당했소'라고 하자 '큰일났군 내 차는 틀렸군'이라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조사관은 김창룡이 저격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며 확인 질문했으나 도진희는 계속해 다른 이들의 진술을 부정했다.

한편 도진희에 대한 다섯 번의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신초식의 피의자신문이 있었다. 3월 8일 신초식은 제5회 신문에서 이번 사건의 살해 동기를 진술하면서 허태영을 중심으로 한 배후세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신초식은 허태영이 평소 했다는 말을 빌어 '계획은 정대장, 강중장, 이대장, 원중장 등 군 상위층과 전부 합의가 되어 있는 문제이고 특히 저격 후의 처리문제 등도 문제시할 것이 없다', '도진희 의원과도 논의되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고 해 이 사건에 군 수뇌부와 도진희 의원이 관여했음을 진술했다. 또한 '이진용 대령이 특무대장으로, 허태영이 첩보부대장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군 내부의 권력층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신초식이 1955년 10월경 상경했을 때 벌써 군 고관들 중 이진용 대령과 도진희 의원은 허태영의 집을 출입했고, 허태영은 늘 점심시간에 도의원을 만나는 한편 이진용 대령의 직장인 육군 정병감실로 그를 만나러 가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일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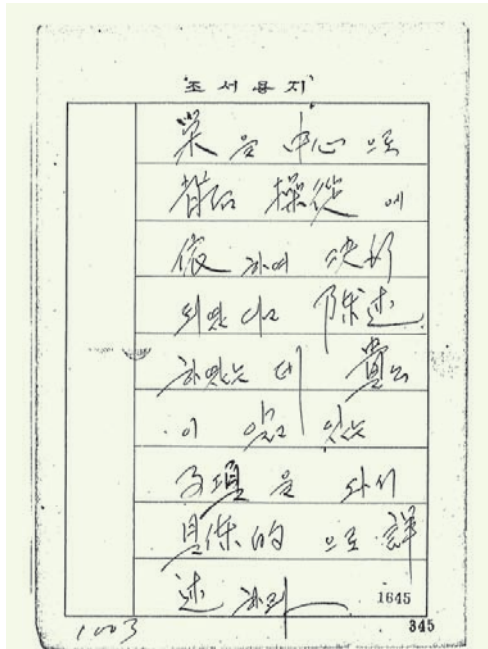


도진희 피의자신문조서 (3회) (1956.3.5)
(BA0802638)

도진희 피의자신문조서 (5회) (1956.3.7)
(BA0802638)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신초식 피의자신문조서 (5회) (1956.3.8) (BA0802640)

했다. 허태영은 정일권의 비서로 있으면서 3일에 한번씩 정일권의 집에 가는가 하면 늘상 정일권으로부터 직접 허태영에게 전화가 왔음을 인정했다. 신초식은 허태영과 군 고관들이 계획을 모의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허태영을 통해 김창룡 건으로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곧잘 들었다고 했다.

특히, 신초식은 이진용 대령과 도진희가 김창룡 살해 계획을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왜냐 하면 허태영은 이진용 대령, 도진희 의원과 실제로 왕래했으며, 무엇이든 이진용 대령에게 상의하고 처리했다. 그리고 신초식과 7, 8회에 걸쳐 육군본부 정병감실 이진용 대령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했고,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마다 허태영은 ‘다 됐어’ 등의 말로 김창룡 살해에 대한 문제를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진희의 관여 사실에 대해서도 신초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허태영이 ‘도진희한테도 다 의(議)가 되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한 바가 있고,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허태영에게 도진희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니 허태영은 도진희가 김창룡이 죽은 데 대해 “김창룡은 그렇지 않아도 제 나이대로 살지 못한다. 청색 죄수복을 입고 벌써 형무소살이를 할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신초식에게 전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신초식은 허태영과 논의한 후 범행 당시 사용했던 지프차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허중위로부터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는 사람이 김창룡이 죽은 그 다음 날부터 김창룡을 싫어하던 사람들과 허태영 집에 모여 김창룡에 대한 비난과 욕을 하면서 밤낮을 모르고 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도진희 의원의 사전인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진희는 다섯 번의 신문에서 본인이 김창룡 저격사건과는 상관없음을 강조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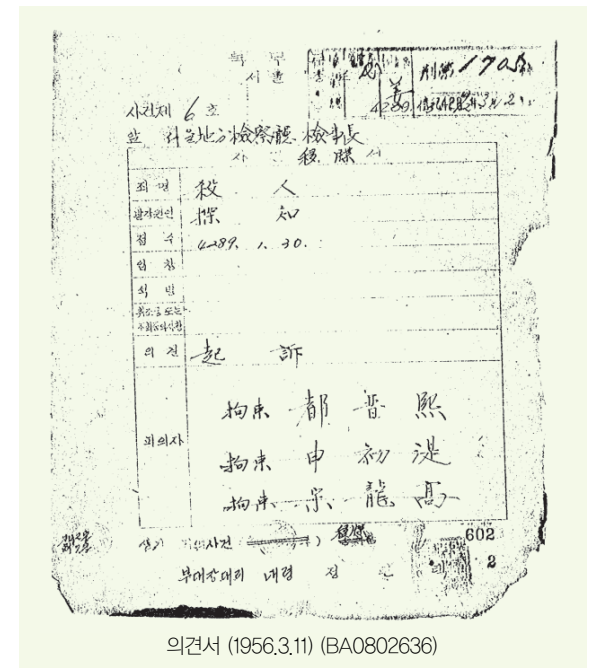
대질신문에서조차 ‘모르는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일관했다. 그러나 실제 허태영의 하수인으로 범행을 실행한 신초식은 도진희의 진술과는 정반대로 군 수뇌부가 연계되어 있으며 적어도 이진용 대령과 도진희 의원의 사전모의가 있었음을 확신하는 이야기를 했다.

2-9. 수사종결, 덮혀진 수사일지

본 사건에 대한 육군 특무대의 수사는 1956년 1월 30일 사건의 발생보고로 시작해 2월과 3월에 걸친 피의자신문 및 관련인 진술을 거쳐 3월 11일 종결되었다. 이 날 특무대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의자 도진희, 신초식, 송용고의 범죄사실, 사건 조사에 대한 내용과 결과가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무대는 이 사건에 대해 형법 제250조 1항을 들어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냈고 이렇게 해 해당 피의자들에게 대한 군의 사건조사는 일단락되었다. <의견서>의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개요를 보면 도진희, 신초식, 송용고는 허태영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범행을 주도·모의하고 사건 수습을 담당했다. 도진희는 허태영과의 친분 외에도 5·20 민의원 선거 때 김창룡이 후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

신초식은 1955년 10월부터 김창룡을 살해하라는 허태영의 지령을 받고 김창룡의 집 부근, 국방부와 육군본부, 시내 회현동 요리점 등에서 살해하고자 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허태영은



의견서 (1956.3.11) (BA0802636)

신초식에게 지령을 내리면서 '이번 일은 장래 특무부대장이 될 이진용 대령과 국회의원 도진희와도 모의하고 있다', '절대 체포되지 않을 것이며 체포되어도 일주일 이내에 석방된다'고 하며 군 내부의 여러 사람들과 미리 논의하고 계획한 것임을 강조했다. 도진희의 경우 본인은 조사과정에서 '모릅니다'로 일관했으나 관련인과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허태영과의 사전 범행 모의와 범행 당시 사용한 허태영의 지프차를 은닉하고 증거를 소멸하기 위해 차를 인수하고 원형 변조 및 도색한 사실 등 사건의 모의부터 수습까지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도진희에 대한 다섯 번의 신문 이후에 이미 종결된 것 같았던 신초식에 대한 신문이 한 번 더 있었다는 사실, 신초식이 이전 신문조서와는 다르게 배후에 대해 거침없는 진술을 한 사실, 그리고 허태영이 밝힌 군 수뇌부의 연루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수사일지는 그대로 덮였다.

3

사건조사 이후부터 최종판결까지

김창룡 저격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조사 종료 후 최종판결까지의 재판 진행결과를 동아일보, 회고록 등 관련 자료로 재구성했다.

육군 특무대의 수사 종료 후 1956년 3월 12일 군인 신분인 허태영과 이유희,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은 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로, 민간인 신분인 신초식과 송용고, 도진희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각각 송치되었다.

그 후 3월 27일 제 1회 군사재판이 열린 후 14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허태영은 '저격거사동기서'를 제출, 저격이 사사로운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했고, 허태영의 변호인 또한 저격의 동기가 국가·사회적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956년 8월 17일 열린 판결 공판은 허태영에게 사형, 이유희에게 사형,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에게 각각 징역 20년, 5년, 3년을 언도했고, 판결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사재판은 1956년 5월 22일 개정해 6회의 공판을 거친 후 8월 11일 신초식과 송용고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이에 신초식, 송용고는 항소해 같은 해 11월 9일 2심 판결공판에서 또 다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상고했다. 1957년 4월 19일 신초식과 송용고 없이 열린 3심 판결 공판에서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사형을 언도,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재심청구를 기각, 사형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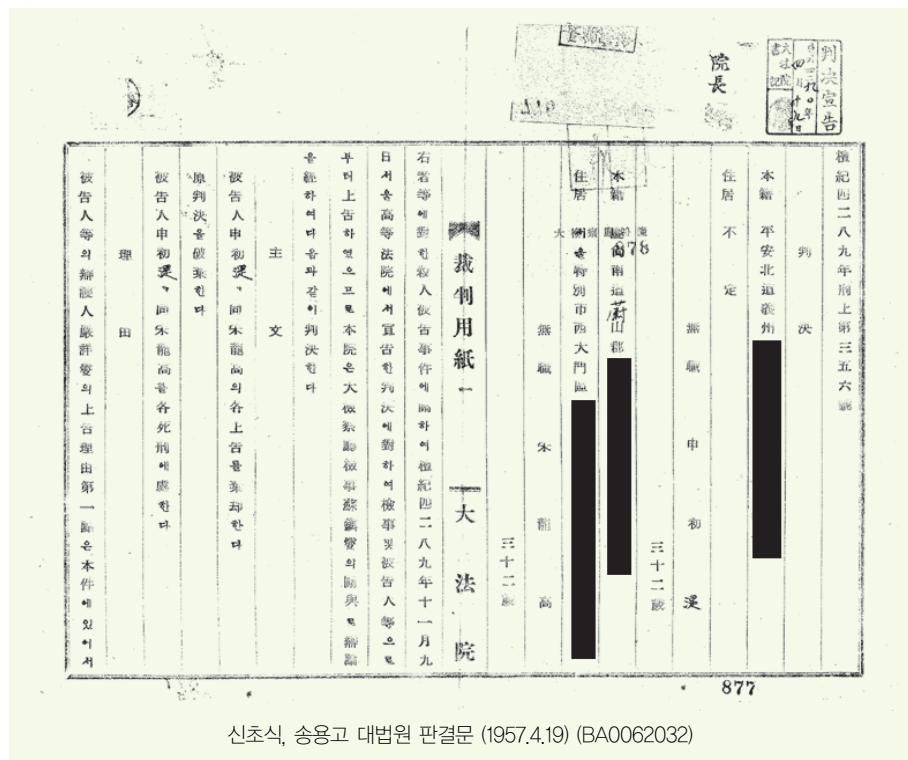
한편 허태영과 이유희의 형 집행을 앞두고 있던 1956년 11월, 저격의 배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황운하(허태영의 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56년 12월 9일 관련인 6명을 군법회의에 회부, 또 다시 군사재판이 열렸다. 군 장성들을 대거 출두시키고 장장 54회에 걸쳐 진행된 김창룡 저격사건 '추소군재'는 1957년 4월 17일의 판결 공판에서 저격의 배후로 최종 지목된 강문봉에게 사형을, 공국진에게 징역 7년, 강홍모·성정보·백학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언도했다. 이들 후인 4월 19일 이승만은 대통령 직권으로 강문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같은 날 신초식과 송용고는 3심 공판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형량인 사형을 언도받았다. 강문봉의 감형이 있는 후에도 허태영과 이유희에게 언도된 사형 판결은 유지되었다.

3-1. 법원의 판결



검찰에서의 조사가 완료되고 김창룡 저격사건 피의자인 신초식, 송용고와 도진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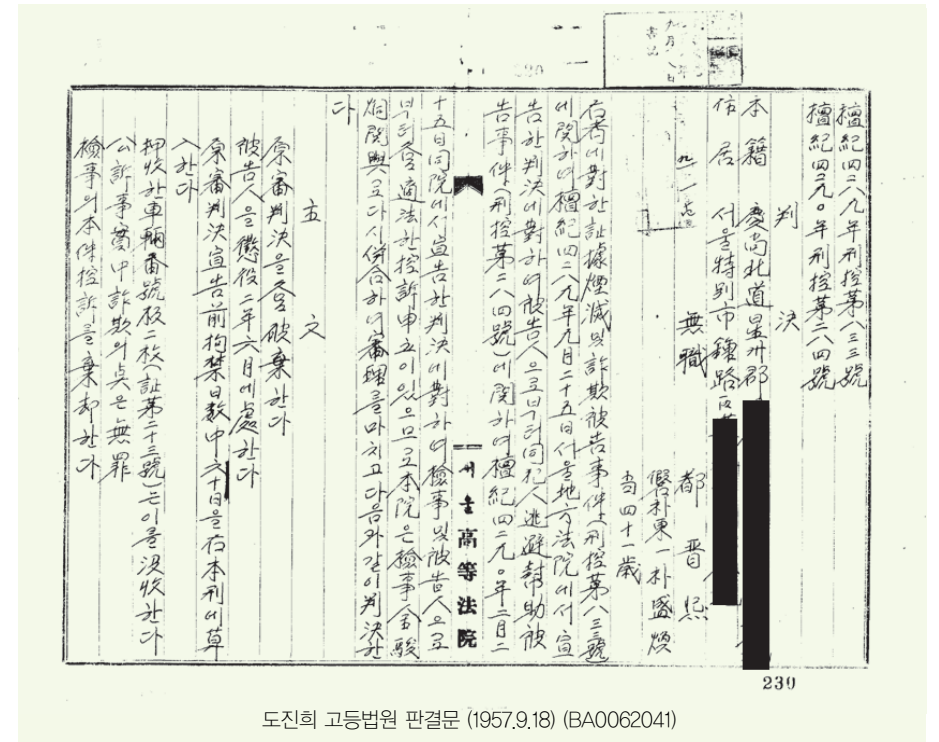
먼저 신초식과 송용고는 1956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고, 공소했으나 1956년 11월 기각되었다. 그리고 1957년 4월 대법원은 상고

기각, 원판결 파기로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이번 사건의 동기를 ‘정의감을 느껴 감행한 애국적인 소행’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양심의 가책을 받음이 없이 상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상세하게 상고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무대 부대장 김창룡이 어떤 인물인지를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어 나열했다. ‘김창룡은 특무대 부대장을 기회로 정보를 허위날조하고 사건을 조작하며, 국군 장성급을 모략 중상하며, 사리사욕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 총애를 독점하고 자기영달에 사로잡힌 자라 말하며’ 조병창(造兵廠)사건, 관(棺)사건, 가옥착복사건, 쌀사건 등의 사건을 사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여운형, 김구 암살사건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무기징역이라는 원판결이 설명이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없어 규지(窺知)할 수 없는 것으로 수궁하기 어렵고, 해방 이후 소위 정치적 암살로 국가사회에 막대한 타격을 준 사실 등으로 볼 때 그 형량이 타당하지 않다며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재심청구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1957년 12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본 사건에 대한 신초식, 송용고의 판결은 종결되었다.

한편, 민의원(民議員) 도진희는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공기호 위조, 사기사건으로 1956년 9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도진희는 김창룡 저격사건과 관련해 허태영과 음모해 사건 당일 사용되었던 지프차 구입, 변호판 위조, 도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다. 1957년 9월 고등법원에 항소해 원심 판결 파기 결정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는데, 허위공문서작성 및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때문이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958년 1월 기각되었다.



신초식 사형집행결과보고 (1958.5.21) (BA0152570)

3-2.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대법원의 사형선고가 있는 후 서울고등검찰청의 <사형집행결과보고>가 있었다. 신초식과 송용고는 1958년 5월 20일 서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고 다음 날인 5월 21일 그 결과가 법무부에 보고되었다.

한편, 당시 신문에 의하면 1956년 10월 4일 본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을 받은 허태영은 1년 후인 1957년 9월 24일, 그의 운전수 이유회와 함께 대구 육군정보학교 야외훈련장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한다.

4 ‘김창룡 저격사건’ 더 알아보기

4-1. 미국무부 문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부무 보고

4 1 1. 기록물 개요

김창룡 저격사건 관련 보고가 편철된 <Internal political and national defense affairs : personnel, commissioned and enlisted/ Dowling, Walter 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는 미국무부의 일반문서들을 편철한 RG59에 포함되어 있다. RG59에는 여러 기록물 시리즈들이 있는데 김창룡 저격사건 관련 보고는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 1959, File 795, 795B, 895, 895B, 995, 995B> 내에 포함되어 있다. 본 기록물은 국회도서관이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된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1910~1959년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무부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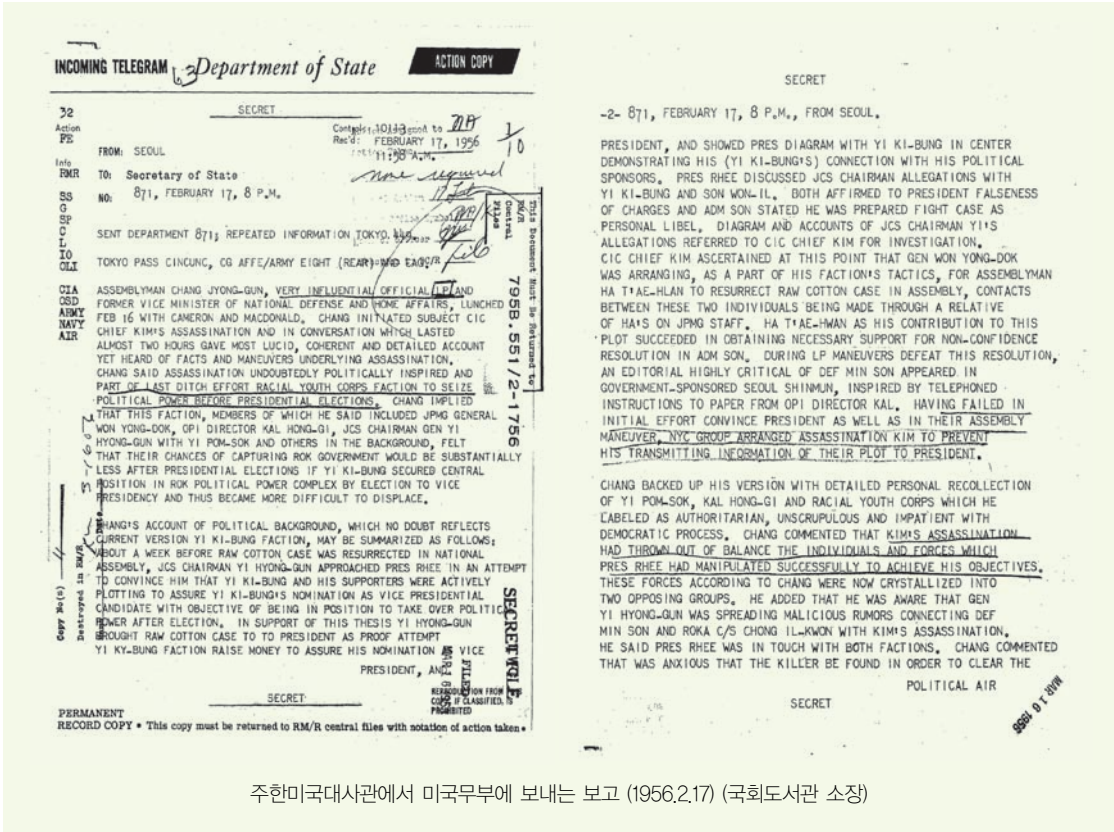
김창룡 저격사건 보고서 기록의 대부분은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보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발신자, 수신자, 발신일자, 보고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등급은 Secret File, Confidential File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김창룡 저격사건에 관한 기록은 1956년 1월 30일에서 3월 5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배후인물들에 대해 약 14여 회에 걸쳐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건 수사가 재개된 1956년 11월 14일부터 1957년 4월 19일까지 15회에 걸쳐 보고하고 있는데 분량은 38페이지이다. 저격사건과 배후인물들에 대한 추정 및 사건에 따른 국내의 정세, 특히 군부 내의 정세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4 1 2. 기록물의 내용 및 의의

미국무부에 보내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김창룡 저격사건과 관련해 ‘누구에 의해 왜 발생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56년 1월 30일 보고서는 김창룡 저격사건의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에 보내는 보고 (1956.2.17) (국회도서관 소장)

용의자로 김창룡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원용덕, 김창룡에게 수사받았던 친정부 혹은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점차 미국대사관은 김창룡 저격사건 발생이 단순한 원한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의 사건이라고 판단해 보고한다. 왜냐하면 김창룡이 원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부 내의 여러 세력과 갈등하는 가운데 손원일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격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창룡 저격사건은 정치적 맥락의 사건으로서 대선 이전에 군부 내의 원용덕, 이형근, 이범석 등 군부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중요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1956년 2월 27일자 보고에서는 허태영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범인들이 체포되었지만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김창룡 저격사건 이후 이승만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 사이에 뚜렷한 파벌간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한다. 1956년 11월 14일 보고에서는 김창룡 저격사건의 배후인물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강문봉, 공국진이 체포되고 5명의 다른 군 고위직도 체포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의 판단은 김창룡 저격사건의 수사재개는 한국 군대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57년 3월 19일 보고에서는 이승만이 강문봉에 대한 처리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강문봉을 사형시킬 경우 다시 그 윗선인 정일권이 개입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군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정일권을 사건수사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고, 강문봉은 감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보고한다.

이상과 같이 김창룡 저격사건에 대해 수시로 미국무부에 보고한 기록은 현재 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김창룡 저격사건의 배경으로 군장성들과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통한 군부 내의 세력 갈등 등장, 사건의 배후세력에 대한 언급, 미국의 김창룡 저격사건에 대한 인식, 이승만의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물 이다.

4-2. 민사재판일지

1956.03.12	특무대 수사 종료, 관련인을 관계기관으로 각각 송치	군인 신분 허태영, 이유회,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 육군 중앙군법회의로 송치
		민간인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서울지방법찰청으로 송치
1956.05.22	1회 공판	도진희 인정심문 (서울지방법원)
1956.06.05	2회 공판	신초식, 송용고 사실심문 (서울지방법원)
1956.06.12	3회 공판	검사·변호사 양측 증거신문 (서울지방법원)
1956.06.23	도진희 행정소송 1회 공판	잔형집행정지취소 (서울고등법원)
1956.06.29	도진희 재판권 재정신청	대법원 심의완료 (대법원)
1956.07.06	도진희 재판권 재정신청 결과	서울지방법으로 회답 "본 건은 서울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대법원)
1956.07.07	도진희 행정소송 2회 공판	도진희 재판권 "민재속행(民裁續行)이 타당" (대법원)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956.07.07	도진희 행정소송 2회 공판	도진희 재판권 "민재속행(民裁續行)이 타당" (대법원)
1956.07.13	4회 공판	증인 10명 채택 (서울지방법원)
1956.07.20	5회 공판	(서울지방법원)
1956.07.27	신초식, 송용고 결심공판	사형구형 (서울지방법원)
1956.08.06	도진희 행정소송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08.10	도진희 결심공판	증거인멸 및 공문서위조죄로 5년 구형 (서울지방법원)
1956.08.10	신초식, 송용고 판결공판	무기징역 언도 (서울지방법원)
1956.09.08	도진희 행정소송 상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 내린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제기
1956.09.25	도진희 판결공판	징역4년 (서울지방법원)
1956.10.17	신초식, 송용고 2심 1회 공판	(서울고등법원)
1956.10.26	신초식, 송용고 2심 결심공판	검사 사형구형 (서울고등법원)
1956.11.07	도진희 2심 1회 공판	간단한 사실심리 (서울고등법원)
1956.11.09	신초식, 송용고 2심 판결공판	신초식 송용고 공소 기각 판결, 검사·피고 즉시 대법원에 각각 상고
1957.02.14	도진희 범인도피방조 혐의 추소 결심공판	징역 2년 구형 (서울지방법원)
1957.02.25	도진희 판결공판	징역 8개월 언도 (서울지방법원), 언도 직후 불복공소 재기
1957.04.10	도진희 항소심 1회 공판	(서울고등법원)
1957.04.19	신초식, 송용고 3심 판결공판	원심 파기 사형 언도 (대법원), 신초식 송용고는 출석치 않은 채 판결
1957.08.29	도진희 항소심 결심공판	범인도피방조죄로 1년 6개월, 사기 및 증거인멸죄로 4년
1957.09.09	도진희 재구속	총 5년 6개월 구형 (서울고등법원)
1957.09.19	도진희 항소심 판결공판	국법회의에서의 잔형집행을 마치고 9일 출감,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피고로 재구속
1957.12.27	신초식, 송용고 재심청구 기각	기소사실 중 '사기'는 무죄,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방조'는 유죄로 판정, 징역 2년 6월 언도 (서울고등법원)
1958.01.14	도진희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판결, 4월 19일의 사형판결 확정
1958.05.20	교수형 집행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6개월 확정

4-3. 군사재판일지

1956.03.12	특무대 수사 종료, 관련인을 관계기관으로 각각 송치	군인신분 허태영, 이유회,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 육군 중앙군법회의로 송치 민간인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
1956.03.27	1회 공판	군사재판 개정
1956.03.31	2회 공판	민재(民裁) 이송 요청이 이유 없다는 재정(裁定)이 내려지자, 재판권 관할 재정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
1956.04.11	대법원 판정	재판권 관할 재정 신청 관련, 변호인측 신청은 이유 없음
1956.04.16	3회 공판	신초식, 송용고 증언
1956.04.18	5회 공판	허태영 진술, 사원(私怨) 때문에 살해했다는 검찰관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1956.04.19	6회 공판	특무처장 증언, 범행은 사원(私怨) 같다.
1956.04.20	7회 공판	도진희 증언
1956.05.18	9회 공판	허태영 변호인, 살해동기가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국가사회적인 것을 참작하여 선처 요망
1956.07.25	10회 공판	5·15 선거와 재판관 관계로 휴정 중에 있던 군재 속개 신임재판장에 나재홍
1956.07.30	12회 공판	정일권 증언
1956.08.02	13회 공판	변호인측 최후변론
1956.08.03	14회 공판	(결심공판) 허태영 사형, 이유회 사형, 안정수 무기, 허병익 5년, 이진용 3년 구형
1956.08.17	판결공판	(판결공판) 허태영 사형, 이유회 사형, 안정수 20년, 허병익 5년, 이진용 3년 언도
1956.10.04	허태영 사형확정	대통령 결재
1956.11.12	허태영의 부인 황운하 탄원서 제출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회 조사위원단 앞으로 허태영은 주범이 아니며 사건의 배후에는 고위층이 관여했다고 주장
1956.11.14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형근 참모총장의 명에 의하여 육군 당국에서 구성, 특무대 교육대에 설치 수사 개시, 허태영의 동생 허태석 심문
1956.11.15	특별조사위원회	황운하 심문
1956.11.16	특별조사위원회	오전 허병익 부인 심문, 오후 허태영 심문
1956.11.17	특별조사위원회	단장 경질, 17일 오전 유재홍중장 임명, 허태영 2차 심문
1956.11.18	특별조사위원회	허태영 3차 심문, 2명의 민간인 수표관계로 소환 심문
1956.11.19	특별조사위원회	허태영 4차 · 이진용 · 신초식 심문
1956.11.20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심문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956.11.20~21	특별조사위원회	공국진, 소령 1명 철야심문
1956.11.21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성정모 소환 심문
1956.11.22	특별조사위원회	2명의 영관급장교 소환 심문
1956.11.23	관련자 구속	강문봉, 공국진, 강홍모, 성정모, 박범서
1956.11.25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허태영 심문만 남기고 조사 거의 완료
1956.11.27~28	특별조사위원회	도진희 소환 심문
1956.11.28~29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심문
1956.11.28~29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심문
1956.11.30	특별조사위원회	사건조사 완료
1956.12.01	특별조사위원회	이형근에게 조사결과 보고, 관계자 7명 (강문봉, 공국진, 강홍모, 성정모, 백항규, 최창준, 박범서) 육군 법무부감실 검찰과(군검찰)로 이첩
		검찰은 군사재판을 위한 예심조사 착수
1956.12.03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3일 정오에 해체
1956.12.17	구속적부심사 신청	강문봉, 공국진
1956.12.09	탄원사건 군법회의 회부	강문봉은 살인, 공국진 등은 음모죄로 군법회의 회부
1956.12.15	추소군재 개정	1956.12.19 2회 추소군재
1956.12.20	3회 추소군재	1956.12.21 4회 추소군재
1956.12.22	5회 추소군재	1956.12.26 6회 추소군재
1956.12.27	7회 추소군재	1956.12.28 8회 추소군재
1956.12.29	9회 추소군재	1957.01.06 10회 추소군재
1957.01.08	12회 추소군재	1957.01.09 13회 추소군재
1957.01.19	14회 추소군재	1957.01.21 15회 추소군재
1957.01.23	17회 추소군재	1957.01.24 18회 추소군재
1957.01.25	19회 추소군재	1957.01.28 20회 추소군재
1957.01.28	21회 추소군재	1957.01.29 22회 추소군재
1957.02.01	24회 추소군재	1957.02.02 25회 추소군재
1957.02.03	26회 추소군재	1957.02.04~05 27회 추소군재
1957.02.06	28회 추소군재	1957.02.07 29회 추소군재
1957.02.08	30회 추소군재	1957.02.11 31회 추소군재
1957.02.12	32회 추소군재	1957.02.13 33회 추소군재
1957.02.14	34회 추소군재	1957.02.15 35회 추소군재
1957.02.14	34회 추소군재	1957.02.15 35회 추소군재

1957.02.16	36회 추소군재	1957.02.19	38회 추소군재
1957.02.20	39회 추소군재	1957.02.27	41회 추소군재
1957.03.02	42회 추소군재	1957.03.04	43회 추소군재
1957.03.05	44회 추소군재	1957.03.06	45회 추소군재
1957.03.07	46회 추소군재	1957.03.08	47회 추소군재
1957.03.09	48회 추소군재	1957.03.11	49회 추소군재
1957.03.14	50회 추소군재	1957.03.15	51회 추소군재
1957.03.16	52회 추소군재	1957.03.18	53회 추소군재
1957.03.19	54회 추소군재	(결심공판) 강문봉 사형, 공국진 징역 7년, 강홍모 성정모, 백항규 징역 3년 구형	
1957.04.17	추소군재 판결공판	(언도공판) 강문봉 사형, 공국진 징역 5년, 성정모 징역 3년, 강홍모 징역 2년, 백항규 징역 2년 언도	
1957.04.19	강문봉 중장 무기로 감형	대통령 직권으로 감형	
1957.09.23	사형집행 공포	국방부 장관	
1957.09.24	사형집행	허태영, 이유희	

4-4. 동아일보 기사 색인 목록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6.01.31	3	1	김창룡소장 육군특무부대장 피격 괴한의 총탄 받고 절명 작조(昨朝)(7시30분 출근도중, 자해 병원 앞서 범인은 2명 지프차 타고 잠적//길 막고, 차창 열자 발사 순식간에 범행한 현장광경 이대통령 사건경위청취//고 김소장유해 특무부대안치//범인의 특징 신장이 보통이상 검찰에 보고된 일단//명멸하는 조촉(弔燭) 빈실에 조객답지(弔客遽至)//군관간담회의//범인의장은 소령 견장 군복? 군검경합동수사진결성//범인에 대한 치안국견해//조난(遭難)전의 얘기하며 슬피우는 부인 도씨 담(談)//김소장 악력//무번호
1956.02.01	3	1	김중장 암살범인 종적의연묘연 지문과 탄환이 물증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확대 용의자 6명 목불문초중(目不聞招中)//범인은 시내잠복? 경찰측 수사면//그의 죽음 헛되지 않게 이대통령, 애도의 담화발표//해향까지 일절검색 경찰측의 수사방침//유해, 자택에 이안//피격사건에 특무대공식발표//육군장으로 거행 故김중장의 장의결정//50만〇현상 정보 제공하면//고인은 중장승급 후임에 정대령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발행일	면단	제 목
1956.02.02	3 1	포풍작영(捕風捉影) 제3일 도과(徒過) ! 단서포착에 고심 군검경수사진 혈안활동중//군인가장의 용의자 부산에서 서울에 압송//군용차 엄색(嚴索)//전국명수사장병 ○명소집//故김중장묘비문 이대통령이 회호//배후관계 모른다 범인잡기 전에는 김국방차관 담//전 장병에 금족(禁足) 차량 도장도 엄금//또 20만○ 헌감(憲監)서 특별현상//故김중장 장의 준비위원회 조직//애수에 싸인 상가
1956.02.03	3 1	범인 아직 오리무중 김중장 암살범수사 제4일 복장은 중위복으로 확인 검찰측 진범여부판정에는 자신//이대통령께 정대장이 보고//배후탐색으로 전환 가두검색은 헛수고? 증언코 귀가한 목격자 권씨 담//백만○으로 현상 배증(倍增) 전국경찰에겐 함구령 치안국장담//故김중장 오늘 국군장 상오 10시 「육본」 광장서 장의는 불식으로 거행//진중에는 신주령(愼酒令) 가무음곡도 정지
1956.02.04	3 1	故김중장국군장 조포성(弔砲聲)마저 처량 내외헌빈참렬하에 엄수(嚴修) 조금과 조하 이대통령이 전달//이대통령조사
1956.02.04	3 1	범인수사에 협력하라 이대통령, 김중장사건에 답화
1956.02.04	3 4	여론수집에 착수 수사는 부진 침○리활동 김중장사건 수사 제5일//괴지프차엔 중위와 일등중사 운전수까지 3인 일목격자담//수사본부발표 수사내용은 수시보도하겠다
1956.02.05	3 5	김중장사건 수사 제6일 권총가진 사병 문초 제일관구근무 김명도중사//전국적 수사망에 얽혀든 부산범죄//수사결과 매조마다 발표//현시에 수사본부설치//손국방장관 내무장관과 요담
1956.02.06	3 1	유력용의자등장 김중장사건 문초받은 인사 이십명//사건현장을 재검증//자동적 문제일 뿐 원중장, 수사본부 설치에 언급//「합수」서 증언 또 하나의 목격자
1956.02.07	3 4	진범체포엔 장시일? 제2주에 돌입한 김중장사건//이대통령 방문 원용덕중장이 사건보고//시경 찰국장 치안국장과 요담//언론자유보장 취재문제에 김차관담//수사에 한몫 가특무대원//인권유 린에 신중 김중장사건에 치안국경고
1956.02.08	3 5	모 기관의 이모 문초 김중장사건 의연무진전//정례발표중지 현사수사본부
1956.02.09	3 8	단서 아직 미포착 금중장사건 어느듯 십일 국방차관담
1956.02.10	3 4	이소령은 과연 진범인가? 비밀리 문초 9일 안개속에 헤매이는 김중장사건//美수사전문가도 내한
1956.02.11	3 1	수사에 별무진전 12일 경과한 김중장사건//시경에서도 용의자 문초
1956.02.12	3 1	새 용의자배후 탐사 증인으로 10여 명 문초 김중장사건//용의자 1명 부산서 피체

발행일	면단	제 목
1956.02.13	3 1	시설 불안비로 지문 감별지연 단서 못 잡은 채 수사계속 김중장사건 벌써 반달간
1956.02.14	3 6	시발점으로 되돌아선 수사 결정적 확증 못 잡은 채 제3주 김중장사건//사건현장을 재검증 경찰측 새 활동전개//협의점차희박? 문제의 두 용의자
1956.02.15	3 6	수사 아주 미궁에? 김중장사건
1956.02.17	3 1	수사진에 협박상 돌연 김중장사건에 수사방해의 행위에 경찰측 작호(昨曉) 불량배 취체(取締)// 특무대 방문요담 경무대 방문한 이련참총장
1956.02.18	3 1	수사 더욱 미궁에 20일째 접어든 김중장사건 이소령 16일 석방 美수사가의 지문 감별로//정체 불명 청년이 수사관 미행 협박상 끝에 또 방해공작?
1956.02.19	3 1	자칭 저격범인 괴청년 1명 체포 중부서에서 맹 문초중//수사경위 보고 김중장사건 정특무대장 대리//범인 「몬타주」가진 가짜 소령2명 체포(목포)
1956.02.27	3 1	김중장 저격사건 수사급진전 확실한 단서포착 진범인색출도 목척(目睫)간에?
1956.02.28	3 1	김중장 암살범 철명 일망타진 주모는 현역 육군대령 허태영 이진용 하수자는 민간인 신, 송양명// 출세방해의 사원(私怨) 특무대서 배후관계는 문초 중//범행 전말을 자백 하수자는 허대령집에서 피신//특무대발표
1956.02.29	3 1	김중장 암살단 전모와 수사경위 상가에 출입 요청서 유흥 허대령은 하수인과 상면하자 자백// 권총은 아궁이에 입던 옷은 불질러 증거를 인멸//김중장사건에 신사실탄로 도의원에 파급? 범행 당시 사용한 지프차 문제화//국회 국방분위서 조사//비상경계 해제//하수인 두명에 구속 령장 발부//이대통령에게 범인검거를 보고
1956.03.01	3 1	개인적 공범행위? 도진희의원에 대한 수사각도 김중장사건//지프차의 개도(改塗)문제화// 지프차주인 체포
1956.03.02	3 5	제2단계의 김중장사건 수사 배후 추궁 무진전 도의원 수사태도는 불변//압수한 「○」차 반환 도의원의 「선처요망」의 명함 받고 「나는 몰랐다」 김서장 변명//양서장 추궁//정인택대령 각 기관 령방 차사(致謝)//박대령 불원석방?//현상금 50만○ 유가족사업에
1956.03.03	3 5	김중장사건 각 방면에 비화 동대문 서대문 양서장 파면 안동대문서 보안계장은 감봉처분에// 실수로 본다 정특무부대장 담//입건수사 김동대문서장 직무유기죄로//시경국장 사찰과장 사표 2일 전부 각하//지방특무대 수명 연금 특무대본부 도의원수사에 주력
1956.03.04	3 7	도진희의원 체포 가결되자 국회사무처 뒷문서//시경서도 두 명 파면//동서교통주임 입건? 극비리에 문초//故김중장 묘 참배 특무대추구원 일동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6.03.05	3	4	파면, 징계등 5명 김종장사건 경찰측 문책은 일단락//피의는 「살인」 도의원에 구속영장
1956.03.07	3	7	도진희의원은 흥분 중에 본격취조는 미착수 김종장사건
1956.03.08	3	1	“사후에 알고 협조” 김종장사건 이진용대령 진술
1956.03.09	3	1	배후관계는 없는 듯 도의원 일부 범죄 자백? 김종장사건//16일 송청시
1956.03.10	3	1	김종장사건 수사종료단계에 12일경에 피의자 전부 송치 하수자 신·송은 검사가 취조 주모는 허태영대령으로 확인//동기는 인사조치에 불만
1956.03.11	3	8	도의원의 전과조회 사실이라면 도의원의 자격은 취소당해 행정관도 문제돼
1956.03.13	3	1	故김중장 암살범 전원송치 5명 중앙고등 군법회의에 민간인 3명은 서울지검으로//특무요직에 출세를 몽상 지프차처리엔 도진희의원이 담당 범행후 암약(暗躍)상(相)
1956.03.13	3	6	밝혀진 범행전모 ; 김종장 암살범 [제1회, 전3회]
1956.03.14	3	1	밝혀진 범행전모 ; 김종장 암살범 [제2회, 전3회]
1956.03.14	3	1	전동대문서장 등 4명도 송청(送廳) 죄명은 직무유기 불구속으로 김종장사건 경찰관계 입건//강검사가 취조
1956.03.15	3	7	밝혀진 범행전모 ; 김종장 암살범 [제3회, 전3회]
1956.03.15	3	11	예심에 착수 김종장사건 군재//도의원참심문
1956.03.16	3	9	도의원 의연 범행 부인 17일 현장검증 예정 김종장사건
1956.03.20	3	1	27일경에 군재 개정 김종장 암살범 군 관계자
1956.03.21	3	11	오늘 현장검증 김종장 저격사건
1956.03.22	3	4	범행 시종을 재연 김종장 저격사건 어제 현장 검증//구류기간 연장 도진희의원
1956.03.25	3	5	신초식·송용고를 기소 김종장 암살범
1956.03.28	3	1	투덜대는 허태영대령 김종장 암살범 군재 어제 개정//혐의사실을 부인 도진희의원 검사정에 출두
1956.03.28	3	1	김종장 암살범 군인관계기소장 [제1회, 전3회]
1956.03.29	3	5	김종장 암살범 군인관계기소장 [제2회, 전3회]
1956.03.29	3	5	도의원 형조회 본적지엔 무기재
1956.03.30	3	5	김종장 암살범 군인관계기소장 [제3회, 전3회]
1956.03.31	3	1	재판권관할로 논쟁 상오 공판은 40분 김종장 저격사건 2회 공판//도진희의원 기소 증거인멸 등 6개 죄목으로...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6.04.01	3	1	도진희의원 기소장 ; 연극적인 「O」차 인수증거인멸에 적극협조, 김창룡사건과 관련된
1956.04.01	3	8	관할재정시까지 무기휴정 김종장 저격사건 군재
1956.04.04	3	3	재판장에 김판사 김종장사건 민재(民裁)
1956.04.13	3	11	16일 3회 공판 김종장사건 군재
1956.04.17	3	5	16일 김(중장)사건 3회 군재 「영웅적 행위로 생각」 증언대에 나선 신초식의 과기염
1956.04.18	3	5	안소령 강등 김종장사건 누범
1956.04.19	3	5	「살해동기는 공분」 허태영, 군재서 진술 김종장 저격사건
1956.04.20	3	4	“범행은 시원같다” 현특무처장 장중령의 증언 김종장사건 6회 군재
1956.04.21	3	7	도의원 증언대에 김종장 저격사건 7회 군재...
1956.05.19	3	11	어제 9회 군재 김창룡중장 저격사건
1956.05.20	3	6	도진희의원 자격상실 전과형기의 미료(未了)판명, 김창룡 피살사건
1956.05.23	3	10	도피고 심판대에 1회 공판서 인정신문
1956.06.04	3	5	「잔형집행 정지취소란 법문에 없다」 변호사측 도피고 감금에 이의신청
1956.06.05	3	9	행정소송을 제기 도피고 변호인 정대장을 상대로
1956.06.06	3	7	「4개월이나 미행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거사」 김창룡중장 암살범들 진술
1956.06.07	3	4	사실심리 완료 다음 공판 12일 김종장 저격사건
1956.06.13	3	1	허공에 뜬 국회결의 도의원 석방싸고 법조계 양론//잔형집행의 요청 담당검사, 국방부에 통고
1956.06.14	3	4	의원자격은 있나? 도피고 석방싸고 새로운 관점//국방수뇌회의 도의원 석방여부로
1956.06.15	1	1	도진희의원의 경우
1956.06.16	1	6	초점을 알고 논쟁하자 도의원 구금의 위헌문제 [제1회, 전3회] (조재천)
1956.06.17	1	6	초점을 알고 논쟁하자 도의원 구금의 위헌문제 [제1회, 전3회] (조재천)
1956.06.18	1	1	「형면제」를 받았었다 도의원, 국회조사단에 16일 언명
1956.06.18	1	6	초점을 알고 논쟁하자 도의원 구금의 위헌문제 [제1회, 전3회] (조재천)
1956.06.19	1	10	불일증언 청취 도의원 사건조위 안두희씨를 소환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발 행 일	면 단	제 목
1956.06.22	3 1	도진희의원 잔형집행은 타당 「정지」에 관한 새 증거 있다 김국방부 장관회견담//「행소대상 안된다」 육군서 준비 답변서 제출//도위원의 잔형 일년 단축 집행
1956.06.25	3 9	행소심리를 개시 도의원사건 23일 고법서
1956.07.08	3 9	“민재속행이 타당” 대법원, 도의원 재판권에 재정
1956.07.13	1 9	허대령과 대질신문 도의원사건 조중령 증언청취 후
1956.07.14	1 8	조사경위를 보고 도의원조위 국방위에
1956.07.14	3 9	「조서」를 전적 부인 공판정에선 도진희 피고
1956.07.15	3 9	증인10명 채택 김중장살해사건 4회 하오 공판서
1956.07.22	3 10	내월 6일에 언도 도의원 행정소송
1956.07.25	3 3	25일 군재 속개故김중장사건에
1956.07.26	3 9	기소문도 새로 낭독故김창룡중장사건 군법회의 속개
1956.07.28	3 7	극비리 조사진행 국방부서 도의원사건 ○구입자금 출처
1956.07.28	3 7	故김중장사건 서울지법공판 ; 신·송용고 양피고에 사형구형 신초식 피고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1956.07.28	3 10	故김중장사건 군재 ; 채택 여부는 미정 정대장 등을 증인신청
1956.07.31	3 6	정대장 증언대에 김창룡중장 저격사건 군재 12회 공판
1956.08.01	3 10	“이대령과 만났다” 정일권대장, 김창룡중장사건 군재서 증언
1956.08.04	3 9	김중장사건 14회 군재 「공범에 틀림없다」 이진용대령 허병익중위 등에 논고
1956.08.05	3 4	허(태영) 이(유희)에 사형 이진용엔 3년구형 김중장 저격사건 「군재」
1956.08.07	3 1	고법서 기각판결 도위원의 행정소송
1956.08.11	3 5	도진희피고에 5년을 구형 증거인멸 및 공문서위조죄로
1956.08.12	3 5	신초식·송용고에 무기언도 김중장 암살 하수인
1956.08.18	3 5	허(태영) 이(유희)에 사형 김중장 저격사건 군재서 언도
1956.08.22	3 2	「2·3일내 모종조치」 김장관 연명 도의원 ○차구입대금 출처 국방부 특심위조사 완료
1956.09.09	3 3	대법원에 상고 도의원 행정소송

발 행 일	면 단	제 목
1956.09.26	3 1	도진희의원에 징역4년 어제 언도
1956.10.04	3 10	허태영 사형 확정 대통령결재로
1956.10.07	3 4	허태영 등 사형 비공개로 집행할 듯
1956.10.09	3 3	허태영 등 사형집행 장기 보류될 듯
1956.10.18	3 6	양 하수인 2심 1회 공판개정 김중장 살해범
1956.10.28	3 6	신초식 송용고 양인에 사형 김창룡중장 살해범 2심 구형//허태영중령 등 사형 집행을 또 연기
1956.11.08	3 3	사실심리 진행 도진희 피고 2심
1956.11.11	3 7	허태영대령 등 사형 근일 중에 집행//공소기각판결 김창룡중장살해 하수인
1956.11.13	3 1	배후에 고위장성 허(태영)중령 부인, 요로에 재심탄원//피체전에 거액도 보내오고 관련인물들이 입증했다
1956.11.14	3 1	사실여부의 조사착수 허태영 부인의 탄원내용·김중장 저격사건에 새로운 파문 수사관진급 소집 군당국 탄원서 정식 접수//강중장 소환심문시//새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허의 사형집행 연기될 듯//더 참을 수 없다 잘 되리라던 구명운동도 실패, 황여사와 일문일담 //다소 꾸짖고 무언 탄원사실 안 허태영 모습
1956.11.15	3 1	황운하 여사 탄원서 진상수사 본격화 「특별조사위」 구성 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새로운 관심집중 //“군인은 군기관서만” 필요시엔 허태영을 재심 이참모총장 담//군수뇌부의 반목 때문 고위합동 (군·경·검을 뜻함) 수사로 사실 밝혀주기 바란다. 강중장 탄원서 내용 부인//특무대 등 조직적인 모략공작한다는 정보 기입수//있을 수 없다 모략자 있다면 단호처단 이대장 담//비겁한 태도 허의 가족측 ; 강문봉중장 비난
1956.11.16	3 6	강문봉중장 불일소환 탄원사건 특조위 허의 실제·황운하 여사 심문//3명은 모략 꾸미는 측 강중장 「특조위」에 불만//남편언질을 암시 황여사, 탄원사실에 자신을 표명
1956.11.17	3 1	물적증거 얻기 힘들 듯 탄원사건 특조위 관련인물을 속속 소환 흑·백의 관건 전 허 황부인에 이어 16일 심문//조사 받고 나온 황여사와 문답 최대한의 증거 낼 터 아침 10시~밤 9시 반까지 심문//군수뇌부 개인반목사인 사실이건 모략이건 철저규명 김장관 연명 //상세히 조사 이대통령, 김장관에 지시//동요없이 등고 강문봉중장 동태//탄원사실에 깜짝 놀란 도진희 피고 담 제2의 각본이다 정일권, 강문봉장군 제거 목적//이번의 공세는 사건에 전조전 강중장 담
1956.11.18	3 1	돌연 「특조위단장」 경질 17일 상오 유재흥중장 임명 강중장 뒤에 확대 관건 전 허태영 일차 심문서 증언//「물증」의 행방을 추궁 보증수표의 거래관계등//사법권도 발동방침 출두서구속령 상의 효력 발휘//금액차는 현격 황여사의 돈 거래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6.11.19	3	1	탄원내용조사 상당 진전 밝혀져가는 단계 「특조위」의 움직임 활발//물증의 수표발견//허의 집 「식모」 증언 도씨에게 받았다는 백만○건도 추궁 중//확실한 증언을 회피 일요 불구 허태영 연3일째 심문//내외의 영향 고려 하고 싶은 말 삼갈 뿐 강문봉중장 담//때를 기다린다는 강중장 일요일을 가족과 창경원서 소풍//수표 발견 시인 김국방장관담 공범으로 판정 상조 공정·신중처리를 재강조//남편의 증언기대 황여사 자신을 거듭 표명
1956.11.20	3	1	과연 주범은 따로 있나? 탄원서사건 조사의 중간보고 결정적 단계미달 착수한 지 이미 일주일 //2명의 민간인도 수표관계로 소환//수표4매 모두 발견 주목되는 출처·사용목적//어느 편이 옳은가 해명의 열쇠는 오직 허에//황여사 주장과 강중장의 태도//「수수께끼」의 침묵 심경변화 만이 해결//「모른다」로 일관 유단장, 지금까지의 보도시인
1956.11.21	3	1	특위조사 제2단계로 주목되는 이진용대령의 증언 보증수표 준 사실은 시인 목적 출처엔 황(여사)와 상치//강중장 불일소환? 김장관 「장성급심문」 사전 연락지시//신초식도 심문
1956.11.22	3	1	특위조사 최종단계 김중장 암살 공범의 신빙성확인?//실질상 구금심문 강중장·공준장 등 3씨 탄원서사건//예하 군기관서 수사 21일도 계속 철야심문시//때아닌 「이색부인회의」 황여사 집에 모여든 다섯 여성 //계속 조사 필요 유재흥단장 발표//구속으로 발전시 김장관 장성급 소환에 언급//희망적인 견해 허의 가족측 담
1956.11.23	3	1	관련자 6명 정식구속 공국진준장 자수로 결정적 진전 김창룡중장 암살모의혐의 양장성·두 영관 등에 영장//2개항목을 시인 공국진준장//강중장은 계속부인 더 많은 관계자 소환?//철야로 수사진행 일개의 「콘서트」에 용의자 1명//수사의 초점//「고문설」을 부인 김용우국방장관, 강중장 구속에 언급
1956.11.24	3	1	김창룡중장 암살음모로 입건수사 탄원서사건 새 국면으로 급전//강(중장)은 「살인교사」 공준장 등 5명은 「방조」로//본격적으로 조사 작성//수명의 영관급 장교도 소환//강중장 등 구속 이참모 총장 답화
1956.11.25	3	1	탄원서사건 의외 방면으로 확대//강중장의 경리관계 부정도 추궁 고급장교 2~3명 더 구속//보증수표 군납 회사에서 발행//내주내로 조사완료 유재흥단장 담
1956.11.26	3	1	탄원서 특조위 최종 결론을 추궁 강중장의 혐의 확정적 강중장 허태영 심문만 남기고 조사 거의 완료//죄과평가를 모색 교사법? 방조범? 공동정범?//죄과의 일부로 포함 강중장의 금전 관계 부정사실//직접 관련 없어 군납업 함창희씨//끝까지 묵비권행사? 관련성을 사인치 않는 강중장
1956.11.27	3	4	탄원서사건 암살음모는 사실 백학규중령, 강문봉중장 등 관련사실 자백//일차 음모 정황 청취 김응조 전준장 계속 심문
1956.11.28	3	3	탄원서사건 30일 군재에 회부 강중장등 관련자 7명, 강문봉, 공국진, 강홍모, 성정모, 백학규, 최창준, 박범서//허태영 재심도 고려 유단장 담
1956.11.29	3	4	탄원서사건 백만○ 전달을 부인 도(진회) 이(진용) 등 계속 심문//강중장 지령으로 암살계획 최창준 전 부관에 지법서 영장발급//강제처분도 승낙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6.11.30	3	1	김중장 제거지론 시인 강문봉중장, 백만○ 전달도 음모와는 관련없다//탄원서사건 곧 군법에 이첩 국방부 장관 불일 조사완료 언명
1956.12.01	3	1	특조위의 활동을 종결 탄원서사건 오늘 군검찰에 이첩 허태영 재심여부 처리주목//신성료정에 권총까지 가지고 갔다 강중장 대체로 시인 현금은 도진회 청탁에 의해 준 것//허에 지령한 일은 없다 명백한 진술회피 30일도 허태영 계속 심문
1956.12.02	3	5	탄원서사건 군재회 부결 재이참모총장 유득위단장 대통령에 최종보고//관련자는 도합8명 전제 3헌병대대장 김기석중령 추가 구속//허태영도 시인 「탄원서」의 내용//법무감실에 삼일경 이첩 //모략운운사과 강중장이 서한
1956.12.03	3	7	강문봉중장의 죄과는 공동정범 특위조사에 서명코 해체//재판장 인선(人選) 난색 허태영재심은 불가피?
1956.12.04	3	1	강중장 등 6명을 수구속송치 즉시예심에 착수 법무감실 민간인관계자는 지검에//이참모총장 담 허의 재심방법 검토 관련자는 조속의법처결//도진회도 수사방조·교사혐의로
1956.12.05	3	10	방조 극력부인 강중장의 전 부관
1956.12.06	3	1	암살음모 모두 시인 강중장의 합법적 제거 실패로 인사배치 방해가 주동기 탄원서사건
1956.12.07	3	5	적부심사 신청각하 강중장, 공준장등의 도피를 우려
1956.12.09	3	1	탄원서사건 군법회의 회부 강중장은 살인·공준장등은 음모죄로//13일경 첫 공판 심판관 등 선정착수//허의 재심 감형여부 주목//김중령은 석방 육군징계위에 회부
1956.12.09	3	1	강중장 등 기소장 전문 [제1회, 전5회]
1956.12.10	3	6	강중장 등 기소장 전문 [제2회, 전5회]
1956.12.11	3	1	탄원서사건 백선엽대장 내정 군법회의재판장에 피고들은 계속 청?리에 구치 중
1956.12.11	3	6	강중장 등 기소장전문 [제3회, 전5회]
1956.12.12	3	7	강중장 등 기소장전문 [제4회, 전5회]
1956.12.13	3	6	강중장 등 기소장전문 [제5회, 전5회]
1956.12.13	3	7	강중장 등 군재 3·4일 연기 재판장·심판관의 구성 지연으로//최창준전소령 기소 도진회 피고도 추가할 듯
1956.12.14	3	5	탄원서사건 군재 15일 개정 재판장에 백대장·심판관엔 오중장
1956.12.15	3	1	허(태영) 재심언급 상조 강중장등 군재신속처리 이참모총장담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6.12.16	3	1	강중장사건 군재 첫 공판개정 어제 상오 10시 육군 중앙고등 군법회의 법정에서 백피고 재판권 관할재정신청수리 19일 상오 9시에 속개키로//공판정스납 이채로운 「별」과 훈장 태연한 피고들 황여사는 안 뵈고 방청석은 초만원
1956.12.20	3	1	구속의 법적근거로 논란 어제 강문봉중장사건 제2회 군재 현위에 제청 주장 변호인단 위헌이라 강조//「현위」관계의 조문//울고 있는 강중장의 모친 백피고는 재판권재정신청취하
1956.12.21	3	1	기소사실을 시인 최(강중장전부관)피고, 황여사증언 강중장사건의 군재 20일도 속개//사형 수락인 싫어 탄원서를 내게 된 동기//「현위」제청 등 각하//도피고 추가기소
1956.12.22	3	6	변호인 검찰관 논쟁으로 시종 허의 증언 채택 형식 싸고//강중장사건 21일 4회군재//전책임 내가 지고 죽겠다 허의 증언//강중장등 살인음모는 사실 “생을 체념한 지 이미 오래” 오히려 아내를 원망하는 허태영 담//허의 집 식모 등 증인 추가 채택
1956.12.23	3	4	김창룡, 강문봉중장 회식 알려 이성가소장 증언 군재 26일 속개//기소사실과는 일부 상반 하수인 신초식 증언 청취 21일 하오 공판
1956.12.24	3	8	직접 행위입증을 미제시 애매한 살인죄목 허태영의 「재심」도 문제점
1956.12.27	3	6	강문봉중장사건의 군재 26일 속개 허를 공동증인으로 채택 전 부관 박중위 현금전달 등 증언
1956.12.28	3	1	결정적 단계로 들어간 군재 재판장 기피 채택 여부 주목 공판정 일시 소란 전적 부인하는 도 증인 강제퇴장 //전부 시인 강중장과 모의 등 마침내 허태영 중대 증언//「살해방침 내가 주장 강중장은 사후수습확약」
1956.12.29	3	5	기소사실과 대체로 부합 최소장 · 김준장증언 강중장등 군재 속개 28일 상오 공판//이진용 대령도 증언 27일 하오 공판
1956.12.30	3	1	강중장 재판권 관할 재정 신청 군재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반전 4피고 분리 심리 대법원의 재정주목 내5일에 속개키로
1956.12.30	3	2	취재야화 기자수첩에서 ; 과연 살아날 것인가? 예언의 진의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형수 허태영
1957.01.06	3	7	“강중장 자수 믿었다” 성정모대령의 증언청취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1.08	3	1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엇모르고 「모의」에 가담” 강홍모대령 증언 청취
1957.01.09	3	11	구체적 증언 거부 허태영, 강중장 등 사건 군재서
1957.01.10	3	4	강중장증언 재판권 재정 내린 후 공준장 등 4피고의 사실심리를 완료 무기휴정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백학규 · 최창준피고증언 팔일 하오 공판에서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7.01.12	3	6	탄원사건 강중장도 군재서 대법원서 재판권관할 재정 결정//살해모의를 시인 최창준피고 민재 첫 공판
1957.01.18	3	8	강중장 드디어 심리 군재, 명 19일에 재개
1957.01.20	3	7	강중장 등 군재 21일 속개키로
1957.01.23	3	9	강문봉중장 증언 군재, 22일 하오로 연기
1957.01.24	3	6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심윤중령(당시조위원 CID대장) 김주홍의원(탄원서조종자로 지적된) 증언을 청취//「짜고한 연극분명」 강중장증언 허의 진술은 허위 22일 하오 공판
1957.01.25	3	1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가슴 아픈 육군내의 고문」조서내용일부만 시인 강중장 진술 “특무대보복 두려웠다”//「최창준은 그럴 수 없는 부하」 강중장, 민재서도 증언
1957.01.26	3	1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제거」란 「거세」를 의미” 강중장 기소사실 대체로 부인//「허태영에 지시한 일 없다”//故김창룡중장제거 생각하게 된 동기 “특무대 비행에 공분 군기 · 통수계통 문란 등 4개항 진술”//24일 하오 공판//“군인 해독 크다” //「정 · 경분야까지 침투 군사원조도 중단당할 뻔”
1957.01.27	3	1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허의 말 중심으로 꾸민 조서” 「전피고관련한 일 없다」 강중장, 계속 기소사실을 부인//25일 하오 공판 ; “살해주장을 만류 금중장거세 위해 승진건의 했다”//故김중장 개오 촉구차 회식//“도의원 「돈」 보낸 일 없다”//검찰측 반대심문 군재 28일에 속개키로
1957.01.29	3	3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법정서 한 말이 참” 강중장, 검찰측 반대심문에 증언
1957.01.30	3	5	도의회와 돈 거래를 추궁 검찰관측의 「반대심문」을 종료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28일(21회) 하오 공판 “허의 행동 적극 말했다”
1957.01.31	3	5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밀고란 비겁해서” 강중장, 계속 부인 일관
1957.02.01	3	3	최(창준)에 징역3년 김중장 저격사건 추소 민재구형//고문, 사실이면 처벌 김국방장관담 각별한 주의시켰었다고
1957.02.02	3	5	강중장 심문 종료 법정진술만이 진실 주장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2.03	3	5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과자 담배 내가 싸주었다” 강중장부인 도여사 증언// “고문 받은 일 없으나 비명 들었다” 최피고 증언 1일 하오 공판
1957.02.05	3	1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특무대서 고문당했다” 바트봉으로 20여 회, 이춘광대령 증언 “강중장이 허를 꾸짖는 것 목격”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7.02.06	3	6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여자관계 등 조사 김·강중장간에 불화” 장·김중령증언
1957.02.07	3	1	특무대서 고문 받았다 복잡한 양상을 노정 “알몸등이 거꾸로 매달고 물 맥어” 백학규중령 제대로 말 못했다고 증언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모욕주기 위한 비난” 강중장·김중령 증언에 반박 5일 하오 공판
1957.02.08	3	6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연이은 「고문진술」 성대령 「침대봉으로 맞았다」고//강중장 「말」과 상반 백중령, 신성요정회합 등에 증언 6일 하오 공판
1957.02.09	3	1	“도의적 책임진다” 공준장, 대구·서울회합에 증언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2.12	3	3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심문 때의 녹음청취 강문봉중장, 순순히 사실시인
1957.02.13	3	7	허태영, 증언을 거부 몸의 불편 이유 연3일째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1957.02.14	3	1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강중장의 진술전복 「기소내용」 모두 사실 허태영, 격분한 어조로 증언 “주동인물은 강문봉중장”
1957.02.15	3	5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허증언 일부 시인 공준장과 이대령의 증언만 청취//돈문제에 진술 상반 황운하여사, 도진희피고와 대결 추소공판
1957.02.16	3	5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이형근대장 증인신청 각하 변호인단 총퇴장 부정한 증인 채택이유로 혼란//도진희에 2년 구형
1957.02.17	3	6	변호인단 복귀기회 신임 관선변호인만으로 진행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2.20	3	1	관선변호인을 기피 강중장의 분리심리 신청을 각하 38회 군재 상오 공판
1957.02.21	3	6	강중장 증언을 포기 사실심리는 실질상 종료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2.22	3	5	장성간의 알력 해소 급무 강중장, 눈물의 최후진술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2.23	3	9	군재, 27일 결심
1957.02.26	3	6	도진희피고에 실형 8개월 김중장 저격사건 「종범(從犯)」으로 언도
1957.02.27	3	8	군재, 오늘 결심
1957.02.28	3	1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변호인단 준비 위해 변론·논고 내2일로 연기
1957.03.03	3	1	「취」가 「고양이」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격이다 강중장의 변호인단, 변론을 개시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04	3	1	“고위층의 연질유감 허의 구명운동 증거있다”
1957.03.05	3	1	“탄원서는 고위층의 조종에 의한 것 고문으로 조작된 수사기관조서 예심도 증거능력없다” 강문봉중장의 변호인단, 변론을 속행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06	3	1	“도의적 책임있으나 형사상으로 무죄” 강문봉중장의 변호인단 주장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07	3	8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증거 희박 정상 고려 공소취하 주장·변론 계속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7.03.8	3	3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 공준장의 변론을 개시//6일 하오 공판 ; 무죄 아니면 사형 강중장의 변호인단주장
1957.03.9	3	8	합법적 제거만 주장 공준장 자수 참작 바란다 변론을 계속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10	3	4	전피고의 변론 종결 11일에 논고·구형예정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13	3	6	관선 변호 4피고 무죄 주장 14일에 논고와 구형예정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15	3	8	“정치적 해결 안될 말” 검찰관측 「논고」를 시작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16	3	5	변호인단의 변론을 반박 “허의 말 신빙성있다” 검찰관측의 논고를 계속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17	3	5	사감(私感)으로 한 살해 이검찰관, 연2일간 논고를 속행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19	3	1	강중장은 허태영과 공동정범 법률논거당 김검찰관의 논고 “범죄의 증거 충분 공준장 등 4피고도 음모” 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1957.03.20	3	1	강문봉중장에 사형 죄목은 「살인 및 음모」 공국진준장에 징역 7년을 구형 강홍모·성정모대령과 백학규중령에도 3년 각 피고의 계급 전봉급도 몰수//할 말 없다고 쓴웃음 강중장 등 가족 눈물 바다
1957.03.22	3	8	강문봉중장 등 양형(量刑)을 평의(評議) 추소군재의 심판관들
1957.03.28	3	8	언도공판일 미정 강문봉중장 등에 양형평의는 진행 중
1957.04.12	3	5	기소사실부인 도진희피고 일회 공소심
1957.04.14	3	3	양형평의에 미달 강문봉중장 등 언도일 결정도
1957.04.16	3	6	강문봉중장등 명17일에 언도공판
1957.04.18	3	1	강문봉중장에 사형언도 「살인」 및 「동예비죄」로 공준장 5년, 성대령 3년, 강대령·백중령 각 2년, 4피고에 실형·파면·전급료 몰수//故김창룡중장 저격사건 추소 군재 어제 판결 도리어 군기파괴 공 크나 국군 전통위해 단불용판결 내용 사형은 면하리라는 관측 주목 끄는 결재와 허의 재심여부//공판정 광경 태연히 담소 삼성장군 부인은 보이지도 않고
1957.04.19	3	7	허태영 재심불언급 육군 당국 강중장, 서울형무소 수감수속 중
1957.04.20	3	1	신초식·송용고에 사형을 언도 故김창룡중장 암살 하수인 대법원 원심을 파기자판(破棄自判)//강문봉중장에 무기 이대통령 공훈 참작 일등감결재
1957.04.25	3	5	공소 기각 판결 김중장 저격사건 민간인 최피고에
1957.04.26	3	6	최창준 공판 계속, 김창룡중장사건
1957.04.26	3	7	허태영에 감형 조치 사면법에 의해 내신(內申)한 듯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발행일	면	단	제 목
1957.04.27	3	4	"위법 아니다" 허태영 사형집행보류 김국방차관 해명
1957.04.28	3	10	공국진준장 등 신병 부산형무소로 이송
1957.04.30	3	6	허태영 등 감형 확정? 강전중장 등과 함께 대구로 이감//공국진준장 등 머리 깎고 부산군형무소 수감
1957.05.18	3	10	식발한 전날의 삼성장군 강문봉, 기결집방에 수감(대구)
1957.08.29	3	9	징역 5년 6월 도진희피고 2심 구형
1957.09.10	3	5	도진희피고 재구속 김종장 저격사건의 형사피고로
1957.09.12	3	7	허태영 이유회 형집행논의 육군 당국
1957.09.19	3	8	징역 2년 6월 언도 고법서 도진희에 유죄판결
1957.09.20	3	8	허태영 감형 없을 듯 최세황국방차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 시사
1957.09.25	3	1	허태영 이유회 사형집행 김종장살해 1년8개월만인 24일 상오 10시 3분에 최후 알린 6발의 총성 대구교외 육군정보학교훈련장에서 총살//가족의 면회도 불허 삼엄한 경호하 형장으로// 마지막 만나는 길 황운하여사·모친·동생등 대구로//오늘의 비운 모르는 4남매 쓸쓸한 허의 집 학교도 가고 텅 비어//사건경위; 구명운동 끝내 허사//재심여부 곧 결정 하수인 신초식과 송용고
1957.09.26	1	1	허태영·이유회의 형집행이 남긴 교훈
1957.09.26	3	1	허태영 이유회 두 사형수 최후의 순간 애국가 부르고 만세 삼창 끝까지 태연·조국통일 부탁 유언 가족들과의 마지막 이별//새 말뚝이신 형장의 길//흰옷 입은 맨발의 사형수//미소로 죽는다고 전하오//유회야 애국가를 부르자//소리 높이 만국만세 세 번//총성 울리는 최후의 순간//기구한 운명? 만삭의 꿈故김중장도 부인해산달에 피살 //수수께끼의 황여사 임신 또 다시 집중되는 허태영을 둘러싼 화제 사상 두 번째의 일 자유로운 수감생활 중에 상봉?//담당 수사관의 동정에 선 듯 최국방차관, 황여사 임신에 비공식 담//“나는 속았다” 황녀사 담 (대구)
1957.09.27	3	1	남편과 자유롭게 만났다 황운하여사가 말하는 「임신」의 경위 관계관들의 O인 아래 허의 「임」 열도록 설복시키라고//석달간 면회도 삼가 만삭의 몸·세상이목 두려워//“친구들의 권고뿐” 「탄원서」를 내게된 이면 //조위객 하나 없는 「상가」
1957.10.01	3	1	판사와 사형수 정의(情誼) 고허태영씨의 고별에 답하여 [상] (서울고법판사 김홍섭)
1957.10.02	3	1	판사와 사형수 정의 고허태영씨의 고별에 답하여 [중] (서울고법판사 김홍섭)
1957.10.03	3	4	판사와 사형수 정의 고허태영씨의 고별에 답하여 [하] (서울고법판사 김홍섭)
1957.12.29	3	7	재심청구기각故김중장 살해범 신·송 양기결수
1958.01.15	3	10	도진희의원 징역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1958.05.22	5	5	신초식 송용고 「교수형」 집행 김창룡중장 암살 하수범 20일 상오 서대문형무소에서
1958.05.25	4	1	두 하수인의 최후 김창룡중장 암살범 조용하게 죽어간 송용고·신초식 나란이 잠든 4인 파란 많던 사건에 마지막 종지부//“집형에 유감없다 허의 가족과 한 식구같이 지내도록” 신·송유서

두 번째 기록 _

진보당사건

1. 진보당사건이란

2. ‘진보당사건’ 기록물 개요

3.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두 번째 기록 _

진보당사건



1 진보당사건이란

1-1. 진보당사건 개요

1 1 1. 사건의 발단

진보당사건은 1957년 9월 서울특별시 경찰국(이하 '서울시경')이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의 불법성과 당수인 조봉암이 조총련계 정우갑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경은 1958년 1월 12일 윤길중, 조규희, 박기출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했고, 1월 14일 조봉암은 자진 출두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검찰과 서울시경은 조봉암이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과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당에 대한 전면 수사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을 인식하고, 잇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당의 수사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경은 여러 간첩사건과



재판받고 있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의 모습 (CET0037387)

진보당을 연결시키려고 했고, 검찰은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반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로 일치점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뒤죽박죽으로 사건 결과가 발표되었다.

1 1 2. 수사 및 재판과정

진보당사건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사건수사 초반에 서울시경이 기소했던 간첩들과 진보당과의 접선 혐의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건수사 후반에는 검찰과 서울시경이 일치된

방향으로 진보당의 수사방향을 '평화통일론'의 위법성 여부와 양이섭이라는 '이중 간첩'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라는 간첩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첫 번째 쟁점인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의 위법성 여부는 정부 측이 발표한 기소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골자로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통일론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혐의였다. 두 번째 쟁점은 조봉암이 북한과 남한의 첩보조직 사이에서 이중 간첩으로 활약하고 있던 양이섭을 통해 1955년과 1956년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약 2,500만 환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 진보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1958년 7월 2일 1심에서는 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기본적 원리를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규정했으나 간첩죄 여부에 대해서는 양이섭의 '자백'을 토대로 하여 조봉암에게 5년을 선고했다. 양이섭에게는 국가변란 혐의로 5년을 선고하고 대부분의 다른 진보당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있는지 사흘 후인 7월 5일 ‘반공청년단’을 자칭하는 2, 3백 명의 청년들이 “친공(親共)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간첩 조봉암을 처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법원에 난입하는 재판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은 10일 후 또 다시 친공판사를 규탄한다고 대한문 앞에 모였다가 무장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로 인해 1심에 관여했던 법관 유병진, 이병용, 배기호 등은 한동안 피신해 있어야 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원난동사건’의 배후조종자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색출해 엄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난입난동으로 체포된 청년들을 일부 구속했을 뿐 석방, 즉심회부 등 너그러운 처사로 흐지부지 처리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유당은 국회에서 야당 측이 제시한 법원난동사건진상조사단 구성안을 거부했다.

1 1 3. 2심 재판과정

사법부는 ‘법원난동사건’으로 확실히 위축되었다. 때마침 정계는 야당탄압의 도구로 등장할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국이 극도로 긴장과 불안에 휩싸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58년 9월 열린 김○○ 판사가 담당한 2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의 구형대로 조봉암과 양이섭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조봉암의 간첩죄 적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1, 2심의 처리과정에서 조봉암은 양이섭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그 돈이 북한에서 온 것이라는 점은 몰랐으며 북한과 내통했다는 검찰의 공소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은 조봉암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우선 HID(대북공작기구)에서 양이섭에 대한 감시감독을 책임졌다는 엄○○은 양이섭이 북한을 왕래할 때 자신이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조봉암이 북한과 주고 받았다는 돈이나 약재, 감사장은 자신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러한 물품은 자신이 아는 한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봉암 간첩죄의 유일한 증인이자 피고인인 양이섭도 2심에서는 1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했다. 특무대의 고문과 협박, 회유에 못 이겨 한 ‘거짓자백’이었다고 번복 진술한 것이다.

상식대로라면 1심에서 양이섭의 자백으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2심에서는 양이섭이 그 자백을 번복했으므로 검찰 측에서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간첩죄는 백지화되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양이섭의 번복 진술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조봉암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무시하고 사형을 언도했다.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법을 가지고 판이한 재판을 하게 되면 국민은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기 힘들다. 재판의 권위를 세워줄 것을 사법부에 요망한다”라는 함축적인 발언을 하여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었고 신문에 보도된 이 발언은 압력치고는 대단한 압력을 사법부에 가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었다.

1 1 4. 대법원 확정판결

1958년 12월 24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정당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릴 의도로 내놓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무술 경관 200여 명을 동원해 야당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24파동’). 그리고 곧 1959년 2월 27일 진보당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평화통일론에 대해서는 ‘언론자유에 한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봉암의 간첩죄 여부에 대해서는 양이섭의 1심 자백과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을 받은 사실, 그리고 감방 안에서 양이섭에게 전하려 했다는 조봉암의



1958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상을 점거한 야당의원의 모습 (CET0039994)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쪽지가 중요 증거가 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어서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판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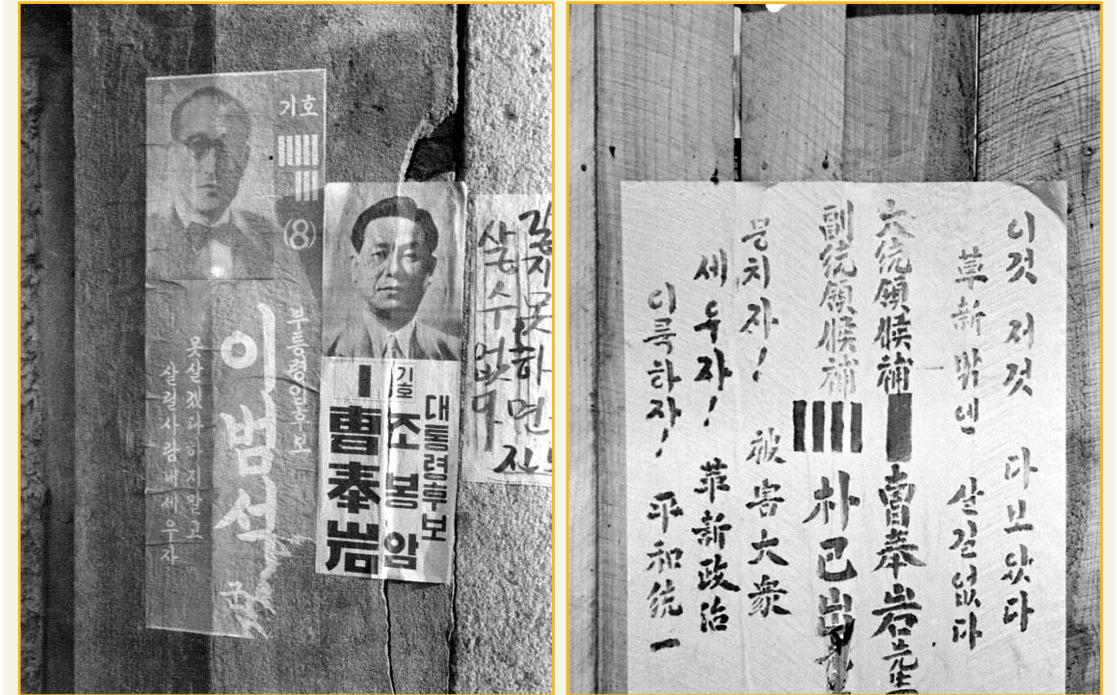
조봉암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지만 상고심을 맡았던 바로 그 재판부가 다시 재심을 맡았다. 자기가 맡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리는 없을 것이므로 결과는 뻔했다. 1959년 7월 30일 재심은 기각되었고 다음 날인 7월 31일 오전 11시에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전격 집행되었다. 유일한 증인이었던 양이섭은 이보다 이틀 앞서 이미 처형되었다. 양이섭의 번복 진술을 뒤집을 기회조차 막아버린 뒤였다. 진보당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탄생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결국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소멸되고 말았다. 그 뒤 1년도 못되어 ‘4월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1 1 5. 진보당사건의 쟁점들

진보당의 당세 확장과 조봉암의 대중적 영향력 조봉암은 1956년 5·15정·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216만여 표를 얻었다. 이승만은 504만여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을 저지할 필요성에서 진보당사건은 일어났고 법적 절차라는 합법적 요건을 갖추고 진보당과 조봉암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는 재판의 진행과정은 법률적용이나 절차상의 공정성 여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남겼다. 법률상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첫째, 조봉암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유일한 증거가 양이섭의 자백으로, 양이섭은 2심에서 1심의 자백을 번복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1심 자백만 기초해 뚜렷한 다른 보강 증거도 없이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언도한 것은 증거불충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진보당사건은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기소 건과 조봉암·양이섭이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한 것으로, 두 사건은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강령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행위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조직된 당을 불법으로 판시한 것은 법률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진보당사건이 단순하지 않은 정치적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의 선거 벽보 (CET0045176)

배경을 갖는 정치재판이며,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보당사건은 왜곡되고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오유석 (성공회대 강사)

1-2. 진보당사건기록 공개의 의미 및 역사적 가치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하는 진보당사건 기록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기록과 육군 특무대의 수사기록, 서울지방검찰청의 기록, 그리고 재판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명은 공안사범기록(조봉암 외)이고, 분량은 1만 3천여 쪽으로 총 42권으로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해 진보당사건 전개과정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기록 공개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진보당사건기록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보당사건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사실에 기초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우선 서울시경의 진보당사건 수사과정을 보면 동해안반란사건, 박정호 간첩사건(1957년), 근로인민당 재건사건(1957년 12월), 정우갑 간첩사건 등 크고 작은 각종 간첩사건이 진보당·조봉암의 연관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9년 1월 12일 치안국이 공식적으로 진보당과 조봉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서울시경 사찰과에서는 정우갑, 박정호 등 간첩들과의 접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서상일, 송남현, 김성숙 등 모두 해방 직후 좌익과 관련이 있던 혁신세력들로서 서상일의 민주혁신당과 조봉암의 진보당이 결별하기 전부터 혁신정당운동에 가담해 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까지의 수사방향은 주로 진보당을 여러 간첩사건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육군 특무부대(이하 육군 특무대)도 조봉암에 대하여 수사했다. 육군 특무대는 1958년 1월 9일 간첩용의자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고 내사하던 중, 1958년 2월 8일 양이섭을 검거하고 조봉암의 간첩혐의를 수사한다.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한 간첩혐의 수사는 특무대 및 서울지검의 조사를 거쳐 기소예까지 이르렀고, 1958년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은 진행 중이던 진보당사건 제9회 공판부터 양이섭, 조봉암의 간첩행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다.

이상의 기록은 서울시경이 북한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근거없이 조봉암과 진보당을 엮어 수사에 나선 사실, 진보당과 간첩들의 접선혐의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고 평화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의 모습 (CET0037387)

통일론의 불법성을 근거로 들어 진보당을 해체하기 어려워지자 수사권도 없는 사안에 대해 육군 특무대까지 수사에 나선 일,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사형에 이르게 한 정황들을 충분히 보여준다.

진보당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이 될 기록은 육군 특무대와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할 수 있다. 양이섭이 2심 공판에서 수사기관과 1심에서 진술했던 자백을 반복했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공개된 ‘양이섭 신문조서’ 어디에서도 조봉암이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 줄 근거가 희박하다. 오히려 양이섭이 명백히 미 대사관 및 HID(대북공작기구)와 관계된 대한민국의 대북첩보원이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 뿐이다.

또한 조봉암은 양이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북한에서 보내온 공작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양이섭은 일제시기부터 조봉암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어 온 사이로서 이따금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따라서 양이섭의 신문조서만으로는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아

내기 어렵다.

한편, 이번 진보당사건 기록물의 공개로 그간 ‘조봉암 구명위원회’가 주장해왔던 증거불충분, 국가보안법상의 범죄구성 요건 미흡, 증거재판주의 위배 여부 등의 쟁점을 재검토할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보당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들(판사들, 수사관들, 연구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왔던 사건의 진실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진보당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기록물 공개는 당시 아시아 최고의 ‘사회민주주의 이론가’로 알려졌던 이동화의 사회주의이론, 그리고 이른바 혁신계라 불리었던 중간파 및 좌파들의 사회주의사상, 통일론,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깊이 있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우파에 속하는 서상일보보다도 해방 후 조봉암과 함께 민족자주연맹활동을 했던 중간좌파들이 오히려 조봉암과 진보당의 강령,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진보(정당)세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오유석 (성공회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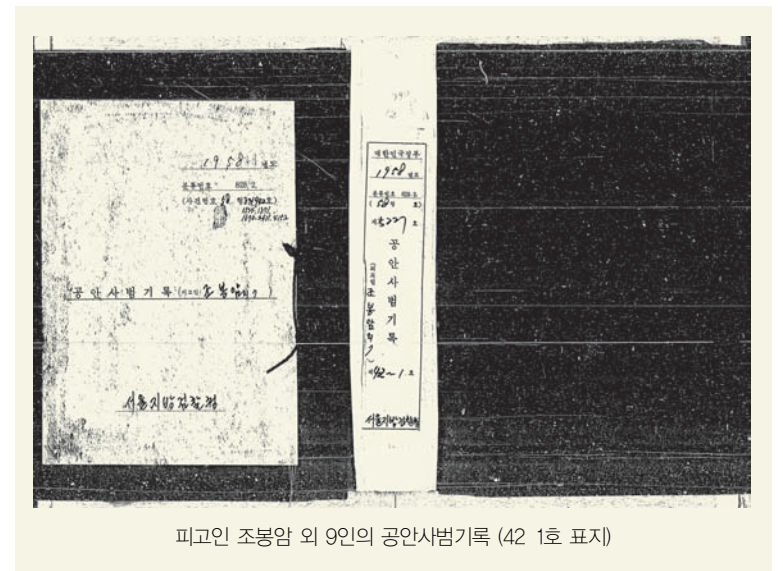
2

‘진보당사건’ 기록물 개요

‘진보당사건기록’은 1만 3천여 쪽으로 총 42권으로 편철되어 있다. 기록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및 육군 특무대의 수사기록,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사기록은 조봉암 외 9명의 진보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한 서울시경의 기록, 양이섭과 조봉암의 간첩 혐의 관련 육군 특무대의 수사 기록, 서울시경으로부터 사건 송치 받은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이섭과 조봉암의 간첩 혐의는 육군 특무대에서 조사했으나, 진보당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위해 1958년 3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

수사기록은 의견서, 피의자 및 증인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견서는 경찰이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작성하는데, 그 기관의 최종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신문조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건 관련 수사내용에 대한 보고기록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이 추가된다. 공소장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건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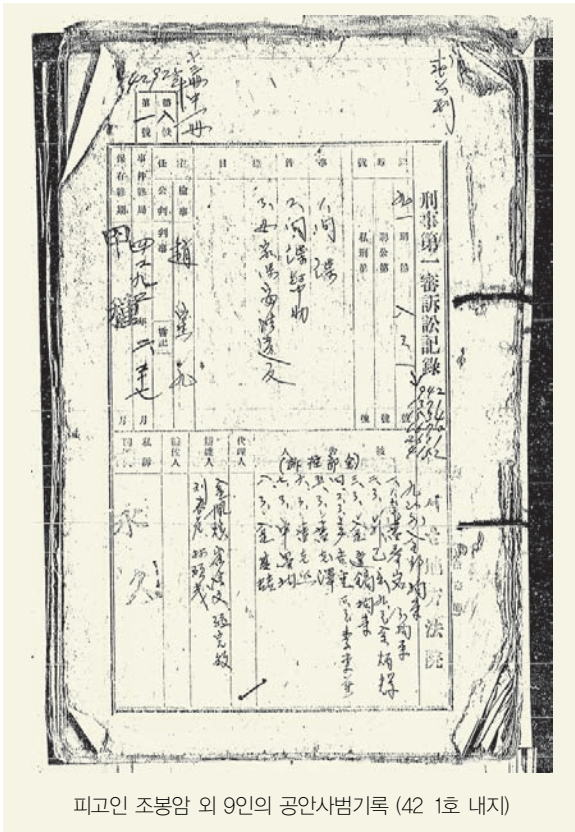
피고인 조봉암 외 9인의 공안사범기록 (42 1호 표지)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공판기록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시행한 21차례의 제1심 공판조서와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의 14차례의 제2심 공판조서와 판결문, 대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판기록 중 판결문은 별도로 편철되어 있다. 공판조서에는 공판을 행한 날짜와 법원, 재판관과 검사 등의 성명, 공소사실, 변론요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내용, 선고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수사기록



피고인 조봉암 외 9인의 공안사범기록 (42 1호 내지)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1호 ~ 11호(11권)** : 조봉암(간첩,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윤길중(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박기출, 김달호,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기철, 김병휘, 이동화(이상 국가보안법 위반) 등 진보당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 진보당 동향보고, 서상일, 송남현 등 증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봉암의 간첩 접선,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23호, 24호(2권)** : 정태영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의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진보당의 ‘강평서’라는 북한 비밀지령문과 관련된 수사였다.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25호 ~ 28호(4권)** : 이명하, 최희규, 안경득, 박준길, 권대복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기록으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및 증인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당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수사로, 진보당의 이적성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30호 ~ 31호(2권)** : 조봉암의 측근이었던 전세룡, 김정학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기록으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및 증인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41호, 42호(2권)** : 조봉암과 양이섭 사이에 오간 쪽지 전달에 관여한 서울형무소 간수인 이동현, 임신환과 이상귀의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서울시 경찰국의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조봉암, 양이섭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육군 특무대 수사기록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32호 ~ 39호(8권)** : 양이섭과 조봉암의 간첩 혐의 수사기록이다. 육군 특무대는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했으나, 진보당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위해 1958년 3월 17일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기록은 육군 특무대의 의견서, 간첩용의자에 대한 정보보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진술조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록에는 조봉암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이정자, 조규희 등의 수사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조봉암의 간첩혐의 입증이 수사의 초점이었으며, 양이섭을 통한 조봉암의 북한 정치자금 수수, 밀서와 진보당 관련 자료의 전달 등이 쟁점이었다.

■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12호(1권)** : 서울지방검찰청의 조봉암 외 9인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조봉암, 이동화, 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김기철, 조규희, 신창균, 조규택, 김병휘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서상일, 정일형, 유진오 등의 증인 신문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의 핵심은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였다.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29호(1권)** :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으로, 진보당의 주요 간부였던 이명하, 최희규, 안경득, 김안국, 박준길, 권대복, 정중, 김창수, 정규엽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와 기소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하 등 5인은 기소되었으며, 김안국 등 4인은 불기소되었다.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40호(1권)** : 육군 특무대로부터 이첩 받은 양이섭과 조봉암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이섭의 간첩 및 간첩 예비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조봉암과의 관계, 북한과의 접촉, 조봉암에 대한 북의 정치자금 지원 등이 조사의 핵심이었다.

■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공판기록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13호~17호(5권)** :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추가 공소장,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 21회분의 공판조서와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회부터 15회까지는 평화통일론, 진보당 활동의 이적성 여부, 조봉암의 간첩 혐의에 대한 사실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6회에는 검사의 구형, 17회부터 20회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과 최후진술이 기록되어 있으며, 21회 공판은 최종 판결 기록이다.
-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 외) 제42-18호~22호(5권)** :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제2심 14회분의 공판조서와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회부터 7회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혐의, 옥중 폭지사건에 대한 사실심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8회부터 11회까지의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변론, 12회 및 13회 공판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14회 공판은 판결 관련 기록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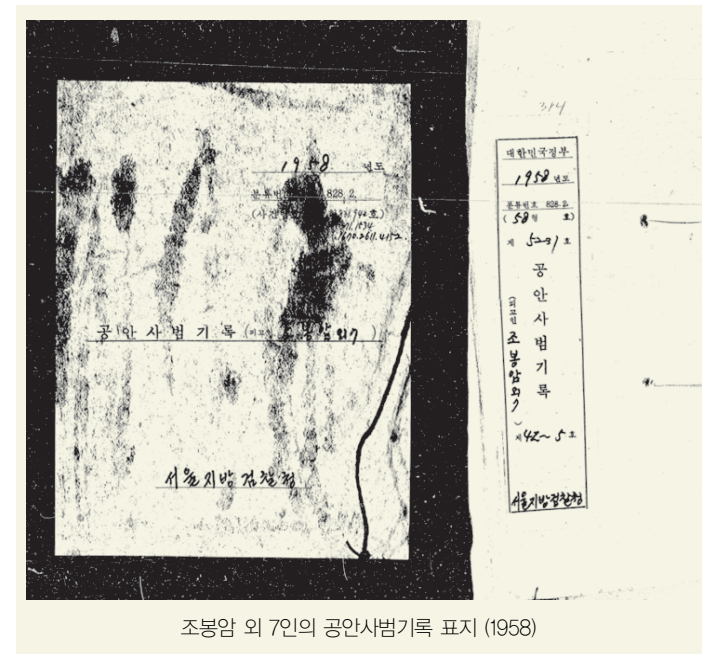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3-1.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수사대상이 되다 서울시 경찰국 수사기록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찰국(이하 ‘서울시경’)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은 5건이나 된다. 그리고 전체 42권의 수사기록 중 절반에 해당하는 21권이나 된다는 것은 진보당사건 수사에 있어서 서울시경의 비중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경이 수사한 주요 내용은 조봉암과 진보당의 간첩행위와 평화통일론에 대한 수사, 진보당 조직원 정태영이 작성했다는 소위 진보당의 ‘강평서’ 수사, 이명하·최희규·안경득 등 진보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수사, 진보당의 비밀조직 ‘여명회’의 조직원이었던 이상두에 대한 수사, 마지막으로 조봉암이 형무소 간수인 임신환을 통해 양이섭에게 자필 쪽지를 보내려했다는 소위 ‘옥중쪽지’ 사건에 대한 수사였다.

이 가운데 서울시경이 수사에 가장 많이 주력했던 사안은 박정호·정우갑과 조봉암·진보당의 관계, 그리고 진보당의 강령인 평화통일론과 사회민주주의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였다. 그 외는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포착된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한 수사였다.

서울시경이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최초로 개시한 것은 1957년 9월 2일부터이다. 주로 진보당의 동향과 간부들에 대한 내사, 정우갑과의 밀회, 근민당 및



조봉암 외 7인의 공안사범기록 표지 (1958)

제 II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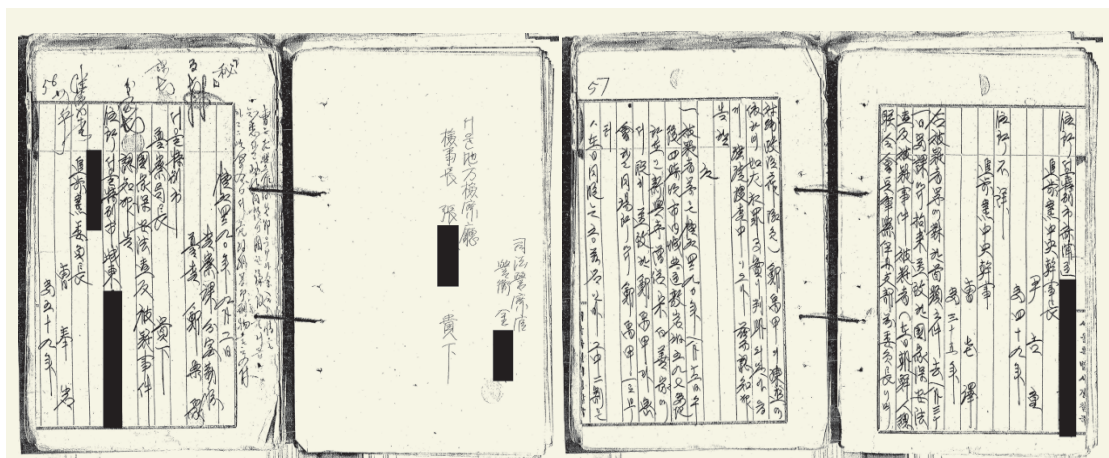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진보당과 북한의 정치노선과의 연관성, 평화통일론의 이적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경은 1958년 1월 9일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조직하고, 북한괴집과의 협상으로 무력 재침의 선전구호인 평화통일공작에 호응해 정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했다. 서울시경은 <인지보고> 직후인 1958년 1월 1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58년 1월 12일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한다(<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동행보고>, 1958.1.12). 한편, 조봉암은 1월 14일에 김기철과 신창균 등은 1월 15일에 각각 체포되었다.

3 1 1. 간첩연계 여부(박정호, 정우갑과의 관계)

진보당사건의 초기 수사는 조봉암과 진보당이 북한 간첩과 연계되었고, 북한에 밀사를 파견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서울시경 사찰과 분실이 1957년 9월 2일자로 작성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이다. 조봉암이 조총련계 간첩 정우갑의 간첩활동을 방조했음을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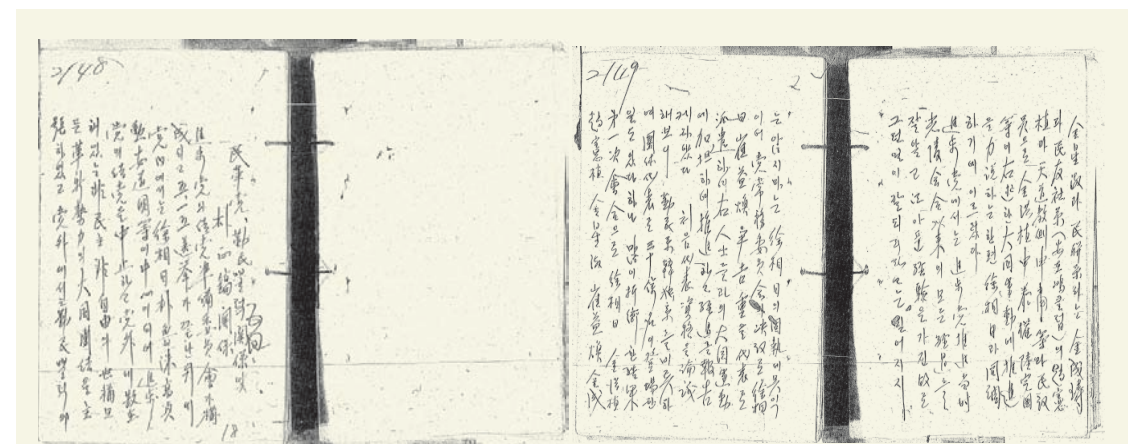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 (1957.9.2)

서울시경은 또 다른 간첩연계수사를 실시했는데, 조봉암이 간첩 박정호와 접선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였다. 박정호는 1957년 무역업자로 가장해 북한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남하한 후 장건상 등 혁신계 정치인과 접선해 혁신운동에 관여하다가 체포된, 소위 1957년 12월 ‘근로인민당 재건사건’의 장본인이다.

조봉암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이러한 서울시경의 수사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먼저 조봉암은 정우갑을 만나 진보당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설명과 재일교포들의 상황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그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1회)>, 1958.1.14).

간첩 박정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박정호가 간첩이라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당시 선거 때문에 광주에 있어서 박정호가 진보당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만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5회~6회)>, 1958.1.18, 19; <자공서(自供書)>, 1958.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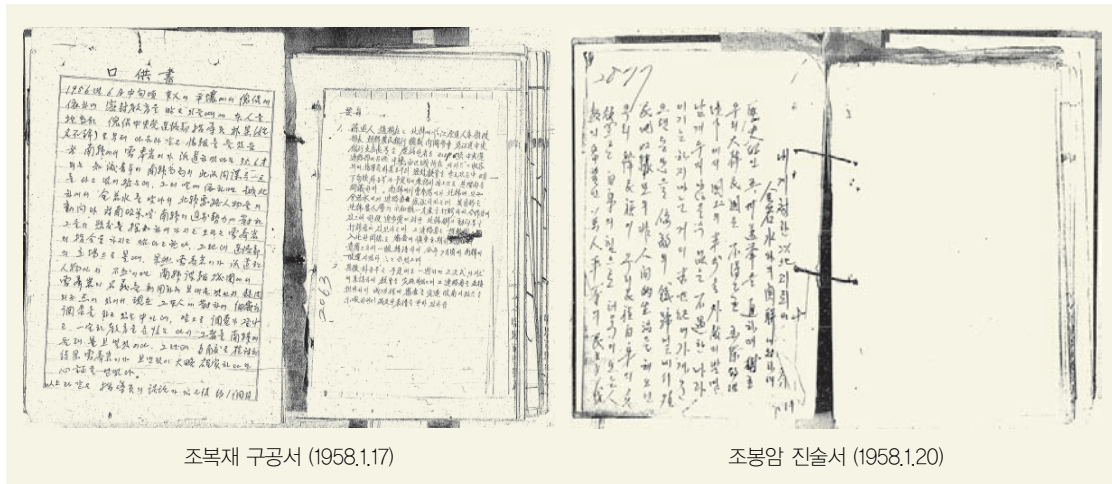


조봉암 자공서 (1958.1.18)

한편, 전향한 남파간첩으로 특무대의 정치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조복재는 조봉암의 북한 밀사 파견을 진술했다. 조복재는 <구공서(口供書)>(1958.1.17)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던 중 남한에서 조봉암이 북한에 있는 김약수에게 연락원을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조복재 구공서 (1958.1.17)

조봉암 진술서 (1958.1.20)

밀파해 북한요인증과 평화통일방안을 합작하고, 진보당에 대한 북한 측의 동향 등을 타진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9회)>(1958.1.20)에서 밀사 파견을 부인했다. 자신은 북한에 미련이 없고,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은 배반자이며 개인적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신의 처를 죽인 원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김약수는 20세 무렵부터 서로 왕래하는 사이였지만 정부수립 이후에는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진술서>1958.1.20)

3 1 2. 평화통일론은 국시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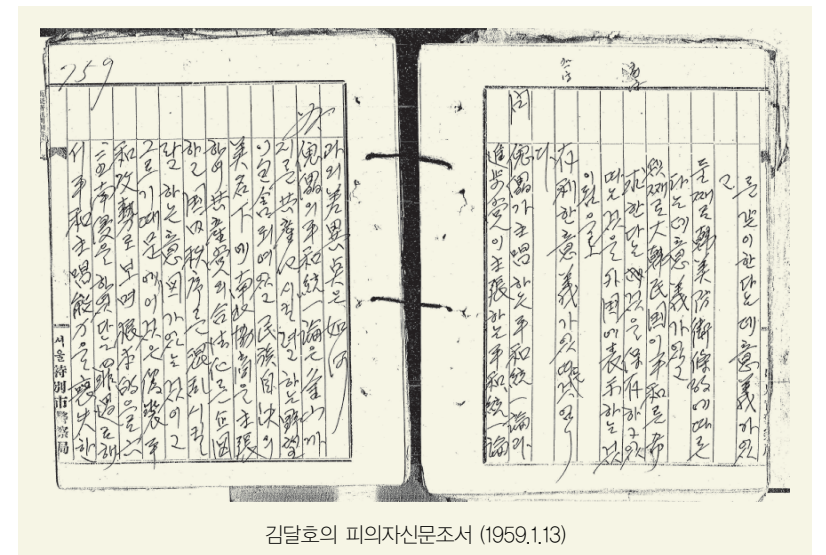
서울시경이 수사했던 또 다른 혐의는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였다. 진보당 사건의 쟁점인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위법성은 정부 측이 발표한 기소이유 중 가장 중요한 골자로서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통일론과 사실상 동일하며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통일론의 근거와 실천방안, 북한과의 사전호응 및 이적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먼저, 평화통일론의 근거와 작성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1958.1.16)에서 진보당 평화통일선언문(초안)은 1954년 제네바합의 당시 소련대표가 제출한 5개

항목을 근거로 하여 1957년 11월에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통일론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윤길중의 <진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윤길중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제민(諸民)이 대동단결하고, 국제 우방과 긴밀히 협조해 민주진영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UN선에 서서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을 기하되, 압록강까지 민주화할 수 있는 승리의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며 원칙적인 지향과 방안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두 번째 쟁점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와 호응 여부였다. 이에 대해 조봉암과 선언문 초안 작성자인 김기철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 1958.1.16). 박기철은 진보당의 통일론에 대한 북한과의 호응 여부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1958.1.16.)>에서 평화통일론은



김달호의 피의자신문조서 (1959.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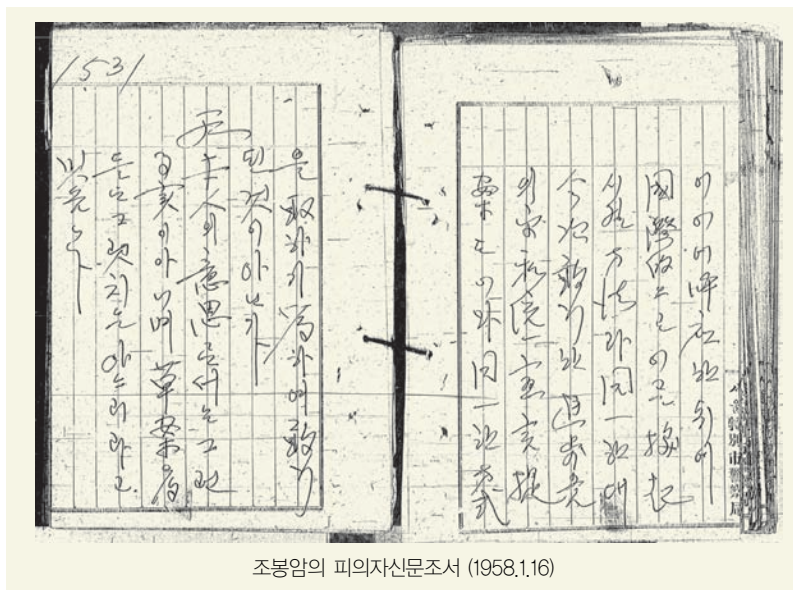
북한이 먼저 주장했지만 북한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 아니고, 제네바회담과 유엔총회의 결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통일론의 구체적 방안이 없는 이유도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통일 방안이 변화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체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과의 동일성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달호는 <피의자신문조서(1959.1.13)>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족자결이라는 이름 아래 남북협상을 주장해 공산당의 합법화를 기도하고 국내 질서를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위장평화공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6·25남침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평화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주창 능력을 상실했으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야말로 대한민국 평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봉암의 피의자신문조서 (1958.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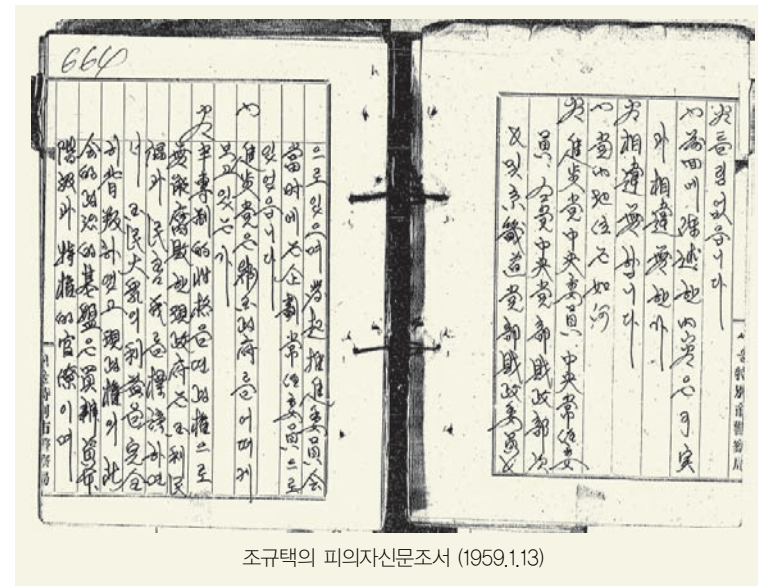
국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 유엔의 결의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괴뢰집단도 대한민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배된다는 거듭된 신문에 대해서도 조봉암은 진보당에서 북한에 대해 통일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련대표가 제안한 5개 항목이 현 대한민국의 통일노선인 북진통일론의 국시에 위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

3 1 3. 진보당의 성격 사회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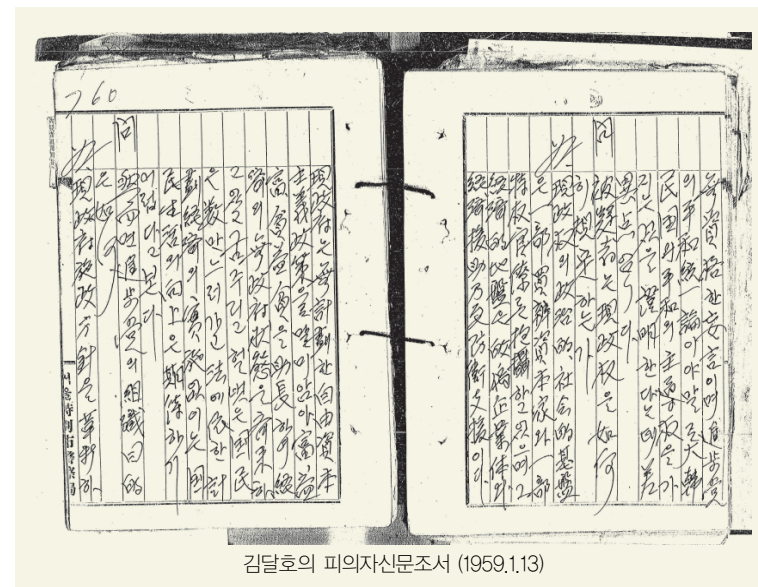
서울시경의 수사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함께 진보당의 성격과 목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진보당이 맑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 아래 결사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기본입장이었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진보당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인식, 진보당의 선언문과 강령이 북한괴뢰집의 목적

하는 바에 호응하는 것이 아닌가?’ 등이 주요 신문 사항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인식은 조규택과 김달호의 <피의자신문조서>(1958.1.13)에 잘 나타나 있다. 조규택은 대한민국 정부는 반전제적 성격을 띤 무능·부패한 정부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국민대중의 이익을 완전히 배반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치적 기반은 매관자본계급과 특권적 관료이며 그 경제적 기반은 일제로부터 인수한 국가적 독점 기업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로 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진보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민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진보적인 진정한 사회적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역사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달호는 현정권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은 일부 매관자본가와 일부 특권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경제적 기반은 귀속기업체와 경제원조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현 정부의 무계획한 자유자본주의 정책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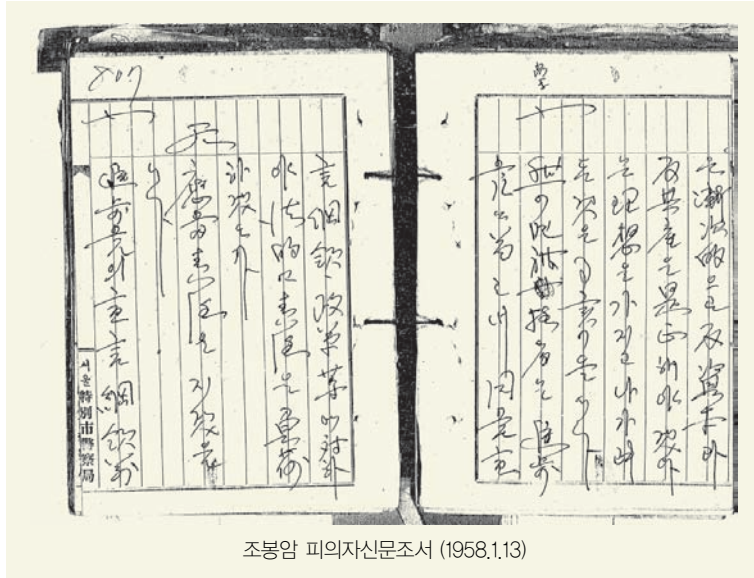
조규택의 피의자신문조서 (1959.1.13)



김달호의 피의자신문조서 (1959.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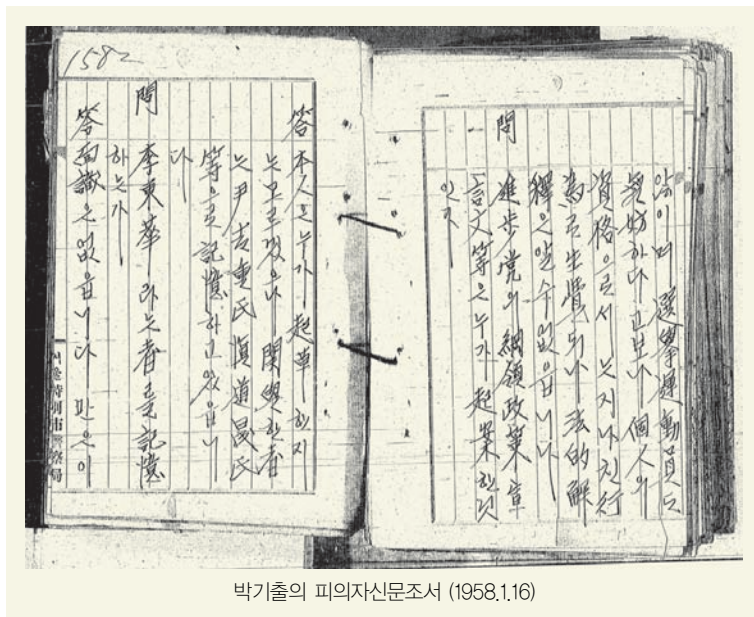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 (1958.1.13)

적인 정치철학에 입각한 계급적 혁명정당이 아니라 反자본과 反공산을 시정해야겠다는 이상을 가진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출의 피의자신문조서 (1958.1.16)

더욱 조장되어 경제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있어 법에 의한 계획경제의 실시 없이는 국민생활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결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 아래 조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문에서,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 1회(1958.1.13.)>에서 진보당은 유물사관

진보당의 조직적 기반에 대해 박기출은 <피의자신문조서 (1958.1.16.)>에서 노동자, 농민, 진보적 근로인테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 등 특권층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국민대중 피해대중이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진보당은 국민대중의 이익실현을 당의 임무로 하고, 민족자본 육성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화는 <피의자신문조서(1958.1.14)>에서 진보당의 주의사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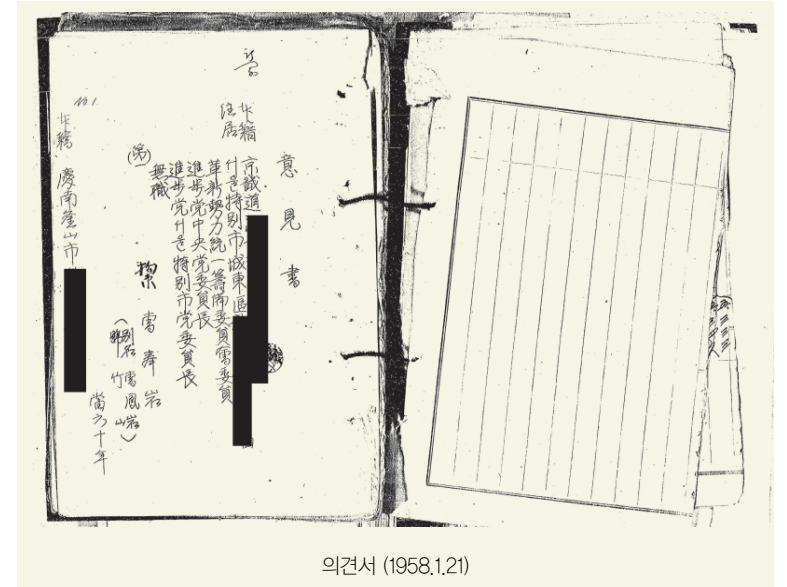
사회적 민주주의사상이라고 규정했다. 진보당의 강령과 선언문이 정부를 타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신문에 대해서도 박기출은 정·부통령선거 당시 그 후보자의 한 사람이 기존 정부를 타도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고, 강령정책의 주문은 공산당과는 상반되며 反공산 민주주의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길중은 <피의자신문조서(6회) (1958.1.17)>에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방안, 강령, 정책에 대해 북한공산괴집이 목적하는 사항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며, 진보당은 민주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변혁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시경은 조봉암과 진보당의 간첩 혐의,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하여 1958년 1월 21일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의견과 범죄사실을 담은 <의견서>와 함께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다. 서울시경은 의견서에 ‘조봉암과 진보당이 표면상 대한민국 국시에 입각한 양 합법을 가장하고 실은 공산주의사상 포지자 및 동조자를 총망라한 진보 또는 혁신세력을 규합해 공산당노선을 기본당책으로 한 유물론에 입각해 계급적 불법집단의 결사인 진보당을 구성하고, 북진통일론의 국시에 위반되는 평화통일론을 주장’ 했음을 주요 범죄사실로 기재했다.

3 1 4. 통방사건 옥중 ‘쪽지사건’

진보당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른바 ‘옥중쪽지’ 사건이다. 옥중쪽지란 조봉암이 임신헌이라는 간수를 통해 양이섭에게 전하려던 메모로, 양이섭의



의견서 (1958.1.21)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형무관 범죄사실 통과사실 인지보고 (1958.4.12)

허위진술을 질책하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짤막한 내용의 쪽지였다. 1심 재판에서 이 메모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정작 문제가 된 것은 2심과 3심에서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 메모는 조봉암의 간첩죄를 증명하는 가장 유력한 보강증거로 채택되었다.

1958년 4월 12일 <형무관 범죄사실 통과사실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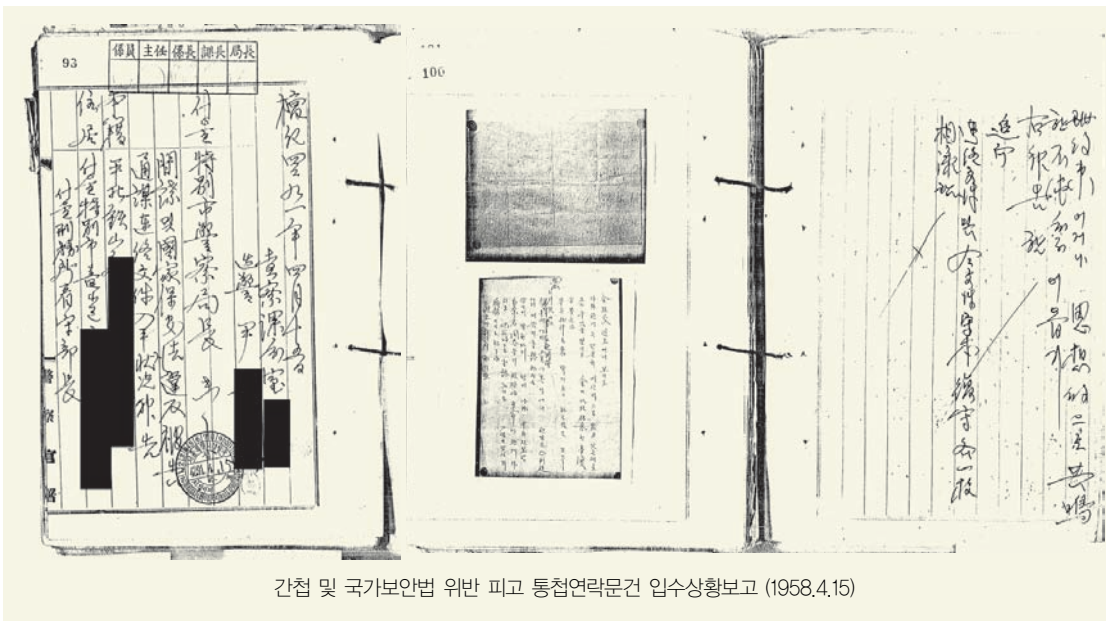
보고>와 <수사보고>에서 서울형무소 간수인 이동현이 수차에 걸쳐 양이섭과 조봉암 사이에 비밀연락을 매개해 주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1958년 4월 15일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 통첩연락문건 입수상황보고>를 통해 임신환에게서 조봉암이 양이섭에게 보내는 자필쪽지를 입수했다는 보고를 올리게 된다. <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사장 변소에서 보시오. 나와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능력있는 대로 도와 주었을 뿐이고 김이 이북 왕래한 사실을 모른다. 무슨 물건거래 쪽지 운운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만년필도 한 개다. 특무대에서 고문에 못 이겨서 한 말은 공판정에서 깨끗이 부인하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 말이 나와 우리 진보당 만여 명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계가 되어 결사적으로 부인하시오. 그것이 당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변소에서 처치하시오」라는 내용이었다. 조봉암은 1958년 4월 15일 <진술조서(2회)>에서 이동현에게 사건관계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지만 임신환에게는 이 쪽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임신환, 이동현 두 간수 부장이 구속, 기소되어 진보당사건의 피고인으로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3-2. 간첩죄를 묻다 육군 특무대 수사기록

3 2 1. 양이섭, 조봉암의 간첩혐의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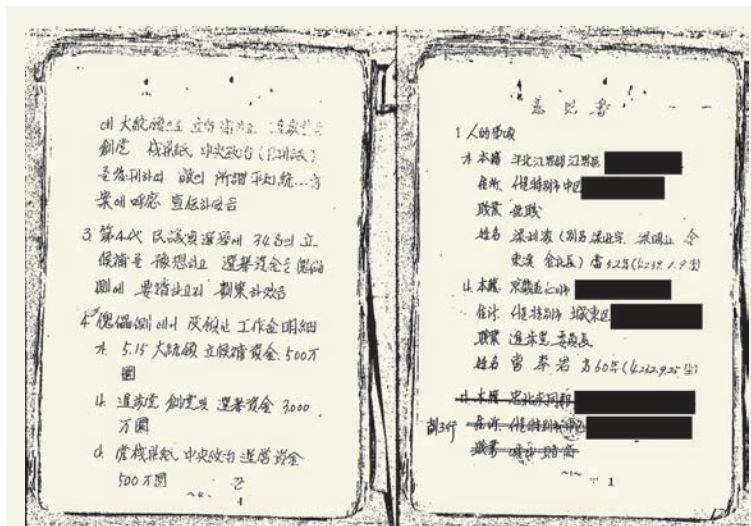
진보당사건에 대한 육군 특무대에서의 수사는 1958년 1월 9일 양이섭의 <간첩 용의자에 대한 정보보고>로 시작해 3월 17일 조봉암과 양이섭을 간첩죄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기까지 두 달 남짓 진행되었다. 육군 특무대에서의 수사는 진보당사건의 초기 수사로, 조봉암의 간첩죄 여부에 무게가 실렸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조봉암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때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즉, 양이섭을 연락책으로 한 조봉암과 북한측의 정치적 거래, 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 대통령으로 입후보하고 진보당 창당 기관지인 『중앙정치』를 발간하여 북의 평화통일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 통첩연락문건 입수상황보고 (1958.4.15)

방안에 호응한 점 등이다.

육군 특무대에서의 수사는 '간첩 양이섭'이 말하는 '간첩 조봉암'에 초점이 맞춰져 양이섭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양이섭은 특무대에서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거짓진술이었음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무대에서의 진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견서 (1958.3.10)

것이다. 또한 조봉암의 밀서와 진보당 관계 자료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 명백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양이섭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는데, 양이섭은 특무대에서 12회의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조봉암과 북한 측이 정치적 거래를 해 왔음을 계속해 진술했다. 즉, 양이섭은 1956년 2월부터 1957년 9월까지 9차에 걸쳐 HID(대북공작 기구)의 대북 공작선을 이용해 남북을 왕래했고, 월북 때에는 박일영과 접선하여 남한의 군사·정치·경제·사회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월남해서는 조봉암과 접선하여 북의 지령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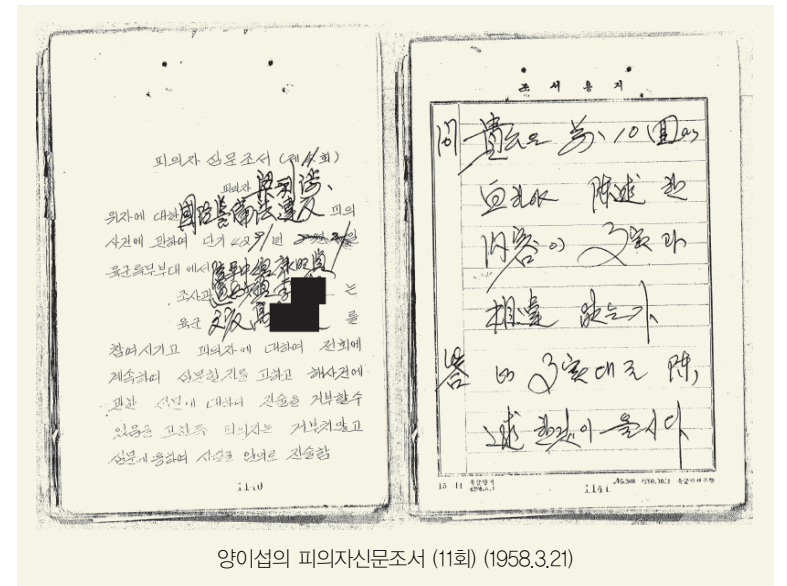
육군 특무대가 수사를 마치고 작성한 <의견서>에는 조봉암의 간첩혐의 입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북한 당국이 남북을 수차례 왕래하고 있던 양이섭을 통해 조봉암에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한다는 뜻과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조봉암이 북한정권에 협조하기로 하고 자금을 받아 제3대 대통령선거 비용과 기관지 발간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3 2 2.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엇갈린 진술

그러나 조봉암은 양이섭이 진술한 간첩행위를 부인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이섭과 조봉암의 엇갈리는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방안이 북한의 지령에 호응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 (8회)>에서 김사장(양이섭)과 긴밀한 관계이지만 평화통일방안은 진보당 자체의 주장이며 북의 지령에 호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양이섭은 9차례의 남북왕래 때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상세히 진술했고, 특무대는 남한의 정치상황에 따라 수위를 달리하는 지령의 내용이 조봉암과 북한과의 긴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양이섭이 진술한 북한의 지령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양이섭의 피의자신문조서 (11회) (1958.3.21)

양이섭이 HID를 통해 1차 월북한 1956년 2월과 2차 월북 때 받은 지령은 남한의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현황 및 조봉암과의 접선여부 파악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입후보하라, 평화통일 노선을 기초로 하여 정견을 발표하라, 선거자금은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지령을 내렸다. 이어 3월에는 창당추진을 강화하라, 평화통일론을 일반에 주입시켜라, 선거자금은 원조하겠다 등의 지령이 있었다. 그리고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가 있는 후 6월에는 정당으로서 일간신문이 절대 필요하니 속히 창간 노력하라, 자금을 보조하겠다, 평화통일노선을 구호로 하여 적극 선전하라 등의 지령이 있었다. 1957년에는 다음 해의 제4대 민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평화통일론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라, 야당 연합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진보당은 양보적으로 나가라,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반미 민족운동을 전개하라, 조직을 확대하라, 제4차 총선거에 대비해 공작을 활발히 전개해 진보당의 정치적 투쟁기초를 생성하라 등의 지령을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치자금 지원 및 사용에 있어 조봉암이 북한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정치자금에 대해 양이섭은 <피의자신문조서(5회)>에서 조봉암이 북으로부터의 선거자금을 본인을 통해 계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1956년 4월 하순경 우선 500만 원을 대체해주라는 북한의 지시로 5월 초순 남하해 전화로 연락 해 지령을 전달하고 이후 약 500만 원의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6회)>에서는 1956년 7월 초순 조봉암을 아서원에서 만났는데, 조봉암은 신문발간에 2,000만 원, 『대동신문』 판권인수에 우선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내용을 월북해 보고했는데, 북한에서는 창당추진과 신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양이섭은 수차례 걸쳐 조봉암의 딸과 운전수 등을 통해 500만 원과 백삼3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9회)>등에서 녹용과 함께 암달러상을 통해 한화로 교환, 현금과 수표로 조봉암에게 자금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암달러상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조규진도 <피의자신문조서(1회)>, <피의자신문조서(2회)>등에서 양이섭에게 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봉암은 양이섭의 간첩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양이섭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당 운영과 기관지 발행 등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지원이라는 부분은 알지 못했으며 양이섭 개인적인 차원의 지원으로 알았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신문조서(3회)>에서 조봉암은 1956년 3월경 양이섭과 선거자금 원조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에서 원조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4월경 창당추진위원회와 지방 당조직까지 강화하려면 자금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하기는 했으나 돈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4회)>에서 조봉암은 1956년 7월경 김사장(양이섭)과 『대동신문』 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있으며, 1956년 9월 초에는 당기관지 발간과 신문사 위한 자금이 곤란하다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양이섭으로부터의 조규진, 조호정을 통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조봉암의 서한과 진보당 관계 자료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도 간첩행위의 증거가 되었다. 일반적인 교역물품 외에 양이섭은 조봉암으로부터 진보당 관련 자료들을 받아 북에 전달했는데, 진보당 중앙위원과 상임위원 명단, 선언서와 강령 등 정책 등과 함께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남북평화방안이 게재된 『중앙정치』 10월호, 연락문 등이 그것이다. 특히 조봉암이 작성했다는 ‘사업은 잘되어 가니 큰 집에서 경제적으로 후원해 달라’는 내용의 연락문은 북한과 긴밀한 연락을 한 증거이며 공작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라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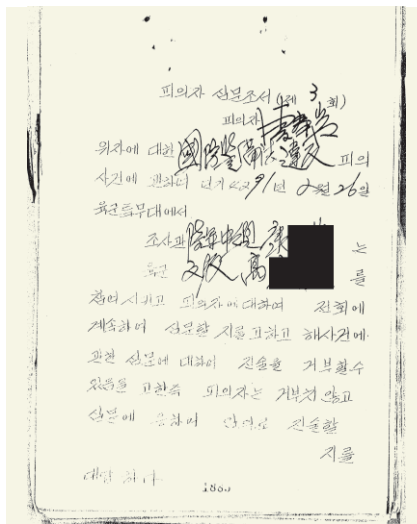
이처럼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육군 특무대는 양이섭의 진술을 토대로 조봉암의 간첩협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육군 특무대에서는 진보당사건과 관련해 조봉암과 양이섭 수사 이외에도 관련인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정치자금의 수령, 관리 및 양이섭의 월북과 관련해 암달러상이었던 이○○와 조봉암의 조카로 비서역할을 했던 조규진, 조봉암의 딸 조호정, 운전수 이○○ 및 남한 HID요원이었던 엄○○ 등이 증인 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았다.

이 중 이○○와 조규진은 군법회의 중 조봉암, 양이섭과의 병합심리를 위해 3월 18일 검찰청에 이첩되었다. 그 외 조호정을 비롯한 이○○ 등 4명은 3월 24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3-3. ‘평화통일론’ 기소되다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

3 3 1.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에 대한 수사내용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는 서울시경이 1958년 1월 21일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 10인의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송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경은 이후 이명하 등 진보당 간부들 9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2월 7일 추가 송치



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 (3회) (1958.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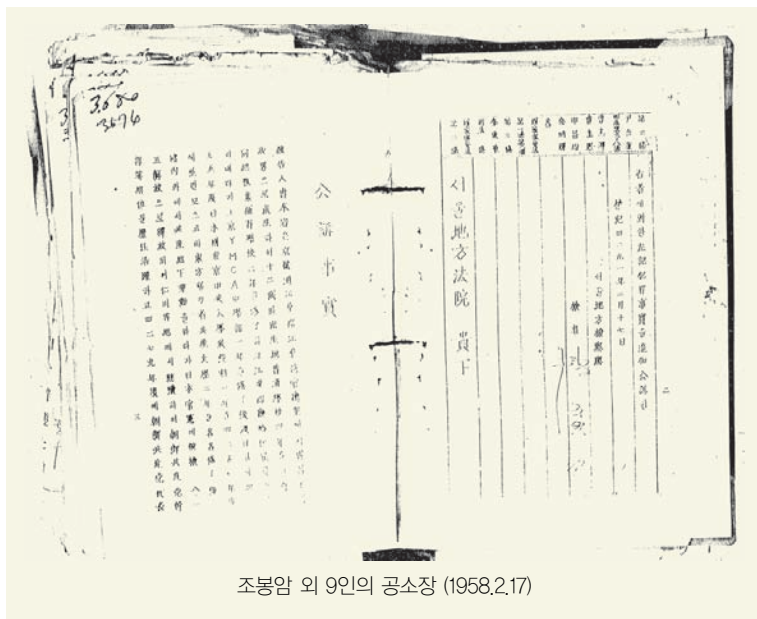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조봉암 외 9인의 공소장 (1958.2.17)

17일 공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가 기소했다. 그리고 양이섭은 4월 3일 ‘간첩 및 간첩예비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기소했다.



조봉암 외 9인의 공소장 (1958.2.17)

했고, 육군 특무대가 3월 17일 양이섭, 조봉암의 간첩 및 간첩예비사건을 송치하면서 진보당 사건 수사는 검찰의 손으로 모두 넘어오게 되었다.

검찰에서의 수사는 피의자 및 증인신문과 법원에 기소하기 위한 관련 조사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 10명에 대해 ‘간첩,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으로 2월 8일 기소하고, 2월 17일 공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가 기소했다. 그리고 양이섭은 4월 3일 ‘간첩 및 간첩예비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기소했다.

서울시경에서의 수사가 조봉암과 간첩사건을 연루시키는 한편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육군 특무대에서의 수사가 양이섭과 조봉암의 간첩죄 여부를 중점으로 하여 진행되었다면, 검찰에서는 두 기관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기보다는 특무대나 서울시경에서의 진술을 확인·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오히려 서울시

경과 특무대에서 중점적으로 수사한 간첩과의 연계 부분이나 북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수령 부분 등은 축소되고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배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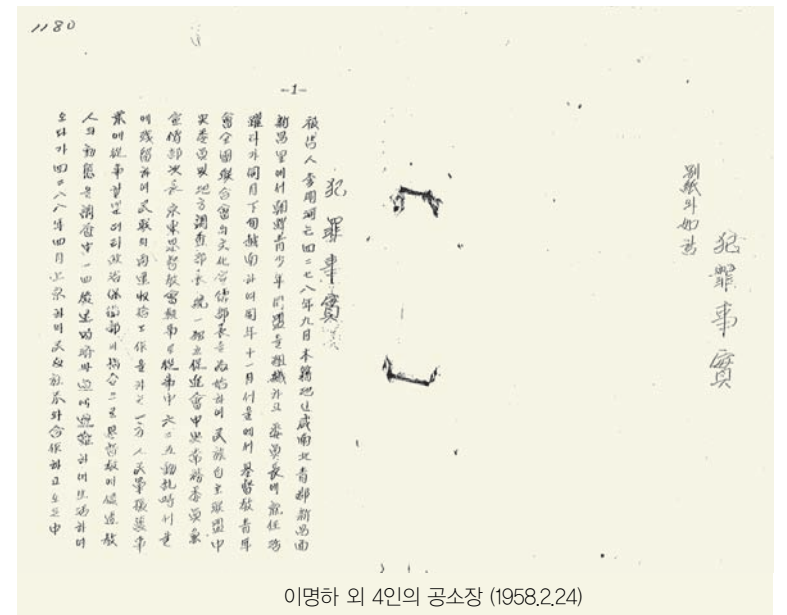
이러한 점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1958년 1월 21일부터 조봉암과 이동화, 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등 진보당 간부 10인의 피의자신문이 시작되었다. 피의자신문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중심으로 피의자들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중앙정치』 10월호에 게재한 논문 「평화통일의 길」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해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2월 7일부터 이명하, 최희규, 안경득, 박준길, 권대복의 피의자신문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진보당 구성 경위, 중앙당 당무부장 및 통일연구위원회 위원 등 주요간부로서의 활동내용과 공산주의사상 포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피의자신문이 끝나고 검찰은 신문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조봉암 외 9인에 대해서 ‘피고인 등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서 통일정권을 수립할 것을 정강정책으로 하는 진보당을 결성하고, 국시에 위배되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간첩,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58년 2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명하 외 4인에 대해서는 ‘유엔감시하의 북한만의 자유선거를 전적 부인하고 남북한 대등한 위치에서 동시에 중립국



이명하 외 4인의 공소장 (1958.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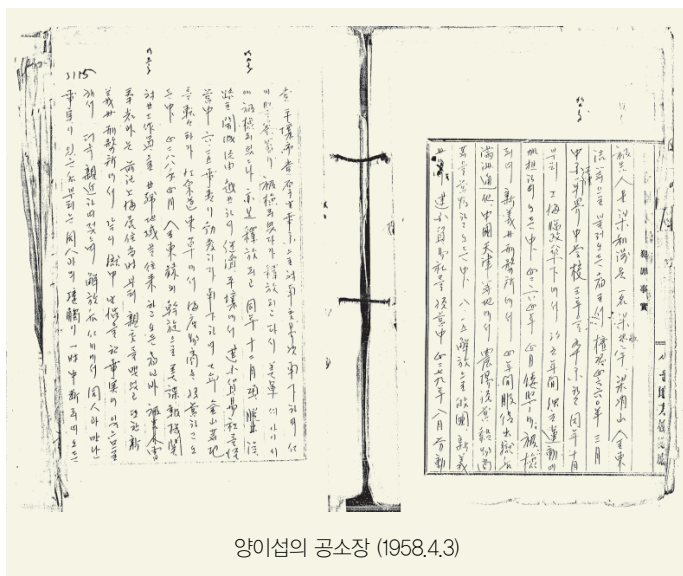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주장하는 등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혁신적 정당당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한 사실을 들어 2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3 3 2.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한 수사내용

한편, 육군 특무대에서 수사를 받던 양이섭과 조봉암은 1958년 3월 17일 서울지법 검찰청으로 송치되자마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서울지검 검사 조○○는 양이섭을 중심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육군 특무대 수사내용을 확인, 보완해 1958년 4월 3일에 양이섭을 ‘간첩 및 간첩예비죄’로 기소했다.



양이섭의 공소장 (1958.4.3)

한편 서울지검은 1958년 2월 24일 진보당사건과 관련해 송치되었던 피의자 가운데 진보당 간부인 김안국 등 4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58년 5월 6일 정문자, 조규진, 조호정, 이정자, 이재운, 김영순에 대해 간첩방조로 불기소 처분했다.

양이섭은 모두 다섯 번의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특무대에서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대북공작원으로 북한 지역을 왕래하게 된 경위, 조봉암과의 관계와 접촉 내용, 정치자금의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특무대의 의견서 내용을 이어 받아 <공소장>을 작성했다. 양이섭이 월북해 북의 지령과 정치자금을 조봉암에게 전하고 진보당의 정강, 조봉암의 서한 등을 북에 전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음을 공소장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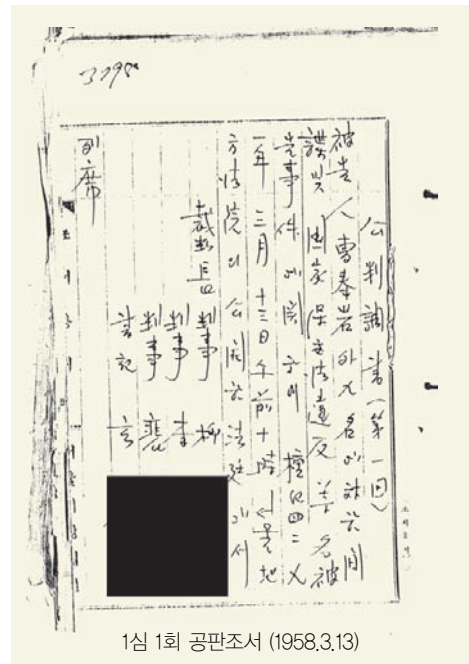
3-4. 진보당 법정에 서다 공판기록

3 4 1. ‘진보’의 이적 여부를 판단하다, 제1심 공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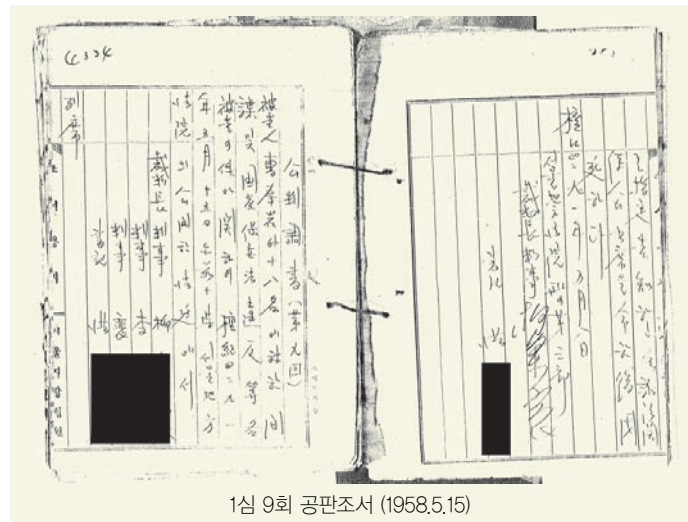
진보당사건의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이 법정에 선 것은 공소가 제기된 지 약 한 달 후인 1958년 3월 13일이었다. 1심 공판은 서울지법 법원에서 유○○ 부장판사의 주재로 총 21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회 공판에 소환된 피고인은 조봉암 외 9인이었으나, 이후 추가 구속된 진보당 주요 간부와 양이섭의 간첩사건 등의 병합 심리되다 인해 이후 피고인은 23명에 이르렀다.

재판의 전반부인 8회까지는 진보당의 활동과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평화통일이라는 용어가 북한괴뢰가 사용하고 있는 문구이며, 조봉암이 <평화통일에의 길>에서 주장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가 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국헌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은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며, 북진통일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평화통일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평화통일론은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논박했다.

9회 공판부터는 공판의 쟁점이



1심 1회 공판조서 (1958.3.13)



1심 9회 공판조서 (1958.5.15)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조봉암의 간첩혐의에 맞춰졌다. 1958년 4월 3일 기소된 양이섭 사건과 병합심리가 결정되고, 5월 15일 9회 공판에 피고인 양이섭이 등장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조봉암이 양이섭을 통해 북한 측과 정치자금 수수, 상호협력 등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양이섭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봉암과의 대질 심문에서 두 피고인의 진술은 줄곧 상반되었다. 양이섭은 조봉암이 북의 원조 제의를 수용한 사실, 조봉암에게 북의 지령을 전달한 사실, 진보당의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에 조봉암은 양이섭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했을 뿐 양이섭을 통한 북한과의 접촉이나 지령 수령 등은 모두 부인했다. 정치자금도 양이섭 개인의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대부분의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조봉암, 양이섭의 대질심문과 양이섭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10회 공판에서는 이른바 ‘통방사건(옥중쪽지사건)’의 두 피고 이동현, 임신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다. ‘통방사건’은 간수인 피고인들이 조봉암을 도와 양이섭에게 말과 쪽지를 전달하다 발각된 사건이다. 검찰은 메모의 내용이 북한과의 관계를 부인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조봉암이 증거인멸을 기도한 증거이며, 메모 그 자체가 조봉암의 간첩죄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양이섭이 처한 입장을 잘 알고 있던 조봉암이 공판과정에서 진실을 말해 달라고 호소했을 뿐이며 북한과의 야합을 증명할 구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6월 12일 15회 공판에서 모든 사실심리가 종료되었으며, 다음 날 16회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검사는 조봉암, 양이섭 두 피고에게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방조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 밖의 진보당 간부에게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1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현, 임신환 두 전직 간수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이후 17회부터 20회까지의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나흘간에 걸친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각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문을 작성해 변론을 펼쳤으며, 조봉암을 시작으로 하여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마쳤다. 6월 19일 조봉암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건을 조작해낸 검찰이야말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평화통일은 절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사다’라고 재판의 부당성을 밝혔다. 한편, 양이섭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은 최후진술의 기회를 ‘할 말 없음’으로 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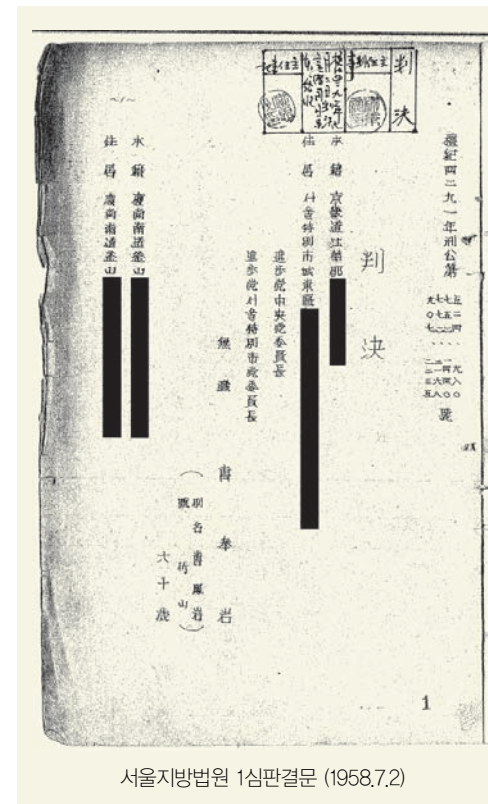
7월 2일 제21회 공판에서 진보당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재판장 유○○ 판사는 조봉암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언도했다. 조봉암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양피고인(양이섭)은 공소 사실을 끝내 시인한 데 반하여 조피고인(조봉암)은 금전 관계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괴뢰와의 야합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다. 조피고인과 양피고인이 괴뢰의 지령에 의해 접선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간에 조피고인이 당원 명단을 주었다는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 혐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가 인정한 조봉암의 유죄 사유였다.

한편, 진보당 관계자 중 김정학, 전세룡에게는 징역 10월을, 그 외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를 언도했다. 양이섭에게는 조봉암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언도했다. 통방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이동현, 임신환 중 이동현에게만 징역 1년을 언도했다.

3 4 2. 반복된 진술 늘어난 형량, 제2심 공판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를 제기해 진보당사건은 2심으로 접어들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김○○ 판사가 주재했다.

진보당사건의 2심은 1심이 종료되고 두 달이 지난 1958년 9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공개법정에서 시작되었다. 진보당사건의 2심은 처음부터 양이섭이 특무대의 수사 과정과 1심 공판에서 진술했던 바를 거의 모두 반복함에 따라 1심 공판과는 전혀



서울지방법원 1심판결문 (195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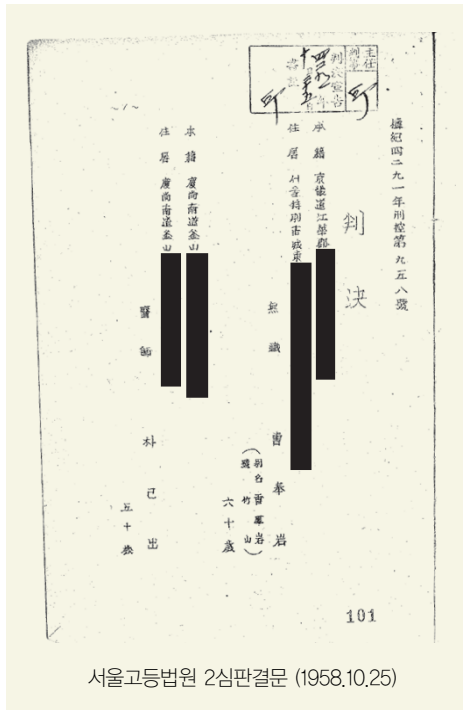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다른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양이섭의 진술 번복은 2심 공판 내내 계속되었다.

양이섭은 특무대에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은 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누워서 심문을 받으며 특무대의 질문에 줄곧 “네 네”라고 대답했던 일, “조봉암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천하의 악당역할을 해야 한다”고 특무대가 회유했던 일, 수사과정에서 비탄과 회의를 들어 자살을 시도했던 일, 그리고 1심 공판을 거치며 진술 번복을 결심한 일 등을 2심 첫 회 공판에서 진술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무대에서 양이섭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특무대의 수사가 조작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조봉암의 간첩행위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던 양이섭의 진술이 완전히 번복된 상황에서 심리는 계속되었다. 심리 내용은 1심에서 다뤄졌던 평화통일론과 진보당의 강령 등 진보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양이섭의 간첩활동, 통방사건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7회에서 사실심리가 종료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문 (1958.10.25)

8회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변론이 있었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봉암, 양이섭에게 사형,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12~20년을 구형했다. 1심 때 20년을 구형 받은 김기철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변호인단의 변론이 11회 공판까지 이어졌다. 12, 13회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1958년 10월 25일 열린 진보당사건의 2심 언도공판은 1심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조봉암, 양이섭에게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사형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북에 밀사를 보내 평화통일을 협의했다는 혐의, 간첩 박정호와의 관련 혐의, 조총련계 정우갑과의 관련 혐의, 정태영이 북괴의 지령에 따라 진보당에 강령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시에 위반되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양이섭을 통해 북한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자금을 받는 등 간첩행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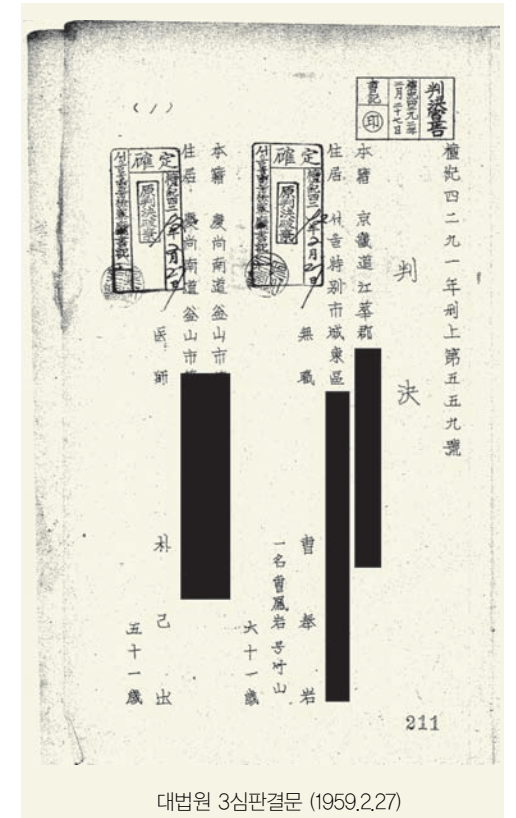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양이섭의 진술번복으로 조봉암의 간첩행위에 대한 증거 효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형량은 큰 폭으로 가중된 것이다.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입증된 진보당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2년에서 3년의 형이 언도되었다.

3 4 3. 최종판결, 제3심 공판

진보당사건 1심과 2심의 판결 사이에 큰 간극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상고가 제기되어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3심으로 이어졌다. 1959년 2월 27일 재판부는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한 2심의 사형판결을 유지했고 그 외의 대부분의 진보당 간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봉암에 대한 사형판결이 유지되자 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1959년 7월 30일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재심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 아침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편, 양이섭은 앞서 이틀 전인 7월 2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1년 가까이 걸쳐 진행된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에 대해 사형, 양이섭에 대해 사형, 그리고 전세룡·이상두 두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종결되었다. 평화통일론 등 진보당의 강령 중 애초 서울시경이 수사에 착수, 검찰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전부 무죄로 판결되었다.



대법원 3심판결문 (1959.2.27)

3-5. 진보당 주요 인사 및 이력

인물명	이력
조봉암(曹奉岩)	- 경기 강화 출생(1899) - 출생지에서 보통학교와 농업보습학교 졸업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인 물 명	이 력
조봉암(曹奉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YMCA 중학부 입학(1920)- 동경 유학- 중앙대학 정치과 1년 수료- 박열(朴烈) 등과 함께 무정부주의 단체 흑도회(黑濤會) 조직(1921), 곧 무정부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사회주의에 심취- 김찬·정재달 등과 함께 사회운동을 위해 귀국(1923)-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통합을 위한 벨크네우진스크 대회에 국내 대표로 참가(1923)- 대회 결렬 후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입학- 폐결핵으로 귀국(1924)- 화요회, 혁청단(革淸團), 신흥청년동맹에서 활동- 꼬르뷰로 국내부 청년부로 책임- 조선청년총동맹 문화부 책임- 제 1차 조선공산당 결성, 중앙 검사위원(1925.4)- 제 1차 고려공산청년회(공청) 중앙 집행위원- 당과 공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모스크바로 파견(1925.5)- 상해로 귀환하여 재상해 코민테른 원동부 위원 취임(1925.10)-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 김조이(金祚伊)와 결혼-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1926.5)-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 조직(1927.4)- '일국일당 원칙'에 따라 홍남표, 여운형 등과 중국공산당 한인지부 조직(1927.5) 동 책임(1928.1)- 한국독립운동자동맹, 상해 한인청년동맹, 상해 한인반제동맹 조직(1930)-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국내로 압송(1932.6)-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 이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양명산을 알게 됨- 고문과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을 여러 개 절단- 해방 직전 해외와 연락했다는 혐의로 일본 헌병사령부에 체포됨(1945)- 해방과 동시에 헌병사령부에서 풀려나 인천으로 감- 인천 치안유지회 조직-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조직- 노동운동과 공산당 재건운동 참가- 인천시 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1946.2)- 박헌영을 비판하는 「존경하는 박동무에게」가 CIC측에 의해 동아일보 등 우익 신문에 게재됨(1946.5)- 인천 시민대회 자리에서 계급독재 부인하는 성명 발표, 『삼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란 소책자를 통해 극우와 극좌파를 모두 비판(1946.6)- 김찬, 배성룡, 임원근, 원우관, 이극로 등과 민주주의 독립선전 조직(1947.2)- 제헌국회의원(무소속, 인천 을구)(1948.5)- 헌법 기초위원(1948.7)- 초대 농림부 장관(1948.8)- 관사 수리비 유용혐의로 농림부 장관 사직(1949.2), 무죄판결(1949.11)

인 물 명	이 력
조봉암(曹奉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반역자 조봉암을 처단하라」는 벽보가 나붙음(1950.6)- 제 2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1952)- 제 3대 국회의원예 출마하려 했으나 당국의 방해로 후보자 등록 못함(1954)-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실패의 반발로 물러남(1955.2)- 진보당 추진위원회 대표(1955.12)- 제 3대 대통령 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1956.5)- 진보당 위원장(1956.11)- 진보당사건으로 구속(1958.1)- 사형 집행(1959.7)- 2대 국회의원(국민당, 인천 병구)(1950.5)- 국회부의장
박기출(朴己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부산 출생(1909)- 의학박사(1942)- 민족자주연맹 경남 위원장(1947)- 민주독립당(당수 홍명희) 경남도당 위원장- 건민회(위원장 이극로) 경남 지부장- 『민주중보(民主衆報)』 사장- 진보당 중앙당부위원장(1955)- 진보당 부통령 후보(1965.5)- 세한학회 이사장- 사회대중당 발기(1960)- 통일사회당 간부(1961)- 6대 의원 출마, 낙선(민정당)(1963)- 7대 의원(신민당, 부산 갑구)(1967)- 신민당 정무위원(1968)- 일본에서 의사 개업(1973)- 작고(1977)
김달호(金達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상주 출생(1912)- 일본 중앙대학 법과 중퇴-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1933), 판사 재직- 판사 사임, 신사(神社) 불참 이유로 변호사 인가 불허(1940)- 만주에서 광산업 종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1947)- 변호사 개업(1948)- 제 3대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상주)(1954)- 진보당 부위원장(1956)- 사회대중당 총무위원(1960.5)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인 물 명	이 력
김달호(金達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9 총선거에 출마, 낙선(1960.7)- 사회대중당 재결성, 동 위원장(1960.11)- 민족자주통일연맹 의장단(1961)-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 언도- 출감(1968)- 작고(1979)
윤길중(尹吉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원성 출생(1916)- 일본대학 법과 졸업- 변호사 시험·고등문관 시험 합격- 강진·무안군수, 총독부 학무국 사무관 역임- 국민대학 교수(1946)- 입법의원 법제조사국장(1947)- 헌법 기초 전문위원(1948)- 제 2대 민의원(무소속, 강원 원성)(1950)- 제 2대 국회 법제사법분과 위원장- 진보당 추진위원회 선전부장(1955)- 진보당 간사장(1956)-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사회대중당 간사장(1960)- 제 5대 민의원(사회대중당, 강원 원성)- 통일사회당 정치위원(1961)- 군사재판에서 징역 12년 언도(1962)- 출감(1968)- 신민당 정무위원(1970)- 8대 국회의원(신민당, 영등포 정구)(1971)- 변호사 개업(197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 의원(1980)- 11대 의원(민정당, 서대문구)(1981)- 국회 부의장- 12대 의원(민정당, 서대문구)(1985)- 당총재 상임고문(1985.3~8)
조규택(曹圭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보당 발기 추진위원회 기획상임위원(1955)- 진보당 중앙당 재정부 부간사(1956)- 혁신동지 총연맹 간부(1960)- 민주사회당(대중당 전신) 간부(1966)
조규희(曹圭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남 북청 출생(1914)- 일본 중앙대 법과 중퇴(1936)- 건국준비위원회 선전위원(1945)

인 물 명	이 력
조규희(曹圭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조선보』기자- 『한성일보』, 『항도신문』, 『한국매일신문』 편집국장(1946~1950)- 진보당 중앙당 선전부 간사(1956)-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사회대중당 창당위원(1960)-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 언도(1961)- 작고
신창균(申昌均)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 사범학교 졸업(1910)- 한독당 재정부장, 연락부장(1947)- 남북협상 참가(1948)- 진보당 중앙당 재정위원장(1956)
김기철(金基喆)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남 흥남 출생(1915)- 동경공전 전기공학과 졸(1939)- 함흥에서 박전사(博電社) 경영- 건국후원 함남 협의회 간부(1945.8)-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월남(1946)- 좌우합작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체감매상, 유상분배의 토지개혁 주장)- 민족자주연맹 보도부장(1947)- 민주한독당 선전부장- 남북협상 참가(1948)- 조봉암 대통령후보 선거사무장(1952)- 진보당 중앙당 통제위원회 부위원장-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1956)- 진보당 통일문제 연구위원장(1957.9)- 사회대중당 조직위원장(1960)- 5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사회대중당, 부산 영도)(1960)- 통일사회당 정치위원 겸 통일촉진위원장(1961)- 영세중립화통일연맹 대변인(1961)- 군사혁명재판에서 징역 6년 언도- 신민당 통일문제 특별 위원장(1971)- 민족통일촉진회 통일연구위원장(1972)- 신민당 지도위원(1977)- 박정희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제의(1977)- 국회 개원 논의시 한반도의 비핵화 건의(1980)- 작고(1984)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인 물 명	이 력
김병휘(金炳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북 용천 출생(1921) - 일본대학 법학과 중퇴 - 해방 후 북한에서 백의청년동맹 조직 - 월남(1946.4) - 독립신문사(임시정부계) 사회부장 - 홍익대 국제법 교수 - 대전여자고등기술학교장 - 진보당 중앙당 교양부 간사(1956) -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1957) - 『중앙정치』 편집위원 - 한국사회당 국제부장(1960) - 사회대중당 정책위원장(1960) - 군사재판에서 징역 5년 언도(1961)
이동화(李東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남 강동 출생(1907) - 일본 동경제국대학 졸업(1937) - 해화전문학교 강사(1938) -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간 복역(1941) - 여운형 등과 건국동맹 조직(1944) - 건국준비위원회 서기국 위원(1945) - 『평양민보』 주필(1945.9) - 조·소 문화협회 부위원장(1946) - 김일성대학 교수 - 1·4 후퇴시 월남하여 육군본부 정보국 근무(1951) - 경북대학 교수(1952) - 성균관대 교수(1954) - 진보당 강령 기초(1955) - 민주혁신당 정치위원(1956) - 동국대 교수, 도서관장(1959) - 사회대중당 기획위원장(1960) - 통일사회당 정치위원장(1961) - 군사재판에서 징역 5년 언도(1961) - 통일사회당 위원장(1966) - 대중당 당수 - 민주회복선언에 참여(1975) - 민주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1981) - 민족통일촉진회 최고위원, 독립동지회 지도위원(현재) - 민주사회주의연구회의 의장
정태영(鄭太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익산 출생 - 진보당 서울특별시 도당상임위원 - 동양통신사 외신부 기자

인 물 명	이 력
이명하(李明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남 북청 출생(1913) - 『동아일보』, 『조선일보』 함흥 지국장 - 조선청년동맹위 위원장(1945) - 기독교청년 전국연합회 문화선전부장 - 신탁통치반대 투쟁위원회 중앙위원(1946) - 좌우합작위원회 조직부 차장 - 민족자주연맹 조사부장(1947) - 진보당 중앙상무위원 -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진보당 부간사장 겸 조직부 간사(1956) - 사회대중당 통제위원장(1960) - 제 5대 민의원 낙선(부산 중구) - 통일사회당 당무 부위원장(1961) -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 언도 - 신한당 전당대회 부위원장(1966) - 의정부에서 농장 경영(현재)
최희규(崔熙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학성 출생(1920) - 경성농업학교 졸업, 재학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 - 일본대학 척식과 졸업 - 북해도 제국대학 농학부 수학 - 서울특별시 부흥건설단 단장(1953) - 3·1 정신 선양회 청년부장(1954) - 진보당 당무 간사(1956) -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미국 이민
안경득(安慶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남 함흥 출생 - 진보당 중앙당 상무위원 -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진보당 서대문올구 당위원장
박준길(朴俊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보은 출생(1912) - 보은 중초(中草) 학원 수료 - 산성야학(山城夜學) 설립 - 일제말기 만주에서 독립운동 - 해방 후 전재동포구제회 간부 - 한·중협회 중앙위원 - 후생협회 상임이사(1947) - 3·1 정신 선양회 사업부장(1954) - 진보당 재정 간사(1956) - 진보당 중앙위원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인 물 명	이 력
권대복(權大福)	- 서울 출생(1932)
	- 국학대학 정치과 졸업(1957)
	- 조국수호 전국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1954)
	- 한국 카톨릭학생총연합회 의장(1956)
	- 진보당 사회부 간사(1956)
	-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여명회 회장,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1957)
	- 사회대중당 청년국장, 동 조직부위원장(1960)
	- 혁신당 기획위 부위원장(1961)
	- 군사혁명재판에서 징역 15년 언도(1961)
	- 출옥(1968)
	- 통일당 정치위원 겸 조직국장(1973)
	-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2년 언도(1974)
	- 출옥 후 천주교 평신도운동 종사(1976)
	- 신사당 정책위의장(1984)
	- 12대 선거 출마 낙선(신사당, 서울 구로구)(1985)
전세룡(全世龍)	- 함북 명천 출생
	- 진보당 중앙상무위원
	- 진보당 특수지하조직 전국위원장
	- 진보당 조직부 부간사

3-6. 진보당사건 관련 형사사건기록 목록

철관리번호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건 제목	생산년도
BA0024926	형사판결원본	간첩방조 법령 제5호 위반	1959
BA0062055	판결원본	간첩 간첩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법령 제5호 위반	1958
BA0079722	형사판결원본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법령 제5호 위반	1959
BA0802879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1958
BA0802880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2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1958
BA0024926	형사판결원본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법령 제5호 위반	1959
BA0062055	판결원본	간첩 간첩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법령 제5호 위반	1958

철관리번호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건 제목	생산년도
BA0079722	형사판결원본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법령 제5호 위반	1959
BA0802879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1958
BA0802880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2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1958
BA0802881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3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1958
BA0802882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4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1958
BA0802884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6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BA0802886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8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BA0802888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0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방조 간첩	1958
BA0802889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1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BA0802890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2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BA0802891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3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BA0802892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4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등	1958
BA0802893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5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	1958
BA0802894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6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	1958
BA0802894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6	국가보안법 위반 (신체구속 적법여부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1958
BA0802895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7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BA0802896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8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BA0802897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19	간첩 등	1958
BA0802898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20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	1958
BA0802899	형사사건기록 (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21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1958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철관리번호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건 제목	생산년도
BA0802900	형사사건기록(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22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법령 제5호 위반(재심청구)	1959
BA0802912	형사사건기록(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32	간첩	1958
BA0802917	형사사건기록(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37	국가경비법 위반	1958
BA0802920	형사사건기록(58-831,1670,942,2611,1371,4152,1534) 42책중기40	간첩 등	1958

3-7. 주요 사건기록

철관리번호	건제목	원문제목
BA0802912	간첩	의견서
BA0802912	간첩	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3회)
BA0802891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조봉암 외 9인의 공소장
BA0802905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이명하 외 4인의 공소장
BA0802920	간첩 등	양이섭 공소장
BA0802915	간첩 간첩 예비	양이섭 피의자신문조서 11회
BA0802917	국가경비법 위반	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 3회
BA0802879	국가보안법 위반	의견서
BA0802879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
BA0802911	국가보안법 위반 수뢰 증거인멸 법령 제5호 위반	의견서
BA0802911	국가보안법 위반 수뢰 증거인멸 법령 제5호 위반	인지보고
BA0802911	국가보안법 위반 수뢰 증거인멸 법령 제5호 위반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통첩연락문건 입수상황보고
BA0802882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김달호 피의자신문조서
BA0802882	국가보안법 위반	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
BA0802881	법령 제93호 위반	조규택 피의자신문조서
BA0802884	국가보안법 위반	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
BA0802885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윤길중 피의자신문조서
BA0802884	국가보안법 위반	박기출 피의자신문조서
BA0802888	국가보안법 위반	조봉암 자공서
BA0802886	국가보안법 위반	조복재 구공서
BA0802886	국가보안법 위반	조봉암 자공서
BA0802891	국가보안법 위반	공판조서 제1회 (1심)
BA0802891	국가보안법 위반	공판조서 제3회 (1심)
BA0802892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판조서 제7회 (1심)
BA0802893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판조서 제9회 (1심)
BA0802896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방조	공판조서 제1회 (2심)



세 번째 기록 _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 역사 속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2. 사건기록으로 보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세 번째 기록 _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

역사 속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1. 3·15 부정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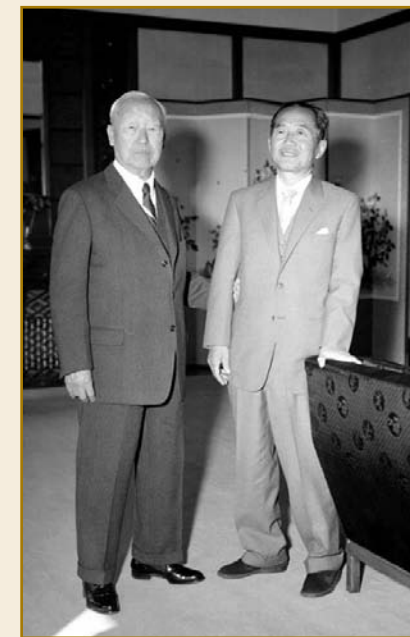
1 1 1. 배경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적 헌법과 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제도의 운영은 민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1952년 5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른바 '부산정치 파동'이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1954년 11월에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1956년 5월 제 3대 대통령선거 및 제 4대 부통령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제도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구호를 내걸고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도전했다. 선거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편 소수파이기는 했지만 혁신정당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선거운동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선거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은 504만여 표를 얻었지만, 정식 발당도 하지 못한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216만여 표를 얻어 선전했다. 신익희에 대한 추모 표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무효표도 무려 185만여 표나 나왔다. 서울의 경우 이승만은 20만5천여 표를 득표한 반면 무효표는 무려 28만4천표나 되었다.

부통령선거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당시는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는데 민주당 후보 장면이 자유당 후보 이기붕을 20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의 모습
(CET0028207)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선전물 (CET0041749)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선거 결과가 나오자 주한미국대사관은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선거 결과는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것으로 “아시아에서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상황은 자유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1 1 2. 기획과 시행

사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거행되었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여당 후보의 득표를 위해 선거에 개입했고, 야당 후보에 대한 방해공작과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3·15부정선거는 이전의 선거 부정과 달리 사전 계획에 의해 자행되었다. 재판 기록에 의하면, 최인규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던 1959년 3월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기획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인규 내무장관 임명 직후 국방, 내무, 재무, 법무, 농림, 체신부 장관으로 구성된 6인위원회가 만들어져 다가올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했다.



자유당 선전부장회의 (CET0026225)



자유당 동대문갑구 정·부통령선거 대책위원회 결성식 모습 (CET0078902)

최인규는 내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모든 공무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자유당에서는 기획위원회가 부정선거 준비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자유당 기획위원회는 1959년 9월부터 자유당 당무위원회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임무를 인계받았다. 기획위원회 위원장 한희석은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거자금은 주로 여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뿌려졌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1960년 2월 반도호텔 809호실에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치안국장 이강국, 자유당 총무위원장 박용익은 선거자금 11억 원을 경찰조직에 배포했다. 서울 특별시와 각 도 내무국장 10명에게는 2백만 원, 각 시장에게는 70만 원, 군수에게는 1백만 원에서 70만 원, 읍장과 면장에게는 2만 원씩 교부되었다. 한편 최인규와 한희석은 1억8천만 원을 반공청년단 단장 신도환에게 단비명목으로 교부했다.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된 부정선거의 기획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었다. 부정선거에서 사용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4할 사전선거였다. 이는 선거인 명부를



최인규가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직원들에게 훈시하는 모습 (CET0026225)



이승만 대통령을 접견하는 이강학 경찰국장의 모습 (CET0078902)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이승만 대통령과 만세 삼창을 외치는 국무위원들
(CET0019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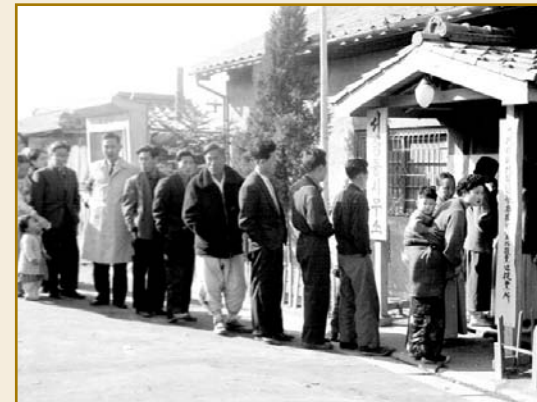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과 만세 삼창을 외치는 동리반장들
(CET0028167)



이승만 대통령과 만세 삼창을 외치는 대한부인회 각 도 대표들
(CET0028200)

허위기재하거나 유령유권자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유권자를 금전으로 매수해 기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미리 빼돌리는 것이었다. 그 밖에 3인조 9인조 투표, 투표함 바뀌 치기 등이 사전에 준비, 계획되었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공무원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한편 2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통령은 꼭 동일정당에서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어도 따르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마침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날이 다가왔다. 골목마다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전투표뿐 아니라 3인조, 9인조 투표도 진행되었다. 3명이 하나의 조를 편성하는데 이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장이 되어 공개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3인조가 기본 단위인데 이것이 3개 모인 것이 9인조이다. 야당 성향이 강했던 대구 모 선거구의 경우 중간 집계를 해보니



투표에서 개표까지의 모습 (CET0045236)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이기봉은 5천표를 획득했는데 반해 장면은 불과 32표 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이승만 80%, 이기봉 70% 득표 선에서 집계 결과를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부정행위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는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1 1 3 부정선거의 숨은 공신, ‘정치깡패’

정치의 하수인-이기봉과 이정재의 만남

자유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경찰과 청년단체와 같은 강압적 기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체계적인 조직이었지만, 공식적인 국가 기구이므로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유당은 청년 단체를 활용하게 된다. 당시 정치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선전과 세력 확보를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방어를 위해 청년단체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정치 권력의 행동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먹패를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이기봉과 부인 박마리아의 모습 (CET0032797)

1952년 국방장관으로 ‘국민방위군사건’을 해결하면서 이승만의 신임을 얻었던 이기봉은 자유당 내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정치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수행해줄 행동대장이 필요했다. 이정재가 선택되었고 이정재는 자유당 감찰부장이 되었다. 이정재는 자신의 주먹사단을 비호해줄 정치우산이 필요했고 이기봉은 자신을 위해 앞장서줄 주먹이 필요했다. 이정재는 ‘검은 잠바부대’로 정치 전면에서 이기봉의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정재는 이천 출신으로 대한청년단 동대문

특별단 단장으로 동대문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주먹사단’을 만들어갔다. 당대 최고의 세도를 누리던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 정치깡패 유지광도 이천 토박이들이었다. 이정재는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기봉, 곽영주라는 권력의 비호와 폭력을 기반으로 불법을 일삼으며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1958년 제 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정재는 고향 이천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대문갑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이기봉이 당선이 불확실해지자 이천으로 출마지역을 옮기면서 이기봉과 이정재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치주먹 1세대 교주 이정재는 실각했다. 그 자리를 임화수가 이어받았다.

3·15부정선거와 ‘정치깡패’

자유당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며 유래 없는 부정선거를 기획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배후조직으로 대한반공청년단(이하 반공청년단)을 결성했다. 자유당의 자금지원으로 1959년 1월 발족한 반공청년단은 신도환을 단장으로 총재에는 이승만, 부총재에는 이기봉을 추대했다. 1960년 2월 10일 반공청년단은 자유당으로부터 1억 원의 자금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확대해 나갔다. 명동의 일부 주먹을 제외하고 서울의 주먹들 대부분이 반공청년단에 가입했다. 반공청년단은 자유당의 새로운 전위부대였다. 임화수는 반공청년단 총로 구단 책임자가 되었으며 1959년 3월에는 ‘반공예술인단’을 결성해 예술인들을 부정 선거를 위한 선전공작대로 활용했다.

1960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장택상의 대통령후보 추천서류를 빼앗아 간 깡패를 취재 중이던 사진기자 수명이 폭행을 당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야당 후보자와 유권자는 물론 폭력과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대에 대한 동원된 정치깡패의 테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국 곳곳에서 각 지방의 반공청년단을 위시한 정치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할 뿐이었다. 이들 정치깡패들의 배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책임을 맡고 있던 곽영주 경무관과 이기봉 자유당 부총재가 있었다.

3·15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60년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반공청년단 훈련생과 기념촬영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 (CET0028187)



이승만 · 이기붕의 대통령 · 부통령 출마환영
예술인대회 (CET0057503)

4월 18일 고려대 학생 수천여 명은 ‘3·15 선거 무효’, ‘마산사건 책임자 처단’, ‘기성정치인 거부’ 등을 외치며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해 연좌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도중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학생들은 쇠갈고리와 곡괭이 등으로 무장한 100여 명의 정치깡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4·18 고대생습격사건은 반공청년단 단장 신도환, 종로구단장 임화수, 유지광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동원된 정치깡패들 역시 반공청년단과 유지광 휘하 화랑동지회 회원들이었다.

그러나 4·19혁명과 함께 이승만과 자유당이 무너지면서 정치깡패들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깡패가 존재할 수 있었던 기반이 자유당이었던지 자유당과 정치깡패들은 공동운명이었다. 상황이 급격하게 이승만정권의 몰락으로 진행되던 4월 22일, 고대생습격사건의 행동대원인 유지광의 부하 7명이 구속되었으며 주범으로 유지광에 대한 긴급체포령이 떨어졌다. 3·15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최인규, 이강학, 임화수, 이정재, 곽영주 등이 체포되었다. 이강학과 유지광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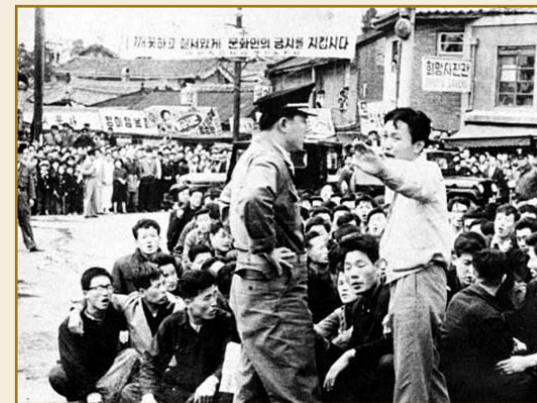
오유석 (성공회대 강사)

1-2.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1 2 1 민중의 항쟁과 4·19혁명

3·15 정·부통령선거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렸다. 야당은 여당의 부정선거 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입수해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도 선거 보름 전부터 일어났다.

마침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날이 다가왔다. 이 날 분위기는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명확했다. 3월 15일 선거날 충주시 용산리 제 1투표소에서는 3인조 투표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에 항의하는 4·19시위대의 모습 (CET0042916)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3인조 투표는 조원 3명이 일시에 기표소에 들어가야 가능했다. 자유당 선거운동원들은 투표장의 혼잡을 막기 위해 용산리 1구 주민은 오전에, 용산리 2구 주민은 오후에 투표하라고 강요했다. 주민들은 황당한 요구에 항의하며 투표소 문을 밀치고 들어갔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강당 문이 파괴되는 등 소란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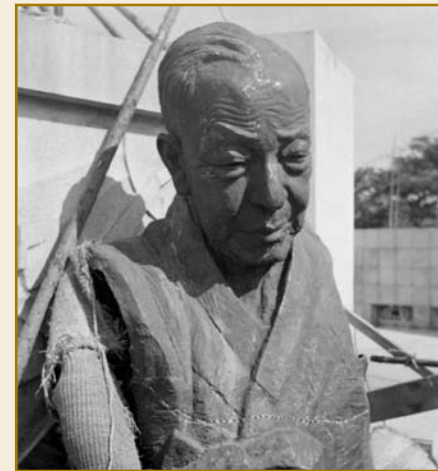
3·15선거 당일 민주당 중앙당의 지도부는 노골적인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는 했지만 뚜렷한 대응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산에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대거 항의시위에 참여했고, 마침내 경찰이 시위 군중에 발포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4월 11일 김주열(마산상고 1학년)의 시체가 마산 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눈에 미제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이었다. 그 날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봉기가 다시 일어났다. 두 차례 마산에서의 시민봉기를 거치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되어갔다.



“쓰러진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과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모습 (CET0032797)

전국 각지에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 4월 18일 고대생습격사건에 이어 4월 19일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일제히 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바로 앞까지 접근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총을 발사했다. 이 날 서울에서만 100여 명, 전국적으로는 18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무대 앞 발포사태 후 전국 5대 도시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탈당하고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취소하는 등 위기 국면을 타개 하기 위해 정치적 수완을 동원했다. 그러나 4월 25일 계엄령 아래에서 서울시내 교수단들이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며 대통령과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펼쳤다. 시민과



시민들에 의해 철거되는 이승만 박사의 동상 (CET0026225)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경무대를 나와 이화장으로 옮기는 이승만 대통령 (CET0078902)

학생들이 대거 합세했고, 이 날 서대문에 있던 이기붕의 집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불에 탔다.

4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시위대가 서울 거리를 메우자 마침내 12년 동안 국가를 통치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 저항에 의해 정권이 바뀌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4월 혁명’이라 불렀다.

1 2 2. 특별법 제정과 5·16군사정변, 그리고 혁명재판

4월 혁명 이후 부정선거 관련자,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의 처벌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었다. 1960년 5월 3일 최인규가 구속되었고, 뒤이어 한희석, 재무부 장관 송인상, 4·19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와 자유당 기획위원 전원이 구속되었다.

4월 혁명은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정치체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청산한 것은 아니었다. 허정 과도정부의 정책은 “비혁명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부정선거와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를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3·15부정선거 공판 (CET0019365)



정치깡패 공판 (CET0037413)



4·19발표명령사건 공판 (CET0037414)

기존 법률에 따라 기존 사법기관에서 심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들은 부정선거 주도자들을 국헌문란 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단지 선거법 위반으로 다스리는 처사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나 장면정권도 이러한 과도정부의 정책을 계승했다.

1960년 10월 8일 법원은 경무대 앞 발포사건 관련자에 대해 먼저 언도 공판을 했다. 실무 책임자인 서울시 경찰국장 유충렬과 서울시 경비과장 백남규에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내무장관 홍진기, 치안국장 조인구,

경무대 비서실장 박영주와 고대생습격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치깡패 신도환, 임화수 등에게는 무죄 또는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기존 법률과 사법기구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의 한계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에 4월 혁명 부상 학생들은 국회를 점거하고 혁명정신에 따른 재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장면정권은 빚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960년 11월 29일 특별법 제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1960년 12월 13일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2월 31일에는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이 공포되었다. 같은 날 이승만 독재시절 반민주행위를 했던 정치인과 공무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도 공포되었다. 부정축재자 처벌법안의 마련은 계속 지체되다가 1961년 4월 14일에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마침내 1961년 4월 17일 특별재판소는 부정선거 실행에 핵심 역할을 했던 내무부 관련자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최인규 사형, 이강학 징역 15년, 내무부 차관 이성우 징역 7년, 내무부 지방국장 최병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부정선거의 핵심이었던 한희석을 비롯한 자유당 기획위원회 관련자들의 1심 공판도 진행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특별재판소의 재판은 중단되었다.

1961년 5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 17호가 공포되어 장면정권 때 만들어졌던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기능이 일단 정지되고 6월 21일 법률 제630호로 ‘혁명 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따로 만들어 공포했다. 여기에서는 부정선거 책임자와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 5·16 군사정변 직후 주도세력의 내분 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반혁명사건’, 장면 정권기에 통일운동·진보적 사회운동을 했던 혁신계 인사 등을 재판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1961년 7월 2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특별법운영에 관한 규칙을 발표해 4월 혁명을 야기한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방침을 공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은 공소를 유지하고,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죄상이 극히 중대한 자에 한해 공소를 유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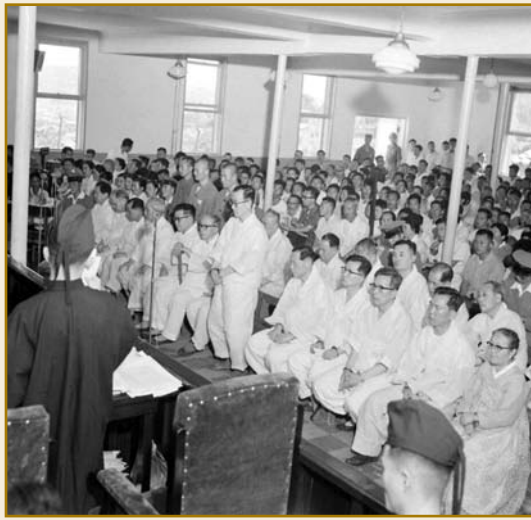
군사정권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리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일단 공소가 유지된 거물급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더 심한 중형을 선고했다. 1961년 9월 20일



1961년 4월, 최인규 등의 언도공판 모습 (CET0037431)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3·15부정선거 혁명재판 모습 (CET0042937)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을 맡은 혁명재판소 제4부는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에게 사형, 자유당 총무부장 박용익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월 28일 정치깡패 이정재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11월 3일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광영주에게는 사형이, 홍진기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한편 고대생습격사건과 관련이 있는 임화수, 유지광은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른바 ‘정치깡패’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이 행한 폭력배 및 불량배 정화활동은 민심수습과 관련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군인들의 통제 속에서 가두행진하는 정치깡패 이정재와 ‘깡패’들의 모습 (CET0040942)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2월 21일 사형선고를 받은 한희석과 유지광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최인규와 임화수에게는 사형을 확정했다. 박정희 의장이 형을 확정 처분한 바로 그날 최인규와 임화수, 경무대 발포사건 책임자 광영주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부정선거 관련자와 발포 책임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2 사건기록으로 보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2-1. 보유 기록물 개요

2 1 1. 생산기관·이관 이력 및 열람조건

‘3·15부정선거 관련 형사사건기록’(3·15부정선거, 정치깡패, 4·19 발포명령 책임자 관련 사건기록물로 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의 생산기관은 서울지방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특별검찰부 및 특별재판소,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이며, 생산년도는 1960~1961년이다.

‘3·15부정선거’ 관련자는 1960년 5월 구속되어 서울지방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 12월 13일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31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공포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다시 수사와 공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1961년 5·16 군사정변 후에는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같은 해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을 제정·공포해 부정선거 책임자 등을 수사·재판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선거 관련자의 수사와 재판은 정치적 변동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특별검찰부 및 특별재판소,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 등에서 처리했다.

2 1 2. 3·15부정선거 기록물 개요

‘3·15부정선거’와 ‘정치깡패’, ‘4·19발포명령 책임자’에 관한 사건기록은 형사사건기록 127권, 판결문 12권으로 5만여 쪽의 분량이다.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특별재판소 및 혁명재판소에서 생산한 공판기록으로 구분되어지며 편철은 사안별로 합철되어 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형사사건기록(60-6013, 17600, 7357, 8226호) BA0803215~50(36권)** : 3·15 부정선거를 기획한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한희석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피의 자들에 대한 범죄인지, 자수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선거 계획, 부정선거 방법과 지침, 배후세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60-6013, 17600, 7357, 8226호) BA0803251~5(6권)** : 최인규 외 28명에 대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사건과 추가된 혐의를 병합심리한 서울지방법원의 공판기록이다. 공판은 1960년 7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1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지만 ‘민주반역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의 통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재판소에서 공판이 시행될 때까지 공판정지한다는 결정문이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60-7537, 61-특제3호) BA0803256~7(2권)** : 민주당의 한강백사장 선거연설회 장소 허가신청을 경비치안을 빙자해 사용허가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특별검찰부, 61-특제11호) BA0803258(1권)** : 최인규, 한희석,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송부받아 특별검찰부에서 공판한 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60-형공제4097호, 형제6013호) BA0803259~60(2권)** : 최인규가 대성목재주식회사 사장 전○○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한 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이 알선수뢰 혐의로 수사한 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61-특제12호, 특공제15호) BA0803261~2(2권)** :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추가수사해 공소제기한 기록물철이다.
-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61-특제8호, 특공제14호) BA0803263~4(2권)** : 서울지방검찰청이 이성우에 대해 민주당의 한강백사장 선거연설회 장소 허가신청 거부사건을 직무유기혐의로 수사해 공소제기한 기록물철로서, 공판조서도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BA0803265(1권)** : 한희석,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해 3·15정·부통령선거 투표결과를 조작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한 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BA0803266-8(3권)** : 이강학, 현규병의 3·15부정선거 직후 일어난 마산데모사건의 처리과정 조작과 방치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특별법 제4조 제22호 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의 수사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특별검찰부) BA0803269(1권)** :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특별검찰부에서 수사하고,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 기록물철로서 특별검찰부의 논고문, 특별재판소의 판결서, 공판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61-형제17600호) BA0803270~2(2권)** : 이○○, 백○○ 외 8인이 최인규에게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무마청탁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수뢰한 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한 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혁공제12호) BA0803272(1권)** :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재판소의 공판 기록이다. 상고이유서, 공판조서, 판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61-혁공제69호, 혁검제8호) BA0803273(1권)** :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서 작성한 수사 및 공판기록물 철이다.
- **형사사건기록(특별재판소, 61-특제1호, 특공제1호) BA0803274(1권)** :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한희석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에 대해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에서 수사 및 공판한 기록철이다. 8회분의 공판조서와 언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 BA0803275~76(2권)** : 1961년 11월 혁명재판소에 제출된 치안국장 이강학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진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월성군 및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경주시, 강원도 홍주군민 일동 명의로 접수되었다.

-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형제47호, 혁공제38호, 혁검제47호) BA0803318~25(7권)** : 신도성, 이수웅, 최인규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지방법검찰청,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형제200호) BA0803389~90(2권)** : 유지광, 차순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공갈 등 혐의에 대해 서울 지방검찰청에서 혁명검찰부에 송부한 수사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특별검찰부, 61-특제137호, 특공제32호) BA0803391~6(6권)** : 신도환, 차순환, 임화수, 유지광 등 13명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집합령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서울동대문 경찰서, 특별검찰부의 수사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60-9202) BA0803277~0803279, 0803294~0803295(5권)** : 이정재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한 기록이다. 피고인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61-혁상제1호, 61-혁검형제3128호) BA0803298~0803301(4권)** : 이정재의 살인교사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혁명검찰부의 기록이다. 깡패조직 화랑동지회와 관련한 수사기록이 중심이며, 이정재의 상소이유서, 진술조서, 고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60-6201) BA0803387~0803388(2권)** : 1960년 4월, 5월 임화수, 박호 등의 폭행치상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치안국 수사 지도국 등에서 조사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구성된 기록물철이다.
- **형사사건기록(특별재판소, 61-특제167호) BA0803391~0803393(3권)** :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곽영주 등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과 특별재판소의 수사기록이다. 4·18고대생습격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61-특제162호, 61-특제167호) BA0803399~0803400(2권)** :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강승일 등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과 특별재판소의 공판기록이다. 4·18고대생습격사건과 관련한 기록물철이다.

- **형사상고소송기록(대법원, 61-형상제209호) BA0803404(1권)** : 임화수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수사기록철이다. 1960년 11월부터 1961년 5월 30일 대법원 구속경신결정이 나기까지 진행된 진술조서, 공판조서, 상고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혁공제15호, 혁검제26호) BA0803409~0803412(3권)** :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등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과 특수범죄처벌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한 혁명재판소의 수사기록철이다. 4·18고대생습격사건과 반공청년단과의 관련 수사를 중심으로 공판조서, 진술조서, 공소장 변론요지, 진정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61-혁공제15호, 혁검제26호) BA0803409~12(3권)** : 신도환 외 25명의 부정선거법 위반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기록이다.
-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형제43호) BA080418~19(2권)** : 김두용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의 수사기록이다. 특별재판소에서 처리한 업무상 횡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혁공제32호, 혁검제43호) BA0803425~32(8권)** : 김두용, 이정용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의 수사과 혁명재판소의 공판기록이다. 9회분의 공판기록과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42,43,45호) BA0803433~37(5권)** : 오임근, 최순교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기록이다. 특별검찰부에서 처리한 대통령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64호) BA0803457~64(8권)**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이다. 제주지방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및 허위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형사사건기록(특별재판소, 61-형제38483호) BA0803482~84(3권)** : 정인택, 김상기 등 6인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 특별검찰부에서 수사해 특별재판소에 공소제기한 기록물철이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룬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BA0222070, BA0804624(2건)** : 1960년 10월 8일 3·15부정선거와 관련한 임흥순 외 47명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이다. 유충렬 사형, 백남규 무기징역, 홍진기 징역 9월, 임흥순 징역 5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벼운 형량을 언도받았고,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판결문(특별재판소) BA0803269(1건)** : 1961년 4월 17일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에서 3·15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 내린 판결문으로 최인규 사형, 이강학 징역 15년, 이성우 징역 7년, 최병환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외의 자유당 기획위원회 관련자, 부정선거 관련 국무위원, 부정선거자금조달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사건은 공판진행 중에 결심을 보지 못한 채 5·16군사정변을 맞으면서 혁명재판소로 이관되었다.
-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424, BA0220564, BA0220561(3건)** :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 심판부 제4부가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치고 결정한 판결문이다. 최인규·이강학 사형, 이성우 징역 10년, 최병환 징역 8년에 처해졌다.
-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4, BA0220561(2건)** :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 제4심판부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한희석, 이중재, 박용익, 조순, 유각경 등에 대한 판결문이다. 한희석 사형, 이중재 징역 10년, 박만원 징역 8년, 박용익 무기징역, 조순 징역 10년, 유각경 징역 3년 6월에 처해졌다.
-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2(1건)** : 1961년 12월 19일 혁명재판소 재판부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피고사건 관련자 홍진기, 곽영주, 유충렬, 백남규에 대한 판결문이다.

-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3(1건)** : 1961년 11월 3일 혁명재판소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익 등에 대해 내린 판결문이다.
-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5(1건)** :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 심판 제1부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인 송인상, 신현확, 최재유, 이근직, 구용서 등에게 선고한 판결문이다. 송인상 징역 15년, 신현확·최재유 징역 8년, 이근직 징역 10년, 구용서 징역 10년 등을 언도받았다.
-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1건)** : 1961년 9월 3일 혁명재판소 재판부는 4·19발포명령사건과 관련해 4·19 당시 내무부 장관 홍진기와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에게 각각 사형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경비과장 백남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2. 주요 기록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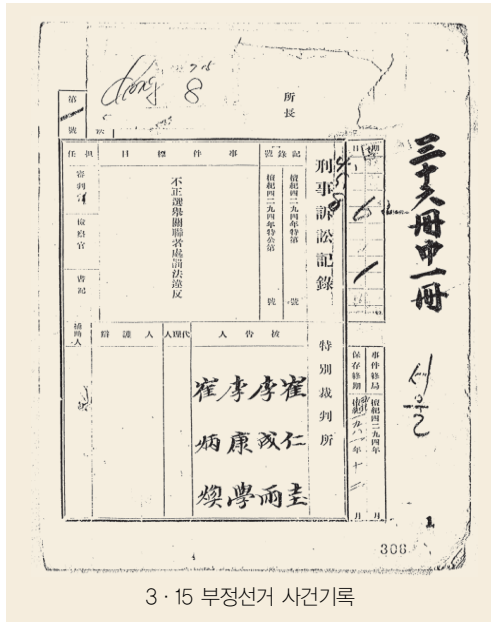
2 2 1. 4·19혁명과 부정선거 수사착수

4·19혁명 직후 부정선거 수사기록은 1960년 4월 29일에서 5월 23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생산되었다. 3·15부정선거사건의 핵심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한희석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범의인지와 피의자들의 자수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 부정선거사건을 수사했던 기록물이다. 특히 3·15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내무부인사들에 대한 사건 수사는 증인들만 무려 1,400여 명이나 되었다.

수사진행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들을 신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피의자들에게 신문하는 방식이었는데 주로 신문내용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배후, 부정선거 방법,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3·15 부정선거 사건기록

사전협의 여부, 구체적 지침 등 이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 한희석 등이 세운 부정선거계획이 지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수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각 지방 검찰청에 3·15정·부통령선거 비밀지령이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실제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부정선거의 전위부대 역할을 담당했던 신도환과 반공청년단, 이정재 등이 자행한 ‘4·18 고대생 습격사건’, ‘제3세력 제거음모사건’ 등도 수사했다.

이상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은 1950년 5월 21일 최인규, 이강학 등의 3·15부정선거에 대해, 1950년 5월 22, 23일 신도환, 이정재 등의 정치깡패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장을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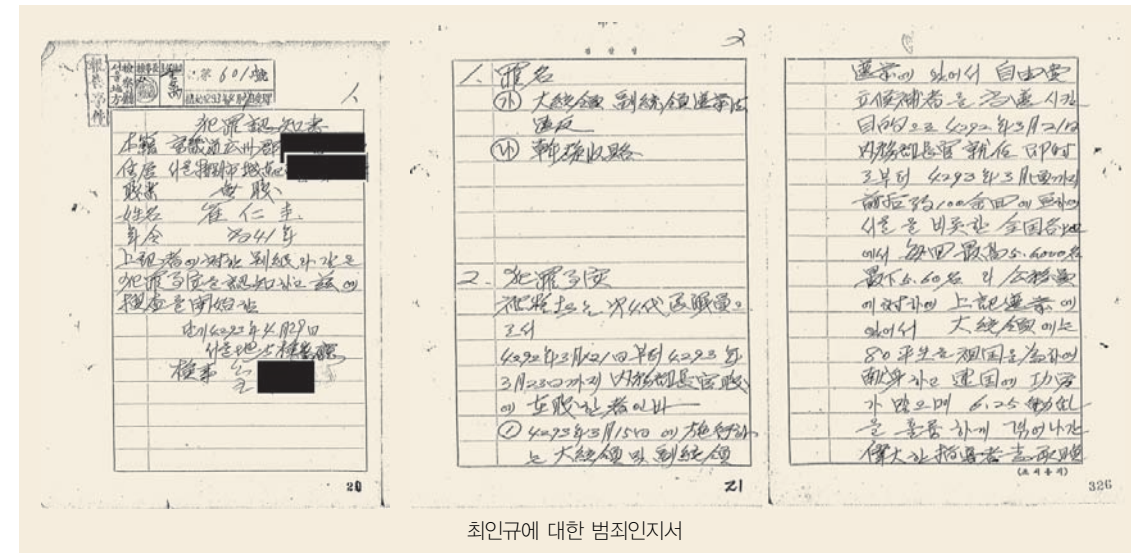
제출했다. 신도환에 대해서는 1960년 5월 31일에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제기했다.

그러나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은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의 증거불충분, 공소유지 미비라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등 낮은 형량을 판결했다. 10월 8일 판결에서 임화수, 유지광은 징역 1년, 조인규, 신도환, 박호, 조열승 등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1960년 4월 29일 서울지방검찰청은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및 알선수뢰 혐의로 3·15부정선거의 핵심인 내무부 장관 최인규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최인규는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에 자유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1959년 3월 21일 내무부 장관 취임 때부터 1960년 3월경까지 약 100여 회에 걸쳐 내무부 차관 이성우, 치안국장 이강학 등과 서로 공모해 자유당 입후보자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 공무원들에게 소위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9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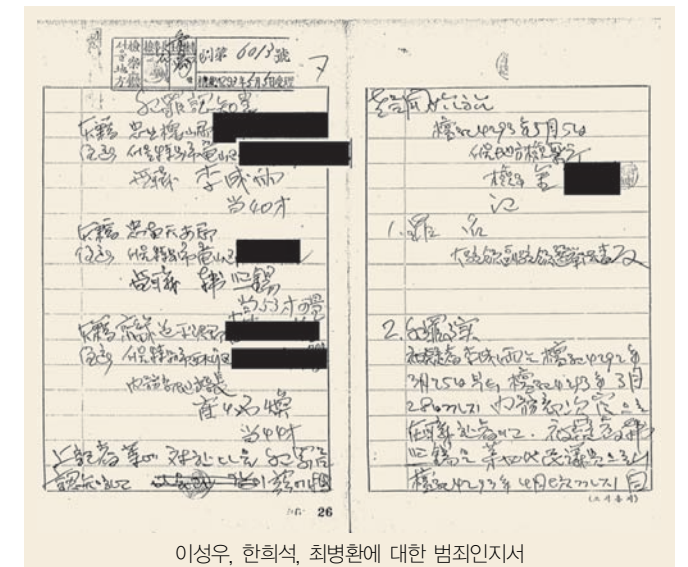


최인규에 대한 범죄인지서

공개투표, 완장부대 투표 등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1959년 6월경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의 당사자인 전택보에게 청탁을 받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에게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했으며 그 명목으로 수표를 수취했다고 보고했다.

●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이성우, 한희석, 최병환

1960년 5월 5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최인규와 함께 3·15부정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내무부 차관 이성우, 내무부 지방국장 최병환, 자유당 기획위원회 위원장 겸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장 한희석의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1959년 11월경부터



이성우, 한희석, 최병환에 대한 범죄인지서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960년 2월경까지 최인규, 이강학 등과 공모해 3·15정·부통령선거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것을 기도하고, 전국 경찰서장·시장·군수 등에게 비밀지령해 소위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투표, 완장착용투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자수인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1960년 4월 2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한 최인규는 3·15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최인규는 내무장관 부임 당시부터 대통령에는 이승만 박사, 부통령에는 자유당에서 지명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1단계로 전 공무원을 일치단결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제2단계로는 1959년 11월 4,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수·경찰서장 등을 개별적으로 소환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유당 입후보자가 기필코 당선되도록 지령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 유권자 중 1할 내지 1할 5푼을 차지하고 있는 평균 기권자의 표를 전부 대리투표케 하고, 나머지 투표자에 대해서는 4할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운동을 지령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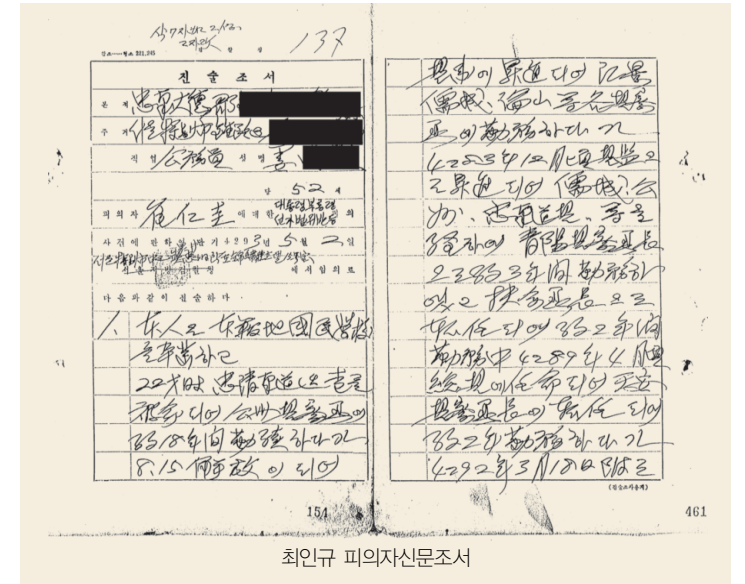
이를 위해 최인규는 치안국장 이강학과 협의해 <정·부통령선거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정선거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했고, 부정선거 지령에 대해서는 내무차관 이성우, 치안국장 이강학, 치안국 특정부장 이상국과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무부 간부 이외에 자유당 고위층과의 사전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당 선거사무장 한희석에게만 동의를 구한 후 그 계획을 실천했다고 진술했다.

●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최인규는 1960년 4월 29일 신문조서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를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이 모두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역별·직종별 가족친목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선거계획과 실천방안은 자유당 조직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회위원 이준화가 아니라 자유당

선거사무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인 한희석과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5월 1일에 실시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부정선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기권표를 대리투표하게 한 사실 이외에는 없으며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기붕과는 사전협의를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5월 2일 대질신문에서 진천군수 안○○은 최인규가 직접 민주당 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 방법을 지시했다고 증언한다.



●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2일, 관련인 강남희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장이었던 강남희에 따르면, 1960년 2월 상순경 내무부장관실에서 최인규 장관, 이성우 차관, 이강학 치안국장, 유충렬 시경국장, 이상국 특정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 각 구청장, 경찰서장을 2명씩 개별적으로 불러서 자유당 입후보자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비합법적인 비수수단을 사용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성우 내무차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이 별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1960년 오후 6시경 시경회의실에서 이강학 치안국장이 시내 각 경찰서장을 모아 놓고 부정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지시는 지상명령, 절대부동의 명령이라며 선거에 관해서는 자신이 시경을 담당하며 그 명령의 실천여부를 감독확인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이강학

1960년 5월 4일 이강학은 부정선거 계획, 내무부에서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계획한 경위, 한희석과 협의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특히 이강학의 진술이 주목되는 것은 최인규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부정선거 계획은 1959년 3월 21일 최인규가 내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수시로 내무부와 자유당이 협의해 수립했고, 국무회의뿐 아니라 반공청년단, 중앙선거위원회 등이 협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내무부에서는 장관 최인규, 차관 이성우, 지방국장 최병환과 치안국장인 자신을 포함해 4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자유당에서는 당무위원 전원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당 선거사무장 한희석, 국회부의장 임○○, 조직위원장인 이준화 등 3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자금조달은 한희석과 총무위원장 박창익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강학의 진술은 3·15부정선거가 단순히 내무부에서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유당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최인규가 진술한 부정선거계획이 자신과 이강학, 이성우, 한희석이 주로 했다는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피의자신문조서(2회)>,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이강학

1960년 5월 4일에 이루어진 이강학의 두 번째 피의자신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정선거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안국에서 독찰반을 결성해 지방에 파견했다는 점이다. 독찰반은 치안국의 수사지도과장, 경무과장, 보안과장, 통신과장을 책임자로 했다. 그리고 총경, 경감, 경위 약 5~60명을 배속해 2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회 내지 5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 파견해 부정선거 실천 여부를 감독하게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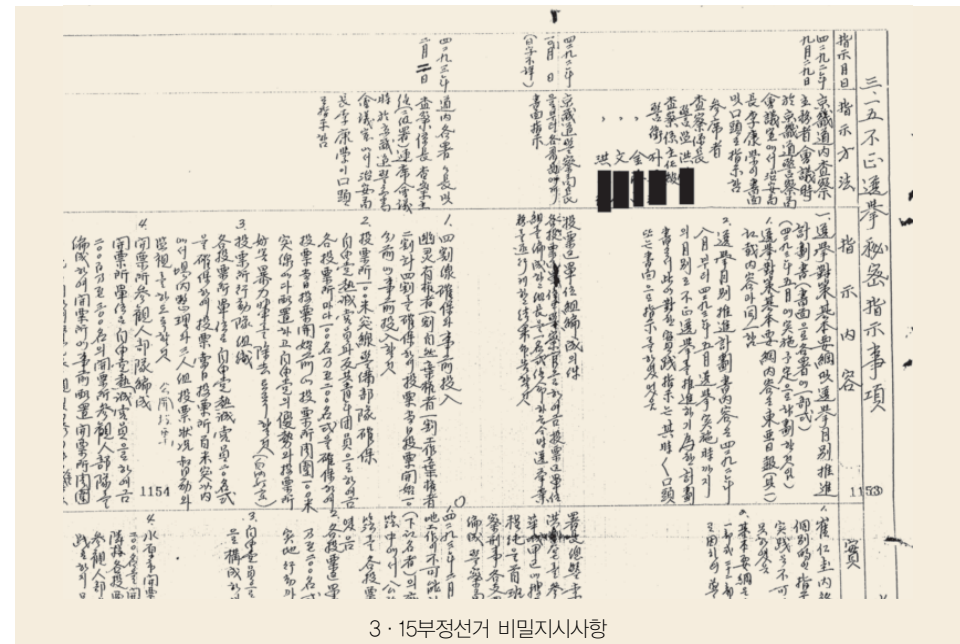
부정선거를 위해 자유당 총무위원장 박용익, 최인규, 이강학이 1960년 2월 24일 반도호텔 8층에 있는 809호실에서 전국 경찰관을 자유당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자금 1백11만 원을 경찰에 교부하되 각 경찰국에는 5백만 원, 경찰서에는 2백50만 원, 지서 파출소에는 8만 원씩을 배부하기로 합의하고 그 다음날 이성우와 자신이 산업은행 총재실에서 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2개와 인장 2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다.

●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6일, 관련인 화성군수 박○○

화성군수 박○○은 최인규, 이강학 등이 세운 부정선거계획이 어떻게 지방으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진술조서에 첨부한 선거비 100만 환에 대한 소비내역을 살펴보면 선거자금의 사용처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선거비 소비내역을 보면 날짜별로 사용처와 사용액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주로 사용한 곳을 보면 내무부장관 강연 때 비용, 전직 면장회의비, 선거위원 접대, 반공청년단 음식비, 부인회 등의 접대비로 사용되었다.

● <3·15부정선거 비밀지시사항>, 경기도 경찰국, 1960년 5월 16일

선거 도중 부정선거 비밀지령 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치안국장은 각 경찰서에 배부했던 선거대책기본요강을 비롯한 기밀서류를 회수하고 선거 후에 소각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러한 지시내용이 담긴 비밀지시문건이다. <3·15부정선거비밀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지시월일, 지시방법, 지시내용, 실천사항 등이 상세하게



3·15부정선거 비밀지시사항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지방에서 경찰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었는지 볼 수 있다. 지시사항에는 선거대책기본요강과 선거월별추진계획서 작성, 투표구단위 조편성, 4할선 확보와 사전투입, 투표소 100미터 경비부대 확보, 투표소 행동대 조직, 개표소 참관인부대 편성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실천사항에는 이상의 지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시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 <경찰선거대책기본요령>, 1960년 5월 13일

<경찰선거대책기본요령>은 이○○, 송○○의 진술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되었다. 3·15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입후보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세한 계획과 방침을 세웠는데 주로 선거자료 유포, 포섭대상자 선정, 포섭요약, 외국인 동향 관찰, 야당 행동 봉쇄, 득표공작 등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포섭대상자는 전 진보당, 족청(민족청년단) 계열, 주둔국 군부대 하사관, 월간·주간 통신 언론인, 각종 요시찰인과 월북자 가족들로, 각각 상황에 따른 포섭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야당 봉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나 기타 당에 푸락치를 투입해 공작하고, 민주당원에 대한 비위조사, 분파공작, 집단탈당 공작 등 야당 분열공작 내용들도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3·15정·부통령선거 전략요지에는 4할투표, 완장투표, 3인조 내지 9인조 공개투표의 실행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지방경찰들이 부정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 <부정선거지령내용 및 선거자금 소비내역>, 대전경찰서 사찰계, 1960년 5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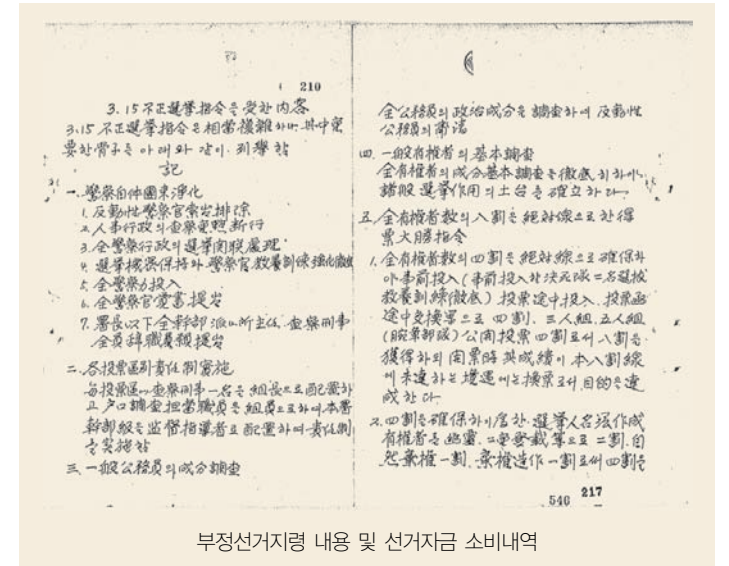
대전경찰서 사찰계에서 부정선거지령 내용과 선거자금 소비내역을 기재한 문서이다. 부정선거지령 내용을 보면, 경찰 내부의 반정부 성향 경찰관을 색출하고, 전 경찰 행정의 선거관련 처리, 선거 기밀유지와 경찰관 교양훈련 강화, 모든 경찰력 투입과 모든 경찰관의 각서 제출, 서장 이하 모든 간부의 사직원 제출을 지시했다. 각 투표구역 책임제를 실시해 투표구에 사찰형사 1명을 조장으로 배치하고, 호구조사 담당 직원을 조원으로 해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들의 정치성향도 조사해 반정부적 성향의 공무원을 숙청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전 유권자수의 8할을 절대선으로 한 득표대수 지령이다. 전 유권자수의 4할을 절대선으로 확보해 4할 사전투표, 3인조·5인조 공개투표, 개표 때 성적이 8할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표로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으며, 4할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유령유권자·이중등재 등으로 2할, 자연기권 1할, 기권조작 1할로서 4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투표구에는 전위대를 조직해 활용하도록 했다. 전위대는 반공청년단원, 자유당원으로서 핵심적 열성인물 30명 정도와 여성청년회, 부인회 등에서 2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었다. 투표 전날까지는 야당세력의 활동 봉쇄와 야당선거위원·참관인의 불참 공작을 지시했고 투표 당일에는 자유당 완장을 착용하고 투표소 주위에 배치해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약 소란할 경우에는 출혈(유혈 상황)도 불사하고 탄압하라고 지시했다.

●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21일, 관련인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 한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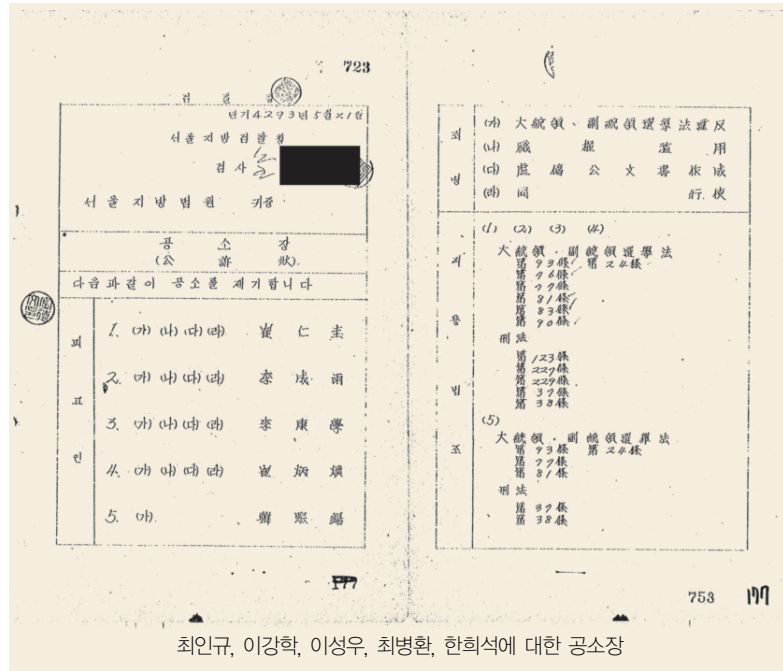
검찰은 3·15부정선거사범에 대해 처음에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의 벌칙과 그들이 선거기간 중 범한 수뢰, 횡령, 공문서 위조 등에 관해 형법의 각 조항을 병합적용했다. 그리고 1960년 7월 6일에는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1960년 7월 11일에는 최인규에 대해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을 추가하여 공소 제기한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추가해 공소제기한 이유는 제3차 개헌 후 7월에 3·15부정선거사범에 대한 면소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 있다. 검찰은 3·15부정선거



부정선거지령 내용 및 선거자금 소비내역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 한희석에 대한 공소장

사범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부정선거를 계획한 내무부 전원과 자유당 기획위원 한희석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추가 기소해 다시금 처벌을 요구했던 것이다.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1959년 11월경부터 1960년 3월경까지 내무부에서 수시로 회합해 위법적인 수단으로 자유당 입후보자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 정·부통령으로 당선시켜

자유당의 재집권을 상호 공모했다는 것이다.

최인규에 대해서는 자유당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4할 사전투표, 3인조 및 9인조 공개투표, 완장착용, 민주당 참관인 축출 등 선거책략을 창안해 시장·군수와 서장들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경찰 선거독찰반을 조직해 부정선거계획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를 허위작성하고 자유당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조작해 개표록에 허위기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성우에 대해서는 최인규와 부정선거를 모의, 1960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라, 경기도 등 일원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계획의 실시 여부를 확인·독려하는 한편 각급 공무원에게 자유당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지시했으며 관하 각 군수,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사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강학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전국 경찰국장회의 등에서 완장부대 배치, 투표함 수송 도중 환함, 개표 때 혼표·환표, 개표완료 후 투표결산서의 위조공표, 자유당 입후보자의 득표목표 83%이상 등 부정선거를 지령했다는 것이다.

최병환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에게 부정선거를 지령하고 부정선거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면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자유당 기획위원이었던 한희석에 대해서는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지방관서에 선거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인규, 이강학 등과 회합해 전국 경찰관의 선거운동자금조로 11억1천만 원을 치안국에 교부했다는 것 등이다.

●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9일, 관련인 광영주

1960년 4·18고대생습격사건으로 현장에서 구속된 주요한 등 6명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광영주의 범죄사실의 인지보고이다.

‘고대생습격사건’은 4월 18일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화랑동지회 회원 강승일 등 50여 명이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집단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화랑동지회원 주요한 등 6명이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에 구속되었는데, 경무대 경무관이었던 광영주가 임화수의 부탁으로 동대문경찰서장 양○○에게 구속자를 석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서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진술요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60년 5월 14일, 관련인 장○○, 김○○, 최○○, 이○○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의 관련자 진술조서이다. 관련자들은 3·15정·부통령선거에 내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부정선거를 지시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전 강릉경찰서장 장○○은 1960년 1월 11일 최인규로부터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유당이 승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같은 해 2월경 치안국장 이강학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50만 환과 부정선거에 대한 지령문을 받고 문건은 소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강릉경찰서 사찰계장 김○○도 치안국장 이강학으로부터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비밀지령과 선거자금 250만 환을 받아 전부 부정선거에 사용했으며, 감찰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원 탈당공작, 3인조 투표 감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강릉경찰서 사찰형사주임 이○○은 자유당원이라는 완장을 600매 만들어 일부 투표구에서 유권자에게 완장을 차도록 한 후 투표하게 했으며, 4할 사전투표를 목표로 기권시킬 예정자와 기권 의사가 있는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강릉시 명주군의 유권자 중에서 4할 사전투표 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했다.

●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9일, 관련인 임화수, 유지광

4·18 고대생습격사건의 주범 임화수와 유지광의 범죄사실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인지서이다.

대한반공예술인단 단장 임화수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특별단장 유지광은 1960년 4월 18일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깡패들을 총동원해 집단폭행해서 데모를 저지할 것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대문시장과 서대문을 중심으로 한 깡패 수 백 명을 동원해 을지로 방면으로 이동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습격, 학생 김○○ 등 30여 명을 집단폭행해 전치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하고 있다.

●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조병후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훈련부장 조병후가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사건을 명령,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진술하는 내용이다.

조병후는 진술조서에서 1960년 4월 18일 오후 2시 30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모의하는 데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반공청년단원을 소집 동원한 것은 반공청년단장인 신도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집단폭행을 모의하던 자리에는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이외에 4명 가량이 더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유지광은 몽둥이와 쇠갈퀴를 사용해 집단폭행해야 학생들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음을 진술했다. 또한 신도환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전원을 소집해서 반공회관으로 모이도록 임화수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임화수는 유지광에게 명령해 단원들이 동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선전요령>, 반공청년단 경기도단부 선전부, 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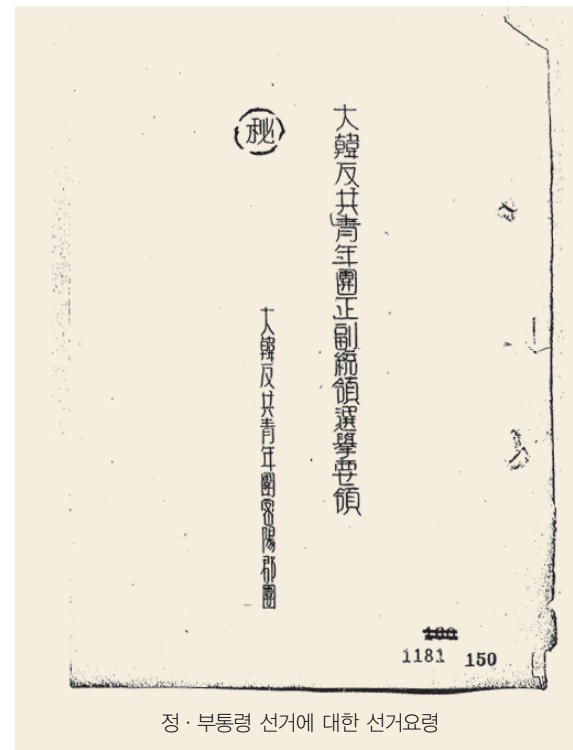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해 반공청년단 경기도단부 선전부에서 작성한 선거요령문이다. 반공청년단 경기도단장인 이○○은 5월 15일 진술조서에서 이 문건이 반공청년단 단장 신도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사실을 진술했다.

선전요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5 정·부통령선거를 ‘분단된 국토를 멸공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국가 운명을 좌우하고 민족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공청년단의 총재와 부총재인 이승만,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것은 반공청년단원에게 부여된 임무로, 임무수행을 위해 반공청년단원은 총궐기해 정·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크고 작은 집회 장소에는 물론이고 직장, 농장, 사랑방 등을 찾아다니며 선전운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있다.

●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6월 22일, 관련인 김○○

1955년 1월 30일 일어난 단성사 앞 총격사건의 피해자 김○○이 이정재의 정치테러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한 조서이다. 이기붕의 지시에 의해 이정재가 작성한 ‘제3세력 암살도표’의 실체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되고 있다.

김○○은 1954년 11월 이정재가 제3세력 암살도표를 보이면서 제3세력의 행동대 책임자인 이덕현을 죽이라고 사주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1955년 1월 30일 이○○에게 자신을 암살하라고 명령해 단성사 앞 총격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한다. 김○○은 이정재가 제3세력 암살도표를 보여주면서 신익희, 김태선 등도 없애버릴 것이며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요령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나머지 정치인들은 테러해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입원시키면 자신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그 사실을 경찰에 고발해 피신해 있다 충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암살대상이 된 제3세력에 포함된 인물은 신익희, 김태선, 조병옥, 조봉암, 이철승, 김상돈, 백두진, 민관식, 임철호, 안두희, 김두한, 이덕현 등이며, 이정재가 정치인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이정재가 이기붕으로부터 테러단장(책임자)으로 지명받아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의 진술에 대해 이정재는 김○○ 등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꾸민 것이며 자신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제3세력 암살도표라는 것을 꾸며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소장>, 혁명재판소, 1960년 6월 27일, 관련인 이정재

이정재는 정적인 신익희, 조병옥 등 40여 명을 암살·테러하는 동시에 자기의 유일한 심복부하였던 이덕현(당시 자유당 서울시당부 조직부장)을 살해하려고 김○○에게 살인청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재는 양면 종이 2매에 적은 제3세력 암살도표를 보여주면서 제3세력의 주모자는 김태선, 부주모자는 이순용, 참모장 이덕현으로 신익희와 김태선에 대한 암살명령을 내렸으니 자신에게 이덕현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3세력의 나머지 인물들은 다리 팔을 부러뜨리고 입원시키면 문제없으며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면 김○○ 자신도 형무소에서 빼내줄 수 있다면서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 <공소장>, 부산지방검찰청, 1960년 5월 31일, 관련인 김두용

1960년 5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진경찰서장 김두용을 업무상 횡령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했다.

김두용은 1960년 4월 19일 오후 3시 15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시위군중이 부산진경찰서를 포위하고 ‘협잡선거 다시 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거하자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경찰봉이나 소방차의 살수, 최루탄 등 최소한의 조치로 해산시킬 수 있었음에도 총기사용을 허용하며 경찰관을 지휘, 군중에 대해 무차별로 총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두용의 총기사용 지시에

따라 해당 경찰관들은 칼빈무기로 실탄을 발사해 무기사용을 남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4·19 부산소요사건진상보고>, 경상남도 경찰국, 1960년 4월

1960년 4·19혁명 직후 경상남도 경찰국이 작성한 부산지역 4·19혁명 진상보고서이다. 1960년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부산 일대에서 3·15부정선거, 마산항쟁에 대한 무차별대응 규탄과 이승만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시민들의 시위운동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1960년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공업고등학교 학생 약 150명의 시위를 시작으로 일어난 부산지역 시위가 “선거를 다시하자, 마산학생 피해에 경찰은 책임지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확산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대응을 보여준다. 사건 진상보고는 4·19 당시 병력이동 및 배치 일람표, 장소별 인명피해 상황(민간인 사망자 13명 등 포함), 경찰 피해자 명단, 사망자·부상자 명단 등과 시위 현장상황도면 등을 담고 있다.



2 2 2. 특별검찰부의 재수사 및 재판기록

1960년 11월 29일 국회는 헌법 개정을 기초로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법률 제586호)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법률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제567호)을 제정했다.

특별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부정 선거 관련자를 일반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제정되었다. 특별 재판소는 3·15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 일반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를, 첫째는 3·15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등의 전 과정이 부정하게 행해진 점이며, 둘째는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시키고 부정 발생을 방지해야 할 임무를 지닌 정부에서 국가권력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부정 선거를 강행한 점, 마지막으로 국가조직의 부정선거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강탈함으로써 자유선거에 의한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성과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찰부는 총 103건 263명의 피고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1961년 4월 17일 부정선거를 계획·실천한 핵심 피고인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에 대해 각 사형, 징역 15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도환, 이정식, 주요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에서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1961년 3월 9일 공소제기했고, 임화수, 유지광 등에 대해서는 1961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제기했다.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정재에 대해서도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특별재판소의 재판은 중단되었다.

● 〈변론요지〉, 관련인 최인규

최인규는 변론요지에서 3·15정·부통령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가 부정선거의 핵심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즉,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점, 자유당 득표율이 예상보다 초과할 것을 막기 위해서 감표를 감행한 점 등은 인정했지만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할 사전투표, 공개투표, 참관인의 축출’ 등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인규는 증인으로 출두한 군수나 경찰국장, 서장 등의 증언을 인용해 자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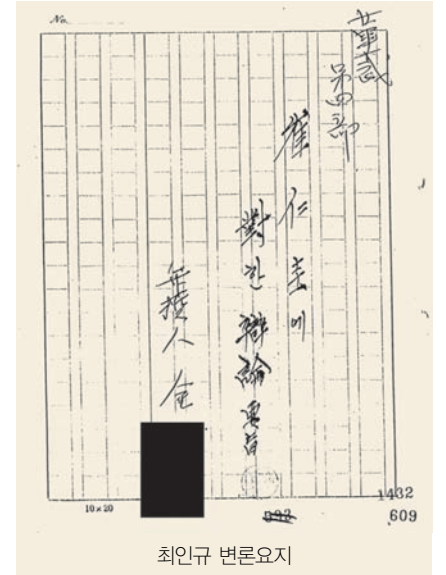
직접 부정선거 지시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면서, 증인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사람은 이강학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이강학에게 직접 부정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실천을 감행한 이강학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 보였던 최인규는 사실상 특별재판부가 이런 거대한 부정선거의 책임을 자신이나 이강학에게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이승만과 이기붕의 권력욕이 없었더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4선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부정 선거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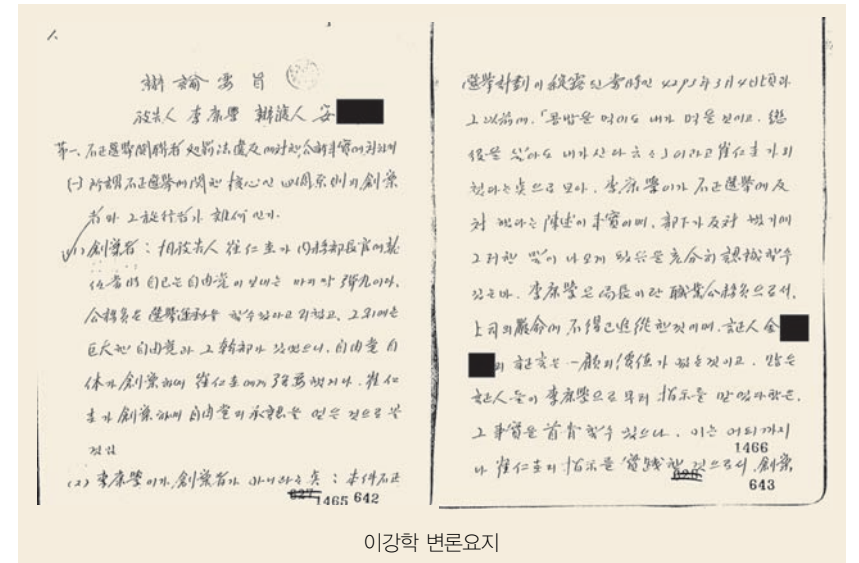
● 〈변론요지〉, 관련인 이강학

이강학은 치안국장이란 일개 직업공무원으로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상관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실천했을 뿐 부정선거를 주도했거나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강학은 최인규가 스스로를 ‘자유당이 보낸 탄환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부정선거의 핵심인 ‘4할 사전투표’는 자유당이 창안해 최인규에게 강요했거나, 최인규가 창안해 자유당의 승인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선거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경찰이 선거위원의 의사에 반해 부정을 감행했다는 것은 있을



최인규 변론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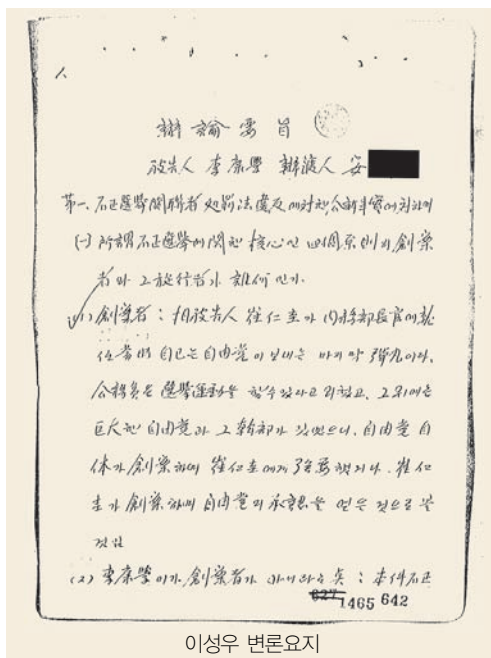


이강학 변론요지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15부정선거의 책임은 자유당과 그 간부,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선거위원회와 그 책임 아래 내무부, 지방국의 공동책임이라 할 것이며 일개 직업 공무원인 치안국장인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항변했다.



이성우 변론요지

● 〈변론요지〉, 관련인 이성우

이성우는 내무부 차관으로서 장관의 명에 따라서 그 직임을 유지했을 뿐 자신은 최인규 내무부 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의 틈에 끼어서 직접 부정선거에 관여한 바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자신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3·15정·부통령선거가 정당하지 못한 선거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무척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리에 출석한 인천시장 등 각 증인들이 ‘피고인 이성우로부터 부정선거에 관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이 뒷받침이 되며, 자신은 최인규 내무부 장관, 이강학 치안국장, 최병환 지방국장 등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1960년 10월 8일, 관련인 유충렬, 백남규, 광영주, 유지광, 임화수, 이정재, 신도환 등 48명

3·15부정선거와 4·19 경무대 앞 발포책임자, 4·18고대생습격사건 등 사건의 핵심인물 유충렬, 광영주 등 48명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 사형, 서울특별시 경비과장 백남규 무기징역, 서울 특별시장 임흥순 징역 5년, 경무대 경무관 광영주 징역 3년, 내무부 장관 홍진기 징역 7월, 평화국장 사장 임화수 징역 1년 벌금 3천3백만 원, 반공청년단 총본부단장

신도환 무죄, 유지광 징역 1년 등이 선고되었다. 4·19 경무대 앞 발포책임자 유충렬과 백남규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유충렬에 대해 1960년 3·15부정선거를 지휘한 혐의 이외에도 4월 19일 3·15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상하더라도 해산·진압시킬 것을 백남규에게 명령해 87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게 한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영주에 대해서는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사건으로 주요한 등 6명이 연행되자 동대문경찰서장 양○○에게 전화해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지위를 이용, 피의자 등을 석방하도록 한 혐의 등만이 인정되었을 뿐 살인 등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사건을 주도한 유지광을 비롯한 임상억, 강승일, 주요한 등에 대해서도 징역 2년 미만이 선고되었다. 임화수에 대한 선고 역시 영화인들에 대한 폭행 등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이며, 반공청년단 중앙본부단장 신도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들의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자 여론은 악화되었고 결국 4·19 부상학생 50여 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는 여론의 저항에 밀려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임시처리법은 관련 모든 재판을 중지시키고 10월 8일 판결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재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11월 23일 헌법개정안을 가결하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부정축재처리법안,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등 4개 특별법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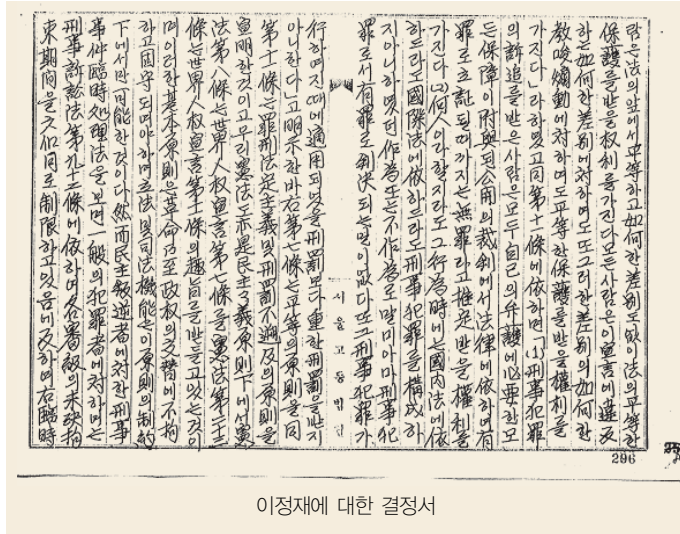
● 〈결정서〉, 서울고등법원, 1960년 11월 19일, 관련인 이정재

이정재의 특수협박 특수폭행치상과 살인미수사건의 민주반역자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 임시처리법의 위반 여부 결정 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서이다.

이정재의 변호인은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임시처리법을 3·15부정선거 이전의 폭력범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이정재에 대한 결정서

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해 민족반역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공소장기재사실변경신청의 건>, 특별검찰부, 1961년 3월 15일, 관련인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억, 강승일, 문○○, 차순환, 백철일, 원민수, 이수보, 김재운, 강○○

특별검찰부는 신도환, 임화수 등 4·18고대생습격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1960년 5월 서울지방법검찰청에서 제기한 특수폭행치상, 집합명령 위반 공소장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공소제기했다.

1960년 4월 18일 오후 1시경 반공청년단장 신도환, 반공청년단 종로구단장 임화수, 특별단장 유지광은 고려대학교 학생 약 2천여 명이 3·15정·부통령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하자 자유당의 전위부대인 반공청년단원 백여 명을 동원해 집단폭행해 데모대를 저지할 것을 결의하고 신도환은 임화수와 유지광에게 단원을 전부 소집하라고 지시하고 임화수는 유지광에게, 유지광은 특별단원에게 집결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위군중에게 집단폭행을 가해서 중앙청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10월 8일 판결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졌다. 국회는 여론의 힘에 밀려 ‘민족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부정선거관련자, 정치적 폭력배 또는 모해행위 등 민족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형사

또한 임상억, 차순환, 강승일 등은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등의 명령에 의해 오후 4시경부터 약 2천 명의 고대생들의 부정선거 항의데모를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반공청년단원들과 함께 대기하다 7시 30분경 데모대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으로 이동할 때 가지고 있던 나무 몽둥이, 쇠갈고리 등 흉기로 집단폭행, 고대생 40여 명에게 1주에서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보고했다.

- <논고문>, 특별검찰부, 1961년 4월 10일

특별검찰부가 작성한 <논고문>은 1961년 4월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 등에 대한 특별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논고문은 ‘인권회복과 인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3·15부정선거에 저항해 희생당한 명령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3·15부정선거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고 인권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4·19의거’를 국민의 실력행사라는 저항권의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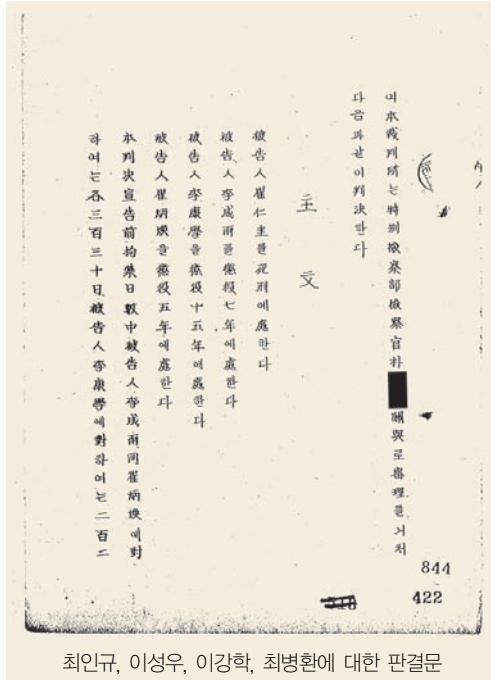
법률적으로는 실정법이 3·15부정선거 같은 기존 법질서를 초월한 비상사태를 상정하지 못한 것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법리론적 근거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다.

- <판결문>, 특별재판소, 1961년 4월 17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3·15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주도한 핵심 피고인은 내무부 장관 최인규, 내무부 차관 이성우, 치안국장 이강학이었다. 최인규는 내무부 장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찰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과 그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하게 한, 사실상 3·15부정선거를 총지휘했던 점이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1959년 3월 말경 치안국장에 임명된 이강학은 경찰의 불법적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최인규가 지시한 부정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부정선거계획의 실천여부를 점검했다. 이강학은 부정선거에 적극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한 판결문

협조하고 항거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성우는 당시 내무부 차관으로, 최인규의 명령에 따라 치안국장 이강학과 함께 각 도지사, 경찰서장, 군수, 시장 등을 불법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선거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 전국 공무원에게 배분했다. 이성우는 부정선거에 적극 조력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인규는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으로 자유당 선거 대책회 기업위원인 은행총재로부터 1960년 2월 초 10억 7천만 원을 전달받았고 이강학은 이를 각 경찰소 10개소에 100만 원, 경찰서 166개소에 250만 원, 지서파출소 1,968개소에 8만 원, 투표구 담당 경찰관 7,107명에게 6만 원씩 배분했다. 내무부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게도 총 2억4천만 원에 달하는 선거운동자금을 제공했다.

2 2 3.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재판기록

부정선거 관련자 수사와 재판은 5·16군사정변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군사정권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해 5·16군사정변 이전과 이후의 반국가·반민족행위사건, 반혁명행위사건, 그리고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에서 이미 결정했거나 공판 중인 사건 등을 담당하기 위해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12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를 발족했다.

이로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는 물론 지방검찰청과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3·15부정선거에 관련한 수사와 공판은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 일임되었다. 하지만 적용 법규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1년 7월 21일 국가재건회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혁명적 범죄를 중점적으로 일벌백계주의로 엄정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혁명정신 완수를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는 폭력단체, 소위 ‘깡패’ 조직의 간부가 대상이었다. 특별법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죄상이 극히 중대한 자에 한해 공소가 유지되었으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도 유지되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혁명재판소에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혁명재판소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은 주요 책임자로 한정되어 총 41건, 111명의 혐의자에게만 실제 재판이 이루어졌다.

1961년 12월 6일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혁명재판소 상소심 언도공판에서 최인규와 한희석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강학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1961년 7월 12일 혁명검찰부는 이정재,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억, 강승일 등 ‘정치깡패’들에 대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특별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1961년 8월 17일 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에 의거해 깡패조직 ‘화랑동지회’의 수괴라는 혐의로 이정재에게는 사형, 1961년 11월 신도환에게는 4·18 고대생습격사건 등과 관련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임화수, 유지광에게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및 특별법 위반으로 각각 사형이 선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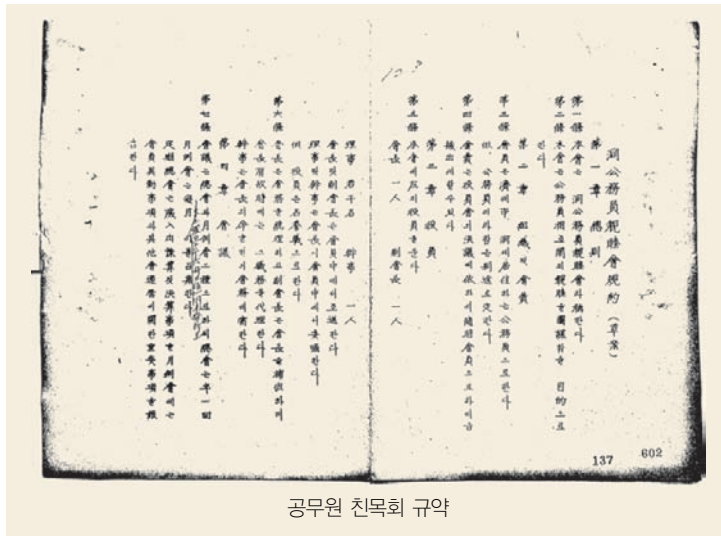
● <범죄인지서>,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12일, 관련인 이강학, 현규병

이강학과 현규병에 대한 특별범죄처벌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견되었음을 인지하는 보고이다. 이강학은 1959년 4월에서 1960년 3월 말 까지 내무부 치안국장으로서 전국 치안사항과 경찰인사를 장악 감독하는 경찰계의 총수였으며, 현규병은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으로서 전시기간 중 재직하면서 범죄수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3·15부정선거가 감행될 때 이들은 부정선거가 탄로나거나 국민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는 현장에서 구속하라고 명령, 마산시민 약 2천여 명에게 발포해 47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자를 체포해 불법감금했다. 또한 1960년 3월 16일 마산파출소를 방화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박○○이 진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검찰청에 송치했다. 현규병은 불법구속자를 석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감금한 사실이 인지되어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공무원 친목회 규약〉, 제주시 공무원 친목회



공무원 친목회 규약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공무원 친목회 중 제주시 공무원 친목회의 규약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목회의 목적,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 및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1960년 봄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무부·농림부·국방부·체신부·교통부장관 등 6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6인위원회에서 전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선거에 동원할 것을

제의해 최종적인 합의를 얻어낸 바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동, 시, 읍, 면, 군 단위로 같은 해 4, 5월 중에 공무원 친목회를, 같은 해 10월경에 공무원가족 친목회를 조직하게 해 매월 1회씩 회합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 사찰계 형사와 동·시·읍·면장 등이 주동이 되어 전국 각지의 각급 공무원 10여 만 명과 그 가족에 대해 자유당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활동을 하게 하는 한편 유권자에 대해 자유당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 〈판결문〉,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20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는 3·15부정선거의 핵심 인물인 최인규와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최인규와 이강학은 사형, 이성우는 징역 10년, 최병환은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공소사실 중 이강학이 마산 시위군중을 불법체포하고 연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되었다.

최인규는 내무부 장관으로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지시했으며 전출자·자연기권자 매수, 기권자들 표의 활용, 3인조·9인조를 이용한 공개투표, 완장부대의 동원, 민주당

참관인의 매수 등 부정선거 요강의 실행을 이강학 치안국장과 최병환 지방국장에게 지시했다. 또한 이강학은 최인규의 명령을 받아 기본 요강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최병환은 경찰과 협조해 경찰이 치안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방법에 따라 선거를 실행하도록 했으며, 1960년 3월 16일 마산과출소를 방화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박○○이 진범이 아님을 알면서도 치안국장의 직권을 남용해 불법감금했다. 또한 피고인 최인규는 3·15부정선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피고인 이성우와 최병환은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피고인 이강학은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폭행, 상해 하도록 명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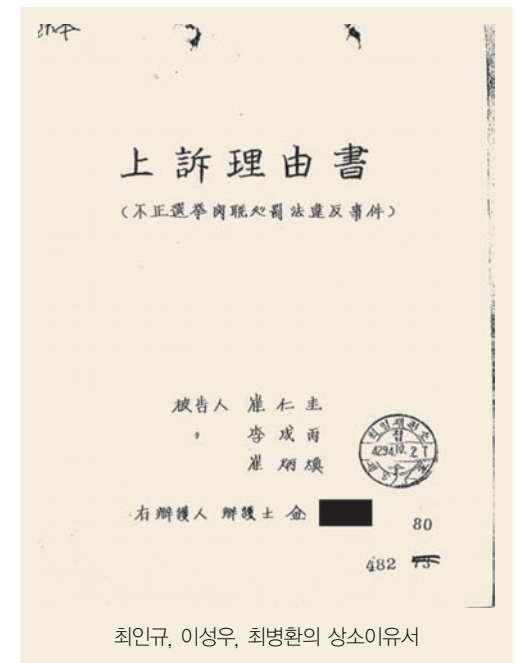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최인규는 주도적 부정행위죄의 소정 형 중 가장 무거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이강학은 가장 중한 형인 국사에 관한 독직죄의 소정 형 중 사형이 선택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이성우와 최병환은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제4조에 해당되어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10월 25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최병환

혁명재판소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소 제기가 있었다.

먼저 최인규는 1961년 10월 21일경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위반과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두 건의 상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했고, 뒤이어 이성우·최병환과 함께 10월 25일 부정선거관련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소이유서를 공동 작성·제출했다. 이강학의 상소이유서는 이를 뒤 1961년 10월 17일자로 제출되었다.

최인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동원과 부정선거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실적 정치환경에서 부정선거는 필연적이었으며, 선진국의 선거범죄 처벌 경우를 근거로 형량이 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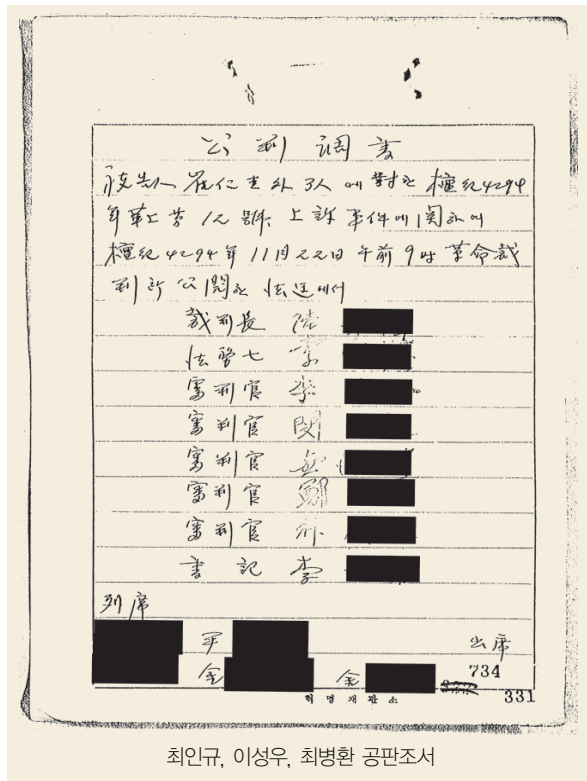
최인규, 이성우, 최병환의 상소이유서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성우는 장관 지시 내용과 선거자금 배부 관련 보도, 지방순회, 시·도 지도과장회의 등에 대한 판시 내용은 사실에 대한 오인이며, 처벌법 제4조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성우와 최병환은 혁명 재판소·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입법정신과 정의에 위배되었다며 상소를 제기했다.

● <공판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1월 22일, 관련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최인규, 이성우, 최병환 공판조서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보았을 때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했다. 이성우, 최병환에 대해서는 이들이 부정선거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보았을 때 이들은 주도자들의 참모로서

혁명재판소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소가 제기되어 공판은 상소심에 접어들었다. 혁명재판소에서 열린 11월 22일 공판에서 검찰관은 변호인들이 제출한 상소이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최인규는 상소이유서에서 부정선거 4대 원칙을 지시했다는 점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인규가 부정선거 4대 원칙을 인식하고 그 원칙에 따라 실행한 점이 진술 등에서 충분히 증명되므로 상소의 이유로 들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4대 원칙과 관련 범죄 사실을 보았을 때 원심의 형량은 지극히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강학은 상소이유서에서 상사의 명령에 의해 4대 원칙을 부득이하게 실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강학이 당시 강력한 경찰력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감행한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이므로 적극적인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6일에 열린 언도공판에서 최인규와 이성우, 최병환의 상소는 각각 기각되었으며, 이강학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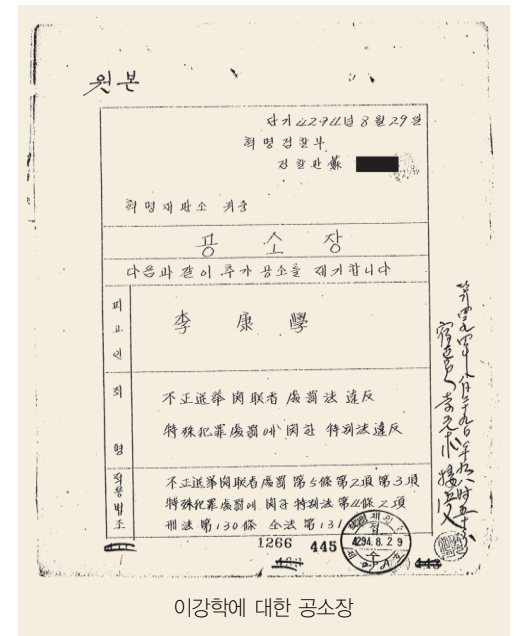
● <이강학 공소장>,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29일, 관련인 이강학

공소장에 의하면, 이강학은 1959년 4월 내무부 치안 국장에 임명된 후 1960년 3·15부정선거를 주도적으로 계획,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강학은 실정과 부패로 인해 민심이 정부와 자유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가자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4할 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완장착용투표, 민주당 참관인 매수·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 지시했으며 만약 부정 선거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는 공산당의 배후조종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불법으로 구속 처벌할 것을 계획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소장은 이강학이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시민 232명을 무차별 체포해 그 중 161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마산경찰서에 불법 구속했고, 시위 과정에서 경찰서 방화사건이 일어나자 3월 20일 직접 마산경찰 서로 내려가서 용의자의 혐의사실이 결백함에도 부정선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범 으로 몰아 방화혐의를 조작하고 불법감금을 자행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 <판결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3일, 관련인 홍진기, 곽영주, 유충렬, 백남규

1961년 9월 3일 혁명재판소는 법무부 장관 홍진기,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 서울 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비과장 백남규에 대해 판결했다. 4·19 경무대 앞 발포명령사건과 관련한 이 판결에서 홍진기와 곽영주에게는 사형을, 유충렬에게는 징역 20년을, 백남규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강학에 대한 공소장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이들은 3·15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입후보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운동을 지시, 실행했을 뿐 아니라 4월 19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의 3·15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시작으로 4월 19일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의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유충렬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홍진기는 저지선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충렬은 모든 화력을 다해 저지선을 절대확보하라는 지시를 백남규에게 내렸다는 것이다. 경무대 경비보안의 최고 책임자인 곽영주는 시위대를 해산하고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수소방차 배치, 최루탄과 칼빙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경무대 경찰서 경비경찰관 약 30여 명을 배치하게 했다. 그리고 홍진기의 요청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M1소총과 공포탄으로 무장한 헌병 약 160명을 배치케 하는 등 발포명령에 서로 동의하여 경비경찰관이 발포하여 시위대 8명이 사망하는 등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소송장 기재사실 변경신청의 진〉, 혁명검찰부, 1961년 8월 8일, 관련인 임화수

1961년 8월 8일 혁명검찰부에서 임화수에 대한 공소장 기재사실변경신청 진 등을 혁명재판소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에는, 임화수의 성장과정과 해방 후 평화극장을 불하받아 이를 경제적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과 이정재, 오화영 등 소위 깡패 두목들과 7형제파의 일원이 되는 과정, 유지광 등 불량배들을 규합해 7형제파의 하부 폭력집단인 화랑동지회를 만들어 유지광이 장악하도록 만드는 과정 등이 기술되어 있다.

임화수는 이러한 깡패집단을 배경으로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부회장, 한국반공예술인단 단장, 반공청년단

총로구단장 등 각종 사회단체 장을 맡는 한편 정치활동에 폭력집단을 활용하는 자유당 인사들과 야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랑동지회를 지도하는 실질적 주도적 간부로 깡패를 동원해 상습적으로 예술인들을 폭행하는 등 무수한 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27일, 관련인 임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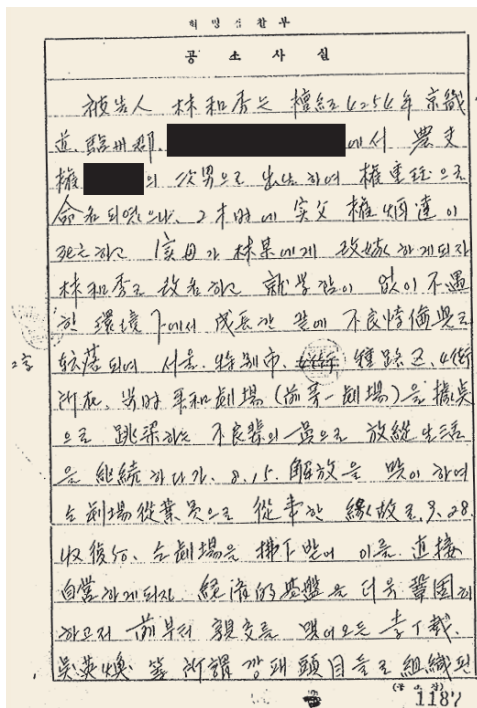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특별법 위반으로 사형이 구형된 임화수가 1961년 8월 25일 열린 혁명재판소에 제출한 상소이유서이다.

임화수는 1960년 4월 18일 고대생습격사건과 관련해 반공청년단 단장 신도환이 데모학생들을 집단폭행할 계획을 세운 후 조병후에게 지시를 내리고, 조병후는 임화수의 동의를 받은 후 유지광에게 지시해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폭행사건을 모의하고자 반공청년단장실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며 그러한 계획에 자신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위 ‘7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7인 위원회는 상호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정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깡패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후 자신은 문화사업에만 열중했다고 주장했다. 화랑동지회에 대해서도 화랑동지회는 이정재가 회장으로, 1955년 5월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야당정치집회를 방해한 ‘장충단 습격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유지광이 장악한 것으로 자신은 화랑동지회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지광은 자신이 문화예술에 헌신한 공로를 참작해줄 것을, 그리고 7인위원회나 화랑동지회는 조직 자체에 관해서도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은 특수범죄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해당하는 범죄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했다.

● 〈공판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0월 30일, 관련인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의 공판조서로서 혁명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상소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신도환과 고대생습격사건의 관련에 대해서, 신도환은 반공청년단장으로서 종로 특별단장 임화수에게 동원명령을 내리고 임화수가 유지광에게 하달해 데모를 제지



소송장 기재사실 변경신청의 진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할 것을 모의한 후 유지광 부하들이 종로 4가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고대생들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파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신도환은 자신이 단장인 반공청년단은 중앙청 앞에 동원된 깡패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지광이 반공청년단 특별단장이고 화랑동지회 회장으로 동원된 자들의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인적 모순이 없으며, 그 관계에 있어서 유일한 증인인 반공청년단 훈련부장 조병후가 임화수에게 연락했다고 하는 뚜렷한 증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아 당시 반공청년단원들은 신도환이 동원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관은 경찰이 묵인이나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선거 관련 부분에서, 신도환이 주도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반공청년단이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를 대비해 창립되었으며 3·15선거 때 연 7,200리나 다니며 선거연설을 한 것으로 보아 주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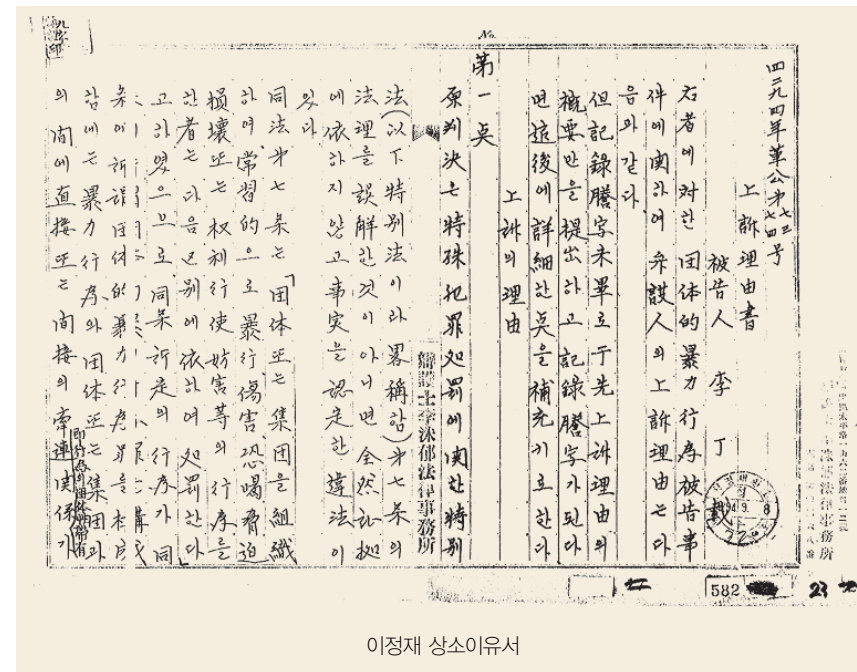
임화수의 상소이유와 관련해서, 동원명령에 대한 점은 조병후의 증언으로 입증 충분하고 1960년 4월 18일 고대생습격사건 다음날 지출된 금액을 볼 때 유지광은 창단기념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동원에 대한 사례비라고 인정된다고 했다. 단체적 폭력행위와 관련해서, 7인위원회는 친목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7인위원회가 서울시내 깡패단체의 최고사령부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임화수의 폭력행위는 개인의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임화수가 모든 예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7인위원회와 화랑동지회의 두목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 <상소이유서>, 혁명재판소, 1961년 9월 8일, 관련인 이정재

1961년 8월 혁명재판소의 원심판결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이정재가 제기한 상소이유서이다.

이정재는 4·19혁명 후 징역 10월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1961년 2월 석방되었으나 다시 특별검찰에 구속되어 1961년 8월, 사형을 언도받았다. 변호인은 원심판결의 착오를 지적하면서 범죄에 비해 그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정재는, 자신이 가공할 폭력배단체인 화랑동지회의 수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랑동지회의 발족시기, 강령, 회원명단, 임원선출, 회장선출경위, 폭력행위, 신분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랑동지회는 유지광이 서울형무소에서 복역출감



이정재 상소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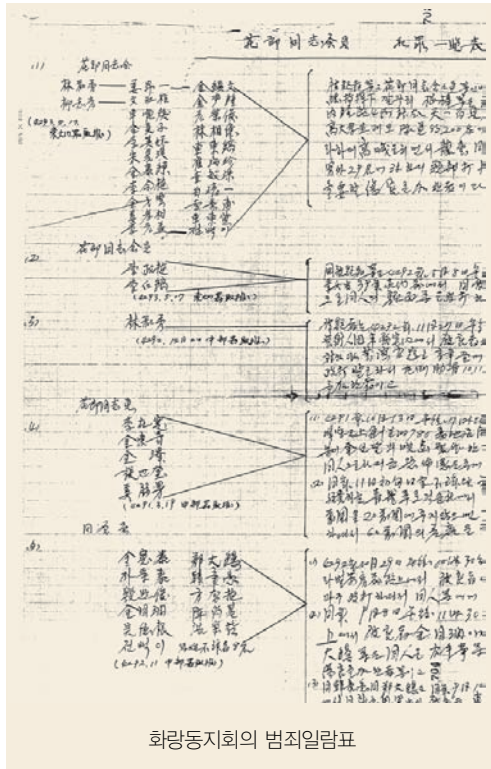
후 전과자나 구두담이 등 소위 ‘불량아동’의 갱생·선도를 위해 만든 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랑동지회가 4·19혁명 후 갑자기 말썽이 된 것은 고대생습격사건과 관련해서 반공이 국시인 국가에서 반공청년단이 학생들을 습격했다고 하면 국민과 국제적인 여론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치안당국에서 신문에 고대생습격사건의 주범을 화랑동지회라고 허위로 조작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정재가 자유당 종로을구 당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당인이며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에 행패를 부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치안을 맡아보는 경찰과 자유당 정치의 결과이지 피고 이정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재는 4·19혁명 후 이미 형을 마쳤으며 반공투사로서 공적이 클 뿐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61년 9월 28일 사형이 확정, 1961년 10월 이정재는 사형당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화랑동지회의 범죄일람표

● 〈화랑동지회 범죄일람표〉, 혁명재판소, 1961년

이정재의 특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961년 7월 10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화랑동지회 범죄일람 문건이다. 화랑동지회는 이정재와 유지광이 주도한 단체로 1960년 4월 18일 3·15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 집단폭행을 주도한 집단이다. 범죄일람표에는 화랑동지회 소속 회원들과 그들이 저지른 정치테러들과 사건을 주도한 회원들에 대해 인물과 사건별로 구성되어 있다.

● 〈판결서〉, 혁명재판소, 1961년 11월 3일, 관련인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억, 강승일, 차순환, 백일청, 원민수, 이수보, 김재운, 문○○, 강○○, 원○○, 김○○, 김○○

1961년 11월 3일 혁명재판소는 반공청년단 총본부단장 신도환을 비롯한 임상억·강승일 등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위반사건과 임화수·유지광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및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에서 신도환 무기징역, 임화수 사형, 유지광 징역 20년, 임상억·신동호·주요한 각각 징역 7년, 강승일·차순환 각각 징역 5년, 백일청·원민수·이수보·김재운 각각 징역 3년, 그리고 문○○·강○○·원○○·김○○·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신도환은 반공청년단 총본부단장직에 있으면서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자유당과 행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3·15부정선거 과정에서 전국 반공청년단원 2백만 명과 그 가족 4백만 명을 선거운동에 총동원했을 뿐 아니라 간부회의를 개최해 부정선거를 실시할 것을 모의하고 실행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도환은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통해 자유당 중앙당부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1960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 경까지 조직 강화라는 미명 아래 각 도단부에 30만원씩, 각 시군 단부에는 5만 원을 배부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도환은 임화수, 유지광과 더불어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이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자 이를 저지시킬 것을 지시하고, 유지광은 이 지시에 따라 반공청년단원과 화랑동지회원인 임상억, 주요한 등 50여 명에게 집단폭력을 지시, 학교로 돌아가는 고대생들을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집단 폭행했다고 결론내렸다.

임화수는 이정재를 비롯한 조열승, 오화영, 고○○ 등과 함께 1954년 6월 서울 일원의 폭력배를 규합해 7인위원회(7형제파)를 조직했으며, 유지광을 화랑동지회의 책임자로 앉히는 등 세력을 키우면서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의 위력을 빌어 연예계를 장악해 폭력과 권력을 배경으로 상습적으로 예술인들을 폭행, 금품을 갈취했다고 판결했다.



네 번째 기록 _

필화사건(1949~1965)

1. 역사로 보는 필화사건

2. 사건기록으로 보는 ‘필화사건(1949~1965)’

네 번째 기록 _

필화사건(1949~1965)



1 역사로 보는 필화사건

1-1. 이승만정권기 언론통제와 필화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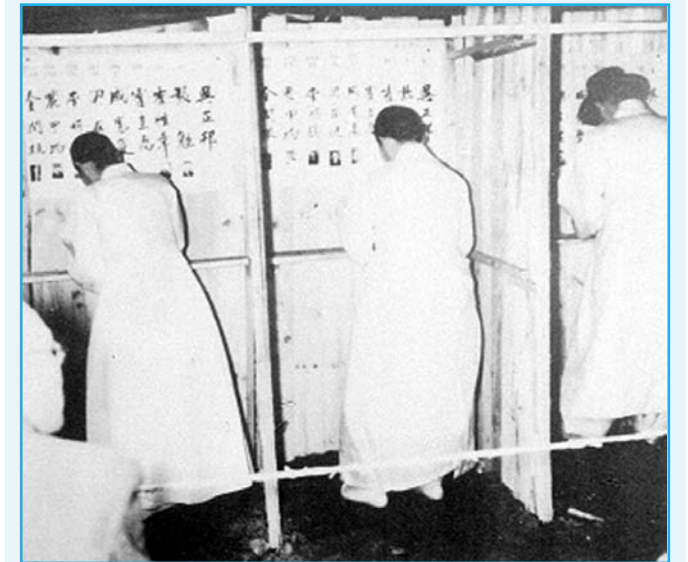
1 1 1. 이승만정권 초기 언론통제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한국의 선거 가능지역에서 총선거’ 안이 가결됨에 따라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 따라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7월 20일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언론정책은 구한말에 제정되어 일제 때까지 시행되었던 「광무신문지법」과 1946년 미군정이 ‘공산당의 파괴적인 활동을 저지할 필요’에 따라 좌익세력의 언론활동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공포한 「군정법령」제88호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승만정부는 집권 초기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948년 9월 22일 ‘① 대한민국의 국시국책(國是國策)을 위반하는 기사 ②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③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⑥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기사 ⑦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에 대해 보도를 금지하는 언론정책 7개항을 발표했다. 이는 좌익계열이나 진보적 언론에 대한 통제이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제이기도 했다.

1948년 10월 27일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문 5개조로 된 「국가보안법」 초안을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정치세력이나 정적(政敵)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소장파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반발이 있었으나,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언론통제를 직접 적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3조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책동 또는 선전을 한 자’ 등의 조항은 언론자유를 포괄적으로 위협했다. 실제로 이승만정권기 필화사건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다.

정부수립 직후부터 1949년 초반 사이 〈조선중앙일보〉, 〈세계일보〉, 〈국민신문〉, 〈대한일보〉 등이 정간·폐간되었고, 이 시기 대표적인 필화사건은 〈서울신문〉 정간이다. 〈서울신문〉은 이승만정권에 비판적이었으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소개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승만정부는 통치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냉전체제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반공체제를 구축



5·10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는 모습 (CET0041749)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하는 데 주력했는데 <서울신문>은 이승만대통령의 한미방위동맹에 관한 담화를 신지 않은 것을 계기로 1949년 5월 정간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은 이승만정부의 언론정책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보수언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정부는 1950년 7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 출판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언론기관은 사전검열을 받았다. 또한 1952년 3월 19일 「광무신문지법」을 폐기한 후 이승만정부는 몇 차례에 걸친 입법 시도 끝에 1957년 12월에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협상선거법」은 선거운동에서의 신문·잡지 등의 불법 이용 제한, 허위보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언론의 선거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다. 언론계는 이 법이 언론통제법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악법철폐운동을 펼쳤다.

1 1 2. 권력강화와 언론통제

한국전쟁이 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지지기반이 미약했던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자 1952년 5월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백골단·땃벌레 등 폭력조직을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만든 후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제공산당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승만을 비판하거나 내각책임제를 주도했던 소장파의원



개헌안을 표결하는 국회의원들 (CET0039905)



개헌안에 서명하는 이승만 대통령 (CET0018104)

50여 명을 헌병대로 연행했다(부산정치파동). 그리고 경찰과 군으로 국회를 포위한 상황에서 직선제 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발췌개헌). 그리고 이승만은 8월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1954년 5월 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해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수 2/3를 확보하자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당은 203의 2/3에서 사사오입하면 136이므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다(사사오입개헌).

이러한 이승만정권의 일련의 비민주적 행태는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고 일부 여당지를 제외한 각 신문은 집권당의 횡포와 부정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이승만정부의 언론 탄압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5년 <동아일보> ‘괴뢰오식사건’과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해진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을 유지·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반공단체나 학생들을 대규모로 이용한 동원정치였다. 이승만은 정치적 난관 극복과 정적(政敵) 제거 및 자신의 위상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동원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승만은 이 대회를 ‘민의(民意)’라고 강조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궐기대회나 시위에는 대한노총 소속원, 시민, 공무원 등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동원했지만, 가장 자주 많이 동원된 것은 학생들이었다. 1955년 9월 13일 <대구매일신문> 사설에 대한 테러사건은 이러한 이승만정권의 동원정치를 비판한 데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한국휴전중립국감시위원단에 참여한 공산권국가들의 탈퇴 요구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CET0040535)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 1 3. <경향신문> 폐간



국가보안법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 중인 야당의원들 (CET0039994)

또는 단체를 위해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집회하거나 문서, 녹음반, 도화 기타 표현물을 반포해 공연히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상의 기관이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으로 규정되는데 결국 이 조항은 국회 활동의 비판과 정부의 부패와 실정에 대한 공박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향신문> 폐간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은 사건이었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1957년을 정점으로 원조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실업자가 넘쳐났다.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에 대한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 민심의 이반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이승만정권은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정권은 자유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

1960년의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과 1959년 <경향신문> 폐간사건은 자유당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1958년 12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간첩 색출을 명분으로 하고 있었지만 집권당인 자유당이 정권연장을 위해 야당을 통제하고 언론을 단속할 목적에서 만든 것이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17조 제5항, 제22조 등은 강력한 언론제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제22조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으며, 민주당 장면정권 탄생과 관련이 깊었던 <경향신문>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웠다. 결국 <경향신문>은 1959년 4월 30일 폐간되었다가 ‘폐간 57일, 하루 발행, 정간’으로 이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1년만인 1960년 4월 26일,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다음 날에야 신문을 복간할 수 있었다.

1-2. 박정희정권 초기 언론통제와 필화사건

1 2 1. 5·16군사정변과 언론통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육사5기생들이 주축이된 군부세력은 입법·사법·행정권 등 일체의 권력을 장악했다. 5·16 주도세력은 포고 제1호를 통해 언론, 출판 보도 등에 대한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으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반혁명분자의 제거’라는 명분 아래 <민족일보> 간부 13명과 혁신계 정치인들을 대거 구속했다.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 광경 (CET0037434)

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로 전환하고 5월 23일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덕의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신성한 언론자유를 모독하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을 정화하고 진정한 민주언론 창달과 혁명과업에 이바지’ 한다는 명분 아래 포고 제11호를 발표해 언론사에 대한 일제 정비를 단행, 1,170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켰다.

〈민족일보〉 폐간과 뒤이은 사장 조용수의 사형은 정부수립 이후 가장 큰 언론탄압이었다. 1960년 7·29총선에서 혁신계가 참패한 원인의 하나가 진보적인 언론매체가 없었다는 인식 아래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하는 신문”을 표방하며 1961년 2월 13일 창간한 〈민족일보〉는 정권의 부패, 진보적 대중운동, 특히 통일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민족일보〉는 휴전과 제네바회담 과정에서 제기되어 4·19혁명 이후 국내에서 많은 동조를 얻고 있던 중립화통일론을 적극 지지했다. 〈민족일보〉가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건 5·16 주도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진보·혁신계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 아니라 통일추구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5·16 주도세력은 군사정변 후 대외적으로 철저한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 더구나 미국 등으로부터 5·16 핵심 주체세력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자 대외적으로 반공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획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의 희생과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고회의는 1961년 6월 21일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공포했으며, 22일에는 「특별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한 뒤 부정선거관련자, 혁신계 정당·사회단체 관계자 등 7만6천여 명을 잡아들였다. 혁신·진보운동가가 주요 처벌대상이 된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 일조했다. 제6조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정권은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했다. 1980년 12월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하기까지 「반공법」은 5·16 이후 군사정권이 일관되게 내세웠던 반공정책을 법제화하고 정권 안정을 확립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이 목적법을 처벌대상으로 한 데 반해서 「반공법」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어서 「국가보안법」보다 그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 「반공법」은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62년 8월, 〈동아일보〉 7월 28일자에 실린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집필자 황산덕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필화를 겪는다. 이 시기는 민정이양의 최대관심사라고 볼 수 있었던 새 헌법심의회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던 때였다. 당시 군사정권은 민정이양 후의 집권을 위해 1962년 7월 11일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1962년 7월부터 11월까지 논의를 거쳐 대통령중심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내놓았으며, 새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시킨다는 최고회의 방침에 따라 국민투표안을 마련했다. 황산덕은 논설에서 관제화된 헌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안된 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자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설이 나가자 최고회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고회의 공보실장이후락은 공식성명을 통해 새 헌법을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것은 혁명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언명하고 이러한 주장은 ‘5·16혁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 2 2. 한일회담과 언론통제

민정이양이 아닌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박정희는 1963년 4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출범한 제3공화국의 시급한 과제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기술을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친미 반공의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미국의 지지와 경제개발에 들어갈 차관도입, 기술자원을 끌어들이야 했던 박정희정권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최대 걸림돌은 대일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였다. 박정희정권은 대일청구권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이해했으며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년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965년 6월 25일 한일협정에 정식 조인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965년 일본 수상관저에서 진행된 한일협정 조인식 (CET0037759)

1964년 5·16의 정치 이념인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등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박정희정권은 학생시위가 격렬해진 원인의 하나가 언론의 선동에 있다고 생각하고 공화당의 주도 아래 비상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을 시도했다. 심의의 기준이 되는 언론윤리요강은 국가

의 안전 및 공안의 보장에 관한 사항, 국가원수의 명예존중에 관한 사항,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보도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잣대를 규정한 것으로 언론의 윤리를 법률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언론계는 이 법안에 대해 결사반대했으나 정부의 보조, 편의제공 취소 등의 정부 압력으로 결국에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대구매일신문〉, 〈동아일보〉 등 4개 언론사만이 투쟁에 남게 되었다. 언론과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친 박정희정권은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조건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보류할 것과 윤리위원회 소집의 무기연기를 결정했다.

한일회담 반대시위 등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경향신문〉을 비롯한 필화사건도 계속 일어났다. 〈경향신문〉은 1964년 몇 차례의 필화사건으로 수난을 겪었다. 계엄령 선포 후 데모 주동학생들은 물론 상당수의 기자가 연행되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6월 3일 수사기관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사진부기자 손충무를 「반공법」과 「특정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을 구속한 근거는 이 해

1월 24일과 28일자에 실린 ‘독자통일론’과 5월 9일자 대전발 기사 ‘하루는 책보 이들은 깡통’, 5월 27일자 ‘허기진 군상’ 등의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향신문〉은 1966년 1월 25일, 간부들의 간첩 및 월북사건이 계기가 되어 은행 부채 4,6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처분당했다. 중앙정보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매처분은 서민생활의 궁핍상 보도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때 〈경향신문〉이 대정부 비판 여론을 주도했던 것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대응 성격이 컸다.

임송자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참고문헌〉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 강준만,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2007 ; 서중석, 《배반당한 민족주의》, 역사비평사, 2004 ; 홍석률,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12, 2004.6 ; 조정진, 〈한국신문 필화의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2, 역사비평사, 1990·1994 ; 김자동, 〈민족일보 기자가 쓴 민족일보의 활동과 수난〉, 《역사비평》 1991년 봄호

2

사건기록으로 보는 ‘필화사건(1949~1965)’

2-1. 보유 기록물 개요

2 1 1. 생산기관·이관 이력 및 열람조건

-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현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하다 「공공기관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에 따라 2005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 본 기록은 생산 후 30년 경과 기록으로 사안의 민감성이 감소하는 등 비공개 사유가 대부분 소멸되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필화사건(1949~1965)의 내용은 연구성과의 축적, 관련인의 자서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으며 필화사건 사건기록은 당시 사회를 재구성해 낼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인지보고, 공소장 등 기록을 분석했을 때 수사기법상의 비밀이나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저해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건 관련 정도가 미약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언급된 개인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한다.

2 2 2. 필화사건(1949~1965) 기록물 개요

‘필화사건(1949~1965)’ 사건기록은 형사사건기록 8권, 판결문 19권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혁명경찰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혁명재판소에서 생산한 공판기록으로 구분되어지나 편철은 사안별로 합철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 BA0802517~0802518, BA0079664)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 ‘괴뢰’ 오식사건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첩한 기록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동아일보 불온기사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BA0803817~0803820) /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 BA0205081)

〈경향신문〉 1964년 5월 12일자 ‘민성(民聲)’과 관련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자공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 〈전말서〉, 〈불온선전물습득 및 수사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BA0804095~0804096) /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 BA0204666)

〈조선일보〉 1964년 11월 21일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 기사와 관련한 이영희의 반공법 위반 사건기록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구속영장〉, 〈압수목록〉,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조회〉 등이 편철되어 있다.

- 형사사건기록(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BA0803055)
- 〈사상계〉 1958년 8월호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함석헌과 장준하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다. 기록물철에는 〈의견서〉, 〈불온논문인지보고〉, 〈수사상황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 판결(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 BA0041904, BA0024906)

〈대구매일신문〉 1955년 9월 13일 사설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와 관련한 최석채의 판결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석채는 1955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1956년 5월 대법원은 검찰측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상고를 기각했다.

- 판정(서울지방법원 : BA0383999)

〈경향신문〉 1959년 2월 4일 칼럼 ‘여적(餘滴)’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를 받은 주요한과 한창우에 대한 1960년 10월 14일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이다.

- 판결서(혁명재판소 : BA0220433)

혁명재판 1심 판결문이다. 1961년 8월 31일 혁명재판소 심판 2부는 특수범죄 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민족일보〉 관련 13명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혁명재판소는 조용수·안신규·송지영에게 사형을, 이상두 징역 15년, 양수정·이건호에게 각 징역 10년, 정규근·양실근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판결서(혁명재판소 : BA0220433)

1961년 10월 31일 혁명재판소 상소심 제1심판부는 1심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조용수 등이 제기한 상소에 대해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 정규근, 양실근, 조규진에 대해서는 상소를 기각하고 이상두, 이종률은 징역 10년, 양수정, 이건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BA0204685, BA0221448)

〈경향신문〉 1964년 4월 13일 ‘4·19의 행방’과 관련해서 내란선동죄로 구속된 윤상철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기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윤상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원 : BA0205223, BA0257199)

〈세대〉 1964년 11월호에 실린 논문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와 관련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용주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 BA0205356)

〈현대문학〉 1965년 3월호 “분지(糞地)”와 관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정현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7년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1967년 1심은 남정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로 낮추고 선고를 유예했으며 1970년 4월 7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결정했다.

2-2. 주요 기록 소개

■ 1955년 〈동아일보〉 ‘괴뢰’ 오식(誤植)사건

1956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승만정권은 언론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승만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에 대한 견제는 더욱 컸다.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자 1면 ‘고위층 재가 대기 중’ 제목 앞에 1면의 다른 기사인 ‘괴뢰 휴전위반을 美 중대시’에 들어갈 ‘괴뢰’라는 글자가 오식(誤植 : 활판에 활자를 잘못 꽂음)되면서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 중’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어 발행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활판에 활자를 일일이 골라 꽂아서 신문을 제작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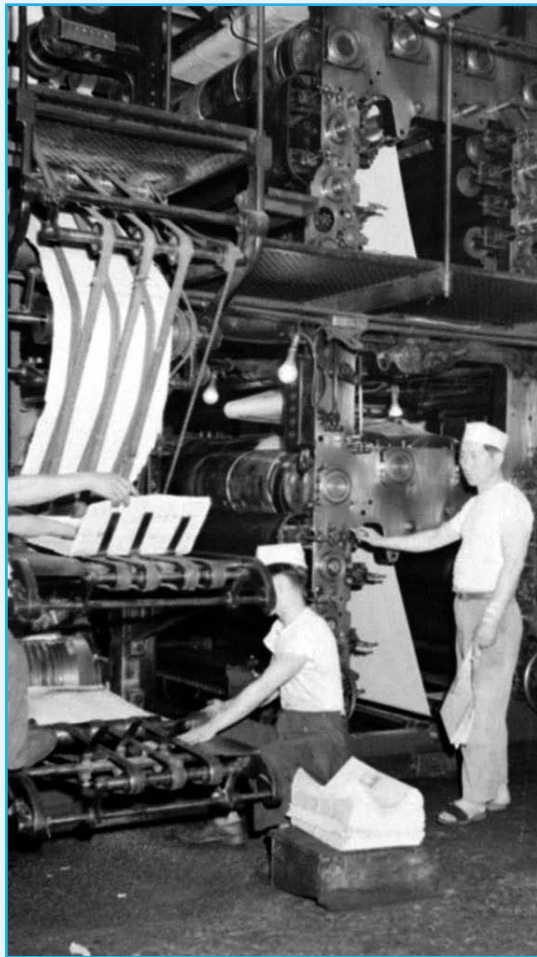
서울신문사 작업광경 (CET0053647)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서울신문사 작업광경 (CET0053647)



때였으므로 글자가 잘못 인쇄되어 나가는 일이 종종 일어났음에도 이 사건으로 업무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다. 정부는 <동아일보>에 대해 오식 실수를 ‘반민족적인 중대 과오’로 규정하고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무기정간 처분을 내렸다.

- <압수금품총목록>, 서울특별시 경찰국, 1955년 3월, 관련인 국태일, 고재욱, 권오철, 원동찬, 현종길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자 ‘괴뢰’ 오식사건과 관련한 압수금품총목록표이다. 압수목록에는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 신문과 원고, 교정대장뿐 아니라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정부를 비방하거나 문제 있다고 의심되는 기사 20여 개가 포함되어 있다.



압수금품총목록

- <의견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 1955년 3월 21일, 관련인 국태일, 고재욱, 권오철, 원동찬, 현종길

195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동아일보> 발행인 국태일, 주필 겸 편집인 고재욱, 편집부장 권오철, 문선공(文選工) 원동찬, 식자공(植字工) 현종길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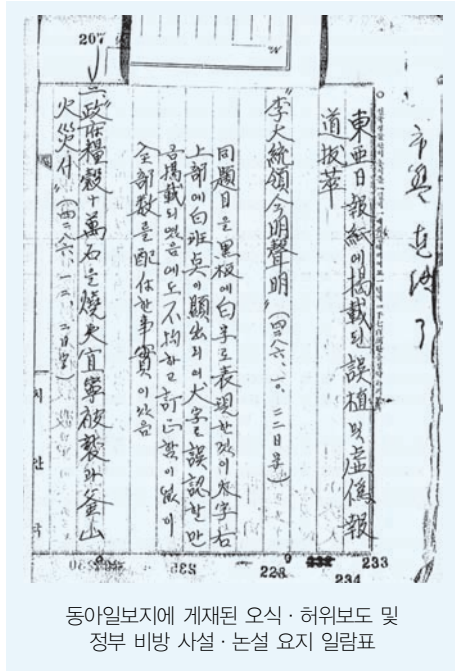
의견서는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자 ‘괴뢰’ 오식사건뿐 아니라 <동아일보>가 ‘괴뢰’ 오식사건 이전부터 정부에 대한 비난과 사실을 왜곡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했고, 계속적인 악선전으로 국체를 손상시키고 국기(國基)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1953년 10월 22일 ‘李大統領 금명 성명’ 기사 제목 중 ‘犬’자 오른쪽 상단부에 검은 점이 묻어 ‘犬’자로 게재한 채 배부한 사실 등 22개 기사를 제시했다.

- <동아일보지에 게재된 오식·허위보도 및 정부 비방 사설·논설 요지 일람표>, 1955년 3월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자 1면 한미석유협정에 관한 보도기사 ‘고위층 재가 대기 중’이라는 제목 앞에 ‘괴뢰’라는 활자가 첨가되어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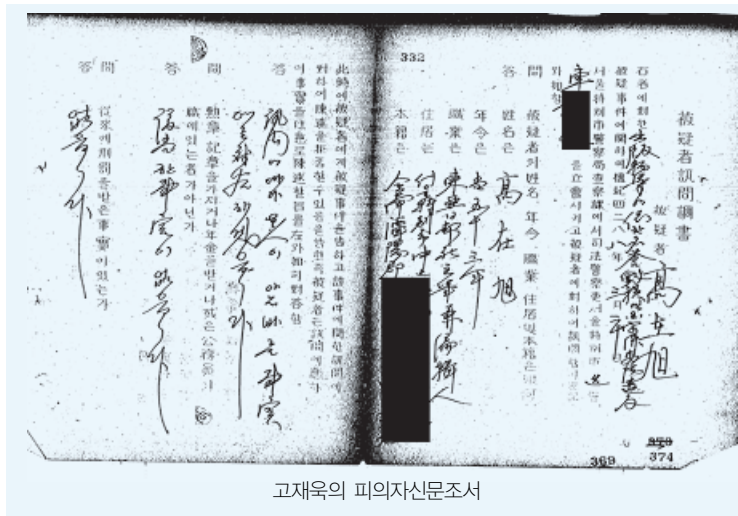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동아일보지에 게재된 오식·허위보도 및 정부 비방 사실·논설 요지 일람표

오식·허위보도 및 정부 비방 사실·논설 요지 일람표)에 제시한 기사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재욱의 피의자신문조서

으로 인쇄되면서,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문제있다고 제시한 <동아일보> 기사들에 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동아일보지에 게재된 오식 및 허위보도 발췌>와 <동아일보지에 게재된 정부비방 사실 및 논설 요지 일람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은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정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 <피의자신문조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 1955년 3월 20일, 관련인 고재욱

<동아일보> 주필 겸 편집인 고재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괴뢰’ 오식사건 뿐 아니라 <동아일보지에 게재된

고재욱은 1954년 11월 23일 사실 ‘동원과 시위에 신중을 기하라’의 내용은 동원이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시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잦은 문제가 일어나므로 동원하는 데 신중하라는 충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53년 10월 22일

‘이 대(大)통령 금명 해명’ 제목이 ‘이 견(犬)통령’이라고 보도된 것은 활판에 모래 같은 것이 끼었던 것으로, ‘犬(견)’자로 보일 정도의 실수가 판명되어서 책임자가 치안국에 전말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해결된 사건이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과 기사를 내보내지 않은 이유는 정정기사나 사과기사가 ‘犬’자가 아닌 것을 오히려 ‘犬’자로 봐달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고재욱에게 1954년 5월 16일 ‘악화일로의 선거분위기’, 1953년 12월 20일 ‘정부양곡 10만석 소실’ 등 기사가 정부를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허위기사가 아닌지 등을 신문했다.

●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55년 3월 23일, 관련인 원동찬

문선공(文選工 : 신문사나 인쇄공장에서 원고대로 활자를 뽑는 일을 하는 직공) 원동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원동찬은 ‘고위층 재가 대기 중’이라는 제목 앞에 ‘괴뢰’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유와 관련해 자신은 원고에 따라 ‘고위층 재가 대기 중’이라고 활자를 문선해 같은 케이스에 넣어 정판부로 보냈으며 오식사건이 일어난 것은 정판과 식자공의 실수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원동찬은 ‘괴뢰’는 2호 활자이며 ‘후전 위반’은 초호 활자로 되어 있었고 ‘고위층 재가 대기 중’은 2호 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자공이 ‘고위층’의 2호 활자와 ‘괴뢰’의 2호 활자가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판을 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원동찬은 사건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좌익 경력과 관련해서, 정부요인의 명예를 훼손해 괴뢰집단의 목적인 바를 실행할 목적으로 고의로 ‘괴뢰’를 넣은 것은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좌익활동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 <오식(誤植)사건 발견 후의 조치(개요)>, 동아일보사, 1955년 4월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자 ‘괴뢰’ 오식사건과 관련해서 신문이 인쇄 배포된 후 신문을 회수하기 위해 동아일보 측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기록한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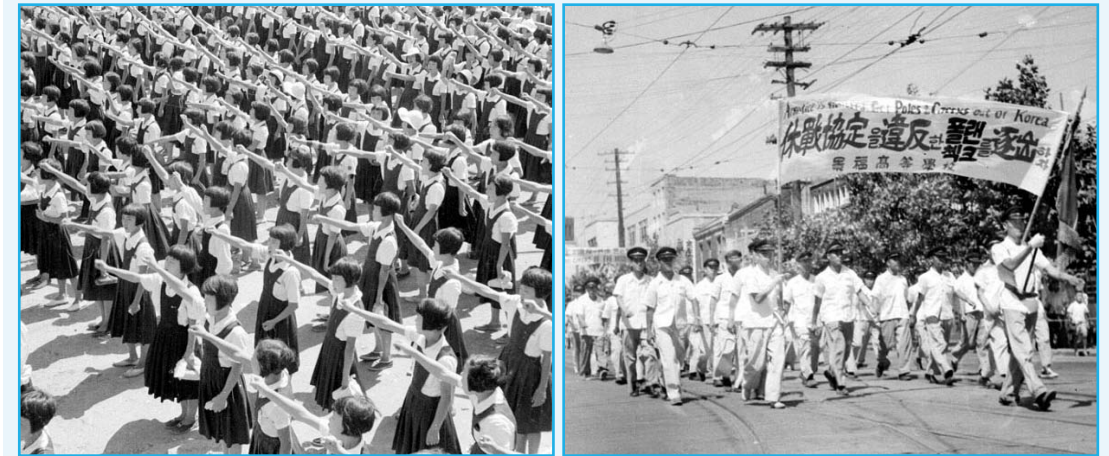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자 신문이 4시 30분경 인쇄되기 시작하고, 15분 후 문선(文選)과장이 기사 제목 앞에 ‘괴뢰’ 두 자가 잘못 붙여진 것을 발견했다. 문선과장은 윤전기를 바로 정지시키고 편집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삭제 지시를 받았고 공무국장 이○○이 직접 ‘괴뢰’ 두 글자를 삭제했다. 정리부장은 즉시 업무국에 연락하는 동시에 발송과로 달려가 이미 인쇄된 신문 9천여 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압류조치를 취했고 신문은 ‘괴뢰’ 부분을 삭제한 후 다시 인쇄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유출된 가두판매분 60부와 군부대 315부 등에 대해서는 오후 5시경 국방부 출입기자가 군부에 전보를 보내 유출된 신문을 즉시 회수해 주도록 보고했고 경찰서, 공보실, 치안국 등 담당 출입기자들 또한 담당 부처로 오식사건을 보고하고 잘못을 사과했다. 그러나 가두판매된 신문 60매는 편집국원 3명이 청량리, 돈암동, 서대문 등에서 회수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1955년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

1955년 9월 13일 <대구매일신문> 주필 최석채는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사설은 임병직 주미대사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 무더위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에 동원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들의 모습 CET0040535

속에 어린 학생들을 강제동원한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고위층 맞이 행사나 관제 데모에 동원하는 폐습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사설이 나간 때는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가 한창인 때였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파견된 ‘중립국감시위원단’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 공산국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반공단체들은 학생들을 앞세워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축출하라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다.

사설이 나가자 대구 시내에는 ‘대구매일의 이적행위를 규탄한다’, ‘대구매일 사설 필자 최석채를 처단하라’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14일 국민회 경북도본부 차장 김○○과 자유당 경북도당 감찰부장 홍○○ 등이 지휘하는 청년 수십 명이 대낮에 신문사를 습격, 기물을 파괴하고 직원을 폭행한 소위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대구매일신문사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경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형사 2명을 파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월 17일 경북도경사찰과장은 “백주(白晝)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필자 최석채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공소기각,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참여한 공산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 (CET0040535)



중립국감시위원단 추방투쟁위원회 본부 관계자들 (CET0040535)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조사보고서>,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특별조사위원회, 1955년 10월, 관련인 최석채

<대구매일신문> 1955년 9월 13일자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가 발단이 되어, 동원된 폭력배 20여 명이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한 소위 ‘대구매일신문 테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이다.

조사보고서는 사건의 개요, 대구매일신문사 측 증언, 애국단체연합회(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 경북연합본부) 측 증언, 경찰의 증언, 최석채 증언, 테러행위자 증언, 대구지검장과 대구지방법원 측의 증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언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9월 14일 일어났던 테러사건의 원인을 피력했다.

대구매일신문사 측은 경찰이 과거부터 대구매일신문의 경찰 관련 기사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 9월 13일자 사설을 계기로 애국단체연합회 간부와 합세해 공격을 한 것이며, 사설은 학생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9월 14일 일어난 대구매일신문사 테러의 주범으로 알려진 애국단체연합회(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본부) 측은 북한이 9월 13일자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을 인용해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운동을 관제동원으로 비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결국 사설이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인 이적행위를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는 애국심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조직이 성명서와 벽보를 붙인 사실은 있어도 테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테러사건에 조직의 간부들이 가담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동일 뿐이라고 증언했다. 경찰 측 또한 대구매일신문사 테러사건을 경찰 측이 방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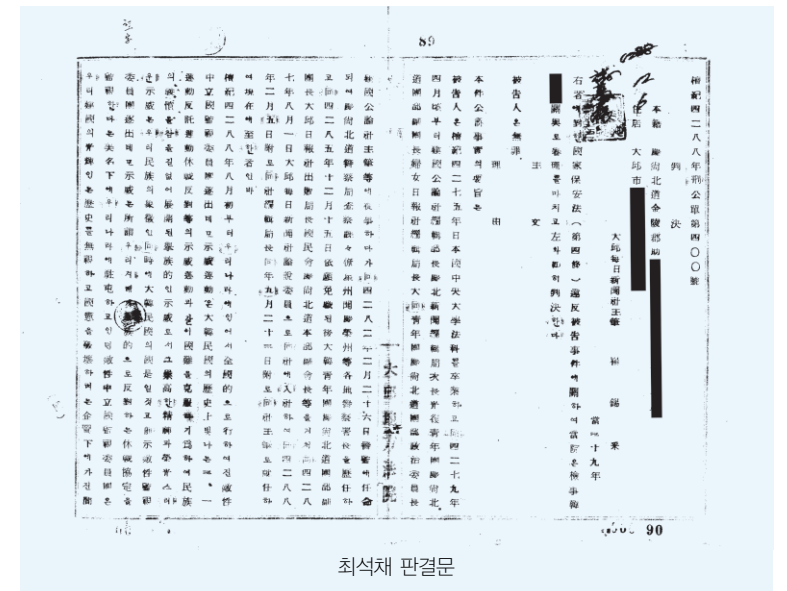
사설을 쓴 최석채는 9월 13일자 사설은 학생을 강제 동원하는 폐습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운동을 비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이유에 대해

최석채의 사설이 구속의 주요인일 뿐 아니라 경찰에서 사상관계로 최석채를 주목해 왔고, 이번 사설이 북한의 방송 내용과 부합되는 점이 있어 배후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했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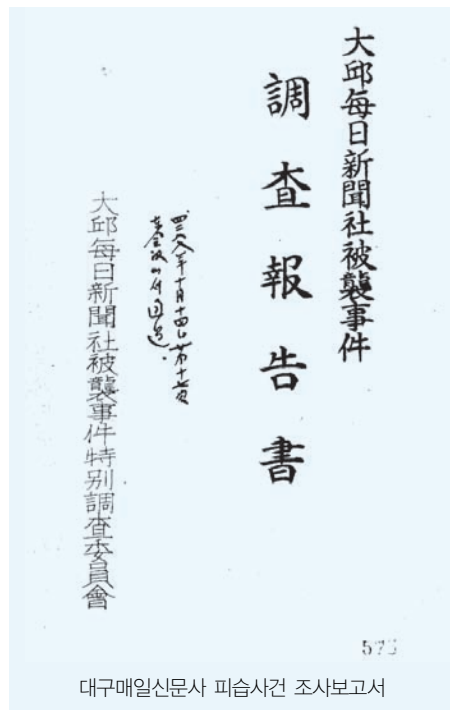
<조사보고서>에는 최석채의 <구속영장적당여부심사신청서>,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 경북연합회본부의 <고발장>, 북한 라디오에서 9월 13일자 사설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청취했다는 경북경찰서 이○○ 순경의 <진술서>, <구속영장발부신청청구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판결>, 대구지방법원, 1955년 12월 6일, 관련인 최석채

판결은 최석채가 쓴 사설을 분석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를 모독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를 포함한 행사나 시위에 학생을 동원하는 문제와 학생운동의 방향을 제언하는 내용을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최석채가 시위를 모독하거나 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이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활동을 방조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설 그 자체가 직간접으로 북한에서 입수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최석채의 활동으로 볼 때 사설을 쓴 목적이 북한이나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활동을 방조할 목적이나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석채 판결문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조사보고서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판결>, 대구고등법원, 1956년 1월 27일, 관련인 최석채

1955년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석채에게 선고한 무죄판결에 대해 원심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한 판결문이다.

검사는 공소에서 최석채가 1955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진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를 모독했으며, 그러한 행위가 북한의 악선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위를 모독하는 사실을 실었다는 것이다. 사실에서 “어떤 시위의 목적이나 대회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지령 한 장으로 손쉽게 동원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라는 등 마치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55년 9월 17일 북한방송에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반대하는 시위에 학생들을 강제동원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데 학생들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선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최석채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한방송 내용이 사실과 같기는 하지만, 사실 내용을 검토했을 때 임병직 대사 환영대회에 수많은 학생들을 동원해 폭염에 학생들이 쓰러지자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석채의 사실이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운동을 모독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모든 시위에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평양방송의 “.....동아일보에 대한 테러가 있는 지 불과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9월 14일에 또다시 대구매일신문사가 테러단의 습격을 받았다. 그 원인은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을 게재한 데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 사실이 북한의 악선전재료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테러가 악선전의 빌미를 준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 <판결>, 대법원 형사부, 1956년 5월 8일, 관련인 최석채

1956년 1월 2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최석채에게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1956년 5월 8일 대법원 형사부에서 기각한 판결이다.

검찰은 최석채의 원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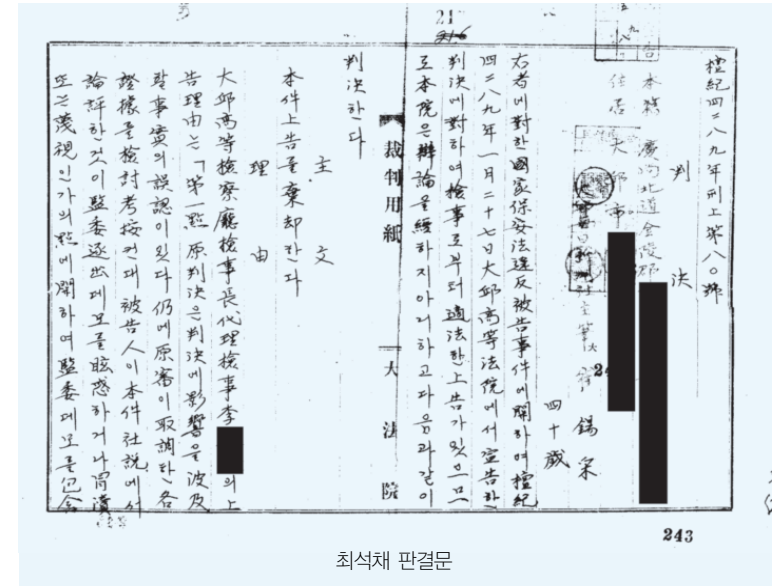
최석채의 사실이 국가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북한정권에서 악선전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적성중립국감시위원단’의 사기를 복돋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이라 할지라도 그 구성요건적 사실이 사상에 의해 표시된 관계로 일종의 표시범(表示犯)적 방조 사실이 있으므로 충분히 구성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실 내용을 북한 평양방송에서 악선전에 이용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검찰의 상고내용에 대해 대법원 형사부는 최석채의 논설이 ‘적성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를 모독하거나 천시할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며, 다만 모든 시위운동에 있어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건설적 의견의 제안이며, 설령 최석채의 논설이 북한정권의 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석채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1958년 8월호 <사상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사상계> 1958년 8월호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쓴 함석헌¹⁾은 8월호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1) 1901~1989.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일제시기 계우회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1945년 해방 후 평안북도 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이 되었으나 신의주학생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투옥되었다. 1947년 월남. 1953년경부터 일요강좌를 열어 성경강론을 펼쳤다. <사상계>를 통해 사회비판적 글을 썼으며, 1970년 <씨알의 소리>를 발간해 민주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958년 <사상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을 실어 투옥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언론수호대책위원회, 3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다.



최석채 판결문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전쟁 중 쉬고 있는 어린 군인의 모습 (CET0047877)

협의로 구속되었다. 이 글로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²⁾와 주간 안병욱도 연행되어 조사받았다. 함석헌은 글에서 분단 현실과 이승만정권의 부정을 비판했다. 함석헌을 구속한 경찰은 대한민국을 ‘꼭두각시’라 한 것은 국체(國體)를 부인하는 것이고 북한괴뢰와 대한민국을 동일시한 것이며, 또 군의 전투의욕을 감퇴시키고 비상시기에 놓인 사회의 사상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석헌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현실문제를 다루어서 현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비취졌으며 공산주의자로 국제

변혁을 꾀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충성과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불온논문 인지보고>, 서울동대문경찰서, 1958년 7월 31일, 관련인 함석헌

동대문경찰서에서 함석헌이 쓴 <사상계> 1958년 8월호에 실린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중 불온하다고 판단한 표현들을 적시해 서울특별시 경찰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이다. 다음은 논문 중 문제시된 구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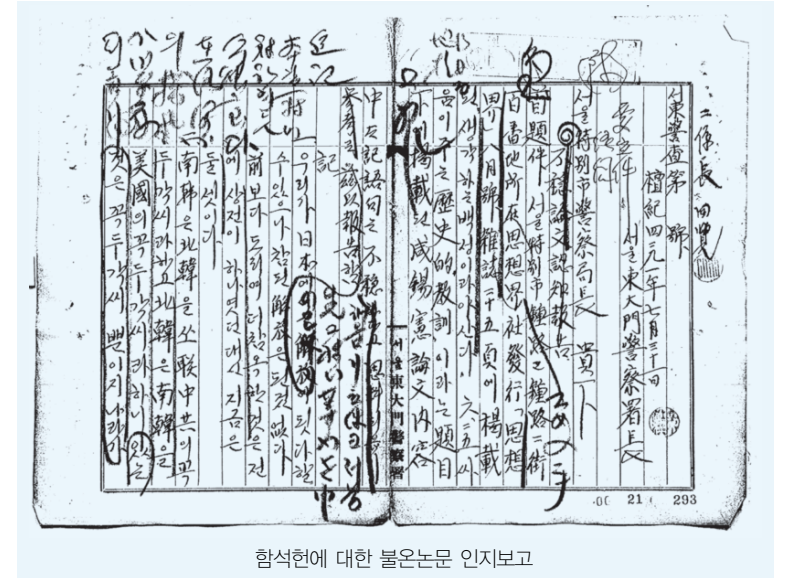
2) 1918~1975.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1944년 일본군을 탈출한 후 1945년 중경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1953년 <사상계>를 창간했으며, 1967년에는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1972년 ‘10월 유신’ 후 민주화운동을 펼쳤다.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후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추락으로 사망했다. 1962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1. 우리가 일제에 일본에서는 해방이 됐다 할 수 있으나 참 해방은 조금도 된 것 없다. 도리어 전보다 더 참혹한 것은 전에 상전이 하나였던 대신 지금은 둘 셋이다.
2. 남한은 북한을 쓰러 중공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3.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4. 6·25는 꼭두각시의 노름이었다. 민중의 시대에 민중이 살아야 할 터인데 민중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 밖에 될 것 없지 않은가? 잘못이 애당초에 전주 이씨에서 시작이 됐다.
5. 민중 잡아먹고 토실토실 살핀 강아지 같은 벼슬아치들 보고 울어서 무엇해? 여우 같고 계집 같은 소위 측근자 비서 무리들 보고 울어 무엇해?
6. 6·25의 남북싸움의 원인은 스탈린 김일성 루우즈벨트에 있지 않고 이성계에 있다.
7. 6·25전쟁이 난 것은 그 뜻을 알고 본다면
 - 1. 이것은 참 해방이나
 - 2. 이 정권들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가?
 - 3. 너희는 새 역사를 낳을 새 종교를 가졌느냐?
8. 전쟁이 일어나자 남북 두 정부가 서로 저쪽을 시비할 뿐이었지 네 잘못이 내 잘못 아니냐 하는 태도가 없었다
9. 슬피울어도 부족할 일인데 어느 군인도 어느 장교도 주는 훈장 자랑으로 달고 다녔지 ‘형제를 죽이고 훈장이 무슨 훈장이야?’ 하고 떼어 던진 것을 보지 못했다…….

● <피의자신문조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1958년 8월 9일, 관련인 함석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건과 관련한 함석헌의 피의자신문조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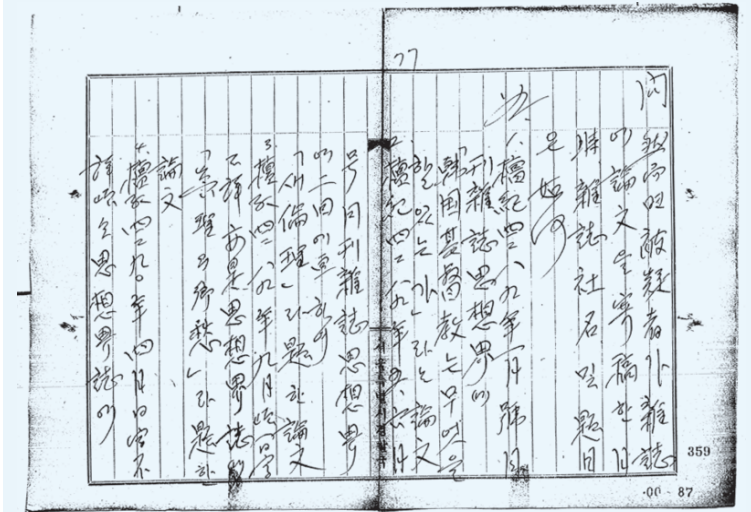
신문조서는 함석헌의 월남 전 활동과 교파없이 일요성경강좌를 하는 이유,



함석헌에 대한 불온논문 인지보고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함석헌 피의자신문조서

부제를 붙였고 논문을 쓴 목적은 우리 민족 전체가 6·25전쟁의 뜻을 깊이 각성하자는 데 있었다고 진술했다.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분단상황은 정치적으로 참된 해방이 아니며 남북을 미국과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한 것은 남북이 서로 괴뢰라고 하므로 제3자들이 볼 때는 나라 없이 동포끼리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다. 또한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는 뜻은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민중 잡아먹고 토실토실 살찐 강아지 같은 벼슬아치들 보고 울어서 무엇해 여우갈고 계집같은 측근자 비서무리들 보고 울어서 무엇해’라는 표현은 ‘국민방위군사건’³⁾을 연상하고 고위고관을 비유해 쓴 것으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중이 희생했다는 의미라고 진술했다.

3)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1950년 12월11일 설치법 공포) 고급 장교들이 국민방위군을 후방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국고금과 군수물자(24억여 원, 양곡 5만 2천 석)를 부정하게 착복한 결과 보급물자 부족으로 수만여 명이 동사·아사하는 등 사상자를 냈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1951년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산되었다. 관련 군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김윤근 등 4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사상계〉에 실린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내용의 이적성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함석헌은 원고를 청탁받은 시기가 6·25가 일어난 지 8주년이 된 시기라서 ‘6·25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으며, 제목은 사상계 편집진에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제목 아래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 〈진술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 1958년 8월 11일, 관련인 장준하

진술조서에서 장준하는 일제시기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갔다 일본군을 탈출해 광복군에 편입한 후 미군정보기관 OSS(미국 전략정보처)에서 촉탁으로 근무했으며 1953년 〈사상계〉를 창간하는 등 이력을 설명했다.

장준하는 함석헌이 사회적 명망이 있고 여러 차례 논문을 투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논문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사상계〉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논문을 기고할 당시 제목(‘6·25의 뜻’)을 바꾼 이유는 원제목이 8월호로 나가기에는 시사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장준하는 논문 내용과 관련해서 남북한을 미국과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한 표현이나 우리가 나라없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지만, 함석헌과 공모해 북한을 선전선동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 〈사실 및 이유〉,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 1958년 8월 16일, 관련인 함석헌, 장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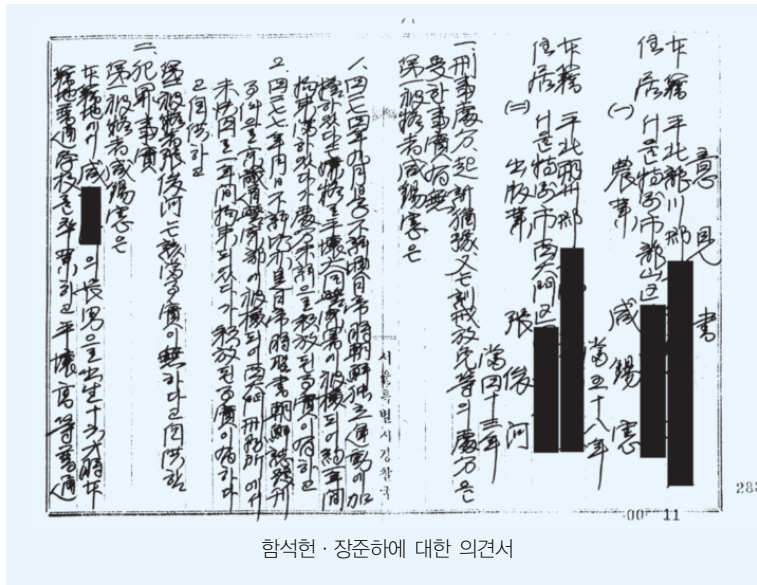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낸 함석헌, 장준하의 피의 사실 요지서이다.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는 범죄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논문 내용 가운데 남북한을 미국과 소련의 ‘꼭두각시’라 전제하면서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김일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이씨 이성계에 있다, 이제라도 우리 손으로 다시 해방을 해야 한다 등 과격한 표현은 현 정부를 북한괴뢰집단과 동일시하고 혁명을 책동하는 불온한 표현으로 학문의 자유를 빙자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북한정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논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함석헌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하기보다는 엄중경계한 후 방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함석헌의 논문은 종교인으로 정치를 비판하려는 시도가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으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또 이를 자진방조한다는 의사가 없는 한 국헌을 모욕했다는 구절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제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의견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 1958년 8월 16일, 관련인 함석헌, 장준하



함석헌·장준하에 대한 의견서

1958년 8월 〈사상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문제되는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국시(國是)인 북진통일을 부인하고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준하에 대해서는 1953년 4월 9일부터 〈사상계〉를 발간해 국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북한괴뢰집단과 동일시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석헌의 논문을 게재해 일반에게 판매,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이러한 범죄사실에 입각해 함석헌, 장준하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58년 8월 22일, 관련인 함석헌

함석헌은 논문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우리나라 백성들이 깊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6·25가 일어난 지 8주년을 맞아 평소 생각하고 있는 소감을 쓰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논문 중 남북을 미국과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동등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낸 함석헌과 장준하에 대한 의견서이다.

의견서는 함석헌이 1947년 3월경 월남한 후 1953년경부터 일요강좌를 통해 신종교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집단과 동일한 괴뢰로 규정해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볼 때에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심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중 잡아 먹고 토실토실 살 찐 강아지보고 울어서 무얼해 여호 같은 계집 같은 소위 측근자 비서 무리를 보고 울어서 무얼해’라는 표현은 ‘국민방위군사건’을 보았을 때 많은 군인들이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리들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6·25사변의 원인이 ‘스탈린, 김일성, 루스벨트에 있지 않고 이성계에 있다’는 의미는 외적으로 3·8선을 긋게 된 원인은 소련이나 김일성 등의 책략에 의한 것이지만 내적 원인을 살펴서 자기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6·25가 참된 해방이 아닌 이유는 미·소 두 세력이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국가를 세워야 했으며 대한민국 역시 국토의 절반에만 실력을 미치고 있으니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민족을 대표할 국가가 되려면 새로운 국민정신이 필요한데 그 국민정신은 새로운 위대한 종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 1959년 〈경향신문〉 폐간

〈경향신문〉은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을 뿐 아니라 자유당의 정적(政敵)인 민주당 장면을 지지하는 당파성을 가지고 있어 ‘야당의 대변지’로 불릴 정도로 자유당 정권에 대해 어느 신문보다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1959년 4월 30일, 이승만정권은 미군정이 남로당계 좌익신문들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군정법령 제88호를 근거로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조치를 단행했다. 이승만정권이 폐간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된 데는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향신문〉의 정부비판 기사가 대중에게 미칠 영향력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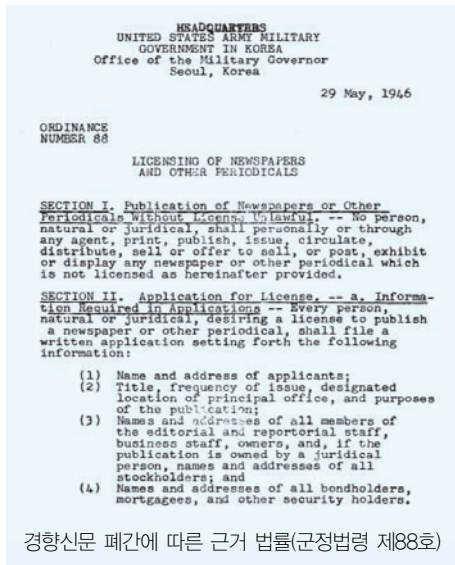
〈경향신문〉은 1959년 4월 30일 폐간통지를 받았고, 바로 법정투쟁에 들어갔다. 〈경향신문〉은 폐간의 법적 근거인 군정법령 제88호에 대해 위헌이라며 공보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경향신문〉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여 다시 신문을 발행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했으나 복간 7시간 만에 정부는 또다시 정간처분을 내렸다. <경향신문>은 다시 정간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강구소송 및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신청, 군정법령 제88호에 대한 위헌신청을 내는 등 법정투쟁을 펼쳤다. 그 후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해야하던 1960년 4월 26일 대법원은 <경향신문>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경향신문은 복간되었다.

● <경향신문 폐간에 따른 근거법률(군정법령 제88호)>, 외무부, 1959년



경향신문 폐간에 따른 근거 법률(군정법령 제88호)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 폐간에 따른 근거법률인 군정법령 제88호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외무부가 1959년 5월 1일 각 재외공관장 앞으로 송부한 군정법령 제88호 전문과 1959년 6월 3일 외무부 정부국에서 생산한 ‘군정법령 제88호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문건이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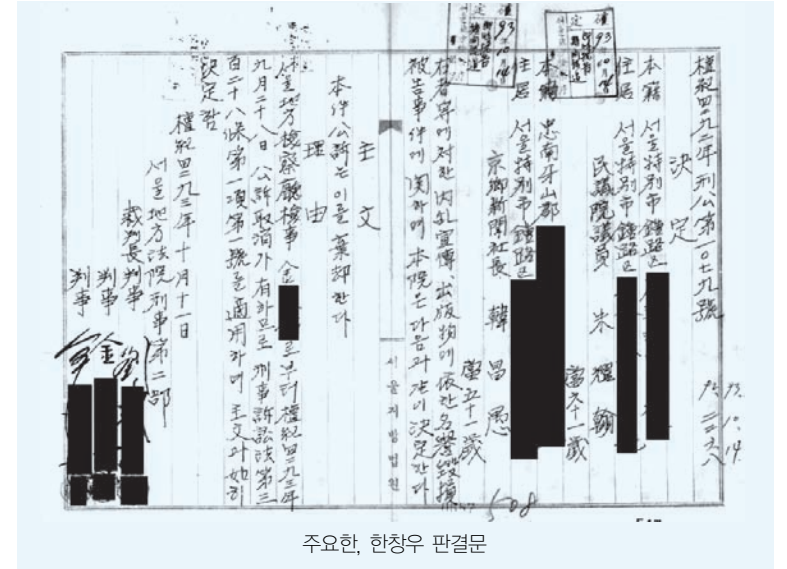
군정법령 제88호는 1946년 5월 29일 공포 발효한 것으로, 신문 기타 정기 간행물 허가제를 규정한 것이다. 군정법령 제88호는 입법취지에서 밝힌듯이 ‘법령을 통해 공산당의 파괴적인 활동을 저지할 필요’에 따라 미군의 진주라는 특수한 상황과 좌익세력의 언론 선전을 저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 <판정>,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3부, 1960년 10월 14일, 관련인 주요한, 한창우

<경향신문> 1959년 2월 4일 단평칼럼 ‘여적(餘滴)’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경향신문> 비상임 논설위원인 주요한과 사장 한창우에 대한 1960년 10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의 판정문이다. 법원은 주요한과 한창우의 내란선전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허먼스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에 대한 단평인 ‘여적’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보다 선거가 다수의 의사를 공정히

반영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며 선거가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강제로 전달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단평의 내용이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며 주요한과 한창우를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한, 한창우 판결문

■ 1961년 <민족일보> 폐간

1961년 5월 23일 5·16군사정변 이후 최고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해체하는 동시에 포고령 11호를 선포, 언론기관에 대한 일대 정비를 실시했다. 이때 폐간된 신문 가운데 <민족일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9일 계엄



민족일보사건 혁명재판 광경 (CET0037434)

사령부는 <민족일보>의 폐간을 통고하고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 8명을 구속했다. 치안국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조총련계 불법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해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는 등 북한을 고무, 동조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1961년 2월 13일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간한 <민족일보>는 당시 혁신계가 주장하는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 민족자주통일 등 진보적 여론을 주도했다.

1961년 7월 12일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7월 23일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혁명재판소에 기소했다. 혁명재판소 심판부는 조용수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6조를 적용해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서 <민족일보>에 사설 등을 게재해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민족일보>는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아니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특별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족일보>의 발간 자금은 조총련과 무관하다고 상소를 제기했으나 상소심판부 역시 “사회단체 간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정당의 주요간부”였다고 판결, 사형을 선고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문 제11호 및 동 13호 및 공보부령 제11호 송부에 관한 건>, 국가재건회의, 1961년 5월 23일

5·16군사정변의 주도세력인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바꾸고 정당·사회단체를 해체하는 한편 언론통제를 강화했다. 포고 제11호는 ‘구약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신성한 언론 자유를 모독하는 사이비 언론인과 언론기관을 정화하고 진정한 민주언론 창달과 혁명과업에 이바지’ 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며 ‘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인쇄시설을 완비한 자에 한 함 2. 통신을 발행하려는 자는 통신발행에 필요한 송수신시설을 구비해야 함 3. 등록사항을 위반한 정기 및 부정기 간행은 이를 취소함 4. 신규등록은 당분간 접수치 않음’ 등 4개항을 포함하고 있다.

● <반공법 공포의 건>, 내각사무처,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은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반공법은 제1조 목적에서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는데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 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라고 정의했다. 반공법은 제4조 고무·찬양 등의 죄, 제5조 회합·통신죄, 제6조 잠입·탈출죄, 제7조 편의제공, 제8조 불고지 등을 규정해 놓았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공법은 박정희정권 시기 국가보안법과 함께 소위 ‘2대 안보형사법’으로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에 대한 처벌법인 데 반해 반공법은 그 가운데서도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경우 목적범의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반공법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도 결과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국가보안법보다 그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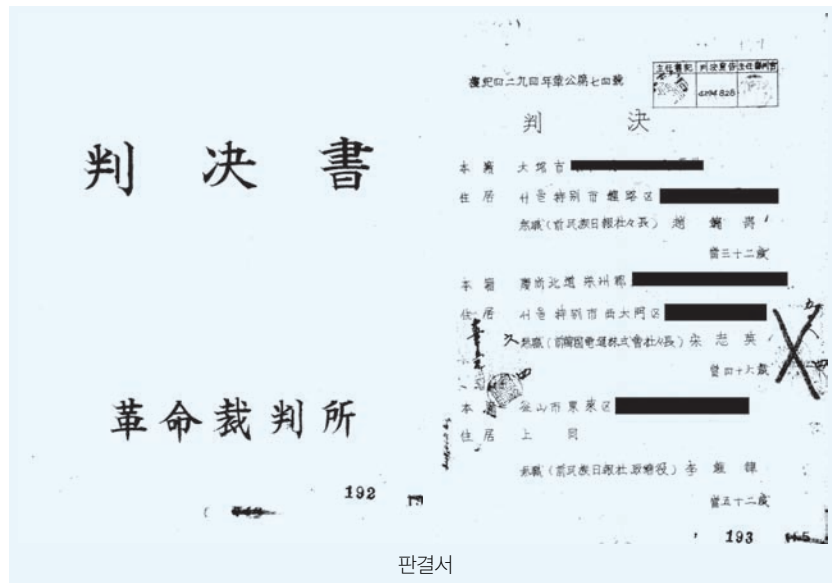
● <판결서>, 혁명재판소 심판부 2부, 1961년 8월 28일, 관련인 조용수, 송지영, 이종률, 안신규, 정규근, 양수정, 전승택, 김영달, 조규진, 이상두, 이진호, 양실근, 장윤근

혁명재판 1심 판결문이다. 1961년 8월 31일 혁명재판소는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민족일보> 관련자 13명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혁명재판소는 민족일보사 사장 조용수·상무감사 안신규·고문 송지영에게 사형, 논설위원 겸 경북대학교 강사 이상두 징역 15년, 편집국장 양수정·논설위원 겸 고려대학교 교수 이진호에게 각 징역 10년, 상무취체역 정규근·선원 양실근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혁명재판소는 선거공판에서 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정당, 사회단체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주장하는 중립화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협상, 경제·서신·문화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지지하는 기사를 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판결서>, 혁명재판소 상소심 제1심판부, 1961년 10월 31일, 관련인 조용수, 송지영, 이종률, 안신규, 정규근, 양수정, 조규진, 이상두, 이진호, 양실근

1961년 10월 31일 혁명재판 상소심 판결문이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조용수 등이 제기한 상소에 대해 상소 심판부는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 정규근, 양실근, 조규진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고 이상두, 이종률에게 징역 10년, 양수정, 이진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용수는 <민족일보>를 광의의 사회단체라고 규정해 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당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사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이라는 본질에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사회적 영향력에 착안해 ‘사회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식회사 민족일보사를 특별법 제6조의 사회단체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를

규정을 적용해 조용수 등 3명에게 사형을, 이상두 등에게는 범행 방조 혐의로 15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심판부는 조용수에 대해 대남간첩 혐의를 받은 공소 외 이○○이 제공한 자금으로 혁신계 대변지로서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이

오해한 의률착오(擬律錯誤)라고 변론했다. 또한 조용수가 대남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이○○과 일본에서 수시로 접촉해 정계의 혼란을 틈타 혁신계 각 정당을 통합하고 대변지를 발간할 것을 협의하고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이 간첩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족일보사 설립 자금은 재일 거류민단 간부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인사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용수 등의 주장에 대해 상소심판부는 민족일보사가 특별법 제6조의 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의률착오이지만 조용수는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서 민족일보사를 설립해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을 고무, 동조했다고 판결했다. 그 후 안신규, 송지영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조용수는 1961년 12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

■ 민정이양 후 언론통제

민정이양이 아닌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박정희는 1962년 8월 군복을 벗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1963년 4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출범한 박정희정권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기술을 끌어들이는 일이 시급했고 이를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절실했다. 친미반공의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미국에게도 한일국교 정상화가 필요했다. 한일국교정상화 해결의 핵심인 대일청구권문제⁴⁾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판단한 박정희정권은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정식 조인했다.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학생시위가 격렬해진 원인의 하나가 언론의 선동에 있다고 생각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자 공화당의 주도 아래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

4)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로 대일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한국은 8억 달러, 일본은 최고액 7천만 달러를 제시해 난항을 겪었으나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히라(大平) 일본외상의 비밀회담 끝에 무상 공여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대일청구권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진압경찰과 대치중인 한일협정 반대시위대 (CET0037706)



한일회담 본조인식 (CET0037759)

했다. 언론계는 이 법안에 대해 결사반대했고 언론과 여론의 저항에 부딪친 박정희 정권은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조건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윤리위원회 소집을 무기연기했다.

〈동아일보〉 1962년 7월 28일, “국민투표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1962년 7월 28일 사설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에서 1963년 여름으로 예정된 민정이양에 앞서 군사정부가 새 헌법을 기초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군사정권은 〈동아일보〉 주필 고재욱과 논설위원 황산덕의 구속으로 대응했다.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고재욱은 8월 14일 기소유예로 석방, 황산덕은 12월 7일 공소취하로 석방되었다.

〈경향신문〉 1964년 4월 13일, “4·19의 행방”

〈경향신문〉은 4·19 네들을 맞아 4·19를 재평가하는 특집기사 ‘4·19의 행방’을 기획하고 첫 회로 윤상철이 ‘정치풍조’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로 윤상철은 내란선동죄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4·19의 행방’이 5·16군사정변과 정부를 부인했으며,

사찰정치가 부활했다는 등 학생과 일반국민을 자극해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시위를 유발했다면서 윤상철을 기소했다. 검찰은 기사 내용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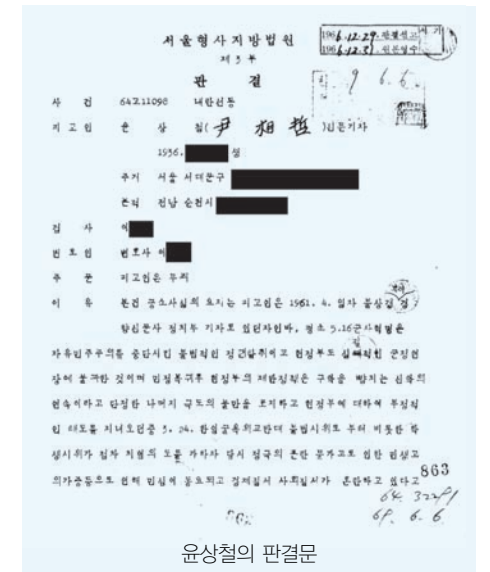
1. 4·19가 뿌린 씨앗이 움트기 전에 정치는 군화에 짓밟혀 버렸다
2. 5·16군사정변의 성공은 4·19계승 운운으로 아전인수되었을 뿐이다
3. 반4·19 비4·19적 요인을 포함한 5·16은 이 땅에 다시금 독재의 터전인 허무의 무사리를 잉태해 놓았다
4. 밸리트(투표)를 불리트(탄환)로 바뀐 군사혁명...민주주의 역사를 수단계 후퇴시킨 것이다
5. 지난 총선거는 완전범죄형의 부정선거라는 낙인을 받았다
6. 민정은 복귀되었으나 실질적인 군정연장이란 감을 도저히 불식할 수 없다
7. 민족적 민주주의,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현혹되어 자유당 독재의 유령이 다시 출몰한다면 그리고 저간의 신문처럼 청와대 비서정치가 재생하고 소아병적인 사찰정치가 부활한다면 4·19의 고훈들이 통곡만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등 9가지 내용을 근거로 윤상철을 내란선동죄로 구속했다. 윤상철은 선고공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제3부, 1966년 12월 29일, 관련인 윤상철

〈경향신문〉 1964년 4월 13일 ‘4·19의 행방’과 관련해서 내란선동죄로 구속된 윤상철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다.

공소에 의하면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윤상철은 5·16 군사정변이 자유민주주의를 중단시킨 불법적 정권탈취로, 현 정부도 군정연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한일굴욕외교반대시위 등 학생시위가 확산되면서 민심이 동요되고 경제·사회질서가 혼란해지자 학생과 일반 국민을 선동해서 4·19혁명과 같은 반정부적 시위를 통해 정부를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1964년 4월 13일 ‘4·19의 행방’



윤상철의 판결문

이라는 제목 아래 5·16군사정변을 부정하고 자유당독재, 사찰정치의 부활 등 선동적인 기사를 써서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실만으로 학생이나 일반 국민들을 자극해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고 볼 수 없어, 즉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윤상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1969년 5월 29일, 관련인 윤상철

내란선동죄로 구속된 윤상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의 판결이다.

검사는 내란죄는 객관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관적으로 국헌문란 등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성립되는데도 원심이 윤상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경향신문> 1964년 5월 9일, “하루는 책보 이들은 깡통”

<경향신문> 1964년 5월 17일, “허기진 군상”

<경향신문>은 1964년 취재팀을 구성해 농촌과 도시 영세민의 비참한 생활현장을 집중조명하기로 기획하고 기동취재반을 만들었다. 르뽀 형식의 이 기사는 “하루는 책보 이들은 깡통”(1964년 5월 9일)이라는 제목으로 구결에 나선 정○○ 어린이의 생활을 사진과 함께 연재했다. 그리고 “허기진 군상”(1964년 5월 17일)에서는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이 시리즈는 6·3비상계엄⁵⁾ 선포로 중단되었고, 6월 4일 사장 이준구와 사진부 기자 손충무가 강제연행되었다. 수사는 ‘정부를 비방했다’, ‘북한 언론에 경향신문 기사가 인용되어 결국 북을 이롭게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정희정권은 북한과의 연계를 조사하다 6월 16일 이준구, 7월 1일 손충무를 석방했다.

5) 1964년 6월 3일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 3·24데모 이후 한일회담반대투쟁은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해 6월 3일에는 학생과 시민 약 1만여 명이 박정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까지 진출했다. 정부는 밤 8시를 기해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야간통행금지 및 휴교령을 포함, 옥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언론·출판·보도 등이 사전검열을 받게 되었다.

● <첩보송부>, 치안국, 1964년 5월 16일

내무부 치안국에서 서울시 경찰국장 앞으로 보낸 문건으로, 1964년 국회에서 가결된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해설과 법을 마련하게 된 동기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영화 “책임있는 언론” 제작지시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무부 치안국은 서울시 경찰국장, 정보과장에게 <경향신문> ‘취재기자들의 어긋난 취재방식과 과장보도사실’을 통보하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들은 1964년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자 절량농가의 비참한 모습을 사진기사와 함께 보여준 기사 등이다. 치안국은 관계기관(신문윤리위원회)에 엄중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사를 덧붙였다.

● <언론윤리위원회법 공포>, 법제처, 1964년 8월 4일

언론윤리위원회법은 1964년 계엄해제 다음 날인 7월 30일 공화당이 국회에 상정하였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 공포되었다. 전문 20조로 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건전언론의 육성’을 위해 언론윤리위원회와 언론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윤리요강을 제정해 보도 내용이 이 요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의케 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의의 기준이 되는 언론윤리요강은 국가의 안전 및 공안의 보장에 관한 사항, 국가원수의 명예존중에 관한 사항,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자 언론계는 이 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그러나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투쟁은 정부의 압력으로 이탈하는 언론사가 속출했으며 결국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대구 매일신문> 4개 언론사만이 남았다. 정부는 이들 언론사에 대해 신문구독 중지와 아울러 은행용자 제한, 광고계제 중단 압력, 취재활동 제한 등 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4개 신문사는 4개사 편집국장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비인도적 조치를 비난하고 ‘악법철폐를 위해 끝까지 분투’할 것을 선언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1964년 <경향신문> ‘민성(民聲)’ 필화사건

1930년 5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459/전송치서

다음의 사건을 송지합니다

의뢰자	물주 (1) 張 敬 浩 (2) 金 元 鎭 (3) 金 元 鎭 (4) 金 元 鎭 (5) 金 元 鎭	물주 (2) 申 東 昌 (3) 申 東 昌 (4) 申 東 昌 (5) 申 東 昌 (6) 申 東 昌
이 명	反共法違反	
발기원인	認 口	
결 수	서지 1964년 5월 12일	
구 속	서지 1964년 5월 13일	
제 방	서지 1964년 5월 15일 (1)(2)(3)(4)(5)(6)	
의 견	(1) 申 東 昌 (2) 申 東 昌 (3) 申 東 昌 (4) 申 東 昌 (5) 申 東 昌 (6) 申 東 昌	
비 고	楊 敬 浩 申 東 昌	

(4전송치서)

555 2

사건송치서

1964년 5월 제3공화국 정일권 내각이 출범하자 <경향신문>은 5월 12일, 출범하는 정내각에 대한 독자 앙케이트 ‘난국타개, 이것부터, 丁내각에 바라는 2백자 민성(民聲)’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시민 4명, 경제계 2명, 문화예술계 2명, 교육계 4명, 정치인 3명, 학생 2명, 언론인 등 각계 인물들의 새 내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

그 중 자유노동자 이형춘과의 인터뷰 기사 가운데 “지금까지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구호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백미 2백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북한에서는 실업자에 일터도 준다고 하니 한일회담보다 판문점 개방협상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일이다”라는 내용이 문제되었다. 편집부 기자 추영현이 ‘당장 연명해 갈 구호대책을’이라는 부제를 달고 내보냈던 이 기사의 내용이 북한 방송에서 선전한 내용과 일치했다.

기사와 관련해서 치안국은 북한이 뿌린 전단 내용을 추영현이 ‘이형춘’이란 가공 인물을 만들어 게재한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경향신문>은 추영현 뿐 아니라 편집국장, 특집부장, 정치부장 등 7명이 구속되었다.

● <의견서>, 서울특별시 사찰국 정보과, 1964년 5월 20일, 관련인 추영현, 신동문, 김원동, 민재정, 전민호, 신동백, 박용각, 최치근, 이준구, 장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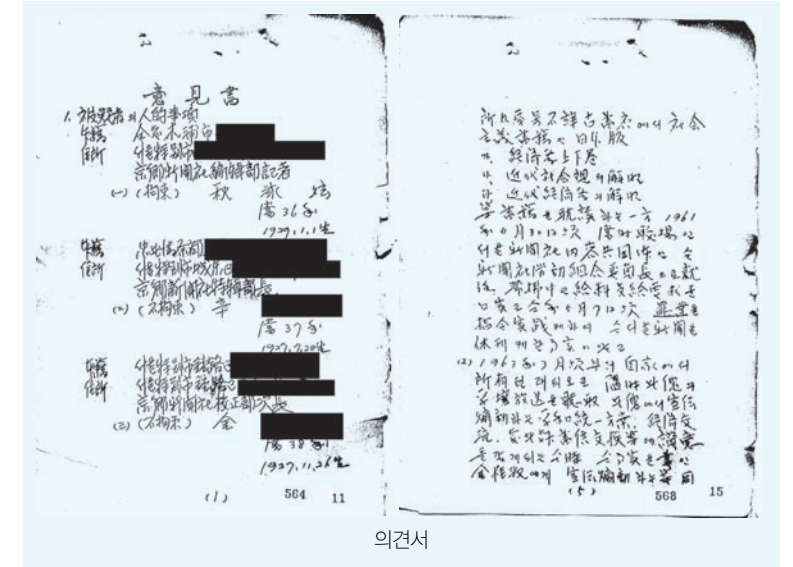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추영현, 특집부장 신동문, 교정부 차장 김○○, 편집국장 민○○, 편집부 부국장 전○○, 편집부 기자 신○○, 편집부 기자 박○○, 편집부장 최○○, 사장 이○○, 교정부장 장○○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사찰국 정보과에서 서울지방검찰청에 보낸 의견서이다. 의견서는 각 피의자에 대한 인적 사항, 범죄

사실,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영현에 대해서는 1961년 4월 서울신문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5월 7일 파업을 주도했으며, 북한 평양방송을 청취하면서 북한에서 선전선동하는 평화통일방안, 경제교류, 무상원조방안에 호응했다는 것이다. 1964년 5월 11일 특집부장인 신동문에게 특집 기사를 의뢰받고 북한의 대남방송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원고를 써서 자유노동자 이형춘을 직접 취재한 것처럼 위장해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 사실이 있다고 제시했다.

특집부장 신동문에 대해서는 1964년 5월 10일 추영현에게 특집 기사 중 시민여론 취재를 의뢰한 후 구두보고를 받고 특집부 기사대장에 추영현이 작성한 불온기사가 게재되었는데도 장부를 그대로 사정(査定)했고, 교정부차장 김○○은 불온한 기사가 발견될 때는 이를 상부에 전달, 게재를 중지할 책무가 있음에도 편집부 기자 신○○과 함께 불온원고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과해 신문에 게재,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 <진술조서>, 서울특별시 경찰국 정보과, 1964년 5월 12일, 관련인 신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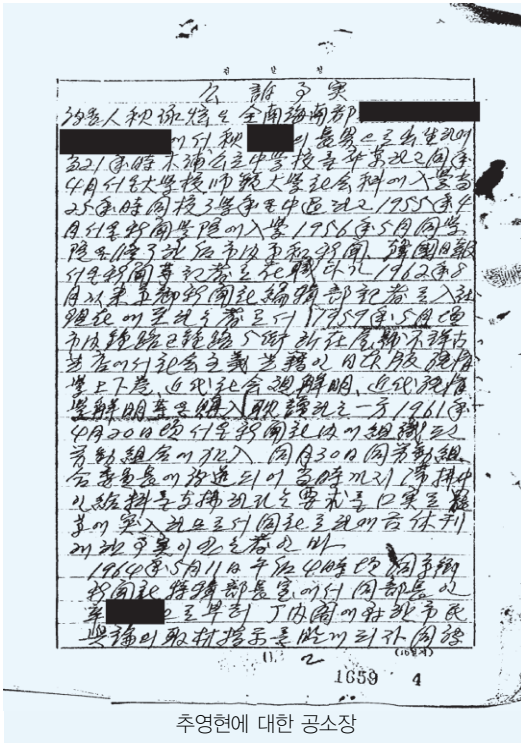
1964년 5월 12일자 ‘민성’ 기사 작성 과정에 대해 특집부장 신동문은 1964년 5월 11일 오후 6시쯤 편집부 추영현에게 취재를 부탁해 12일 오전 9시 50분경 취재 여부를 물으니 이미 취재를 마치고 원고를 문선부로 넘겼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기사내용에 문제가 있는데도 편집부로 원고를 이송한 이유에 대해서 신동문은 원고 마감 즈음해서도 추영현의 원고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추영현이 자신이 취재해서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편집하겠다고 했는데, 원고를 자신에게 보이지도 않고 문선으로 넘겨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며, 내용 검토는 편집 마감시간이 급해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1964년 6월 6일, 관련인 추영현



추영현에 대한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이 추영현에 대해 반공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소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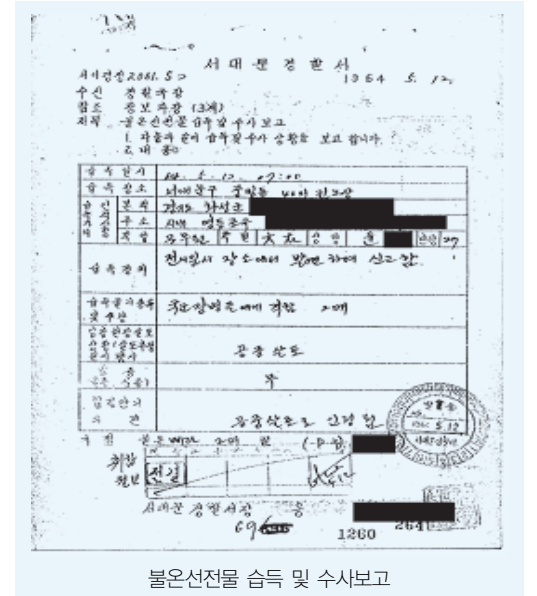
추영현은 1964년 5월 11일 오후 4시 <경향신문> 특집부장 신동문으로부터 새 내각에 대한 시민여론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백미 2백만 석, 기계 화학 섬유 시멘트 등을 남한에 무상원조하고 남한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북한방송 선전을 들은 후 그 내용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4월 12일 특집부장으로 부터 특집기사 취재를 부탁받고 정부가 곡가조절만으로 아사지경에 놓인 수백만 명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구호대책 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백미 2백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북한에서는 실업자에 일터도 준다고 하니 한일회담보다 판문점개방 협상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일이다”라는 기사를 쓰고 가공인물인

이형춘을 인터뷰한 것처럼 작성해 5월 12일에 게재, 배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 <불온선전물 습득 및 수사보고>, 서대문경찰서, 1964년 5월 12일

검찰은 추영현의 반공법 위반사건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1964년 5월 12일자 ‘민성’과 북한에서 살포한 불온선전물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기사 이적성을 주장하는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1964년 5월 12일 서대문경찰서에 습득·보고된 불온선전물은 ‘국군장병에게 격함’, ‘남조선 인민들과 제정당 사회단체 인사들 및 남조선 국회의원에 보내는 호소문’ 등이다. 북한에서 살포한 불온선전물은 “우리는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해 지금 형편에서 우선 매년 2백만 석(30만 톤)의 쌀, 10만 통의 감자, 10억 킬로와트의 전기, 1만 톤의 화학 섬유를 비롯해 시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제공하려고 한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을.... 그들에게 기능에 맞는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온선전물 습득 및 수사보고

● <공판조서>, 서울형사지방법원, 1964년 8월 17일, 관련인 추영현

검사는 추영현에게 취재 경위, 취재 목적, 사상 검증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다. 추영현은 취재 경위에 대해 1964년 5월 12일 시내 서대문구청 앞 중앙수산시장 노상에서 자유노동자 이모씨(이형춘)를 취재했으며, 취재 내용은 날품팔이 노동자들의 수입으로는 식구의 호구지책을 면하기 어려워 집단자살을 생각하게 되며, 새 내각에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으므로 바랄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취재한 기사를 통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장으로 넘긴 이유에 대해 시간에 쫓겨 편집부장, 특집부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쇄되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측은 추영현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판 <맑스경제학>이나 여순사건⁶⁾ 당시 행적, 1961년 서울신문사 노조위원장 경력 등을 질문하면서 그러한 기사를 쓴 이유가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취조했다. 그러나 추영현은 북한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6)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5·10선거반대를 기치로 일어난 제주 4·3사건 진압을 명령받자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장교 및 사병들이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파병반대, 친일경찰 처단’ 등을 외치며 봉기한 사건이다.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 전라남도 동부지역 일대의 시민과 합세해 이승만정부를 반대하는 항쟁으로 발전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기사화한 것은 정부에게 시급한 구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4년 8월 31일, 관련인 추영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추영현이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백미 2백만 석, 기계, 화학, 섬유 등을 남한에 무상원조하겠다는 북한의 제의에 공감해서 특집 기사에 절량농가와 도시영세민에 대한 구호대책이 없다면 북한에서 제공하겠다는 쌀 2백만 석을 받아 배급하고, 한일회담보다 판문점 개방협상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제4조를 적용,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

● <항소이유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2부, 1964년 10월 8일, 관련인 추영현

1964년 8월 1심에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추영현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이다.

추영현은 기사를 쓴 목적이 영세민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여론

특집을 통해 자극적으로 경고

해 정치가들의 각성을 촉구,

정부로 하여금 긴급한 구호

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추영현은 기사를 썼던 5월

즈음은 춘궁이 심각한 상황이

었고 5·16군사정변이나 민정

이양 때마다 ‘깜짝 선심’이

아닌 절량농가와 도시영세민의

절박한 기아상태를 보도해

정부에 긴급구호책을 호소

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추영현은 ‘모든 아름다운 환상이 무너진’ 수인의 입장에서 농촌의 상황이 어떠한 북한 운운하며 기사를 쓴 것은 지나쳤다고 느낀다면서, 동시에 굶주려 쓰러져가는 수많은 기아동포를 빨리 구호해 보자는 일념에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려는 데 기사의 목적이 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 <진정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2부, 1964년 11월 20일, 관련인 추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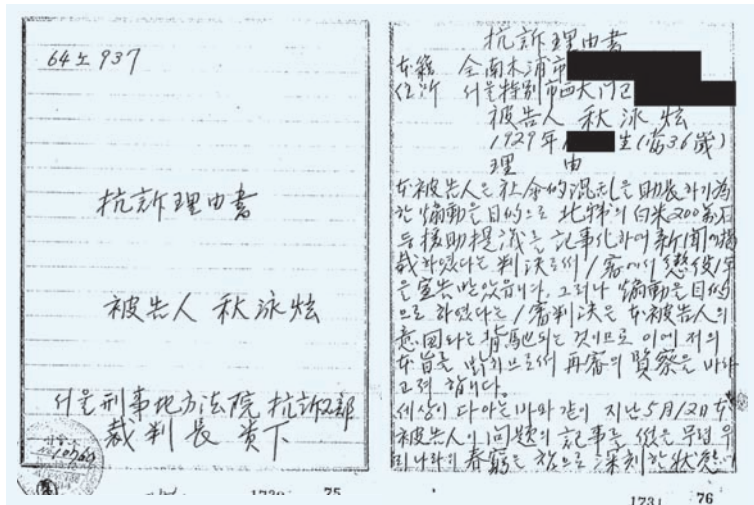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들의 참상을 동정했기 때문에 구속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진정서>를 시작한 추영현은 경상남도 김해의 한 국민학교 아동들의 참상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식량난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등 악덕배들과 그것을 묵인하는 위정자들에 대해 느끼는 민족적 분노와 정의감에서 기자로서 굶주린 동포를 돕기 위해 기사를 썼다는 심경을 고백했다. 추영현은 그러한 기사를 쓴 이유는 위정자들의 고식적인 태도를 경고하면서 비참한 민생고를 자극적으로 기사화해 정부가 긴급구호책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동기가 정의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음과 함께 간한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회한을 솔직하고 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4년 12월24일, 관련인 추영현

1964년 12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경향신문> 기자 추영현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추영현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추영현이 위정자들에게 각성의 기회를 주려던 의도에서 행한 일로 보여지며 추영현의 태도 등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여 형이 과중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 <세대> 1964년 11월호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월간 <세대> 1964년 11월호에 실린 논문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과 관련해 필자 황용주가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추영현의 항소이유서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이 사건은 1964년 11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정책질의 석상에서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가 쓴 논문이 “북괴의 통일안에 동조한 것”으로 ‘국시(國是)’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진 데서 발단이 되었다. 정치적 공세 속에서 서울지검 공안부는 11일 밤 황용주를 구속했다. 황용주가 <세대> 1964년 11월호에 쓴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는 국토분단을 타개하기 위한 강대국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남북한의 적대 상황을 우선 해소해야 하며 군비축소와 최소한의 유엔군 주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5년 4월 30일, 관련인 황용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황용주에게 1심 판결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대> 1964년 11월호에 실은 논문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가 남북 두 개의 한국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의 합헌성을 부인했고, 8·15 후 미군의 진주를 점령으로 보고 유엔(미국)의 6·25의 참전을 군사개입으로 단정해 반미사상을 고취했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제3국을 통한 남북한 대화 등 다양한 통일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 통일론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 판결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부, 1966년 9월 15일, 관련인 황용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황용주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해 각각 기각을 선고했다.

황용주는 항소이유로 첫째, 반공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조문에 규정된 찬양·고무·동조 등은 추상적인 용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법률이며, 둘째, 논설의 요지는 북한 등 공산침략을 맹렬히 비난하고 대한민국에서 민족세력을 집결해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셋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명백하지만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언론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황용주의 논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일치해 북한에 이익이 되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글을 게재, 보도했으므로 원심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판결>, 대법원 제1부, 1969년 10월 23일, 관련인 황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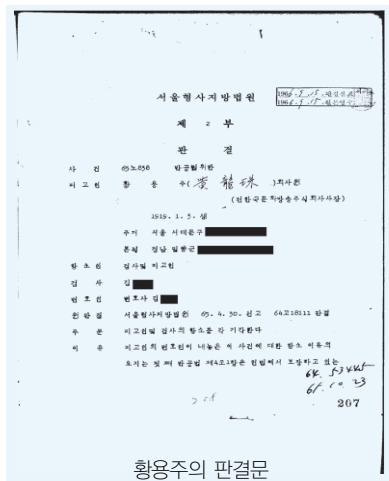
<세대> 1964년 11월호에 쓴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와 관련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용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황용주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내용을 검토할 때 황용주의 행위를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본 것은 정당하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반공법 제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위헌법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 1964년 <조선일보> 필화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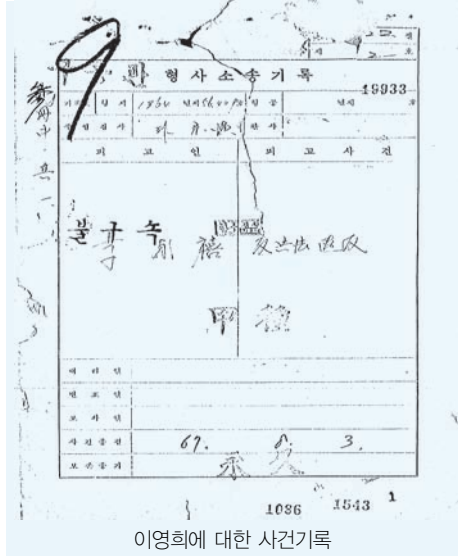
<조선일보>는 1964년 11월 21일자 1면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 준비’라는 제목으로 아랍공화국 등 중립국들의 유엔활동 사항을 분석 보도하면서 한국정부가 현실적 대응으로 유엔에 남북한 동시 가입 제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정책이 아직 ‘할슈타인원칙’⁷⁾을 적용하고 있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이 터부시되던 시절,

7) 1955년 서독의 외무차관 할슈타인이 기초한 정책으로 동독정부를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서독의 외교정책이다. 서독의 외무장관 W. 할슈타인은 서독만이 합법적 정부를 가진 독일의 합법국가이므로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967년 서독이 루마니아와 국교정상화를 하면서부터 이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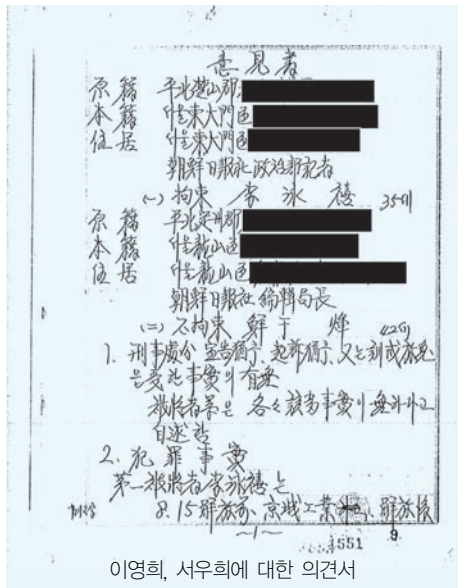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의견서〉, 중앙정보부, 1964년 11월 28일, 관련인 이영희, 선우휘



이 기사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이영희와 편집국장 선우휘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대한민국의 비영속성에 관한 회의를 시사했다는 혐의였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유엔에 초대되거나 동시가입이 제안 되는 따위의 이야기는 반공법 제4조 제2항 ‘적성국가·단체 고무찬양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편집국장 선우휘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지만 이영희는 불구속으로 나와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의견서에서 이영희는 북한을 위시한 중공 등 국내외 공산계열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지위향상을 도모 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를 획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964년 11월 20일 유엔 사무총장이 연례보고에서 “중공, 북괴, 동독, 월맹이 유엔 문호에 발을 들어놓도록 제의 했다”는 외신보도를 접하고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중립국 등이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안을 정식 제출할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런 기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국제적 위치가 흔들 리고 있다거나 유엔 단독가입이라는 대한민국의 기본방침이 사라졌다는 인상을 주는 등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우휘에 대해서는 이영희가 쓴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 준비’ 내용이 허위인지도 모른다고 인식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보도되면 반국가단체

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허위왜곡기사를 유포해 정부를 비방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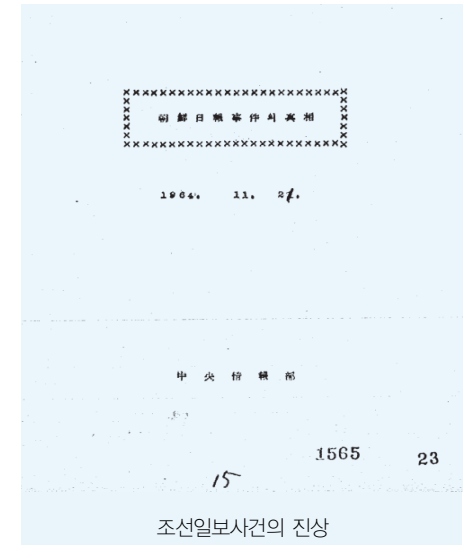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영희에게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및 특정범죄처벌에 관한임시특례법 제3조로, 선우휘에게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및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사건의 진상〉, 중앙정보부, 1964년 11월 21일, 관련인 이영희, 선우휘

〈조선일보〉 1964년 11월 20일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 준비”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사보고서이다. 보고서는 보도내용, 보도내용에 대한 평가,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 중앙정보부의 조치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중공, 북한, 동독, 월맹에게도 유엔의 문호를 개방하자고 제의한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을 공식화하기 위해 아랍공화국 등이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안을 총회 개막식에 정식의제로 제출할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해외 공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조선일보〉 1964년 11월 20일 기사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기사가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적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 유엔가입이라는 대한민국정부의 기본방침이 현실적으로 사라졌다는 인상을 주어 반공 태세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충성심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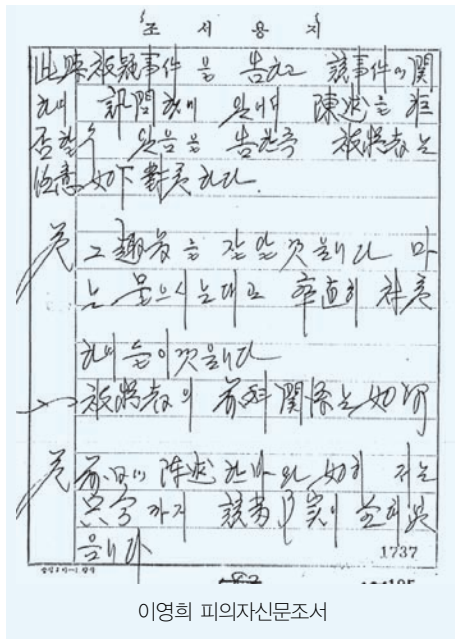
이러한 판단 아래 중앙정보부는 〈조선일보〉 1964년 11월 21일자 지방판 전부와 서울 가판 일부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적용해 경찰이 긴급압수하고 조선일보사 편집국장 선우휘, 정치부기자 이영희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선우휘, 이영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입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피의자신문조서>, 중앙정보부, 1964년 11월 23일, 관련인 이영희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선일보> 정치부기자 이영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다.

기사의 취재원에 대해 이영희는 기사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한국문제의 전망과 국내외 정세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취재원을 말할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외무부가 해외공관으로부터 기사내용과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영희는 외무부에서 공식으로 부인하는 것은 외교적인 필요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무부 관리로부터 해외공관에서의 보고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탄트 사무총장의 제의 전에 그러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그 때 기사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영희는, 우탄트 사무총장의 제의가 있기 전에 중립국가들의 동정에 대한 자료는

입수했으나 그들이 어떠한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가 우탄트 제의가 있자 이를 계기로 중립국가의 전략을 관계 관리에게서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희는 자신이 의도한대로 설명을 해야 했는데 요점만을 기사화해서 국민의 오해가 발생했으며, 기사 전체가 190자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편집부에서 표제를 크게 다루어 보도한 것이 관심이 더 가게 된 결과가 되었고,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이것을 문제시하는 당국의 정세감각과 사고에 불만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더불어 어떠한 사주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 <피의자신문조서>, 중앙정보부, 1964년 11월 27일, 관련인 선우휘

피의자신문조서는 문제가 된 기사의 작성 경위, 선우휘의 통일에 대한 생각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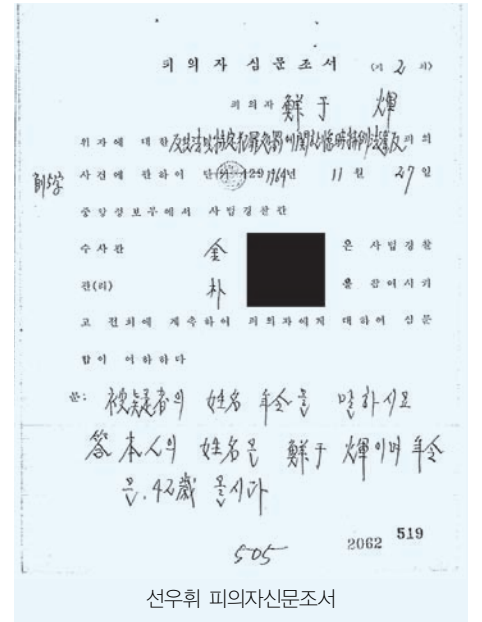
선우휘는 1964년 11월 21일자에 실린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 기사가 문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집국장으로서 취재원이 확실한가 여부를 확인한 후 취재원이 서기관급이라고 하기에 기사내용의 ‘고위소식통’이라는 표현을 ‘정밀한 소식통’으로 정정할 것, 타이틀이 자극적이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주제와 부제를 수정할 것, 단수를 한 단 줄여 5단으로 할 것 등을 부국장에게 지시했으며, 기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사대장만을 보고 통과시켰다고 진술했다.

통일문제에 대한 연재보도는 ‘신씨 부녀 상봉사건’⁸⁾이 계기가 되어 남북면회소 설치 제의 등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의 통일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기획되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통일 관련 보도는 심층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취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실적 조건에서 통일논의를 배격하거나 북한의 전략적 통일논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진술했다.

● <우탄트 사무총장의 제의와 제1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 전망>, 중앙정보부, 1964년 11월 24일

<조선일보> 기자 이영희와 편집국장 선우휘의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중앙정보부는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의 제언 내용과 각국의 반응, 한국문제 토의



8) 1964년 10월 동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동경에 왔던 북한의 육상선수 신금단이 한국전쟁으로 헤어졌던 아버지 신문준을 13년만에 만난 사건이다. 신금단은 1964년 동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으로 참가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출전을 금지시켰던 가네포대회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고, 10월 9일 동경 조선회관에서 서울에 살던 아버지 신문준과 13년만에 상봉했다. 이 일은 여야의원들이 판문점에 남북면회소를 설치하자는 결의안을 내놓는 등 통일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 II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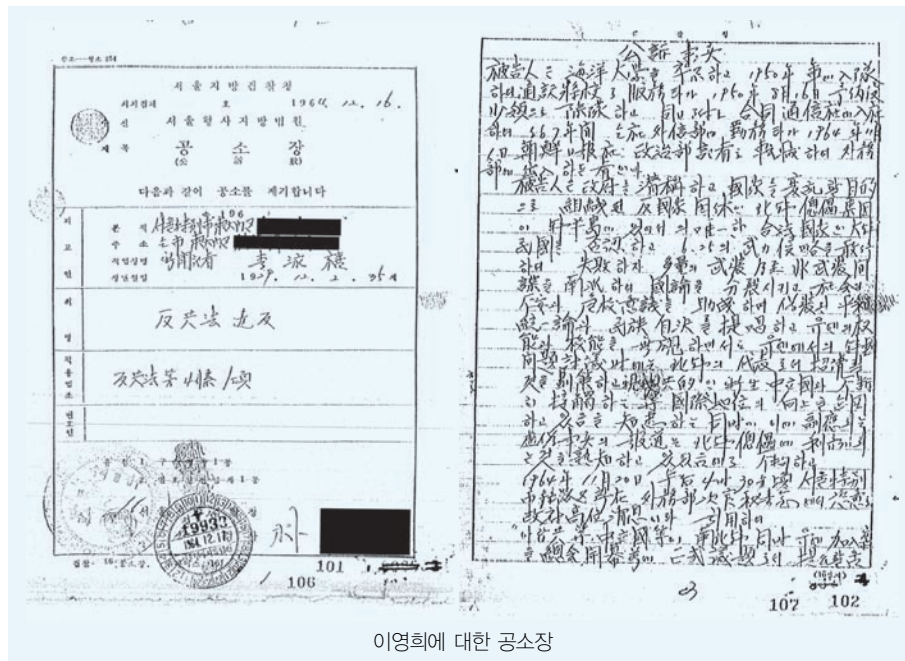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전망 등으로 구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부록으로 ‘유엔통한결의안에 대한 표결예상표’를 덧붙였다.

보고서는 1964년 11월 20일 우탄트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의 ‘비가맹국의 대표 파견문제’에 대한 내용과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서독, 자유중국, 소련, 중국 등의 반응을 분석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유엔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는 매년 작성되는 유엔의 제반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일종의 사업보고서일 뿐이며 우탄트 총장의 제의는 비가맹 국가 중 유엔에 옵서버를 파견하고 있지 않은 여러 나라에게 유엔문화개방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북한, 동독, 월맹 등을 지적해 이들의 옵서버 파견을 보고한 제의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 <공소장>, 서울지방법검찰청, 1964년 12월 16일, 관련인 이영희

서울지방법검찰청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 이영희를 상대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다.



이영희에 대한 공소장

공소장은 이영희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위장된 평화통일론과 민족자결을 제창하면서 공산주의 신생 중립국과 접촉하는 등 국제적 지위향상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북한괴뢰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 <공판조서>, 서울형사지방법원, 1965년 5월 13일, 관련인 이영희

이영희는 검사의 공소장에 대해서 보도내용은 틀림없으나 허위보도는 아니므로 반공법위반이라는 공소내용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영희에 대해서 북한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한 반국가단체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친공적인 신생 중립국과 접촉하는 등 국제 지위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영희가 특종의식에 사로잡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검사는 기사취재원이 누구인가를 여러차례 물었으나 이영희는 기자윤리로 취재원을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사는 이영희가 자의로 허위 사실을 날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고 이영희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문제를 분명히 듣고 취재했음을 주장했다.

이영희는 변론에서 유엔에서 한국에 대해 불리한 움직임이 있다면 그 상황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내에도 알려지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기사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5년 7월 3일, 관련인 이영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구속된 이영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영희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유엔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으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에 부응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이러한 보도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로서의 특종의식에 사로잡혀 “아랍 중동 중립국 등이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안을 총회 개막 전에 정식의제로 제출할 움직임이

있고 남한단독가입문제는 유엔 의제에서 탈락될 염려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판결했다.

- <항소이유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2부, 1965년 8월 30일, 관련인 이영희 항소는 두 가지 점에서 제시되었다.

첫째 이영희의 행위가 반공법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영희가 허위사실을 날조해 게재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공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영희의 기사는 국제적 정치정세,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의 해석에 관한 외신보도와 외무부 고위층으로부터 취재한 정보 등을 종합 보도한 것으로, 우탄트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에 대한 외신이 국내에 보도되자 사무총장의 제의에 대한 논평에 덧붙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유엔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은 여러 신문에 대서특필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취재한 기사내용이 전연 근거없는 허위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양형(量刑)의 문제로, 변호인은 피고의 행위가 반공법에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조선일보에만 게재된 것이 아니라 국내 각 신문에 외신보도된 것이며 취재내용은 편집국에서 재검토된 후 게재되는 것으로 그 책임을 취재기자에 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적당한 양형(量刑)이라고 주장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부, 1967년 7월 26일, 관련인 이영희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영희에 대한 2심 판결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이영희에게 원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영희는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구속, 1965년 7월 3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변호인의 항소이유 중 이영희의 행위가 반공법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양형(量刑)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영희가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에 처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고 개전의 여지가 현저해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1965년 3월호 <현대문학> “분지”

<현대문학> 1965년 3월호에 실린 남정현의 소설 “분지(糞地)”는 주인공 홍만수가 어머니 영전에 하소연하는 형식의 풍자소설이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행방불명되었고, 미군환영대회에 나갔다 미군에 강간당해 미쳐 돌아가신 어머니와 미군과 동거하면서 학대를 당하는 여동생 분이가 중심 인물로 과장과 희화화 등 우화적 수법으로 쓰여졌다.

소설이 출간된 2개월 후 북한 <조국통일> 5월 8일자가 이 소설을 실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중앙정보부는 남정현에게 “북한의 누군가가 써서 건네준 것일 터이니 그 접선 내용을 밝혀라” 추궁했고 7월 7일 남정현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공식 구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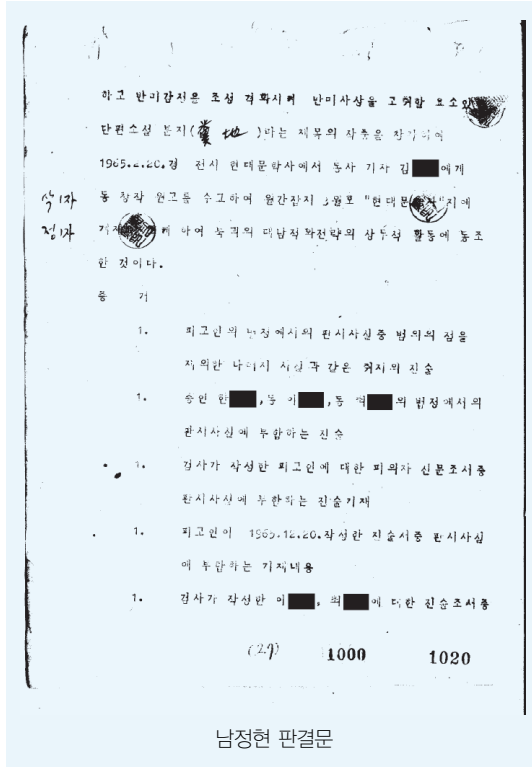
백낙청은 <조선일보> 7월 13일자에 남정현의 구속에 항의하는 글을 실었는데, 이 기사로 백낙청과 원고를 청탁한 <조선일보> 문화부장 남재희도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또한 <현대문학> 측은 8월호에 “분지 지난 3월호에 발표된 남정현 씨의 소설 “분지”는 본지의 부주의로 인해 게재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현대문학>은 33년 후인 1998년 10월호에 다시 남정현의 “분지”를 게재했다. 검찰은 남정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7년 자격정지를 구형했으나 1967년 1심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로 낮추고 선고를 유예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7년 6월 28일, 관련인 남정현

<현대문학> 1965년 3월호에 실린 “분지(糞地)”의 작가 남정현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반공법 위반 판결이다. 검찰은 남정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으나 1967년 6월 28일 1심에서 법원은 반공법 제4조, 제16조와

제 II 부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국가보안법 제11조, 형법 제57조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로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소설 “분지”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 12부분을 인용하면서 “분지”가 남한의 현실을 왜곡 허위선전하며 빈민대중에게 계급의식과 반정부 의식을 조장하고 반미감정을 격화시켜 반미사상을 고취할 요소가 있는 작품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의 변소에 대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배척했다. 첫째, 피고 남정현이 “분지”를 집필함에 반국가단체에 동조한다는 하등의 혐의가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작품을 집필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할 적극적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품 “분지”를 보면 제목, 줄거리, 표현 등이 반미·반정부적 감정과 계급의

식을 고취하는 요소가 다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정도의 표현은 자유국가에서 예술의 자유의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분단 상황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잡지에 게재했으므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변호인단의 변소를 모두 배척했다.

●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0년 4월 7일, 관련인 남정현

법원은 소설 “분지”는 저항문학·고발문학의 하나로 반공법 제4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다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측의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살폈을 때 피고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검사측의 양형(量刑)과 관련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양형의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원심이 피고 남정현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타당하므로 더 엄한 형량을 주어야 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각각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집필 및 편집

- 이 민 원 (공개서비스과장)
- 시 귀 선 (공개서비스과 팀장)
- 김 형 국 (표준협력과 팀장)
- 김 정 화 (공개서비스과 학예연구사)
- 안 대 희 (정책기획과 학예연구사)
- 이 아 현 (기록관리교육과 학예연구사)
- 정 다 운 (특수기록관리과 학예연구사)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 발 행 일 2008년 12월 28일
- 편집·발행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504호
Tel. 042)481-6300 Fax. 042)472-3906
www.archives.go.kr
인쇄 : 디디컴 Tel. 042)635-2010

〈비매품〉 ※ 본 책자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으며, 사전허락 없이
내용 및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